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540-0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방안 연구

2022. 11

보 건 복 지 부
육 아 정 책 연 구 소
한 국 보 육 진 흥 원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540-0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구자연(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강정원(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권기남(오산대학교 교수)
김정화(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신나리(충북대학교 교수)
장혜진(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
송신영(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방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2
3. 연구 방법	13
4. 연구 절차	17
5. 선행연구	17
II.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28
1.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개관	28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32
3. 시사점	69
III.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71
1.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71
2. 국외 보육제도 및 가정양육지원 우수 사례	81
3. 시사점	103
IV.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전망	106
1. 인구구조 변화와 보육 수요 전망	106
2.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 구축	117
3. 아동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140
4.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162
5. 보육기반 강화	180

V.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정책 우선순위 분석	196
1. 대내·외 환경요인	196
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AHP 분석	200
3.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 우선순위	204
4. 시사점	211
 VI.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안)	 213
1. 기본 방향	213
2. 세부 추진과제	215
3. 맺는 말	240
 참고문헌	 243
 부록	 253
1. 시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 이후 수립)	255
2. 부록 표	261
3. 2차 포럼 토론문	269
4. 3차 포럼 토론문	310
5. 전문가 조사표	346

표 차례

〈표 Ⅰ-3- 1〉 전문가 조사 내용	14
〈표 Ⅰ-3- 2〉 응답자 특성	15
〈표 Ⅰ-3- 3〉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15
〈표 Ⅰ-3- 4〉 전문가 조사 내용	16
〈표 Ⅰ-4- 1〉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안)	18
〈표 Ⅰ-4- 2〉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안)	21
〈표 Ⅰ-4- 3〉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22
〈표 Ⅰ-4- 4〉 세종시 2차 중장기 보육계획	24
〈표 Ⅱ-1- 1〉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0
〈표 Ⅱ-2- 1〉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개요	33
〈표 Ⅱ-2- 2〉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33
〈표 Ⅱ-2- 3〉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 체계 개편	34
〈표 Ⅱ-2- 4〉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34
〈표 Ⅱ-2- 5〉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부모 양육지원 확대	35
〈표 Ⅱ-2- 6〉 4개 추진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한 과제: 1+2순위	36
〈표 Ⅱ-2- 7〉 제 특성별 4개 추진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한 과제: 1순위	36
〈표 Ⅱ-2- 8〉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 정도 개요	37
〈표 Ⅱ-2- 9〉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38
〈표 Ⅱ-2-10〉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보육 체계 개편	38
〈표 Ⅱ-2-11〉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38
〈표 Ⅱ-2-12〉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부모 양육지원 확대	39
〈표 Ⅱ-2-13〉 4개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한 과제: 1+2순위	39
〈표 Ⅱ-2-14〉 제 특성별 4개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한 과제: 1순위	40
〈표 Ⅱ-2-15〉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개요	41
〈표 Ⅱ-2-16〉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국공립 이용률 확대	41
〈표 Ⅱ-2-17〉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41

〈표 II-2-18〉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42
〈표 II-2-19〉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42
〈표 II-2-20〉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국공립 이용률 확대	43
〈표 II-2-21〉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44
〈표 II-2-22〉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44
〈표 II-2-23〉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44
〈표 II-2-24〉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1+2순위	45
〈표 II-2-25〉 제 특성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 1순위	46
〈표 II-2-26〉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46
〈표 II-2-27〉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국공립 이용률 확대	47
〈표 II-2-28〉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47
〈표 II-2-29〉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48
〈표 II-2-30〉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48
〈표 II-2-3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48
〈표 II-2-32〉 제 특성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	49
〈표 II-2-33〉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과제의 세부과제 목표 달성 정도 개요	50
〈표 II-2-34〉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50
〈표 II-2-35〉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50
〈표 II-2-36〉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과정 개편	51
〈표 II-2-37〉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51
〈표 II-2-38〉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52
〈표 II-2-39〉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53
〈표 II-2-40〉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53
〈표 II-2-41〉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보육과정 개편	54
〈표 II-2-42〉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 1+2순위	54
〈표 II-2-43〉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1순위	55
〈표 II-2-44〉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의 세부과제 목표 달성 정도 개요	56
〈표 II-2-45〉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56
〈표 II-2-46〉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57
〈표 II-2-47〉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57
〈표 II-2-48〉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57
〈표 II-2-49〉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58
〈표 II-2-50〉 제 특성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순위	59
〈표 II-2-51〉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 정도 개요	59
〈표 II-2-52〉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60

〈표 II-2-53〉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61
〈표 II-2-54〉 과제 34.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61
〈표 II-2-55〉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61
〈표 II-2-56〉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62
〈표 II-2-57〉 제 특성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	62
〈표 II-2-58〉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개요	63
〈표 II-2-59〉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가정 내 양육지원	63
〈표 II-2-60〉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64
〈표 II-2-61〉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취약보육 지원 개선	64
〈표 II-2-62〉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65
〈표 II-2-63〉 제 특성별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순위	65
〈표 II-2-64〉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66
〈표 II-2-65〉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가정 내 양육지원	66
〈표 II-2-66〉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66
〈표 II-2-67〉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취약보육 지원 개선	67
〈표 II-2-68〉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67
〈표 II-2-69〉 제 특성별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	67

〈표 II-2-70〉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 기여도	68
〈표 II-2-7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 기여도	68
〈표 III-1- 1〉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업무 내용	71
〈표 III-1- 2〉 지방자치단체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관련 시책사업	74
〈표 III-1- 3〉 서울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선정 심사기준	75
〈표 III-1- 4〉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내용	79
〈표 III-2- 1〉 국가품질기준(NQS: National Quality Standard)	92
〈표 III-2- 2〉 미국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의 유형	92
〈표 III-2- 3〉 NAEYC가 요구하는 교사 최소 자격 요건	93
〈표 III-2- 4〉 CDA 자격 체계	94
〈표 III-2- 5〉 NAEYC 평가 영역 중 교사 복지와 관련된 항목	96
〈표 III-2- 6〉 NAEYC의 전문성 개발 역량	96
〈표 III-2- 7〉 NAEYC 평가 영역 중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된 항목	97
〈표 III-2- 8〉 NAEYC 평가 영역 중 교사 권리보호와 관련된 항목	98
〈표 III-2- 9〉 호주의 자격수준	99
〈표 III-2-10〉 ACECQA 평가 영역 중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된 항목	99
〈표 III-2-11〉 ACECQA 평가 영역 중 전문역량 강화의 관찰지표 내용	100
〈표 III-2-12〉 뉴질랜드 자격체계	101
〈표 III-2-13〉 뉴질랜드의 교육부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102
〈표 III-2-14〉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역량 강화 자료	102
〈표 IV-1- 1〉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107
〈표 IV-1- 2〉 장래 0~6세 영유아 인구 추계	108
〈표 IV-1- 3〉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보육(ECEC)에 대한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	109
〈표 IV-1- 4〉 최근 10년 간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추이	110
〈표 IV-1- 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 2021년	111
〈표 IV-1- 6〉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113
〈표 IV-1- 7〉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115
〈표 IV-2- 1〉 양육수당 지급 현황	117
〈표 IV-2- 2〉 장난감 및 도서 대여서비스 현황	119
〈표 IV-2- 3〉 장난감 및 도서 대여서비스 실적 현황	120
〈표 IV-2- 4〉 자체 부모교육 현황	122

〈표 IV-2- 5〉 클로버 부모교육 현황	122
〈표 IV-2- 6〉 공통 부모교육 현황	122
〈표 IV-2- 7〉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프로그램	123
〈표 IV-2- 8〉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	123
〈표 IV-2- 9〉 자녀권리 존중 부모교육 운영 실적	124
〈표 IV-2-10〉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	124
〈표 IV-2-11〉 부모교육 경험 여부와 내용	126
〈표 IV-2-12〉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수(2010~2020)	128
〈표 IV-2-13〉 연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29
〈표 IV-2-14〉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130
〈표 IV-2-15〉 영유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현황	131
〈표 IV-2-16〉 시간제보육 이용 기관 및 만족도, 도움 정도	132
〈표 IV-2-17〉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133
〈표 IV-2-18〉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133
〈표 IV-2-19〉 연도별 장애영유아 현황	134
〈표 IV-2-20〉 장애유형별 영유아 수	135
〈표 IV-2-21〉 영유아 건강검진율	136
〈표 IV-2-2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현황	137
〈표 IV-2-23〉 영유아 건강검진 판정 결과	137
〈표 IV-2-24〉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138
〈표 IV-2-25〉 영유아 발달 장애비 지원율과 예산 집행율	138
〈표 IV-2-2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실적 현황: 대상자별	138
〈표 IV-2-27〉 초기 부모 양육상담 현황	139
〈표 IV-3- 1〉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	141
〈표 IV-3- 2〉 반(학급) 편성 기준	141
〈표 IV-3- 3〉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2022년 기준	141
〈표 IV-3- 4〉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의 교사 대 아동 비율: 2018년	142
〈표 IV-3- 5〉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분야 교사/교직원 대 아동 비율(2018)	143
〈표 IV-3- 6〉 NAEYC 연령별 집단 크기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144
〈표 IV-3- 7〉 어린이집 및 보육실 전용면적 산정 방법	145
〈표 IV-3- 8〉 영유아 1인당 면적	145

〈표 IV-3- 9〉 놀이터 면적기준	146
〈표 IV-3-10〉 영유아 1인당 놀이터 면적 변화 추이	146
〈표 IV-3-11〉 OECD 보육시설·유치원 최소 면적기준	147
〈표 IV-3-12〉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시설기준 국제 비교	147
〈표 IV-3-13〉 아픈 아동 돌봄 장소 및 담당자	147
〈표 IV-3-14〉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	152
〈표 IV-3-15〉 영유아 예방접종 확인 방법	154
〈표 IV-3-16〉 보육교직원 대상 건강검진(결핵 포함) 실시 여부	154
〈표 IV-3-17〉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 대비 이행 정도 개요	155
〈표 IV-3-18〉 코로나19로 인한 연간 휴원 일수: 2020년	155
〈표 IV-3-19〉 취약보육 현황: 2021년	156
〈표 IV-3-20〉 연장형보육 유형별 이용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개요	156
〈표 IV-3-21〉 가구특성별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개요	157
〈표 IV-3-22〉 장애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유형	157
〈표 IV-3-23〉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중 자격요건 충족 교사	158
〈표 IV-3- 1〉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학력수준	163
〈표 IV-3- 2〉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현황: 2021년 기준	163
〈표 IV-3- 3〉 자격급수별 자격취득기관 현황: 2017~2021년	164
〈표 IV-3- 4〉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체계	164
〈표 IV-3- 5〉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제21조 관련)	165
〈표 IV-3- 6〉 유치원교사 자격기준(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165
〈표 IV-3- 7〉 수석교사 자격기준	165
〈표 IV-3- 8〉 지역 및 유형별 보수교육기관: 2021년	167
〈표 IV-3- 9〉 2020년 보수교육 실적	167
〈표 IV-3-10〉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현황	169
〈표 IV-3-11〉 다문화가정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170
〈표 IV-3-12〉 보육교직원, 부모 등으로부터의 권리침해 여부 및 가해자 유형	172
〈표 IV-3-13〉 어린이집에서의 마찰·갈등 내용	172
〈표 IV-3-14〉 보육교직원 건강진단	173
〈표 IV-3-15〉 보육교사의 신체건강 문제 경험 여부 및 유형	173
〈표 IV-3-16〉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문제 경험 여부 및 유형	174
〈표 IV-3-17〉 보육교사 근무형태별 현황(2021)	175

〈표 IV-3-18〉 직무별 보조인력 규모	175
〈표 IV-3-19〉 연장보육반 겸임 및 교대 근무 여부 및 횟수	176
〈표 IV-3-20〉 연장보육반 담당교사 배치 비율	176
〈표 IV-3-21〉 보육교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77
〈표 IV-3-22〉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급여(기본급 및 수당)	178
〈표 IV-3-23〉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교육청 교사 지원 수당	179
〈표 IV-4- 1〉 영아 보육 비용 구성	181
〈표 IV-4- 2〉 3~5세 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182
〈표 IV-4- 3〉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 및 이용 현황	184
〈표 IV-4- 4〉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 및 이용 현황	189
〈표 IV-4- 5〉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민간가정 어린이집 분포	193
〈표 IV-4- 6〉 가정어린이집 지역규모별 정원총족률	194
〈표 IV-4- 7〉 민간어린이집 지역규모별 정원총족률	194
〈표 V-1-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대외 환경 요인: 1+2+3순위	196
〈표 V-1- 2〉 제 특성별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요인: 1순위	197
〈표 V-1- 3〉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요인: 1+2+3순위	198
〈표 V-1- 4〉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 요인 1순위	199
〈표 V-2- 1〉 가정양육지원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순위	201
〈표 V-2-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순위	202
〈표 V-2- 3〉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순위	203
〈표 V-2- 4〉 보육기반 강화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순위	204
〈표 V-3-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 중 주요 전략: 1+2순위	205
〈표 V-3- 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 중 주요 전략: 1순위	205
〈표 V-3- 3〉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206
〈표 V-3- 4〉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206
〈표 V-3- 5〉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208
〈표 V-3- 6〉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208
〈표 V-3- 7〉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209

〈표 V-3- 8〉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210
〈표 V-3- 9〉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210
〈표 V-3-10〉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211
〈표 VI-2- 1〉 전략 1.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215
〈표 VI-2- 2〉 부모급여 지원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216
〈표 VI-2- 3〉 부모교육 확대 연차별 추진 계획	217
〈표 VI-2- 4〉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217
〈표 VI-2- 5〉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연차별 추진 계획	218
〈표 VI-2- 6〉 전략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220
〈표 VI-2- 7〉 교사대아동 비율 개선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221
〈표 VI-2- 8〉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222
〈표 VI-2- 9〉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연차별 추진 계획	222
〈표 VI-2-10〉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내실화 위한 연차별 추진 계획	223
〈표 VI-2-11〉 전략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226
〈표 VI-2-12〉 보육교사 승급교육 이수 방식 개선(안)	227
〈표 VI-2-13〉 비담임교사제 도입 및 확대 연차별 추진 계획	227
〈표 VI-2-14〉 전략 4. 보육 기반 강화	233
〈표 VI-2-15〉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운영일 관련사항 개정(안)	234
〈표 VI-2-16〉 특별활동 외 기타 필요경비 항목 및 수납기준	235
〈표 VI-2-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연차별 추진 계획	236

그림 차례

[그림 Ⅰ-3- 1] 연구절차 및 세부내용	17
[그림 Ⅱ-2- 1] 제 특성별 4대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35
[그림 Ⅱ-2- 2] 추진 달성 미흡 과제: 1+2순위	36
[그림 Ⅱ-2- 3]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 정도 개요	37
[그림 Ⅱ-2- 4] 4개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한 과제: 1+2순위	39
[그림 Ⅱ-2- 5]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43
[그림 Ⅱ-2- 6]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1+2순위	45
[그림 Ⅱ-2- 7]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46
[그림 Ⅱ-2- 8]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개요	51
[그림 Ⅱ-2- 9]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52
[그림 Ⅱ-2-10]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53
[그림 Ⅱ-2-11]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55
[그림 Ⅱ-2-12]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별 목표 달성 정도	58
[그림 Ⅱ-2-13]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59
[그림 Ⅱ-2-14]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60
[그림 Ⅱ-2-15]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62
[그림 Ⅱ-2-16]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65
[그림 Ⅲ-1- 1]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72
[그림 Ⅲ-1- 2]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교육신청 페이지	73
[그림 Ⅲ-1- 3] 서울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역할	76

[그림 Ⅲ-1- 4] 광양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추진 경과	77
[그림 Ⅲ-1- 5] 철도어린이집 운영 절차	78
[그림 Ⅲ-1- 6] 서울시 모아어린이집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	80
[그림 Ⅲ-1- 7]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추진체계	81
[그림 Ⅲ-2- 1] 미국의 발달 추적기 모형	85
[그림 Ⅲ-2- 2] 핀란드의 가족센터의 기능과 위치	86
[그림 Ⅲ-2- 3] 핀란드의 캄피 가족센터의 위치와 내부 전경	87
[그림 Ⅲ-2- 4] Tip-Taf: Early years center의 활동 내용	88
[그림 Ⅲ-2- 5] 덴마크의 아빠놀이방(Fars Legestue) 모습	89
[그림 Ⅲ-2- 6] 국가품질체계(NQF: National Quality Framework)	91
[그림 Ⅲ-2- 7] 미국 주별 보육교사 최소 자격 현황	94
[그림 Ⅲ-2- 8] 미국 유아교육 종사자의 보수 현황: 2019년	95
[그림 Ⅳ-1-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106
[그림 Ⅳ-1- 2]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1970, 1995, 2020년	107
[그림 Ⅳ-1- 3] 0~6세 영유아 수 및 장래 영유아 인구추계	108
[그림 Ⅳ-1- 4] 어린이집 이용률: 2012~2021년	110
[그림 Ⅳ-1- 5]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111
[그림 Ⅳ-1- 6]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111
[그림 Ⅳ-1- 7]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to2-year-old	112
[그림 Ⅳ-1- 8]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to5-year-olds	112
[그림 Ⅳ-1- 9]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113
[그림 Ⅳ-1-10]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추계(연령반 별): 2022~2030년	114
[그림 Ⅳ-1-11]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114
[그림 Ⅳ-1-12]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114
[그림 Ⅳ-1-13] 최근 10년 간 어린이집 수 추이	116
[그림 Ⅳ-1-14] 어린이집 유형별 비중	116
[그림 Ⅳ-2- 1] 양육수당 지급 현황	118
[그림 Ⅳ-2- 2]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118
[그림 Ⅳ-2- 3] 아동의 대한 인식	121
[그림 Ⅳ-2- 4] 자녀 연령 및 지역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비율	125

[그림 IV-2- 5] 연령별 인적 자원 투자 대비 회수율	127
[그림 IV-2- 6] 시간제 보육 이용 현황	130
[그림 IV-2- 7] 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	131
[그림 IV-2- 8] 초기 부모 양육상담 현황	139
[그림 IV-3- 1]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분야 교사대 아동 비율: 2018년	143
[그림 IV-3- 2] 유아교육(primary education services) 분야 교사대 아동 비율: 2018년	144
[그림 IV-3- 3] 인증(B등급 이상) 어린이집 비율	150
[그림 IV-3- 4] 평가(인증) 어린이집 추이	150
[그림 IV-3- 5] 부모모니터링 실시 현황	151
[그림 IV-3- 6]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151
[그림 IV-3- 7]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	159
[그림 IV-3- 8]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159
[그림 IV-3- 9] 아동학대 원인: 환경요인	159
[그림 IV-3-10]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159
[그림 IV-3-11] 0~2세 표준보육과정 자료 활용 비율	161
[그림 IV-3-12] 3~5세 누리과정 자료 활용 비율	161
[그림 IV-3-13] 0~2세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1+2순위	162
[그림 IV-3-14]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162
[그림 IV-3- 1] 보수교육 이수 비율 및 방법	168
[그림 IV-3- 2]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168
[그림 IV-3- 3]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 2010~2020년	169
[그림 IV-3- 4] 교사를 위한 ICT 역량 프레임워크	170
[그림 IV-3- 5] 어린이집 유형별 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중 가장 낮은 하원시간	177
[그림 IV-3- 6] 보육교사 근로시간	178
[그림 IV-3- 7]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급여(기본급 및 수당)	179
[그림 IV-4- 1] 최근 5년 간 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인상률	181
[그림 IV-4- 2] 보육료 지원 아동수 및 보육료 지원율	182
[그림 IV-4- 3] 최근 5년간 시도별 부모보육료 상한액 추이	183
[그림 IV-4- 4] 최근 5년간 시도별 특별활동비 상한액	184
[그림 IV-4- 5]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중	185

[그림 IV-4- 6]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 및 이용률	186
[그림 IV-4- 7] 국공립어린이집 수	188
[그림 IV-4- 8] 국공립 및 공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	188
[그림 IV-4- 9]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189
[그림 IV-4-10]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190
[그림 IV-4-11] 시도별 공공보육 이용률	190
[그림 IV-4-12] 연도별 어린이집 수	192
[그림 IV-4-13]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비중	193
[그림 IV-4-14] 적정 어린이집 수	193
[그림 IV-4-15]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 결과	194
[그림 V-1-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대외 환경 요인: 1+2+3순위	197
[그림 V-1- 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대내 환경 요인: 1+2+3순위	199
[그림 V-3- 1]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206
[그림 V-3-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207
[그림 V-3- 3]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209
[그림 V-3- 4]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211
[그림 VI-1-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기본 방향	213
[그림 VI-2- 1] 영유아 희소 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모델	238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Ⅰ-3- 1〉 시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55
〈부록 표 Ⅱ-2- 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개 추진 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2순위	261
〈부록 표 Ⅱ-2-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 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2순위	261
〈부록 표 Ⅱ-2- 3〉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2순위	261
〈부록 표 Ⅱ-2-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로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261
〈부록 표 Ⅱ-2- 5〉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가장 미흡 과제 2순위	262
〈부록 표 Ⅱ-2- 6〉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262
〈부록 표 Ⅱ-2- 7〉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2순위	262
〈부록 표 Ⅱ-2- 8〉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262
〈부록 표 Ⅱ-2- 9〉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263
〈부록 표 Ⅱ-2-10〉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과제 2순위	263
〈부록 표 Ⅱ-2-11〉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2순위	263
〈부록 표 Ⅱ-2-12〉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263
〈부록 표 Ⅳ-2- 1〉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세부 내용	264
〈부록 표 Ⅳ-2- 2〉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265
〈부록 표 Ⅴ-1-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 요인 2순위	265
〈부록 표 V-1- 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 요인 3순위	266
〈부록 표 V-1- 3〉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 요인 2순위	266
〈부록 표 V-1- 4〉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 요인 3순위	266
〈부록 표 V-2-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 2순위	267
〈부록 표 V-2- 2〉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순위	267
〈부록 표 V-2- 3〉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순위	267
〈부록 표 V-2- 4〉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순위	268
〈부록 표 V-2- 5〉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순위	268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대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부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각계 요구를 반영하여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둬.

나. 연구 내용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를 도출함.
- 지난 5년 간 영유아 인구 및 보육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장래 보육 규모를 전망함.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이후 0~5세 취학 전 영유아 수, 어린이집 공급·이용, 보육 인력 등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5년(2023~2027년) 간의 장래 영유아 수 및 보육 수요, 이에 따른 적정 어린이집 규모, 보육 인력 등을 추정함.
- 국내외 보육 및 양육 관련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 사업과 해외 국가의 보육 및 양육지원 우수사례를 고찰함.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내외 환경요인과 추진 전략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봄.
- 제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세부과제를 마련함.

다. 연구 방법

-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고찰하고, 인구 및 보육교육 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보육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별도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보육 시책 사업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중앙정부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함.
 - 해외 자녀양육 및 보육제도 중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살펴봄.
- 보육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내외 환경 요인,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별 우선순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보육 관련 공무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함.
 - TF는 가정양육지원, 보육서비스 품질, 보육 인력, 보육서비스 기반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였고, 분과장 회의 5회, 분과회의 12회를 실시함.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포럼을 개최함.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최종(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함.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부모 등으로 자문회의 및 간담회 구성하여 정책 과제별 요구 및 제안, 조사표 검토 및 분석 방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가. 4대 추진과제

- 전문가들은 4개 추진과제 중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2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함.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달성 정도가 7점 만점에 각각 평균 5.0점으로 높고,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평균 4.9점,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가 평균 4.3점으로 4개 추진 과제 중 가장 낮음.

-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관련 교수나 연구원들보다 높게 평가함.
 - 보육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점 만점에 평균 5.0점,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평균 4.9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둘다 달성 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함.
 - 부모 양육지원 확대 목표 달성 정도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개 추진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이 85.4%로 단연 높고, 다음으로 부모 양육지원 확대 44.4%,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체계 개편이 각각 35.4%, 34.9% 정도임.
- 4개 추진과제를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도 지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가 99.5%로 가장 많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96.2%, 부모 양육지원 확대 95.8%, 보육 체계 개편 94/8% 순임.
- 필요 정도도 4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가 각각 평균 3.5점, 보육 체계 개편이 평균 3.3점으로 가장 낮음.

나.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4개 세부과제 중 국공립 이용률 확대가 7점 만점에 평균 5.2점으로 가장 높고,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평균 4.8점,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평균 4.6점,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평균 4.2점 순임.
- 4개 세부과제 중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와 매우 필요를 합산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97.7%로 가장 많고,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97.2%,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90.1%, 국공립 이용률 확대 80.7% 순임.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과제 중 보육 체계 개편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이 7점 만점에 평균 5.0점으로 가장 높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과 보육과정 개편이 각각 4.5점으로 동일 수준을 나타냄.
- 3개 세부과제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2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96.2%로 높음.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과제 중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 4개 세부과제 중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의 목표 달성 정도가 7점 평균 4.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평균 3.9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 평균 3.8점으로 낮음.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가 4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 각각 평균 3.6점,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가 평균 3.4점으로 가장 낮음.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과제 중 부모 양육지원 확대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가정내 양육지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달성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가 평균 4.7점,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낮음.
-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4점 평균 3.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순임.

다. 총괄 평가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당초 목표로 설정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78.8%가 어느 정도 기여, 16.0%가 매우 기여하였다고 답하여 조사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부분이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여 정도는 4점 평균 3.1점으로 높은 편임.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기여가 76.4%, 매우 기여가 13.2%로 기여하였다는 의견이 90% 가까이 되고, 기여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3.0점으로 높음.

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정책 우선순위 분석

가. 대내외 환경요인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요인을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 저출생 현상 심화가 76.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43.4%,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19.8%, 가족 구조 다양화 17.9% 순임.
- 대외 환경요인을 1,2,3순위로 알아본 결과, 70.3%가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를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66.6%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49.5%는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33.1%는 어린이집 폐원 증가 순임.

나.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AHP 분석

- 보육·유아교육, 사회복지 등 학계(정책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189명을 대상으로 제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함.
- 가정양육지원 분야 4개 세부과제 양육비용 지원 강화,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부모양육 역량 강화,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육아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간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 육아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양육비용 지원 강화 순임.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의 세부과제 중 최적의 보육 환경 조성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순임.
-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순으로 가중치가 높음.
- 보육기반 강화 세부과제 중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가 다른 과제에 비해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린이집 재정지원 체계 마련, 보육의 양적질적 사각지대 예방,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및 홍보 강화 순임.

다.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 우선순위

-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추진 전략 중 주요 전략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6.0%,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보육기반 강화가 각각 53.8%, 51.9%로 비등하고, 가정양육지원 28.3%로 가장 낮음.
- ☐ 가정양육지원 분야의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한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45.3%, 발달단계별 검사상담 서비스 연계 33.1%,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31.6% 순임.
-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71.3%,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리 참여 확대와 아동발달 지원, 표준보육과정 내실화가 각각 20~30% 사이에 분포함.
- ☐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개편이 67.9%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수교육 체계 개편 25.9%, 보육교사 수당체계 개편 24.5%, 보조/대체교사 확대 20.7% 순임.
- ☐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 균형 배치, 보육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강화가 각각 37.7%, 33.0%, 32.1%로 높음.

4.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안)

가. 기본 방향

-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서는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안함.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안)은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추구한 비전은 이어가되, 주 양육자인 부모, 보육교사도 행복하여야 아동이 행복할 수 있고, 부모

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육교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량을 발휘하여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으로 목표를 설정함.

□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미션으로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권리 존중 문화 확산’ 등 세 가지를 제안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②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④ 보육기반 강화 4가지를 제시함.

[요약 그림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기본 방향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미션	자녀 양육 국가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권리 존중 문화 확산	
전략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보육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육아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공공보육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추진과제				

나. 세부 추진과제

1) 전략 1 :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육아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함.

〈요약 표 1〉 전략 1.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1-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 부모급여 도입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 육아물품 대여 인프라 확대
1-2.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어린이집 → 가정 양육지원 기관 육성 - 아동 발달주기 기반 교육개발 제공 및 부모 책무성 강화
1-3.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놀이와 체험 지원 인프라 확대 - 육아자원 및 기관 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1-4. 육아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에 따른 검사 상담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 - 부모 자조기능과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지원 강화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등을 제안함.

〈요약 표 2〉 전략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2-1.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 - 영유아 당 보육면적 확대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합리화
2-2.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율평가 도입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내실화
2-3.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장애아 대상 보육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
2-4.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 표준보육과정 교육의 체계적 관리 - 보육과정 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표준보육과정 고도화 -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3) 전략 3 :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등을 제안

〈요약 표 3〉 전략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3-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상향 개편 - 선임교사 도입 및 확대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3-2. 보육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맞춤형 보수교육 인정체계 마련 (보수교육 수강저축제 운영) - 보육교직원 교육 플랫폼 구축 - 미래대응 핵심직무역량 기반 보수교육 개편 - 보육교직원 직군 및 경력별 보수교육 운영 다각화
3-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 보육교직원 분쟁조정제도 마련 - 보육교직원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인식 확산 - 보육교직원 신체심리 건강지원 확대
3-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체교사 맞춤형보조인력 지원 확대 -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 직군별 단위업무 분석 및 표준화 - 보육교직원 수당 및 호봉체계 개편

4) 전략 3 :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전략 4.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어린이집의 합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공공보육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함.

〈요약 표 4〉 전략 4. 보육 기반 강화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4-1. 어린이집의 합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비용 산출 세분화 및 고도화 통한 안정적 지원 추진 - 연장보육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운영 및 지원 기준 합리화 - 어린이집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 지원체계 강화 - 필요경비 제도 개선
4-2. 공공보육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 및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균형 배치 - 공공보육의 품질 향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책무성 강화와 공공형어린이집 중심의 민간영역 공공성 강화

(요약 표 4 계속)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4-3.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취약지역 내 어린이집 운영 개선 - 어린이집의 합리적 설치운영 기준 정비 - 어린이집의 소규모화 대응 위한 운영 지원
4-4.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의 통합지원 기능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효율화 - 임신육아포털 고도화 및 홍보 강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보육은 그간 ‘양적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현재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육 현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21년에는 26만명 정도가 태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¹⁾. 보육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지난 5년 간 18.3%,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17.4%²⁾가 줄었고, 특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속도가 두드러진다.³⁾ 이에 반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기록한다.⁴⁾

한편, 어린이집 내 건강안전·영양 등 사건사고로 영유아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019년 기준 1,371건이며, 이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1,384건에 달한다(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⁵⁾. 이 외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강화에 따른 보육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며,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5년 마다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 통계청(2022).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2)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7년 145만명에서 2021년 118만명, 어린이집 수는 2017년 40,238개소에서 2021년 33,246개소로 감소함(보건복지부, 2022).

3) 같은 기간 동안 민간어린이집 24.5%, 가정어린이집 29.3% 감소(보건복지부, 2022).

4) 보육시설 이용률 2018년 기준 영아 OECD 평균 36.1%, 한국62.7%, 유아 OECD 평균 87.0%, 한국 94.5%(OECD 홈페이지,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2022. 10. 25 인출))

5) 아동권리보장원(2020). 내부자료.

(2023~2027) 수립이 필요하다. 제3차 중장기보육 계획(2018~2022)은 문재인정부의 보육 분야 국정과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었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꼽을 수 있다. 맞춤형 보육 추진 시 제기된 부모의 취업 등에 따른 이용시간 형평성 문제와 맞춤형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 감소와 보육교사의 업무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 평가제로 전환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질 저하, 보육교사 학과제 개편 과정에서 학계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점 등은 한계로 남았다.

보육 정책의 목표가 부모가 아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행복(well-being) 향상으로 선회될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수요자의 요구(needs)에 부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부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각계 요구를 반영하여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가 향후 5년 간 추진하게 될 보육정책의 기본 틀이 될 것이며,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지난 5년 간 추진하여 온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를 도출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 목표 달성이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지난 5년 간 영유아 인구 및 보육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장래 보육 규모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이후 0~5세 취학 전 영유아 수, 어

린이집 공급·이용, 보육 인력 등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5년(2023~2027년) 간의 장래 영유아 수 및 보육 수요, 이에 따른 적정 어린이집 규모, 보육 인력 등을 추정하였다.

셋째, 국내외 보육 및 양육 관련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 사업과 해외 국가의 보육 및 양육지원 우수사례를 고찰하였다.

넷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내외 환경요인과 추진 전략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섯째,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제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고찰하고, 인구 및 보육교육 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장래 영유아 수와 이에 따른 보육 수요, 적정 어린이집 및 인력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나. 2차 자료 분석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국내외 사례 수집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별도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보육 시책 사업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중앙정부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자녀양육 및 보육제도 중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살펴보았다.

라. 조사 연구

보육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대내외 환경 요인,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별 우선순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내용

먼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를 위한 문항으로는 목표 달성 정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와 가장 추진 실적이 미흡한 과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내외 환경요인,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안)별 정책 우선 순위, 우선 추진 과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I-3-1〉 전문가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추진과제: 목표 달성 정도 및 향후 지속추진 필요 정도, 가장 미흡한 과제(1,2순위),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1,2순위) -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목표달성 정도 및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가장 미흡 과제(1,2순위),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1,2순위)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내외 환경요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 우선순위(1,2순위), 추진전략 별 세부과제 정책 우선순위, 우선 추진과제 등
일반적 특징	성별, 연령, 학력, 직장 유형, 거주지

2) 조사 결과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및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 조사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2명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여자가 대다수이고 남자는 8.5%로 적었으며, 연령은 51~55세와 46~50세가 각각 23.1%, 20.8%로 많고, 다음으로 41~45세 17.5%, 56~60세 15.6%, 40세 이하 13.2% 순이었다. 전문가 유형은 보육 관련 교수 및 강사가 50.0%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35.4%, 보육 관련 정책연구소 연구원 3.8%, 기타 10.8% 순

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졸이 7.1%, 대학원 이상이 91.5%로 1% 내외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표 I-3-2〉 응답자 특성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전문가 유형	
남	8.5(18)	보육 관련 교수, 강사	50.0(106)
여	91.5(194)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35.4(75)
연령		보육 관련 정책연구소 연구원	3.8(8)
40세 이하	13.2(28)	기타	10.8(23)
41~45세 이하	17.5(37)	학력	
46~50세 이하	20.8(44)	전문대 졸	0.9(2)
51~55세 이하	23.1(49)	(4년제) 대졸	7.1(15)
56~60세 이하	15.6(33)	대학원 이상	91.5(194)
61세 이상	9.9(21)	기타	0.5(1)
전체	100.0(202)	전체	100.0(202)

마.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TF 구성·운영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보육 관련 공무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TF는 가정양육지원, 보육서비스 품질, 보육 인력, 보육서비스 기반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였고, 분과장 회의 5회, 분과회의 12회를 실시하였다.

〈표 I-3-3〉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구분	위원
위원장	배금주 국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위원	유보영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홍승령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이승현 과장(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제 1분과 (가정양육지원)	• (분과장) 강정원 교수(한국성서대) • 신영아, 김윤아 팀장(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 송정 센터장(경기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도남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 2분과 (보육서비스 품질)	• (분과장) 김정화 교수(국립목포대) • 경기도 보육 담당 공무원(과장급) • 이원선 국장(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 • 마미정 센터장(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양미선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 3분과 (보육 인력)	• (분과장) 권기남 교수(오산대) • 조용남 국장(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 이남정 센터장(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구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 4분과 (보육서비스 기반)	• (분과장) 신나리 교수(충북대) • 서울시 보육 담당 공무원(과장급) • 이연준 단장(한국보육진흥원 정책사업지원단) • 박희경 센터장(서울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양미선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바. 포럼 및 공청회 운영

1) 포럼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다. 2차 포럼과 3차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발표 및 토론 자료)은 부록2와 부록 3에 수록하였다.

〈표 I-3-4〉 전문가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1차 포럼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4개 분과 TF 위원, 보건복지부 담당관 등 - 안건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 발굴
2차 포럼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 대면 - 참석자 : 4개 분과 TF 위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민주노총 보육교사 노조 등 - 안건 : 기본계획 4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차 포럼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 온/오프라인(유튜브 실시간 송출) - 참석자 : 4개 분과 TF위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어린이집총연합회, 민주노총 보육교사 노조

2) 공청회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최종(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2022년 11월 25일(금)에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였다.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icLdDSewbJA>)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청회 내용을 송출하였으며, 500~600명이 온라인으로 동시 접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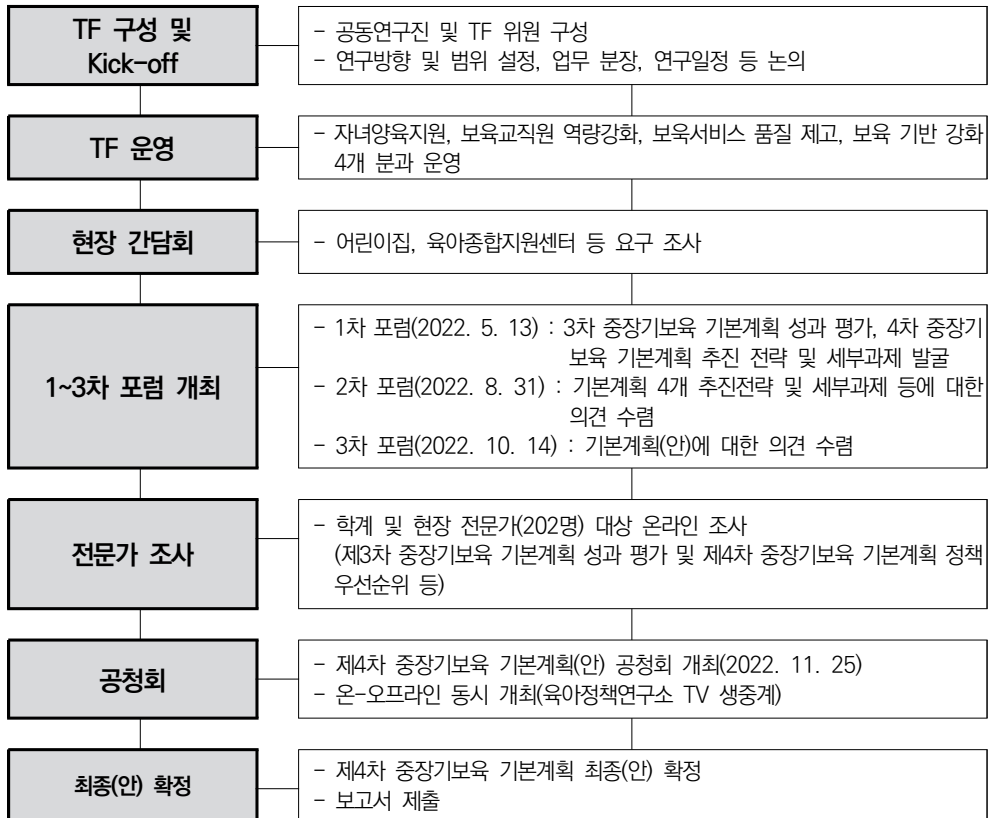
사.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부모 등으로 자문회의 및 간담회 구성하여 정책 과제별 요구 및 제안, 조사표 검토 및 분석 방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추진 절차 및 단계별 세부 내용은 [그림 I-3-1]에 정리하였다.

[그림 I-3-1] 연구절차 및 세부내용



5. 선행연구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문무경 외, 2021; 이정원 외, 2017)가 수차례 수행되었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가. 중앙정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는 그간 자체 연구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정원 외(2017)는 기존의 보육정책과 제2차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조사, 대국민조사, 자문회의와 전문가 워크숍 및 영유아 부모 간담회, 정책연구실무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아동 행복, 부모 신뢰, 교사의 자긍심이 균형을 이루는 보육’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강화’, ‘부모의 행복 육아 실현’, ‘교사의 비전과 자긍심 제고’,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의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중 지속이 필요한 과제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추가로 제안한 과제로 총 8개 추진과제와 각각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표 I-4-1 참조).

〈표 I-4-1〉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안)

추진과제명	2차 계획 내 존속 세부과제 및 추가 제안 세부과제	전문가 및 부모 요구에 근거한 세부과제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1. 보육의 공공성 제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존속)		○
		지역 육아지원 공공 인프라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주요 서비스 제공 분소 설치 확대)	
	· (1-3-1)어린이집 수급 조절 (부실어린이집 퇴출 구조)(추가)	공공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1-3-2)평가인증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건설팅 연계, 피드백 강화)(추가)		
		공공성 제고를 위한 비용 지원 내실화(보육료 지원, 인건비 지원 내실화)	○
2.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 (2-1-1)근로환경 및 급여 개선(존속)	보육교사 근로복지 환경 개선(근무시간, 휴가, 유연근무, 시간외 근무수당 보장, 최저임금 이상 급여 인상)	○
	· (2-1-2)우수인력 보육현장 유인 기반 강화(보육인력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추가)		

(표 I-4-1 계속)

추진과제명	2차 계획 내 존속 세부과제 및 추가 제안 세부과제	전문가 및 부모 요구에 근거한 세부과제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성
3. 교사 전문성 제고	· 보육인력 자격관리체계 개편 (비대면 온라인 교육 양성 과정 축소, 자격갱신제 등)(추가)	양성·자격체계 강화(유치원 교사 수준의 강화 지향, 보육교사·보조교사 양성 체계 구분)	○
	· 보육인력 역량 지원 강화(존속)	현직교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강화, 역량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교사 스트레스 관리)	
	· (3-3-1)부적격 교사 조기발견 ·관리체계 구축(추가)	(3-3-2) 지속적 전문성 지원관리 강화(교사 교육, 이력관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격차해소를 위한 보육 환경 조성		보육현장의 격차 해소 기반 조성(공동보육과정 실행 기반 확보, 유·보간 우수 실행 사례 공유, 정보 공유, 유·보 공통의 장학 및 컨설팅 시스템 구축, 유·보간 시설 환경 등 격차 해소)	○
		가정의 양육환경 격차 해소(발달환경 평가 수행, 양육 환경 취약가구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5. 아동 발달에 적합한 양육 지원		아동발달을 고려한 지원체계 설계	
		장애아다문화 가정 아동 보육 지원 강화	
6. 부모 양육 역량 강화 여건 조성		부모교육 의무화(보육서비스 이용, 양육수당 수령 전 등)	
		부모 양육역량 지원체계 조성(부모교육, 정보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확대 등)	
7. 일하는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여건 조성		안심할 수 있는 영아보육 여건 조성	
		맞춤형 보육 모형 개선 (종일반 입소 자격 기준 보완)	
8. 체계적 보육 서비스 설계 체계 구축		보육수요 변동 요인의 정기적 점검 및 수요 예측	
		정책의 아동 행복(권리) 영향 평가 실시	

자료: 이정환·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pp.218-220.

문무경 외(2021)는 제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18-2022)과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의 추진과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협의회, 학계 전문가 의견조사, 담당 공무원 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정책워크숍 및 토론회,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비전과 전략, 그리고 부문별 세부 정책과

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적응력 강화와 공생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 영유아의 웰빙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② 영유아 주도과 참여를 강조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③ 포용적 공생 사회를 위한 생애초기부터 통합교육 강화 ④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체계 마련 및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 ⑤ 지역적 균형발전과 조화의 5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공통 정책과제로 1)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 2)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는 유보체제 통합, 3)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4) 질적 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제고, 5) 환경개선을 통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6) 우수 영유아 교원의 유입, 근속 및 처우 개선, 7)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체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연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한 서울, 경기 등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제 4차 중장기 보육계획⁶⁾

서울시는 2020년에 2021~2025년에 해당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의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기존의 중장기 보육계획과 달리,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 구조적 질 향상에 중점을 두던 것에서 나아가 과정적 질에도 초점을 두고 영유아 중심으로 관점을 확대하여 운영 주체의 민주적 참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노동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 중심의 보육에서 나아가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계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 함께 키우고 함께 누리는 서울보육”이라는 비전 아래, 영유아 중심의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권 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지원 체계 강화의 목표를 세웠다.

6) 조막래·안현미·이혜숙(2020)의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표 I-4-2〉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안)

정책과제	세부 추진사업
영유아 중심의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의 내실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취약아동 조기발견 체계 마련 및 전문 지원 강화 어린이집 감염병 위험 대응력 체계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보육의 질 제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질 관리 체계 마련 운영주체의 공공성 강화 및 확산 어린이집 공적 인력 지원체계 강화 부모참여 내실화 영유아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권 보장	보육교사 직급체계 도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보육교직원 일-생활 균형 지원 내실화 보육교직원 건강권 보장 강화 보육교직원 소통채널 도입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	가정양육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완화 긴급보육지원 서비스 확대 마을단위 공동육아 지원 확대 인권존중 보육환경 내실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

자료: 조막래·안현마·이혜숙(2020).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중심의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달성을 위해서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보육의 내실화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취약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지원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감염병 위험 대응력을 체계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공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산하며, 어린이집 공적 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부모참여 내실화, 어린이집 인근 금연시설 규제 강화, 보행환경 개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확대와 같은 영유아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권 보장이다. 보육교사의 직급체계를 도입하고 직급별 역량강화 체계를 마련하고 보수교육 심화과정 확대운영하는 등 역량강화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내실화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소통채널 도입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양육지원 인프라와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긴급보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마을 단위 공동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인권존중 보육환경 내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표 I-4-2 참조).

2)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경기도는 2017년 2018-2022년에 해당하는 제3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중장기보육 계획을 제시하였다. 문헌검토 및 각종 행정·통계자료 분석, 설문 조사(경기도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원장 요구조사, 경기도 보육교사 근무현황 및 요구조사, 경기도내 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요구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경기도 보육”이라는 비전 아래,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2) 보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4) 학부모의 양육기반 확대, 5)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의 정책목표를 두었다. 각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별 세부추진사업은 <표 I-4-3>와 같다.

<표 I-4-3>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18-2022)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 추진사업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한 수급계획 수립 저비용-고효율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모델 확산
	공보육 인프라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취약보육강화	경계선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외국인 근로자 미취학 자녀 보육지원
보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열린 어린이집 확대	도내 전체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운영요소 의무도입 열린 어린이집 지원 강화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확대	경기도형 보육 컨설턴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경기도형 보육 컨설팅 사업량 확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점검 우수 부모 모니터링 단위 시상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정착	시군 평가인증 컨설턴트 양성 평가 사후관리 지원
	어린이집 경영 합리화	어린이집 회계지원 시스템 확산 직접비 위주의 회계운영점검

(표 I-4-3 계속)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 추진사업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보육교직원 일생활양립 지원	비담임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연가사용 촉진
		대체교사 지원 확대
	현장중심의 보육교사 역량지원 체계 구축	국공립 원장 사전직무교육 실시
		현장중심 직무교육교재 개발 보급
		보수교육시간 연간 적립제 도입
	취약보육 교사 집중 지원	유아특수교사 직무수당 지급
		취약보육 담당교사 집중 처우 개선
		영아전문보육과정 기초-심화단계 개발 보급
		경계선상-장애아 담당 교사 직무연수 강화
학부모의 양육기반 확대	부모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영유아 발달단계별 부모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시행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양육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보급확대	영아안심 콘텐츠 보급
		가정양육(자녀와 놀이) 콘텐츠 보급
		가정안전(안전한 가정환경 만들기) 콘텐츠 보급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 수요공급 매칭 강화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관 확대
	보육 양육비 부담 경감	합리적인 필요경비 산정체계 구축
		학부모 보육비용 부담 격차 폐지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필요경비 지원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	영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영유아 숲체험시설 조성
		영유아용 실내 놀이공간 확충
		자연친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어린이집 시설기준 강화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강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기준 적용

자료: 경기도(2018). 내부자료.

3) 세종시 2차 보육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세종시는 2020년에 2차 보육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였다.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세종시 보육실태조사와 심층면담, 보육발전 추진단 구성과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세종”이라는 비전 아래, 보육 신뢰성 강화, 보육 형평성 확대, 육아 공동체 실현이라는 추진 방향을 세우고 공공보육 강화, 보육품질 개선, 부모 양육지원 확대, 유보 연계 운영 강화의 4개 정책 목표를 수립하였다.

공공보육 강화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부모의 요구가 크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는데, 구체적 과제로는 공공보육 내실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 개선의 3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보육품질 개선은 OECD 국가들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로 세부과제로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 교사 역량강화,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이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부모 양육지원으로 세종시에 거주 중인 영유아 부모의 요구와 신생도시라는 특성에 따라 육아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지역사회 육아인프라 균형발전 추진,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양육환경 구축,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의 3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보 연계 강화는 문재인 정부와 세종시의 유-보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 및 목표에 부합하며, 광역과 기초 간 행정과 교육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단층 구조인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유보 관리 운영 주체 연계 강화, 교사 연수 연계 강화, 인프라 공유체계 구축의 과제를 도출하였다(표 I-4-4 참조).

〈표 I-4-4〉 세종시 2차 중장기 보육계획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사업
공공보육 강화	공공보육 내실화	1-1-1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강화 1-1-2 공공보육 위탁운영 표준화 1-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모델 개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1 생활권별 거점 신축 1-2-2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전환 1-2-3 장기임차 방식 전환
	어린이집 환경개선	1-3-1 노후시설 리모델링 강화 1-3-2 어린이집 시설·보강비 지원
보육품질 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선	2-1-1 교사 업무부담 경감 2-1-2 교사 상담·힐링 지원 확대
	교사 역량 강화	2-2-1 교사 재교육시스템 구축 2-2-2 내부 장학시스템 구축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	2-3-1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2-3-2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2-3-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부모양육지원 확대	지역사회 육아인프라 균형발전 추진	3-1-1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3-1-2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3-2-2 읍면지역 영유아-부모 문화시설 확충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양육환경 구축	3-2-1 공공 정보제공 플랫폼 활성화 3-2-2 수요자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3-2-3 부모를 위한 육아멘토 육성 및 지원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3-3-1 시간제보육 활성화 3-3-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3-3-3 취약보육지원 강화

(표 I-4-4 계속)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사업
유·보 연계 운영 강화	유·보 관리·운영 주체 연계 강화	4-1-1 유·보 연계 협의회 활성화 4-1-2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수급계획 조사·운영
	교사 연수 연계 강화	4-2-1 누리과정 공동 우수사례 발굴 및 공동 교사연수 추진 4-2-2 유·보 연계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지원 사업 추진
	인프라 공유체계 구축	4-3-1 어린이 체험교육원 설립·운영 4-3-2 부모교육 연계 강화

자료: 도남하이정원박진아김동훈·신나라·정유나·김태우(2021). 세종특별자치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세종특별자치시·육아정책연구소.

다.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학계 연구

표갑수(2006)는 정부가 그간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보육사업을 추진한 데 반해 중장기보육계획(2006-2010: 새싹플랜)은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편적 보육은 사회주의적 보육 이념에서는 용이하나 자유민주주의적 보육 이념에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추진과제별로는 무리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보다는 민간(개인)보육시설을 보육 법인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개인)보육시설을 아동별 지원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해 주고 있지만 이 또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현실화와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시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비 지원 형식이 아니라 분명한 용도 규정이 필요하며, 가격규제 예외시설 일부 허용은 보육의 공보육 기반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양극화를 통한 빈익빈 부익부로 보육시설, 아동, 부모가 양분되는 계층간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시설종별, 아동별지원 등 보육재정지원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하여야 하며,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아동의 형평성을 고려한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공립시설 종사자 신분 보장, 포괄적 보육 서비스를 위한 Head Start Program 도입, 지방분권화에 따른 보육시설평가시스템 지방이양,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들의 구체적인 양성과정과 인력별 자격 규정 및역할, 수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변선영·황해익·이강훈(2020)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5년 간 수행한 보육지원정책의 수행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6개 주요 추진과제의 세부지표

중 장애아다문화 영유아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다음으로 아동 및 가구 특성별 맞춤형 지원,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보육인력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경감 순이었다.

김진석(2018)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해 그 구체성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기반 강화라는 별도의 과제를 추가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추진 과제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의 다양화라는 장점에도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보육서비스 공급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부재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모 선택권 보장과 이용 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체계 마련 역시 득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시설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화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한편,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등의 정책은 특징적인 정책으로 꼽았다. 추진 과정에서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의 학과, 교수, 학생, 대학 등 관련 당사자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모 양육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제도나 서비스의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정 내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하였다.

라. 시사점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문무경 외, 2021; 이정원 외, 2017)와 서울, 경기, 세종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된 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당사자, 즉 부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요구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나 중장기 정책이니 만큼 추진 가능성이나 실효성, 보육현장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정원 외(2018)는 당시 보육 현장의 문제 및 요구를 파악하여 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세부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추진과제들이 배치되어 있어 세부과제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가인증

의 실질적 질 관리 기능 강화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추진과제를 세분화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 정책이니 만큼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부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한 과제를 별도 설정하는 것은 가정내 양육 부모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맞춤형보육 추진 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불만이 컸던 이유도 부모의 취업에 따른 이용시간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과 맥은 맥을 같이 하되, 지역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쉽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교사대 아동 비율,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지난 10년 간 추진하여 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후속 조치로 운영의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등이 대거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외국인 근로자 미취학 자녀 보육지원 등 관련 과제를 세부 추진사업에 포함시켰고, 서울과 비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저조한 경기도는 예산 부담은 줄이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이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행정도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강조하고,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의 육아인프라 확충을 세부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II.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제2장에서는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지난 5년 간 이루어낸 성과를 평가하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개관

참여정부 이래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였고, 200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2006년 7월 중장기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을 발표하였다. 새싹플랜(2006~2010)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5개 정책과제와 2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과제로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 및 평가인증시스템을 확대하며, 보육행정전산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부지,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초기투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 영아에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영아기 기본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인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에 따라 보육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보육행정전산망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8년 3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다시 보육 업무의 주무부처가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국가책임제 보육, 수요자 중심 보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싹플랜(2006~2010)을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

(2009~2012)을 발표하였다. 새싹플랜(2006~2010)에서 강조한 평가인증, 건강·영양·안전, 보육프로그램 강화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의 내용은 지속 추진하되 세부 내용은 보완하였다. 또한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더욱 확대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아이사랑플랜(2009~2012)은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육행정의 효율화도 이루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 방향으로는 새싹플랜(2006~2010)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싹플랜은 이용 아동 30%를 목표로 국공립 확충을 계획하였으나, 아이사랑플랜은 민간보육시설의 국공립 수준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공립은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이미화 외, 2012),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반면, 가정 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에 대한 국가의 양육수당 지원의 형평성, 보육서비스 지원기능 통합 추진 등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아이사랑플랜(2009~2012)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0~2세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확정된 2012년 말에 마련된 계획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정책 방향으로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초과 수요 유발, 취업모의 이용 불편 초래, 전업 주부의 종일제 과잉 이용으로 재정 낭비 소지 등 종일형 위주의 획일적 보육체계 등 문제점이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의무 평가제 도입 운영, 평가와 재정 연계 등으로 질 높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내실화하며, 민간 자원 활용 결과를 토대로 지원 수준 적정화, 각종 규제 정비 등 공적 부분과 사적 이윤 추구의 접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성과 평가 결과(이정원 외, 2017), 6대 추진과제 중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추진과제는 가장 저조하였다. 또한 세부과제 중에서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공개 확대,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 평가인증 강화 등의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높고,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이 가장 낮았다.

〈표 II-1-1〉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새싹 플랜 (2006~2010)	아이사랑 플랜 (2009~201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3~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
비전 :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비전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3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중심 · 국가책임제 보육 · 신뢰회복 	비전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우선 ·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비전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
과제 1. 공보육 기반 조성 1-1.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1-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1-3.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과제 1. 자녀양육 비용 부담 감소 1-1. 보육료지원 확대 1-2.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과제 1.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1-1.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1-2.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경감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1-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1-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1-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과제 2.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2-1. 보육비용 지원 확대 2-2. 영아보육 활성화 2-3. 취업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 2. 아동·부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서비스 2-1. 다문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2-2. 장애아 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2-3. 맞벌이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2-4. 가정내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과제 2.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2-1. 아동과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 2-2. 장애아다문화 아동 맞춤형 지원	과제 2. 보육체계 개편 2-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2-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2-3. 보육과정 개편
과제 3.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3-1.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3-2. 장애아 보육 활성화 3-3. 농어촌 보육서비스 확대 3-4.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3-5.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부모합동보육 활성화	과제 3. 보육시설 환경 개선 3-1. 보육시설 안전기준 개선 3-2.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3-3. 평가인증 활성화 3-4. 보육시설 균형 배치	과제 3.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3-1. 민공 맡김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3-2.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토출 등 연계 3-3. 평가인증 활성화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3-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3-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3-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3-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표 II-1-1 계속)

새싹 플랜 (2006~2010)	아이사랑 플랜 (2009~201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3~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2022)
과제 4.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4-1. 보육시설 환경 개선 4-2.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4-3.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4-4. 표준보육과정 제도화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제 4.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및 처우 개선 4-1. 보육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4-2.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제 4. 양질의 인심 보육 여건 조성 4-1.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4-2.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4-3. 아이가 안전한 보육 환경 기반 마련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4-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4-2. 시·군·구 단위 보육 서비스 확대 4-3. 취약보육 지원 개선
과제 5.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5-1.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5-2.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5-3. 지자체 보육정책 활성화 5-4. 지역사회 참여 및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5-5. 보육사업 추진관련 인프라 확충	과제 5.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5-1. 비영리민간선정기준 간소화 5-2. i-사랑카드 도입	과제 5.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5-1. 참여정부공개실패 등 민간 협력 기반 조성 5-2.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 6. 보육정책 효과적 지원체계 마련 6-1. 보육정책 연구기능 강화 6-2. 보육사업 지원기구 개편 6-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4.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설립 6-5. 보육시설 지도감독 개선 6-6. 부모단체·모니터링 활성화	과제 6.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6-1.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 6-2.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6-3.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 방안 검토		

자료: 여성가족부(2005). 새싹플랜(2006~2010).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보건복지부(2018).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강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4개 분야 17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간 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공급 확충과 무상보육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성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5년 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통해 이용률을 크게 상승시켰고, 어린이집 이용 욕구 및 이용 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와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시설 이용 보장을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로 전환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인력 확대, 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등 다양한 보육교사 지원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2절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4명을 대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4대 추진과제

1) 성과 평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과제, 즉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에게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4개 추진과제 중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2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달성 정도가 7점 만점에 각각 평균 5.0점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평균 4.9점,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가 평균 4.3점으로 4개 추진 과제 중 가장 낮았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국공립어린이집 40%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리모

텔링 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을 다양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을 공표 하고 미설치 사업장에 미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목표 달성 정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2-1〉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4.2	7.5	15.6	36.3	30.7	5.7	100.0(212)	5.0	
2) 보육 체계 개편	0.5	4.2	7.1	17.0	40.1	25.0	6.1	100.0(212)	4.9	
3)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1.9	8.0	15.1	26.4	31.6	15.1	1.9	100.0(212)	4.3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	3.8	11.8	24.1	33.5	24.5	2.4	100.0(212)	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전문가 유형별로 4대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관련 교수나 연구원들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목표 달성 정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7점 만점에 평균 5.1점,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평균 4.9점으로 평가하였다. 평정 구간별로 보면, 7점 만점에 5점 이상으로 평가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68.5%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76.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2-2〉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전체		4.2	7.5	15.6	36.3	30.7	5.7	100.0(212)	5.0	
보육관련교수/연구원		4.6	8.3	18.5	36.1	27.8	4.6	100.0(108)	4.9	
육아종합지원센터		3.8	6.7	12.5	36.5	33.7	6.7	100.0(104)	5.1	
χ^2 (df)/F		2.5(5)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점 만점에 평균 5.0점,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평균 4.9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평정 구간별로는 보육 과년 교수/연구원은 69.4%가 5점 이상을 응답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73.1%가 답하였다.

〈표 II-2-3〉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 체계 개편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전체	0.5	4.2	7.1	17.0	40.1	25.0	6.1	100.0(212)	4.9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3.7	9.3	17.6	40.7	25.0	3.7	100.0(108)	4.9	
육아종합지원센터	1.0	4.8	4.8	16.3	39.4	25.0	8.7	100.0(104)	5.0	
F									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4개 추진과제 중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둘다 달성 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2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4.5점이었다. 구간별로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달성 정도를 5점 이상으로 평가한 응답이 43.5%,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3.9%로 낮았다.

〈표 II-2-4〉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전체	1.9	8.0	15.1	26.4	31.6	15.1	1.9	100.0(212)	4.3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9	9.3	19.4	25.9	27.8	14.8	0.9	100.0(108)	4.2	
육아종합지원센터	1.9	6.7	10.6	26.9	35.6	15.4	2.9	100.0(104)	4.5	
F									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마지막으로 부모 양육지원 확대 목표 달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7점 만점에 평균 4.9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평균 5.1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평정 구간별로 보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49.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72.1%가 5점 이상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가정양육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II-2-5〉 4개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부모 양육지원 확대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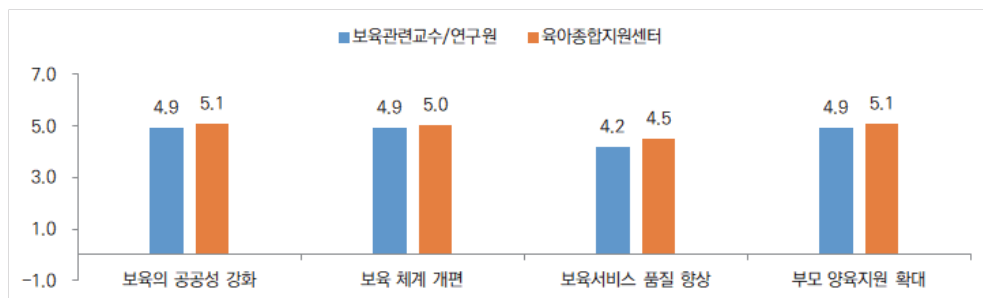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8점		
전체	-	3.8	11.8	24.1	33.5	24.5	2.4	100.0(212)	5.0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5.6	16.7	28.7	29.6	18.5	0.9	100.0(108)	4.9	
육아종합지원센터	-	1.9	6.7	19.2	37.5	30.8	3.8	100.0(104)	5.1	
F										1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01$

[그림 II-2-1]는 4대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제 특성별로 비교한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관련 교수/연구원들보다 4개 과제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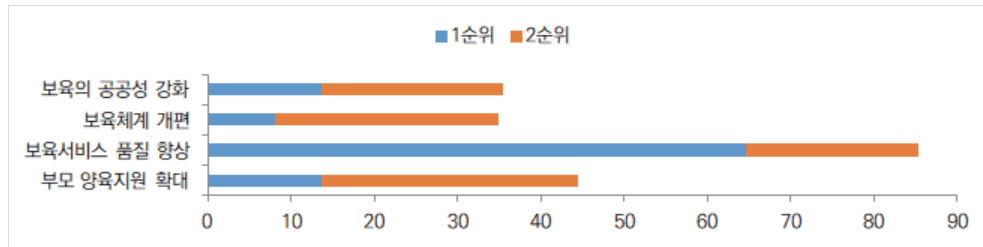
[그림 II-2-1] 제 특성별 4대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개 추진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64.6%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꼽았고, 부모 양육지원 확대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각각 13.7%, 보육체계 개편 8.0%가 들었다. 2순위로는 부모 양육지원 확대가 30.7%, 보육체계 개편 26.9%, 보육의 공공성 강화 21.7%,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20.8%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이 85.4%로 단연 높고, 다음으로 부모 양육지원 확대 44.4%,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체계 개편이 각각 35.4%, 34.9% 정도이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건강영양안전 등의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II-2-2] 추진 달성 미흡 과제: 1+2순위



〈표 II-2-6〉 4개 추진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한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계(수)
1순위	13.7	8.0	64.6	13.7	100.0(212)
2순위	21.7	26.9	20.8	30.7	100.0(212)
1+2순위	35.4	34.9	85.4	44.4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4개 추진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과제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알아본 결과,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통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장 많이 미흡한 과제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다음으로 부모 양육지원 확대 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하다고 꼽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체계 개편을 선택하였다.

〈표 II-2-7〉 제 특성별 4개 추진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한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계(수)
전체	13.7	8.0	64.6	13.7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4.8	3.7	64.8	16.7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2.5	12.5	64.4	10.6	100.0(104)
χ^2 (df)	6.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2) 향후 지속 추진 과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으로 4개 추진과제를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도 지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표 II-2-8〉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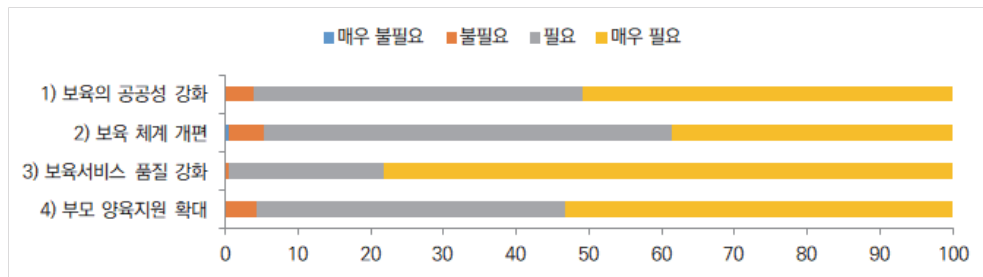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3.8	45.3	50.9	100.0(212)	3.5
2) 보육 체계 개편	0.5	4.7	56.1	38.7	100.0(212)	3.3
3)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	0.5	21.2	78.3	100.0(212)	3.8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	4.2	42.5	53.3	100.0(212)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4개 추진과제 중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과제를 향후에도 지속하여 추진할 필요(필요+매우 필요)가 있다고 답한 응답이 9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96.2%, 부모 양육지원 확대 95.8%, 보육 체계 개편 94/8% 순이었다.

필요 정도도 4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가 각각 평균 3.5점, 보육 체계 개편이 평균 3.3점으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 내에서 건강영양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높지 않아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의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편과 표준보육비용 산정, 보육과정 개편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진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3]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 정도 개요



〈표 II-2-9〉~〈표 II-2-12〉는 4개 추진과제별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을 제 특성별로 알아본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추진 필요성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3.4점으로 거의 비등하였다. 필요(필요+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각각 96.3%, 96.2%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II-2-9〉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3.8	45.3	50.9	100.0(212)	3.5	
보육관련교수/연구원		3.7	38.0	58.3	100.0(108)	3.5	3.8
육아종합지원센터		3.8	52.9	43.3	100.0(104)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 체계 개편 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4점, 3.3점으로 비등하였다. 필요와 매우 필요를 합산한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97.2%,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2.4%가 의견을 주었다.

〈표 II-2-10〉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보육 체계 개편

단위: %(명)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0.5	4.7	56.1	38.7	100.0(212)	3.3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2.8	53.7	43.5	100.0(108)	3.4	3.9
육아종합지원센터	1.0	6.7	58.7	33.7	100.0(104)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5점 만점에 평균 3.8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전체가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는 다수인 99.1%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II-2-11〉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	0.5	21.2	78.3	100.0(212)	3.8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	16.7	83.3	100.0(108)	3.8	3.7
육아종합지원센터	-	1.0	26.0	73.1	100.0(104)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각각 5점 만점에 3.5점을 주었다. 필요(필요+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

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94.4%, 육아종합지원센터 97.1%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소 많았다.

〈표 II-2-12〉 4개 추진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부모 양육지원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4.2	42.5	53.3	100.0(212)	3.5	
보육관련교수/연구원	5.6	37.0	57.4	100.0(108)	3.5	0.5
육아종합지원센터	2.9	48.1	49.0	100.0(104)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 II-2-13〉는 4개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1순위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전문가 중 57.1%가 꼽았고, 다음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모양육지원 확대, 보육체계 개편 순이었다. 2순위로는 부모 양육지원 확대가 29.2%,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27.8%, 보육체계 개편 23.6%, 보육의 공공성 강화 19.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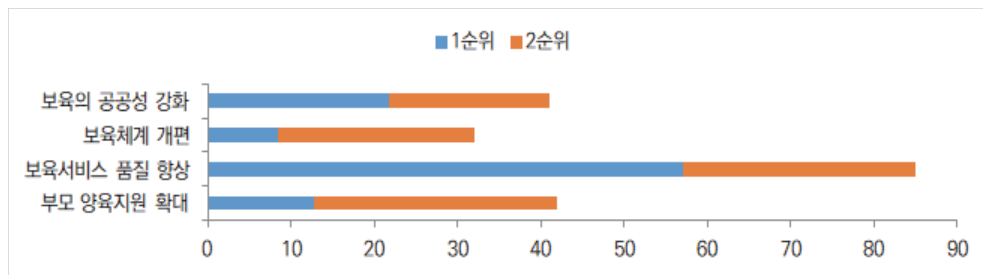
〈표 II-2-13〉 4개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한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계(수)
1순위	21.7	8.5	57.1	12.7	100.0(212)
2순위	19.3	23.6	27.8	29.2	100.0(212)
1+2순위	41	32.1	84.9	41.9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II-2-4] 4개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한 과제: 1+2순위



1,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이 84.9%로 가장 높고, 부모양육지원 확대

가 41.9%, 보육의 공공성 강화 41.0%, 보육체계 개편 32.1% 순이었다. 앞서 살펴본 목표 달성이 미흡한 과제들을 향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II-2-14〉는 4개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가 둘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꼽았다. 다음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부모 양육지원 확대, 보육체계 개편 순이었다.

〈표 II-2-14〉 제 특성별 4개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한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계(수)
전체	21.7	8.5	57.1	12.7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2.2	4.6	62.0	11.1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1.2	12.5	51.9	14.4	100.0(104)
χ^2 (df)	5.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나.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1)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과제 중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성과 평가

〈표 II-2-15〉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4개 세부과제 중 국공립 이용률 확대가 7점 만점에 평균 5.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평균 4.8점,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평균 4.6점,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평균 4.2점 순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2-15〉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1) 국공립 이용률 확대		2.8	7.1	12.7	33.0	33.5	10.8		100.0(212)	5.2
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1.9	7.1	9.0	16.5	41.5	21.2	2.8		100.0(212)	4.6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1.4	4.7	9.0	16.5	33.5	32.1	2.8		100.0(212)	4.8
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3.3	11.8	10.4	29.2	30.2	12.7	2.4		100.0(212)	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다음은 ‘국공립 이용률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5.0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5.4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관련 교수/연구원보다 달성도를 유의하게 높이 평가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70.4%와 육아종합지원센터 84.6%가 5점 이상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2-16〉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국공립 이용률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전체		2.8	7.1	12.7	33.0	33.5	10.8		100.0(212)	5.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3.7	8.3	17.6	34.3	29.6	6.5		100.0(108)	5.0
육아종합지원센터	-	1.9	5.8	7.7	31.7	37.5	15.4		100.0(104)	5.4
$X^2(df)/F$		10.1(5)								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표 II-2-17〉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전체	1.9	7.1	9.0	16.5	41.5	21.2	2.8		100.0(212)	4.6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1.9	12.0	17.6	40.7	25.0	2.8		100.0(108)	4.8
육아종합지원센터	3.8	12.5	5.8	15.4	42.3	17.3	2.9		100.0(104)	4.4
$X^2(df)/F$				-						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8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4.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목표 달성 정도

를 5점 이상 높게 평가한 비중은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68.5%, 육아종합지원센터 62.5%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더 많았다(표 II-2-17 참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7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4.9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소 높게 평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5점 이상 높게 평가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전체 응답자 중 65.8%, 육아종합지원센터는 71.1%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소 많았다.

〈표 II-2-18〉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전체	1.4	4.7	9.0	16.5	33.5	32.1	2.8	100.0(212)	4.8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5.6	10.2	17.6	36.1	27.8	1.9	100.0(108)	4.7
육아종합지원센터	1.9	3.8	7.7	15.4	30.8	36.5	3.8	100.0(104)	4.9
χ^2 (df)/F	-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7점 평균 4.3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평균 4.0점으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다소 높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이상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51.9%,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1.1%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p 이상 많았다.

〈표 II-2-19〉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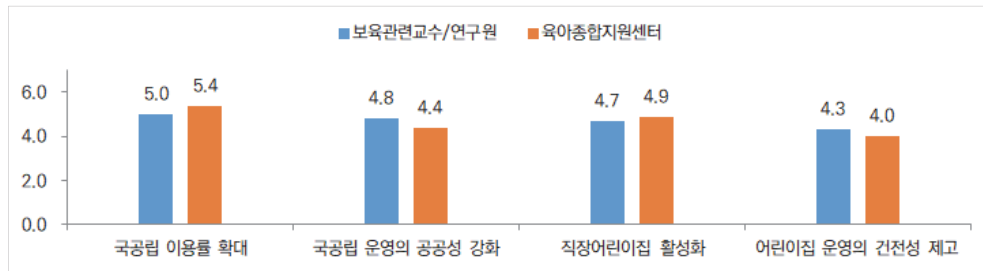
구분	←미흡		보통			달성→		계(수)	평균
	1점	2	3	4	5	6	7점		
전체	3.3	11.8	10.4	29.2	30.2	12.7	2.4	100.0(212)	4.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8	8.3	13.9	23.1	35.2	13.9	2.8	100.0(108)	4.3
육아종합지원센터	3.8	15.4	6.7	35.6	25.0	11.5	1.9	100.0(104)	4.0
χ^2 (df)/F	-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II-2-5]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전문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는 보육관련 교수/연

구원이 목표 달성 정도를 높이 평가한데 반해 국공립 이용률 확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높이 평가하여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2-5]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표 II-2-20〉~〈표 II-2-23〉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별로 목표 달성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관리동 어린이집 확대, 장기임차 방식 도입 등이 포함된 국공립 이용률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5.0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5.4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70.4%,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84.6%가 5점 이상 평가하였다.

〈표 II-2-20〉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국공립 이용률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2.8	7.1	12.7	33.0	33.5	10.8	100.0(212)	5.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3.7	8.3	17.6	34.3	29.6	6.5	100.0(108)	5.0
육아종합지원센터		1.9	5.8	7.7	31.7	37.5	15.4	100.0(104)	5.4
χ^2 (df)/F		10.1(5)							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로 사전 컨설팅 및 사후관리 강화,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이들 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8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4.4점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5점 이상 높게 평가한 전문가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68.5%, 육아종합지원센터

62.5%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많았다.

〈표 II-2-21〉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1.9	7.1	9.0	16.5	41.5	21.2	2.8	100.0(212)	4.6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1.9	12.0	17.6	40.7	25.0	2.8	100.0(108)	4.8
육아종합지원센터	3.8	12.5	5.8	15.4	42.3	17.3	2.9	100.0(104)	4.4
χ^2 (df)/F				-					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0% 이상 확대, 최소 설치기준 마련 등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각각 7점 만점에 평균 4.7점, 4.9점으로 비등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66.7%, 육아종합지원센터 70.2%가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이상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2-22〉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1.4	4.7	9.0	16.5	33.5	32.1	2.8	100.0(212)	4.8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5.6	10.2	17.6	36.1	27.8	1.9	100.0(108)	4.7
육아종합지원센터	1.9	3.8	7.7	15.4	30.8	36.5	3.8	100.0(104)	4.9
χ^2 (df)/F				-					1.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 II-2-23〉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3.3	11.8	10.4	29.2	30.2	12.7	2.4	100.0(212)	4.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8	8.3	13.9	23.1	35.2	13.9	2.8	100.0(108)	4.3
육아종합지원센터	3.8	15.4	6.7	35.6	25.0	11.5	1.9	100.0(104)	4.0
χ^2 (df)/F				-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원장 자격기준 요건 강화, 중간 관리직 신설 방안 검토 등의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제

고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3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4.0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51.9%와 육아종합지원센터 38.4%만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이상으로 답하였다.

〈표 II-2-24〉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를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1순위로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4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31.6%, 국공립 이용률 확대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가 각각 13.7%, 11.8%로 낮았다. 2순위로는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37.3%,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35.8%,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17.9%, 국공립 이용률 확대 9.0%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78.7%로 높고,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68.9%,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29.7%, 국공립 이용률 확대 22.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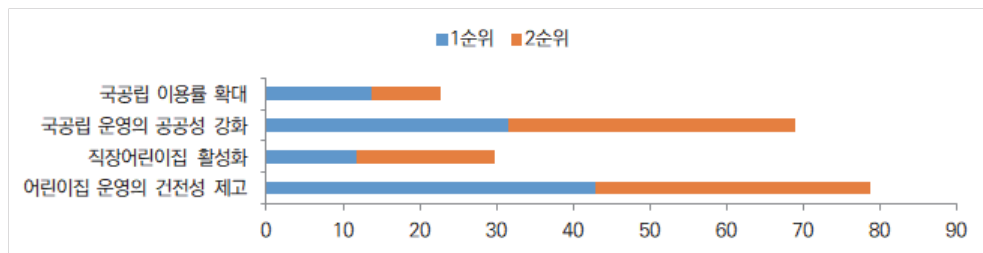
〈표 II-2-24〉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계(수)
1순위	13.7	31.6	11.8	42.9	100.0(212)
2순위	9.0	37.3	17.9	35.8	100.0(212)
1+2순위	22.7	68.9	29.7	7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II-2-6]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1+2순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알아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가장 많이 꼽았다.

〈표 II-2-25〉 제 특성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 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계(수)
전체	13.7	31.6	11.8	42.9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9.4	33.3	7.4	39.8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7.7	29.8	16.3	46.2	100.0(104)
χ^2 (df)	9.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나) 향후 지속 추진 과제

보육의 공공성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4개 세부과제 중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와 매우 필요를 합산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97.7%로 가장 많고,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가 97.2%,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90.1%, 국공립 이용률 확대 80.7% 순이었다. 그간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공립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저출생 장기화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크게 줄면서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이 악화되고 폐원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국공립 이용률에 대한 요구는 줄고, 어린이집의 운영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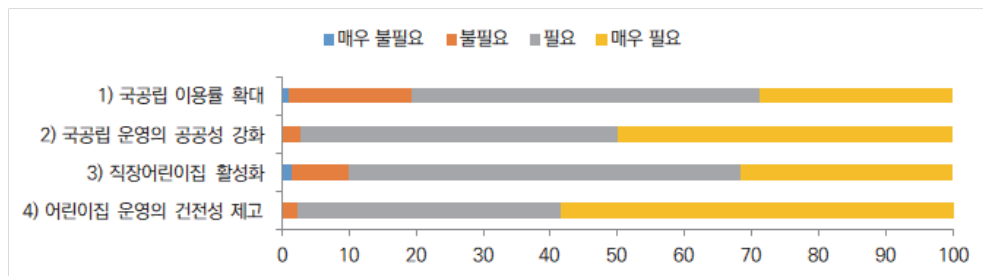
〈표 II-2-26〉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1) 국공립 이용률 확대	0.9	18.4	51.9	28.8	100.0(212)	3.1
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	2.8	47.2	50.0	100.0(212)	3.5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1.4	8.5	58.5	31.6	100.0(212)	3.2
4)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	2.4	39.2	58.5	100.0(212)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II-2-7]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표 II-2-27〉~〈표 II-2-30〉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4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를 제 특성별로 알아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관리동 어린이집 확대, 장기입차 방식 도입 등의 국공립 이용률 확대 과제에 대해 보육 관련 교수/연구원은 4점 평균 3.2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3.0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85.2%,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76.0%가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II-2-27〉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국공립 이용률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0.9	18.4	51.9	28.8	100.0(212)	3.1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14.8	53.7	31.5	100.0(108)	3.2	2.9
육아종합지원센터	1.9	22.1	50.0	26.0	100.0(104)	3.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사전 컨설팅 및 사후관리 강화,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등의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각각 4점 만점에 평균 3.5점을 답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99.1%,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95.2%가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필요+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28〉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2.8	47.2	50.0	100.0(212)	3.5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51.9	47.2	100.0(108)	3.5	0.1
육아종합지원센터	4.8	42.3	52.9	100.0(104)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률 90% 이상 확대, 최소 설치기준 마련 등의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5점 만점에 평균 3.3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1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92.6%, 육아종합지원센터 87.5%가 주었다.

〈표 II-2-29〉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1.4	8.5	58.5	31.6	100.0(212)	3.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7.4	57.4	35.2	100.0(108)	3.3	3.0
육아종합지원센터	2.9	9.6	59.6	27.9	100.0(104)	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원장 자격기준 요건 강화, 중간 관리직 신설 방안 검토 등의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등의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5점 만점에 평균 3.6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3.5점으로 둘다 필요 정도가 높았다. 보육 관련 교수/연구원 97.2%, 육아종합지원센터 98.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표 II-2-30〉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2.4	39.2	58.5	100.0(212)	3.6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8	37.0	60.2	100.0(108)	3.6	0.1
육아종합지원센터	1.9	41.3	56.7	100.0(104)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앞서 살펴본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35.4%, 34.0%가 각각 가장 많이 꼽았고, 2순위로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41.0%로 높고, 다음을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32.5% 순이었다.

〈표 II-2-3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계(수)
1순위	16.5	34.0	14.2	35.4	100.0(212)
2순위	9.9	32.5	16.5	41.0	100.0(212)
1+2순위	26.4	66.5	30.7	76.4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1,2순위를 합산하면,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가 7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66.5%, 국공립 이용률 확대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는 30% 내외로 저조하였다. 출생아 수 감소에 보육 현장이 축소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II-2-32〉는 앞서 살펴본,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향후 지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가장 많이 골랐다.

〈표 II-2-32〉 제 특성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계(수)
전체	16.5	34.0	14.2	35.4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1.3	28.7	15.7	34.3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1.5	39.4	12.5	36.5	100.0(104)
χ^2 (df)	5.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2)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과제 중 보육 체계 개편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성과 평가

보육체계 개편 과제에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편 3개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알아보았다.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이 7점 만점에 평균 5.0점으로 가장 높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과 보육과정 개편이 각각 4.5점으로 동일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II-2-33〉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과제의 세부과제 목표 달성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3.3	7.1	14.6	38.7	29.7	6.6	100.0(212)	5.0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3.3	8.0	10.4	21.7	32.1	22.6	1.9	100.0(212)	4.5
3) 보육과정 개편	2.4	5.2	13.7	21.7	34.0	20.8	2.4	100.0(212)	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준 보육시간제도 도입,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선 등의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7점 만점에 평균 5.0점, 5.1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73.1%,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76.9%가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표 II-2-34〉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	3.3	7.1	14.6	38.7	29.7	6.6	100.0(212)	5.0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2.8	10.2	13.9	37.0	32.4	3.7	100.0(108)	5.0
육아종합지원센터	-	3.8	3.8	15.4	40.4	26.9	9.6	100.0(104)	5.1
χ^2 (df)/F		6.8(5)							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의 목표 달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평균 4.7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4.3점으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목표 달성 정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5점 이상한 응답한 비율이 62.9%,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0.0%가 응답하였다.

〈표 II-2-35〉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3.3	8.0	10.4	21.7	32.1	22.6	1.9	100.0(212)	4.5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5.6	11.1	19.4	36.1	25.9	0.9	100.0(108)	4.7
육아종합지원센터	5.8	10.6	9.6	24.0	27.9	19.2	2.9	100.0(104)	4.3
χ^2 (df)/F									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p < .05

보육 체계 개편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 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6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4.4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59.3%,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54.8%가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이상으로 답하였다.

〈표 II-2-36〉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과정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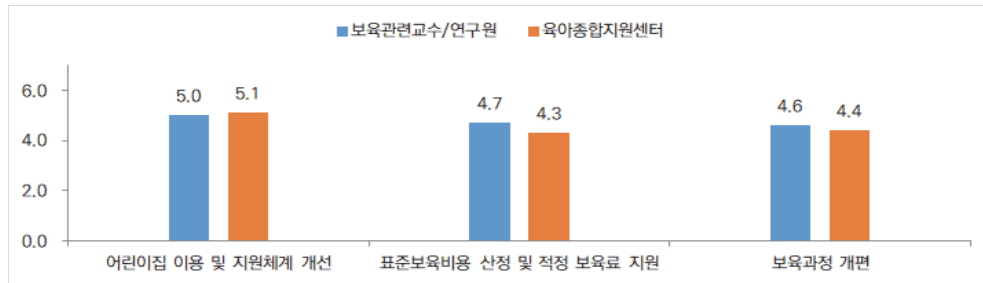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2.4	5.2	13.7	21.7	34.0	20.8	2.4	100.0(212)	4.5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2.8	15.7	21.3	38.0	19.4	1.9	100.0(108)	4.6
육아종합지원센터	3.8	7.7	11.5	22.1	29.8	22.1	2.9	100.0(104)	4.4
$\chi^2(df)/F$									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II-2-8]은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응답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목표 달성 정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림 II-2-8]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개요



〈표 II-2-37〉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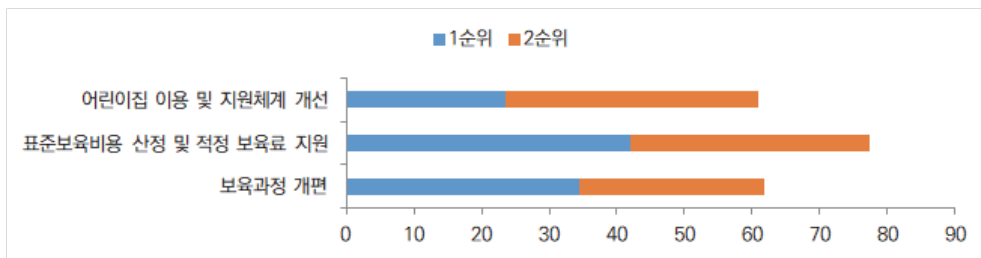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편	계(수)
1순위	23.6	42.0	34.4	100.0(212)
2순위	37.3	35.4	27.4	100.0(212)
1+2순위	60.9	77.4	61.8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 II-2-37〉은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과제를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1순위로 42.0%가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을 꼽았고, 다음으로 34.4%가 보육과정 개편, 23.6%가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순이었다. 2순위로는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이 37.3%,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35.4%, 보육과정 개편 27.4%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이 77.4%로 가장 높고, 보육과정 개편 61.8%,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이 60.9% 순이었다.

〈그림 II-2-9〉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나) 향후 지속 추진 과제

보육체계 개편 과제의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II-2-38〉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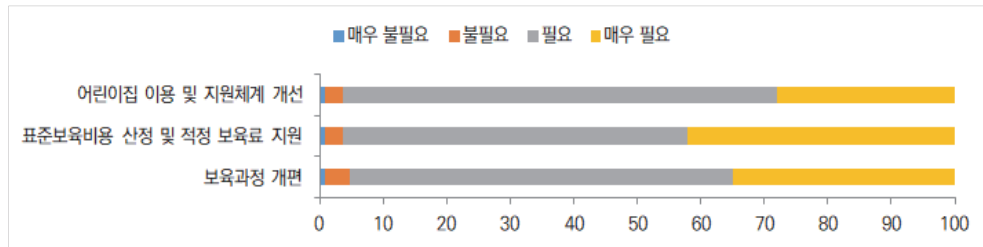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0.9	2.8	68.4	27.8	100.0(212)	3.2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0.9	2.8	54.2	42.0	100.0(212)	3.4
3) 보육과정 개편	0.9	3.8	60.4	34.9	100.0(212)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3개 세부과제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2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96.2%로 높았다.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이 5점 평균 3.4점으로 3개의 세부과제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보육과정 개편 평균 3.3점,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이 평균 3.2점 순이었다. 표준보육비용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산출되어야 하고, 보육료가 실제 보육비용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연장보육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연장보육교사 채용이 어렵고, 야간연장형 보육 등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II-2-10]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표준 보육시간제도 도입,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선 등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4점 평균 3.3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3.2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99.1%, 육아종합지원센터 93.2%가 필요(필요+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39〉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F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체	0.9	2.8	68.4	27.8	100.0(212)	3.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	70.4	28.7	100.0(108)	3.3	1.1
육아종합지원센터	1.0	5.8	66.3	26.9	100.0(104)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 II-2-40〉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F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체	0.9	2.8	54.2	42.0	100.0(212)	3.4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1.9	60.2	37.0	100.0(108)	3.3	1.0
육아종합지원센터	1.0	3.8	48.1	47.1	100.0(104)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준보육비용 재계측 추진 등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4점 평균 3.3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4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97.2%,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5.2%가 답하였다.

특별활동 운영 기준 개선,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 등의 보육과정 개편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각각 4점 평균 3.3점으로 비등하였다. 필요 정도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97.3%,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3.3%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표 II-2-41〉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과제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보육과정 개편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0.9	3.8	60.4	34.9	100.0(212)	3.3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1.9	63.0	34.3	100.0(108)	3.3	0.1
육아종합지원센터	1.0	5.8	57.7	35.6	100.0(104)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 II-2-41〉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을 36.8%가 꼽았고,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34.4%, 보육과정 개편 28.8% 순이었다. 2순위도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이 42.9%로 가장 높고,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34.0%, 보육과정 개편 23.1%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이 7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이 68.4%, 보육과정 개편 51.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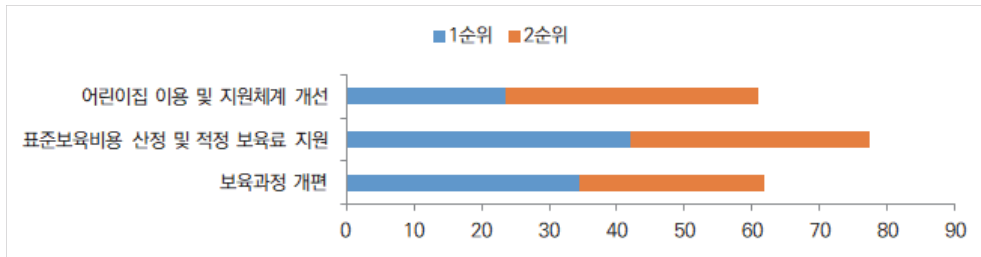
〈표 II-2-42〉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 1+2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편	계(수)
1순위	34.4	36.8	28.8	100.0(212)
2순위	34.0	42.9	23.1	100.0(212)
1+2순위	68.4	79.7	51.9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II-2-11]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표 II-2-43〉는 보육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보육 관련 교수/연구원은 1순위로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편을 가장 많이 꼽았다.

〈표 II-2-43〉 과제 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편	계(수)
전체	34.4	36.8	28.8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36.1	29.6	34.3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32.7	44.2	23.1	100.0(104)
χ^2 (df)	5.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3)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과제 중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성과 평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4개 세부과제 중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의 목표 달성 정도가 7점 평균 4.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평균 3.9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 평균 3.8점으로 낮았다. 5점 이상 높게 평가한 응답은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가 7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60.8%,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60.3%, 보

육교사 전문성 강화 59.0%가 답하였다.

〈표 II-2-44〉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의 세부과제 목표 달성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8.0	18.4	12.3	24.1	27.4	7.5	2.4	100.0(212)	3.8
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4.2	14.2	19.3	24.5	21.7	14.6	1.4	100.0(212)	3.9
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4.2	11.8	22.2	29.2	23.6	7.5	1.4	100.0(212)	3.8
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7.1	13.7	26.9	32.1	16.0	4.2	100.0(212)	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 II-2-44〉~〈표 II-2-47〉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제 특성별로 알아본 것이다.

자격체계 개편, 대학 중심 신규 자격취득 활성화, 보수교육 강화, 총괄관리기관 신설 등의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의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세부과제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평균 3.6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9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34.2%,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40.3%가 5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표 II-2-45〉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8.0	18.4	12.3	24.1	27.4	7.5	2.4	100.0(212)	3.8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2.0	14.8	13.9	25.0	25.0	8.3	0.9	100.0(108)	3.6
육아종합지원센터	3.8	22.1	10.6	23.1	29.8	6.7	3.8	100.0(104)	3.9
$\chi^2(df)/F$	9.1(6)								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적정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보장 등의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척도로 평균 3.7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4.2점으로 평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31.4%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44.2%가 5점 이상으로 답하였다.

〈표 II-2-46〉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4.2	14.2	19.3	24.5	21.7	14.6	1.4	100.0(212)	3.9
보육관련교수/연구원	6.5	14.8	23.1	24.1	19.4	12.0	-	100.0(108)	3.7
육아종합지원센터	1.9	13.5	15.4	25.0	24.0	17.3	2.9	100.0(104)	4.2
χ^2 (df)/F									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탄력보육 최소 운영, 영유아반 구성 기준개편 방안 마련 등의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는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7점 만점에 평균 3.9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8점으로 답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31.5%,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33.7%가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표 II-2-47〉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4.2	11.8	22.2	29.2	23.6	7.5	1.4	100.0(212)	3.8
보육관련교수/연구원	3.7	7.4	23.1	34.3	25.9	5.6	-	100.0(108)	3.9
육아종합지원센터	4.8	16.3	21.2	24.0	21.2	9.6	2.9	100.0(104)	3.8
χ^2 (df)/F									0.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의무화, 평가 수준별 사후관리, 찾아가는 아동안전 체험관, 안전컨설팅 확대 실시 등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달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II-2-48〉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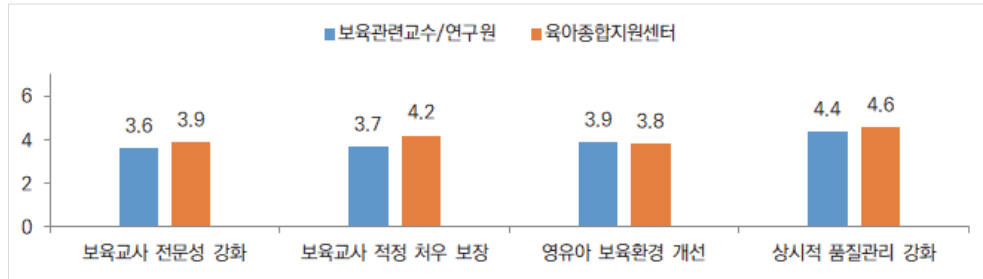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7.1	13.7	26.9	32.1	16.0	4.2	100.0(212)	4.5
보육관련교수/연구원		7.4	13.9	28.7	33.3	16.7	-	100.0(108)	4.4
육아종합지원센터		6.7	13.5	25.0	30.8	15.4	8.7	100.0(104)	4.6
χ^2 (df)/F		9.8(5)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4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4.6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50.0%,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54.9%만 5점 이상으로 답하였다.

[그림 II-2-12]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별 목표 달성 정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가 50.9%,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33.0%,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는 10% 내외 이었다. 2순위는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가 각각 28.8%, 23.6%이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가 13.7%로 가장 적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가 74.5%로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과제로 꼽혔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이 61.8%,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45.8%,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17.9%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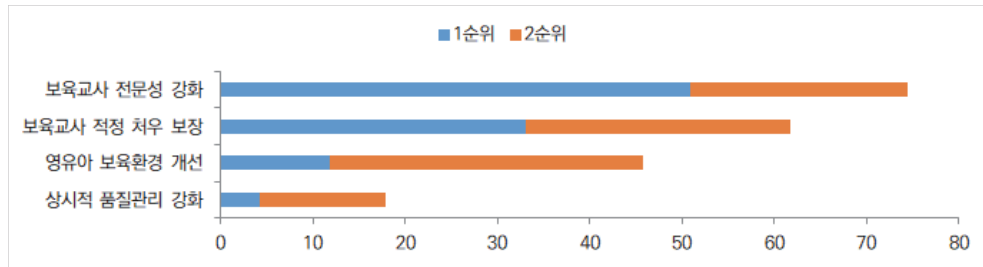
〈표 II-2-49〉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계(수)
1순위	50.9	33.0	11.8	4.2	100.0(212)
2순위	23.6	28.8	34.0	13.7	100.0(212)
1+2순위	74.5	61.8	45.8	17.9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II-2-13]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표 II-2-50〉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1순위를 제 특성 별로 알아본 것이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둘다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과제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2-50〉 제 특성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계(수)
전체	50.9	33.0	11.8	4.2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62.0	32.4	-	5.6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39.4	33.7	24.0	2.9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나) 향후 지속 추진 과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II-2-51〉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적인 추진 필요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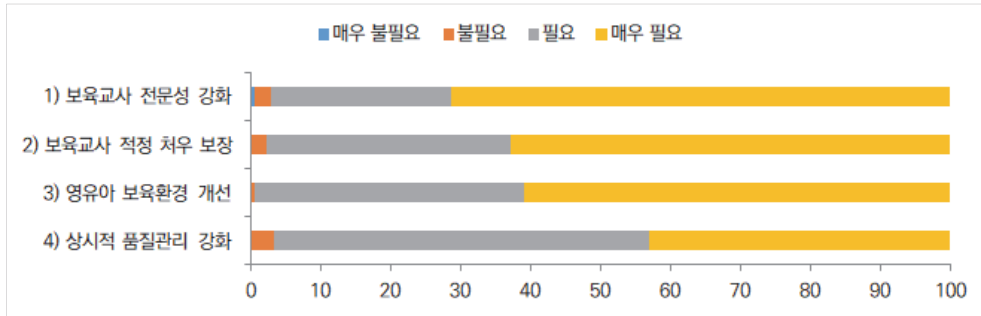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0.5	2.4	25.9	71.2	100.0(212)	3.7
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	2.4	34.9	62.7	100.0(212)	3.6
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	0.5	38.7	60.8	100.0(212)	3.6
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	3.3	53.8	42.9	100.0(212)	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가 4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 각각 평균 3.6점,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가 평균

3.4점으로 가장 낮았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 9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97.6%,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97.1%,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96.7% 순이었다.

[그림 II-2-14]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표 II-2-52〉~〈표 II-2-55〉는 제 특성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자격체계 개편, 대학 중심 신규 자격취득 활성화, 보수교육 강화, 총괄 관리기관 신설 등의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4점 척도로 평균 3.7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3.6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II-2-52〉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0.5	2.4	25.9	71.2	100.0(212)	3.7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1.9	20.4	76.9	100.0(108)	3.7	2.0
육아종합지원센터	-	2.9	31.7	65.4	100.0(104)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적정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보장, 탐력보육 최소 운영, 영유아반 구성기준 개편 방안 마련 등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세부과제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4점 척도로 평균 3.7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5점으로 평가하였다.

〈표 II-2-53〉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단위: %(명), 점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2.4	34.9	62.7	100.0(212)	3.6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9	30.6	67.6	100.0(108)	3.7	2.2
육아종합지원센터	2.9	39.4	57.7	100.0(104)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탄력보육 최소 운영, 영유아반 구성기준 개편 방안 마련 등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세부 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4점 척도로 평균 3.6 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6점으로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II-2-54〉 과제 34.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0.5	38.7	60.8	100.0(212)	3.6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40.7	58.3	100.0(108)	3.6	0.8
육아종합지원센터	-	36.5	63.5	100.0(104)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의무화, 평가 수준별 사후관리,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관, 안전 컨설팅 확대 실시 등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4점 척도로 평균 3.5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3.3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55〉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3.3	53.8	42.9	100.0(212)	3.4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8	49.1	48.1	100.0(108)	3.5	2.4
육아종합지원센터	3.8	58.7	37.5	100.0(104)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 II-2-56〉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본 것이다. 1순위로 56.6%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꼽았고, 다음으로 27.8%가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나머지는 10% 내외 이었다. 2순위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과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 각각 30% 대로 높고, 나머지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가 7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이 61.8%,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43.9%,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17.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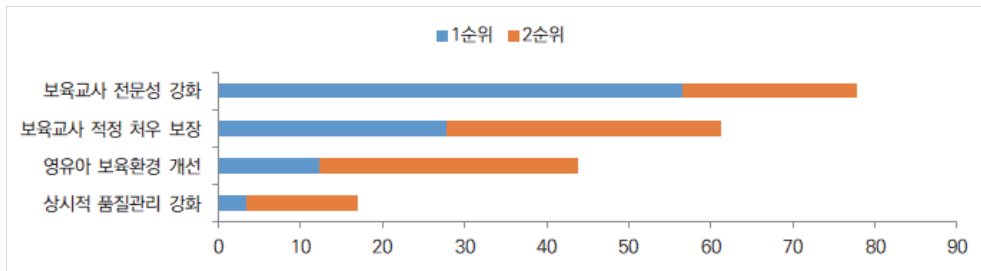
〈표 II-2-56〉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계(수)
1순위	56.6	27.8	12.3	3.3	100.0(212)
2순위	21.2	33.5	31.6	13.7	100.0(212)
1+2순위	77.8	61.3	43.9	17.0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II-2-15〉 과제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표 II-2-57〉 제 특성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계(수)
전체	56.6	27.8	12.3	3.3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73.1	23.1	0.9	2.8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39.4	32.7	24.0	3.8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표 II-2-57〉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알아본 것이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73.1%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꼽은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함께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세부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4)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과제 중 부모 양육지원 확대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도와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성과 평가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별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정내 양육지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달성 정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가 평균 4.7점,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정내 양육지원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이상 높이 평가한 응답자는 63.2%이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는 59.9%, 취약보육 지원 개선 41.0% 순이었다.

〈표 II-2-58〉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1) 가정내 양육지원	1.9	5.7	9.0	20.3	31.6	23.1	8.5	100.0(212)	4.8
2)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1.4	5.2	10.8	22.6	31.6	21.2	7.1	100.0(212)	4.7
3) 취약보육 지원 개선	2.8	11.3	13.2	31.6	29.7	7.5	3.8	100.0(212)	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 정보 제공 및 안내 등의 가정 내 양육지원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알아본 결과,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5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5.1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53.7%,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73.1%가 5점 이상 높이 평가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높이 평가한 비중이 많았다.

〈표 II-2-59〉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가정 내 양육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1.9	5.7	9.0	20.3	31.6	23.1	8.5	100.0(212)	4.8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9	4.6	13.9	25.9	35.2	15.7	2.8	100.0(108)	4.5
육아종합지원센터	1.9	6.7	3.8	14.4	27.9	30.8	14.4	100.0(104)	5.1
χ^2 (df)/F				24.4(6)***					1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 $p < .001$

시간제보육반 5년간 단계적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평균 4.4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5.0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목표 달성 정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5점 이상 높이 평가한 비율은 51.9%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8.2%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2-60〉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1.4	5.2	10.8	22.6	31.6	21.2	7.1	100.0(212)	4.7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6.5	14.8	25.9	34.3	14.8	2.8	100.0(108)	4.4
육아종합지원센터	1.9	3.8	6.7	19.2	28.8	27.9	11.5	100.0(104)	5.0
χ^2 (df)/F				15.8(6)*					1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 $p < .01$

〈표 II-2-61〉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 취약보육 지원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미흡 1점	2	3	보통 4	5	6	달성→ 7점	계(수)	평균
전체	2.8	11.3	13.2	31.6	29.7	7.5	3.8	100.0(212)	4.1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8	9.3	19.4	31.5	27.8	6.5	2.8	100.0(108)	4.0
육아종합지원센터	2.9	13.5	6.7	31.7	31.7	8.7	4.8	100.0(104)	4.2
χ^2 (df)/F									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장애아, 다문화 아동 등 취약보육 지원 개선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7점 만점에 평균 4.0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균 4.2점으로 비등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37.1%,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45.2%만 목표 달성 정도를 5점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표 II-2-59〉는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한 과제를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1순위로 취약보육 지원 개선을 꼽은 비율이 556.1%로 높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 30.2%,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13.7% 순이었다. 2순위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가 48.6%로 높고, 가정 내 양육지원과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각각 26.4%, 25.0%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81.1%로 가장 높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62.3%, 가정내 양육지원 56.6%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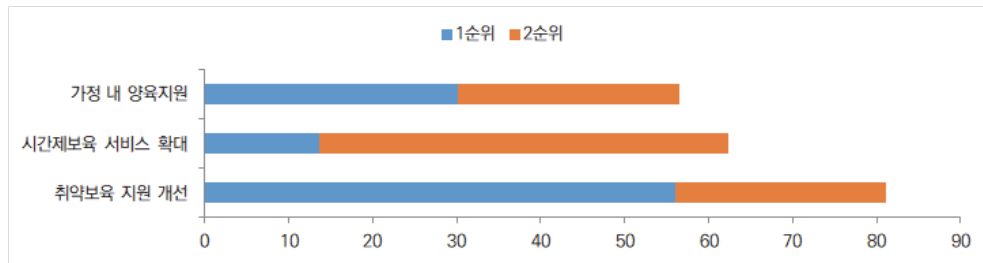
〈표 II-2-62〉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구분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단위: %(명) 계(수)
1순위	30.2	13.7	56.1	100.0(212)
2순위	26.4	48.6	25.0	100.0(212)
1+2순위	56.6	62.3	81.1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그림 II-2-16]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2순위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과 과제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목표 달성 정도 미흡과제로 취약보육 지원 개선을 선택하였다.

〈표 II-2-63〉 제 특성별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1순위

구분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단위: %(명) 계(수)
전체	30.2	13.7	56.1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38.0	15.7	46.3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2.1	11.5	66.3	100.0(104)
$X^2(df)$	8.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나) 향후 지속 추진 과제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4점 평균 3.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순이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취약보육 지원이 99.1%, 가정내 양육지원 97.2%,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91.0% 순이었다.

〈표 II-2-64〉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1) 가정내 양육지원	1.4	1.4	53.3	43.9	100.0(212)	3.4
2)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1.9	7.1	62.7	28.3	100.0(212)	3.2
3) 취약보육 지원 개선	0.5	0.5	45.8	53.3	100.0(212)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 정보 제공 및 안내 등 가정내 양육지원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에 대해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각 평균 3.3점, 3.5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II-2-65〉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가정 내 양육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1.4	1.4	53.3	43.9	100.0(212)	3.4	
보육관련교수/연구원	0.9	2.8	59.3	37.0	100.0(108)	3.3	3.3
육아종합지원센터	1.9	-	47.1	51.0	100.0(104)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시간제보육반 5년간 단계적 확대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도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4점 만점에 평균 3.3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균 3.1점으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이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2-66〉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1.9	7.1	62.7	28.3	100.0(212)	3.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4.6	64.8	30.6	100.0(108)	3.3	4.0*
육아종합지원센터	3.8	9.6	60.6	26.0	100.0(104)	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취약보육 지원 개선은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동일하게 향후 지속추진 필요 정도를 4점 평균 각각 3.5점으로 평가하였다.

〈표 II-2-67〉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향후 지속 추진 필요 정도: 취약보육 지원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계(수)	평균	F
전체	0.5	0.5	45.8	53.3	100.0(212)	3.5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0.9	45.4	53.7	100.0(108)	3.5	0.1
육아종합지원센터	1.0	-	46.2	52.9	100.0(104)	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본 결과는 〈표 II-2-65〉에 정리하였다.

〈표 II-2-68〉 과제 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계(수)
1순위	41.0	18.4	40.6	100.0(212)
2순위	25.5	38.7	35.8	100.0(212)
1+2순위	66.5	57.1	7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1순위로 가정 내 양육지원 사업과 취약보육 지원개선이 각각 41.0%, 40.6%로 차이가 없었고, 2순위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와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각각 38.7%, 35.8%로 높았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76.4%, 가정 내 양육지원 66.5%,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57.1% 순이었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1순위를 제 특성별로 보면, 보육 관련 교수/연구원은 가정 내 양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취약보육 지원 개선을 선택하였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원에 따른 가정 양육 아동 증가에 따라 가정 내 양육지원 확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내 장애 아동 및 다문화 아동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II-2-69〉 제 특성별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계(수)
전체	41.0	18.4	40.6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44.4	19.4	36.1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37.5	17.3	45.2	100.0(104)
χ^2 (df)	1.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다. 총괄 평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당초 목표로 설정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 II-2-70〉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 기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어느 정도 기여	매우 기여	계(수)	평균
전체	-	5.2	78.8	16.0	100.0(212)	3.1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6.5	77.8	15.7	100.0(108)	3.1
육아종합지원센터	-	3.8	79.8	16.3	100.0(104)	3.1
$\chi^2(df)/F$		0.7(2)				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78.8%가 어느 정도 기여, 16.0%가 매우 기여하였다고 답하여 조사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부분이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여 정도는 4점 평균 3.1점으로 높은 편이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각 4점 평균 3.1점으로 기여 정도를 동일하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기여가 76.4%, 매우 기여가 13.2%로 기여하였다는 의견이 90% 가까이 되고, 기여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3.0점으로 높았다. 전문가 유형별로도 기여했다는 비율이나 기여 정도가 차이가 없었다.

〈표 II-2-7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 기여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어느 정도 기여	매우 기여	계(수)	평균
전체	-	10.4	76.4	13.2	100.0(212)	3.0
보육관련교수/연구원	-	10.2	75.9	13.9	100.0(108)	3.0
육아종합지원센터	-	10.6	76.9	12.5	100.0(104)	3.0
$\chi^2(df)/F$	-	0.1(2)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3. 시사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개 추진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높았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목표 달성이 가장 미흡한 과제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이 꼽혔다. 이는 정부가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개편하고 부모 참여를 활성화한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지만, 어린이집의 자율적 질 관리보다는 정부 주도의 질 관리체계가 유지되어 왔고, 부모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보육서비스 질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국공립 이용률 확대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는 높았으나,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목표 달성이 미흡한 과제 및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순이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고, 특히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가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셋째,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 체계 개선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높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의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4년마다 표준보육비용 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자마다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산출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가 급격하게 인상되었지만 출생아 수의 절대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이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낮는데 반해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는 목표 달성 정도가 높았다. 또한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과제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작업을 시도한 바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학과 통폐합 등에 따른 학계의 반대로 합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취약보육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가정내 양육지원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높고, 취약보육 지원 개선이 가장 낮았다. 이는 장애아 및 다문화 아동 등을 둔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Ⅲ.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제3장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과 해외의 보육 및 가정양육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가. 가정양육지원

1)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육아와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관리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사업명이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로 변경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표 Ⅲ-1-1〉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업무 내용

구분	업무 내용
자원관리	• 각종 육아지원 정보 수집 및 업데이트 등
상담	• 전화상담, 현장상담, 온라인(육아카페, SNS) 상담 등 • 일반상담 및 전문상담 연계 등
정보제공	• 일반가정, 출산전입가정, 취약가정 등에 정보 제공 등
현장활동	• 부모 자조모임 결성 및 지원 • 보육반상회 운영 지원 • 유관 기관과 협력 관계 형성 • 육아정책 및 보육서비스에 대한 각종 홍보 등

자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22). 우리동네 보육반장 추진 계획 내부자료.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자원관리, 상담, 정보 제공, 현장활동 4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출산·전입에 필요한 육아정보 제공,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 지원, 자조모임 지원, 보육반상회 지원, 기관 안내 및 연계, 0~7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육아상담 서비스 등이다. 이용자는 120(다산콜)이나 우리동네 키움포털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반장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 141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단, 주1회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출근해야 한다. 보육반장은 시급 2022년 기준 9,160원이며, 통신비(월 20,000원), 간식 및 교통비(일 5,000원, 월 35,000원), 교육비(일 20,000원) 등의 활동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4대 보험 중 의무가입 대상에 가입한다.

2)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운영

충청남도는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며, 시도-시군구센터의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I-1-1]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자료: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cnbumo.or.kr/main/index.php>).

[그림 III-1-2]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교육신청 페이지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the 'Chungnam Parent Education Record System'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The left screenshot shows the 'Parent Education' (부모교육) section with a list of available courses. The right screenshot shows the 'Online Parent Education' (온라인 부모교육) section with a list of applied courses.

번호	부분	특성	신청기간 / 교육기간	신청인원	신청
136	부모교육	[충청남도]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5.17 - 2022.05.04 2022.02.07 - 2022.02.07	6 / 200 (0 / 1)	신청
137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5.05 - 2022.05.05 2022.05.05 - 2022.05.05	76 / 200 (0 / 1)	신청
138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39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0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1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2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3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4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5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6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7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8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49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50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51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152	부모교육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예비 초등학생을 위한 부모교육	2022.02.28 - 2022.03.06 2022.02.07 - 2022.02.07	33 / 200 (0 / 1)	신청

자료: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cnbumo.or.kr/main/index.php>)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에서는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부모교육을 신청하거나 수강 중인 과정, 완료한 과정, 취소한 과정 등의 수강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아이사랑플래너와 영유아성행동상담, 충남형 유아긍정행동발달 프로젝트 신청 조회할 수 있다. 이 외에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육아상담(아이사랑플래너, 영유아 성행동상담, 충남형 유아긍정 행동발달 프로젝트 양육상담 등)과 육아보육 정보도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나.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1) 개요

일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어린이집 인건비 및 보육료 등을 보조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2008년부터 선도적으로 0세반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대전과 전남 광양에서도 2019년부터 경기도의 0세 전용어린이집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과 서울시 동작구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하나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I-1-2〉 지방자치단체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관련 시책사업

구분	사업명	반 편성 기준	지원 내용
경기	0세 전용 어린이집	(0세반) 1:2 (1세반) 1:3	지원대상: 가정어린이집(인건비 미지원 시설) (※ 공공형 제외) - 사업규모: 303개소 - 사업비: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월 1,800천원/인 • 추가반 운영비: 월 600천원 /반 •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월 445천원/인 • 조리원 인건비: 월 600천원/인
인천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사업	(0세반) 1:2 (1세반) 1:4	- 지원대상: 정원 39인 이하 민간, 가정어린이집 (※ 영아반 2개반 이상 구성시, 혼합반 제외) - 사업규모: '20년 25개소 ('16년 10개소, '17년 50개소, '18년 100개소, '19년 30개소) - 사업비: 시비 50%, 구비 50% -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 4,000천원/개소 • 인건비: (0세반 2개반 운영) 2,343천원/월 (0세반(1개), 1세반(1개) 2개반 운영) 2,083천원/월 (※ 0세반 1개반 포함, 보육교사가 담임교사 담당 시 지원)
대전	0세 전용 어린이집	(0세반) 2:3	- 지원대상: 시립 및 국공립 어린이집 - 사업규모: '19년 11개소(12개반), '20년 11개소(15개반) - 사업비: 시비 100% - 지원내용 • 인건비: 월 2,325천원/인(국공립 4호봉 기준, 기관부담금 4대 보험료, 퇴직금 지원) • 운영비: 반당 100천원(특수교재 및 환경개선비, 교사급식비 등)
서울 동작	영유아 중심 보육사업 개선	(0세반) 1:2 (3세반) 1:10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 사업규모: '20년 2개소 - 사업비: 구비 100% - 지원내용: 담당교사 인건비 • 0세반: 보육교사 기본급 20%, 제수당, 4대보험 등 기관부담금 • 3세반: 보육교사 기본급 70%, 제수당, 4대보험 등 기관부담금
전남 광양	광양형 0,1세 아이 전용어린이집	(0세반) 1:2	- 지원대상: 신청기관 중 고독점 어린이집(부록 2 참조) - 사업규모: '20년 3개소 - 사업비: 시비 100% - 지원내용: 0세반 970천원(기본보육료 500천원, 이용보육료 470천원) ※ 혼합반 포함 6개반까지 지원

자료: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2020). 보육사업안내.
 서울시 동작구, 전남 광양시(2020). 사업안내 공고문.

앞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0세 전용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 좀더 살펴보았다. 이 사업은 취업모의 영아 자녀 보육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상승에 따라

영아자녀 보육지원 사업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원대상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이지만 사업 초기에는 민간어린이집을 일부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선정 시 취업 모 또는 맞벌이 부모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였으나 이후 취업모 및 맞벌이 부모 비율이 낮아져도 동일하게 지원하여 사업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

2) 서울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서울시는 2021년부터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과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만0세반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에서 1:2로, 만3세반 교사대 아동비율을 1:15에서 1:10으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교사대 아동비율 축소에 따라 신규 채용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였으며 2022년에는 국공립을 제외한 서울형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만0세반 25개소, 만3세반 25개소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공통기준으로 ①시범사업 기준(반 구성 기준, 반 편성 공통기준 등) 충족하고, ②정부 평가제 가장 최근의 결과가 A,B등급 또는 평가인증 80점 이상인 곳, ③신청반 보육실 면적기준(보육아동 1인당 2.64㎡) 충족, ④신청기간 현재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진행 사항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최저 79점 이상 어린이집 중 고득점 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3〉 서울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선정 심사기준

운영현황(70)	전문성(30)	가산점(6)	감점(-5)
연장반, 취약보육 운영 등	담임교사 경력, 원장의 보육 경력 등	특별활동 미운영, 공유어린이집 운영 등	시정명령 이상 행정처분

자료: 서울특별시(2022).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관련 내부자료.

시범사업 반 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원래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연령별 신규 반을 추가 편성한다. 0세반 기준 2개반(6명) 이상 운영 어린이집의 경우 1:2 기준에 따라 3개반으로 분리하고 교사는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난다. 만3세반은 1개반(15명) 이상 운영 시 8명과

8명의 2개 반으로 나누어 교사가 1명 더 배치된다. 각 반별 현원 최소기준은 0세반 2명 미만, 3세반 7명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 1보육실 최대 3개반까지 공동담임제를 허용하였다. 0세, 3세 현원이 이미 감소되어 신규 반 편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건비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범반 교사 1명의 본봉과 기타인건비를 제공하며, 본봉과 기타인건비 외에 누리담임수당이나 처우개선비 등은 개별 지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만일 시범사업 지정 취소 시에는 취소 통보일 해당 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현원 최소기준 미만 1개월 경과 시에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 해당 월까지만 인건비가 지원된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로 인해 시설의 운영 현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기준에 맞게 영유아보육법령 및 복지부,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등의 관계법령과 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서울형 재공인에 탈락 또는 공인 취소된 경우, 어린이집의 취소 요청 시, 법령 위반으로 시정(개선) 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시, 민원 발생 또는 부정정보 등 시범어린이집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 기간 중 정부 평가제 C등급 또는 D등급 또는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 시범사업 선정은 취소될 수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어린이집의 역할은 [그림 III-1-3]과 같다.

[그림 III-1-3] 서울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역할

<p>서울시 (보육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수립, 예산지원 및 사전·사후 사업평가 총괄 •자치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 언론 홍보 •시범사업 대상 50개소 어린이집 최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추천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자료 확인(총 100곳)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7명 이내)
<p>자치구 (보육업무 담당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계획 안내(관할 서울형어린이집 등) 및 신청 접수 •신청 어린이집 적격 여부 확인 및 자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제출서류 검토(신청서, 운영계획, 실적증빙 등) -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외부 위원 포함) * 심의 시 심사점수(실적), 운영계획 등 고려하여 추천시설 선정 •자치구 추천 시설 서울시 제출 : 총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반 2개소, 3세반 2개소
<p>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간 내 자치구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공고문(신청조건, 반구성 기준 등) 확인 필수 •선정 시 시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적극 참여(사전·사후평가 등)

자료: 서울특별시(2022). 내부자료.

3) 전남 광양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광양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과 아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에 따라 2020년 3월 전국 시군구 최초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정하였다. 광양시는 어린이집 0세, 1세 영아를 밀착 보육하고 지역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만0세와 만1세의 교사 1인당 돌보아야 하는 아동수를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1명씩 감축하고 감소된 1명의 보육료를 담임교사 인건비로 시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 3월 시작되어 2021년 일부 시행을 거쳐 2022년 전면 시행 중에 있다. 예산은 1단계 1,500백만원, 2단계 일부 시행은 2,337백만원, 전면 시행은 3,239백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실제 집행액은 1단계 967백만원, 2단계 일부 시행 1,777백만원, 2단계 전면 시행 1,130백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림 III-1-4] 광양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추진 경과

1단계(2020)	2단계 일부시행(2021)	2단계 전면시행(2022)
0세반	0~1세반	0~1세반
영영아 우선시행	1세까지 일부시행	1세까지 전면시행
1,500백만원 (967백만원)	2,337백만원 (1,777백만원)	3,239백만원 (1,130백만원)
65개소 131개반	73개소, 194개반	86개소, 303개반

자료: 전남 광양시(2022). 내부자료.

전남 광양시에서 추진한 2020년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용역 결과에서 반 정원 조정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86%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다양화

1) 철도 역사 및 집합건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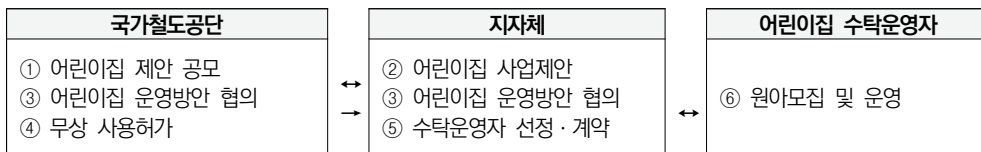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2021년 말 기준 20.1%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반대도 거세지만, 부지 매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철도 역사와 오피스텔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들 수 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철도 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평내호평역 어린이집을 조성하였고, 2022년에는 여주역과 행신역, 탄현역에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3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협력에 따라 보건복지부 50%, 지자체 25%, 철도공단 25%씩 분담한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운영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출퇴근 부모들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7:30에서 21:30분으로 연장 운영한다.

[그림 III-1-5] 철도어린이집 운영 절차



자료: 경기도(2022). 내부자료.

이 외에 경기도는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하남시 소재 시립위례지웰푸르지오어린이집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1층을 어린이집 건축용도(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입주민 찬반 투표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다.

2) 국공립어린이집 분소 운영

강원도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화천군과 정선군 두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계 법령의 한계로 본원과 분소 각각 대표자를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도 각각 받고 있다. 하지만 원장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본원에 있는 원장이 분소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라. 어린이집 협력사업

1) 서초구 공유어린이집⁷⁾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이란 인근 지역의 3~7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국공립과 민간이 지역의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보육 시스템으로, ‘국공립-민간 통합 형태’의 어린이집을 말한다. 단,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서초 모범 어린이집’에 한한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은 일정 자격조건과 평가기준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인하여 운영 보조금과 교사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국공립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42개소가 참여하였으며, 2021년에는 50개소 공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하면서 ‘공유어린이집’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확대 운영되고 있다.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3~7개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계하여 공동·공유·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탄력적인 반편성을 통해 지역의 입소 대기를 줄이고, 원하는 만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보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재원아동 수당, 반운영비) 외에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지도점검, 연 3회 인센티브 정산, 회계 컨설팅을 실시한다.

〈표 III-1-4〉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내용

구분	사업 내용
공동	집콕프로그램, 가방이불식자재 공동구매, 교사 학습공동체 모임 등
공유	장소(텃밭, 강당 등), 교재교구, 가정통신문 등
상생	지역의 보육수요에 맞춘 반조정 협의, 어린이집 연계 추진 등

자료: 서초구(2021). 내부자료.

2) 서울시 ‘모아어린이집’ 사업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협력 사업이다. 인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공유하여 보육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2021).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내부자료 참조함.

질을 향상하고, 입소 대기를 공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 간 협력과 상생을 지향하고 저출생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은 [그림 III-1-6]에 정리하였다.

[그림 III-1-6] 서울시 모아어린이집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

공동 운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공유 (대체교사, 보조 교사 등) · 공간 공유 · 기타 연장형 어린이집 공동 운영 (야간 연장 보육, 휴일 보육 등) · 물품 공동 구매 (교재 교구, 가방 등)
보육 전문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공동체 운영 통한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과정 실천 (교차 장학 등) · 상호 참관 통한 보육환경 등 정보 공유 · 어린이집 간 보육 프로그램 공유 및 실천
부모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위원회 · 부모의 재능 나눔 · 부모교육 통한 부모 역할 지원 · 부모 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 · 부모 동아리
지역네트워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인근의 공간 활용 (숲체험원, 공원, 문화 공간, 소방서 등) · 지역 주민의 재능 나눔 · 지역 내 기관 연계

자료: 서울특별시(2022). 내부자료.

추진과제는 어린이집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형 보육공동체과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유프로그램 개발 운영, 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간 입소 조정, 공동체 내 어린이집 간 정·현원 및 대기 현황 공유 및 공동 원아모집이나 대기자 및 신입생 대상 입소 조정이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그림 III-1-7]에 정리하였다.

[그림 III-1-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추진체계

서울시 (보육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사업설명회, 대상 선정, 예산 지원 · 사업 관련 홍보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어린이집 선정·확대 · 특화프로그램 시행 지원 · 공동체별 협의회·교사모임 · 사업 홍보 및 평가 등
서울시육아종합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 지원, 공유프로그램 · 공동체 간 연계(모임) 지원 · 컨설팅, 교사교육 · 사업 확산 및 홍보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프로그램 등 기획·실행 참여 · 대기자 정보 공유, 입소 조정 협조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연구 모임 참여, 수업 등 경험 공유 · 보육서비스 개선 협조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프로그램 참여 · 공유어린이집 간 입소 조정 협조

자료: 서울특별시(2022).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관련 내부자료.

2. 국외 보육제도 및 가정양육지원 우수 사례

가. 중장기 계획

1) 미국 American Families Plan⁸⁾

미국 정부는 2021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American Job Plan과 함께 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 미국 경제 발전의 기반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자녀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3가지 미션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하고, 배우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13년에서 17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Make education more affordable and expand opportunity). 무상 교육 연령을 3세로 낮추어 3, 4세 아동을 위한 고품질의 무료 Pre-K 접근성을 높이고 고등학교 이후 2년 간

8)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american-families-plan/>)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HBCU(Historical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TCU(Tribal Colleges and Universities), 히스패닉 서비스 기관(HSI), 아시아계 미국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서비스와 같은 기관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학생을 위해 낮은 대학 등록금 기관(AANAPISI) 및 기타 소수자 서비스 기관(MSI)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학비를 보조해 주는 Pell 보조금을 최대 약 1,400달러 증액하고 미국 내 불법체류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교사 양성과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색인종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의 성장을 위해 9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가족에게 각종 현금지원, 유급휴가, 현물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Provide economic security for families). 주(state)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의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고품질 보육에 소득의 7%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포괄적인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신생아, 가족돌봄 휴가, 병가 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 및 여름 영양 혜택 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양 지원을 확대하고, 산모 건강에 3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족 대상 세금 공제 확대이다(Expand tax credits that help workers and families). 우선 자녀 및 부양가족의 세금 공제를 영구적으로 만들어 13세 미만의 자녀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최대 \$4,000, 다자녀 가족은 최대 \$8,000까지 제공한다. 소득이 \$125,000 미만인 가족은 전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며 \$438,000 이하인 가족은 부분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저소득 가정은 전액 환급도 가능하다. 자녀가 없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영구적으로 만들어 출납원, 요리사, 배달 운전자, 음식 준비 근로자 및 보육 근로자를 포함한 필수 근로자 등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다. American Rescue Plan의 아동 세액 공제 인상을 5년 더 연장하여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00에서 \$3,600으로, 6세 이상 아동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00에서 \$3,000로 인상하고 American Rescue Plan의 건강 보험료 감면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한 달에 1인당 평균 50달러를 절약하도록 하여 건강관리 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2) 일본 신육아안심플랜(2021-2024)⁹⁾

일본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4년간 약 14만 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고 정비하는 신육아안심플랜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2기 지자체(시정촌) 아동·육아 지원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대기아동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여성(25~44세)의 취업률 상승에 대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추진 전략은 1)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 2)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사 확보, 3) 지역의 모든 육아 자원 활용 3가지이다.

우선 지역 특성에 따른 지원은 지역 규모 및 보육 수요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은 육아·안심플랜에 따라 보육서비스 공급처 확보를 위해 정비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율을 높이고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보육 컨시어지를 통한 상담 지원을 확충하고, 순회버스 등을 이용하여 등하원 차량을 지원한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공급 확충보다는 보육의 기본방향부터 별도로 검토를 진행한다.

두 번째는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보육사 확보이다. 정보 발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본 주30시간 이하라는 보조요건을 철폐하여 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기아동이 존재하는 시정촌에서는 반별 상근보육사 1명 필수 배치라는 규제를 없애고 그 대신 단시간 보육사 2명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유연성을 높인다. 보육사·보육소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직 보육교사의 취업 상담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의 순회와 매력 있는 직장 만들기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종 복지를 개선한다.

세 번째는 지역의 모든 육아 자원 활용이다. 이용자의 요구에 세심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설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유치원과 베이비시터 등 지역의 모든 육아 자원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유치원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위탁 보육 등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의 보조를 신설하고 대기 아동이 존재하는 시정촌에서 빈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 이용 정원 상한(19명)을 탄력 운영한다(3명→6명 증가). 또한 세제 개편을 통해 베이비시터 이용료에 관한 자치단체 등의 조성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고 기업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 보조를 1일 1매에서 1일 2매로 확대한다. 또한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

9) 일본 후생노동성(2021). 新子育て安心プランの概要 (신육아안심플랜의 개요).

<https://www.mhlw.go.jp/content/11920000/000717624.pdf> 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를 원하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나. 가정양육지원

1) 미국의 Milestone Tracker¹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사용자가 재미있고 쉬운 방법으로 자녀의 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 무료 앱인 Milestone Tracker(발달 추적기)를 개발하였다. 이 모바일 앱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인기있는 무료 가족 친화적인 자료집에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Milestone Tracker(발달 추적기)는 부모에게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는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 이정표를 통해 발달지체를 인식하는 방법, 이 정보를 자녀의 의료제공자와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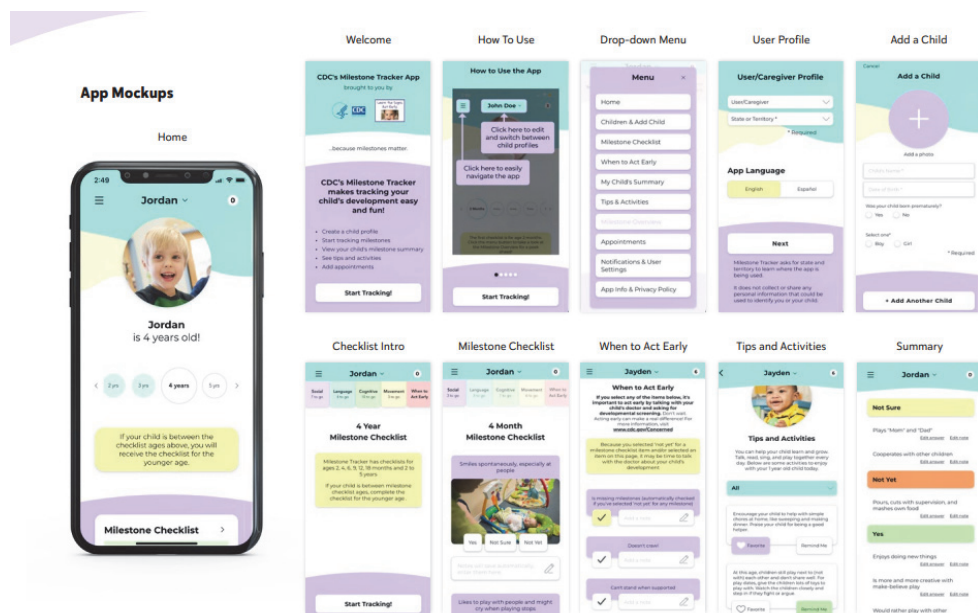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개월에서 5세 사이 영유아를 위한 대화형 이정표 체크리스트를 사진과 비디오로 설명한다. 또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활동, 조기에 행동하고 발달 지연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의사 및 기타 의료 제공자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개인화된 이정표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약속 및 발달 검가에 대한 알림도 제공한다. 이러한 앱의 홍보와 사용법을 위해 2018년에는 웨비나를 실시하여 부모들을 초대하고 Milestone Tracker(발달 추적기)의 고유한 기능과 가족의 발달 이정표를 추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진과 이름을 앱에 입력하고 발달추적기를 활성화하면 체크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고, 발달에 맞는 사진과 비디오 등을 통해 아이 발달에 맞는 활동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아이의 의사와 예약을 하거나 발달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발달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는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15개월, 18개월, 2년, 30개월, 3살, 4살, 5살까지이다. 어린 시기에는 더 잦은 발달 체크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3살 이후부터는 1년에 한번씩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도록 하였다¹¹⁾.

10) https://www.cdc.gov/ncbddd/actearly/milestones-app.html?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2022. 11. 7 CDC's Milestone Tracker App 내용을 정리함.

11) <https://www.cdc.gov/ncbddd/actearly/milestones/checklist/2-Month-Checklist-form.html> 2022. 11.7 인출.

[그림 III-2-1] 미국의 발달 추적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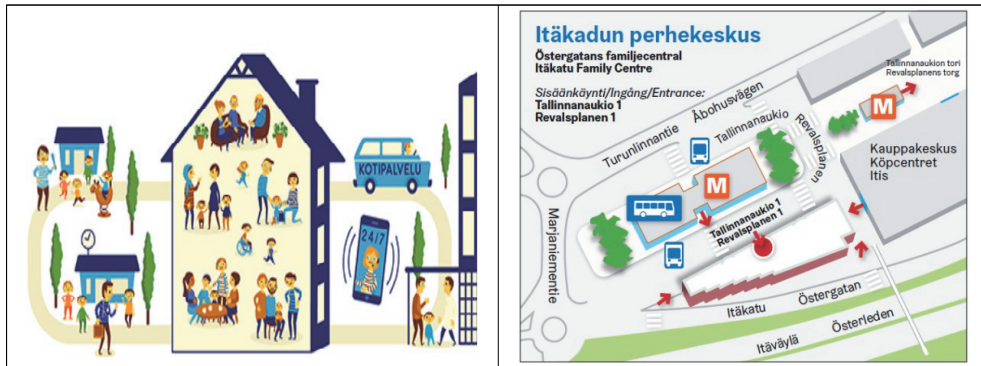
2) 핀란드의 가족 센터

핀란드의 패밀리센터는 조기 지원과 특수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들은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 클리닉, 홈 서비스, 언어 치료, 가족 상담실, 물리치료와 아동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모와 아동 건강 클리닉 서비스는 전화 서비스, 챗봇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가족 센터는 모두 주중과 주말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헬싱키의 가족 센터는 이타카투 센터(Itäkeskus Family Center), 칼리오 센터(Kallio Family Center), 캄피 센터(Kamppi Family Center), 부오사리 센터(Vuosaari Family Center) 등 지역 거점형태로 운영하고 있다¹²⁾.

12) <https://www.hel.fi/sote/units-en/family-centres>

[그림 III-2-2] 핀란드의 가족센터의 기능과 위치



자료: 이타카투센터 홈페이지. <https://www.hel.fi/sote/units-en/family-centres/itakatu-family-centre> 2022.11.22. 인출.

이타카투 센터(Itäkeskus Family Center)¹³⁾는 헬싱키가 최초 설치한 가족 센터로서 자녀가 있는 가족이 유모차 등을 이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다. 가족센터에서는 예방에서 치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가족의 필요에 따라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객이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센터의 직원이 가족 센터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성인 사회사업 또는 약물 남용 및 성인을 위한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¹⁴⁾.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가정 서비스, 가족 업무 및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사회 복지 업무가 포함된다. 가족 센터에서 고객은 필요에 따라 산모와 아동 건강 클리닉, 심리학자 서비스, 구강건강 예방 서비스, 언어 치료, 물리 치료 및 작업 치료, 양육 및 가족 가이던스 서비스, 아동 복지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홈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족 센터의 이용 시간은 평일(월~목)은 7시부터 20시, 금요일은 7에서 18시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 중에는 집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며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산모 및 아동 건강 클리닉은 평일(월~목)은 7시부터 19시, 금요일은 9에서 18시까지 운영되며 다른 서비스도 저녁에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칼리오 가족센터(Kallio Family Center)는 2019년 6월에 새로운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역시 많은 트램과 버스 노선이 있는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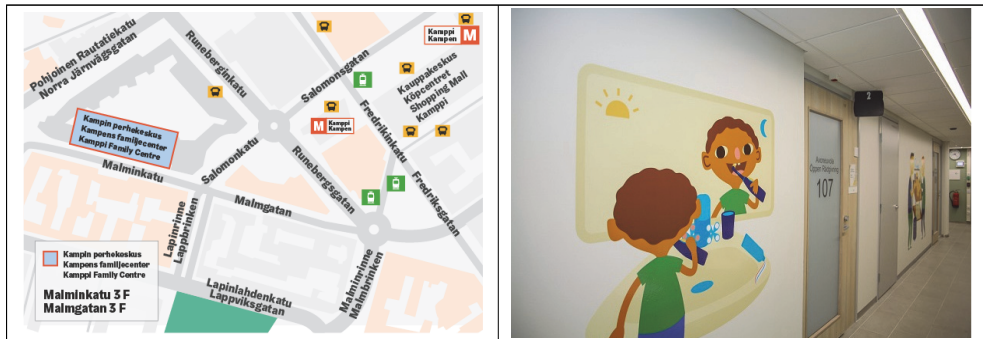
13) 핀란드의 가족 센터 관련 홈페이지<https://www.hel.fi/sote/units-en/family-centres/>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14) <https://www.hel.fi/sote/units-en/family-centres/itakatu-family-centre>

이 센터도 앞서 설명한 이타카투 센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린이,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한 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요구 평가 및 지원, 장애 서비스, 구강 관리 및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등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¹⁵⁾.

한편 캄피 센터(Kamppi Family Center)는 4개 센터 중 마지막으로 설립되었는데, 개별 필요에 따라 가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분산되어 있던 서비스를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한 곳에서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였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개별 서비스 패키지를 개발하였다. 이 센터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열린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조직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¹⁶⁾.

[그림 III-2-3] 핀란드의 캄피 가족센터의 위치와 내부 전경



자료: 캄피센터 홈페이지. <https://www.hel.fi/sote/units-en/family-centres/kamppi-family-centre/> 2022.11.22. 인출.

마지막으로 부오사리 센터(Vuosaari Family Center)는 가족 센터와 건강 및 웰빙 센터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건강 관리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건강 및 웰빙 센터에서는 보건과 사회 서비스, 치과 및 구강 건강 관리, 정진 건강 서비스, 약물 남용 서비스, 장애인과 실험실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¹⁷⁾.

그 밖에 가족 지원 웹사이트도 운영하는데, 전문가와 부모가 협력하여 개발한 서비스로 헬싱키에 사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정보, 지원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링크 주소 등 다양한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5) <https://www.hel.fi/sote/units-en/family-centres/kallio-family-centre>

16) <https://www.hel.fi/sote/units-en/family-centres/kamppi-family-centre/>

17) <https://www.hel.fi/sote/units-en/family-centres/vuosaari-family-centre/>

3) 이스라엘의 팁태프 센터(Tip-Taf: Early years center)

팁태프 센터는 영아기에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알고,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지원하는 곳이다. 이스라엘의 홀론 시는 폐교된 고등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영아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 특별한 센터에서는 부모와 영아(0~3세)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즐거움을 향상시키고,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팁과 안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권미경·이강근, 2016: 51).

이곳에서는 출생부터 3세까지 부모와 자녀를 위한 발달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수업 및 워크숍, 강의 및 개인 상담, 공연, 놀이 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업 및 워크숍은 부모와 자녀에게 발달 및 정서적 반응과 양질의 공유 경험을 제공하고 한다.

또한 강의 및 개인 상담은 부모와 자녀에게 적합한 내용에 맞추도록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오후나 저녁에 전문 강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조정되고 엄선된 쇼와 활동 및 공연 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극장과 같은 세계에 처음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독특한 분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놀이 개인지도는 발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도와 어른과 어린이 간의 양질의 의사소통과 함께 체험형 합동놀이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육아의 즐거움을 높이고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¹⁸⁾.

[그림 III-2-4] Tip-Taf: Early years center의 활동 내용



[부모와 자녀를 위한 체험활동]



[센터에서 부모와 개별 상담]

18) <https://www.tip-taf.com/#!english/c1fj4> 2022.11.4 인출



[음악시간]



[베이비 마사지]

자료: <https://www.tip-taf.com/#!english/c1fj4> 2022.11.4 인출

4) 덴마크 아버지의 놀이터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경우 휴식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놀이방(Legestue)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놀이방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아버지들이 영유아를 키우는 육아휴직 중인 아버지이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세대보다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분위기이며 아내들의 복직을 위해서 남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권미경·문무경·김영민, 2019: 52).

[그림 III-2-5] 덴마크의 아빠놀이방(Fars Legestue) 모습



자료: 전국의 아버지와 자녀 활동. <https://www.farforlivet.dk/aktiviteter> 2022.11.7인출

아버지 놀이방에는 자녀와 함께 와서 다른 아버지들과 함께 놀 수 있으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아버지에게 열려있다. 활동 내용을 보면 출산휴가 중인 아빠와 아기에게 필요한 운동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자녀들과 게임을 통해 재미와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준다. 또한 자녀와 함께 와서 다른 아버지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하며 체조, 배드민턴,

아버지와 어린이를 위한 창작 워크숍도 제공한다. 모든 아버지를 환영하고 시설 이용료는 무료이며 열려 있는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보건 간호사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할 수도 있다¹⁹⁾.

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1) 독일

독일은 「좋은 어린이집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을 개정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을 발의하였다. 좋은 어린이집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은 연방 정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55억 유로를 주 정부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어린이집 참여를 촉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연방가족부는 “평등한 기회는 어린이집에서 시작되며, 교육, 건강한 발달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의 모든 어린이가 부모의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 우수한 교육 장비, 건강 및 영양 그리고 체육 활동 등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 초안에는 7개 분야, ① 수요에 기반한 어린이집 공급 ② 적절한 교사 대 아동 수 ③ 자격을 갖춘 전문가 채용 및 확보 ④ 원장 및 부원장 역할 강화 ⑤ 언어교육 강화 ⑥ 아동 발달, 건강, 영양 및 체육 활동 강화 ⑦ 데이케어 (Kindertagespflege 아동돌보미) 강화 등에 기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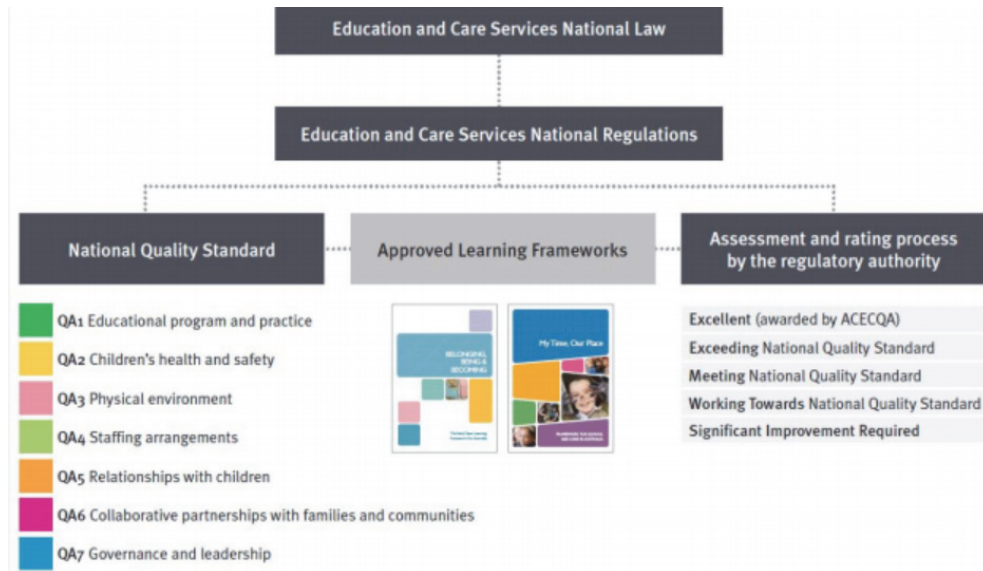
2) 호주

호주는 2012년 국가품질체계(NQF: National Quality Framework)를 마련하여 ECC 기관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품질체계(NQF: National Quality Framework)는 호주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규제, 평가 및 품질 개선에 대한 국가 질 관리체계이다. 국가품질체계(NQF: National Quality Framework)는 국가 교육보육 서비스법(Education and Care Service National Law) 및 규정(Education

19) <https://www.farforlivet.dk/activity/fars-legestue-noerrebro> 2022.11.7. 인출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에 근거하여 국가평정기준과 교육과정, 규제 당국(ACECQA)에 의한 평가 및 평정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국가품질체계(NQF: National Quality Framework)는 영유아 교육·보육 품질관리국(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에서 담당한다. ACECQA는 국가 질 관리기준(NQS: National Quality Standard) 개발 및 운영, 교사에 대한 자격 인증, 평가자 교육, 평가 결과 공개 외에도 최우수 등급 평가, 2차 평가 재검토, 국가 질 아젠다 IT 시스템(National Quality Agenda IT System: NQA) 운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III-2-6] 국가품질체계(NQF: National Quality Framework)



자료: ACEQA(2022). 내부자료.

국가품질기준(NQS: National Quality Standard)은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아동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교직원 배치, 아동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 협력적 파트너십, 거버넌스와 리더십 등 7개 영역, 15개 지표, 40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평가영역은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표는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정량평가(Met, Not Met), 정성평가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며, 각각의 지표는 Met 또는 Not Met으로 평정되고, 7개 각 영역의 등급이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전체 등급이 부여된다.

〈표 III-2-1〉 국가품질기준(NQS: National Quality Standard)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요소
1.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3	9
2. 아동의 건강과 안전	2	5
3. 물리적 환경	2	5
4. 교직원 배치	2	4
5. 아동과의 관계	2	4
6. 가족, 지역사회와 협력적 파트너십	2	6
7. 거버넌스와 리더십	2	6

자료: ACECQA(202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Last updated-March 2023). pp.90-91.

라. 인력

1) 미국

미국의 보육서비스는 K학년에 입학하기 전인 만 0~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National Survey of Early Care & Education, 2021: 4). 미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로 이원화된 체계 아래에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낮고 민간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관들이 혼재되어 있다(차기주·박은혜, 2019a: 247). 미국의 0-5세 대상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유형은 〈표 III-2-1〉과 같다.

〈표 III-2-2〉 미국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의 유형

기관명	대상연령	재원	설립유형
Kindergarten	• 만 5(6)세	• 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공영/국립
Public Preschool/ Pre-K	• 만 3-4세	•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Early Head Start(EHS) Head Start(HS)	• EHS: 생후 6주-만 2세 • HS: 만 3-세	• 연방정부	
Child Care/ Daycare Center	• 생후 6주-만 5세	• 학부모(+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원금)	민영/사립
Preschool Nursery School	• 만 2-5세		
Family Child Care(FCC) In-Home Care	• 생후 5주-만 5세		

자료: 차기주, 박은혜. (2019b). 미국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역사 및 유형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 연구, 24(3), 25-49. p.35 〈표 2〉의 내용을 일부 발췌.

이처럼 미국의 보육제도는 다양한 재원과 설립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자격체계와 치우는 주 정부마다 상이하다. 미국유아교육협회(NAEYC)의 인증 기준 (accreditation standards)의 평가지표에 따른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격체계

미국 NAEYC의 교사 자격체계는 영역 6(교사 역량, 준비, 지원)의 하위지표 6.C 교사 자격에 제시되어 있다(표 III-2-2). NAEYC의 기준에 따르면 보조교사는 최소 CDA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CDA 자격증은 전문가 인증협회(Council for Professional Recognition)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 유형에 따라 세부 자격에서 차이가 있다(Council for Professional Recognition, 2021). CDA 자격증 유형과 취득 방법은 <표 III-2-3>과 같다.

<표 III-2-2>와 같이, 담임교사의 최소 요건인 공립 자격증의 경우 교원의 학력 수준의 요구는 높으나 자격증이 포괄하는 연령의 범위가 넓어 영유아기에 대한 전문성이 낮고, 민간 자격증(CDA)의 경우 영유아기에 대한 집중도는 높으나 요구하는 학력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수준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차기주·박은혜, 2019a).

<표 III-2-3> NAEYC가 요구하는 교사 최소 자격 요건

영역	하위지표	인력유형	최소 자격
6. 교사 역량, 준비, 지원	6.C. 교사 자격	보조교사 (6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학급 아동의 연령대를 반영하는 민간 자격증 (Child Development Associate: CDA) • 또는 CDA와 동등한 자격(대학의 유아교육, 아동발달, 초등교육 및 유아특수교육 과목에서 12학점 이수)
		담임교사 (6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적으로 최소 유아교육, 아동발달, 초등교육, 또는 유아특수교육 전공의 고등교육 학위(학사 또는 전문학사) • 다른 전공에 대한 고등교육 학위 취득 시 유아교육, 아동발달, 초등교육, 또는 유아특수교육 과목에서 최소 36 학점 취득 • 0~8세까지 영유아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주의 공립교사 자격증

자료: 차기주·박은혜. (2019b). 미국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역사 및 유형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 연구, 24(3), p.35. <표 2>의 내용을 일부 발췌.

실제 주별 자격요건 현황을 살펴보면, NAEYC의 기준과는 달리 보조교사에게 CDA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은 기관 보조교사의 경우 12개 주, 가정보육 보조교사의 경우 11개 주에서만 해당하였다. 또한 보육기관 교사의 경우에도 단 10개의 주에서만 NAEYC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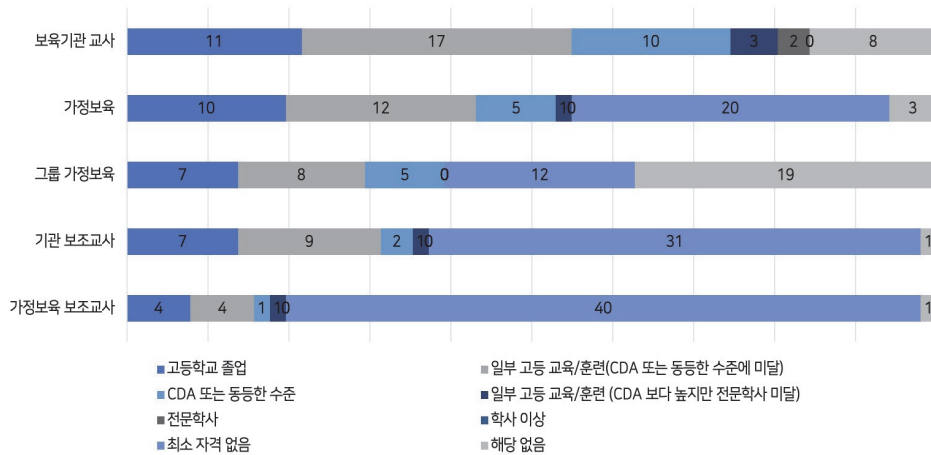
〈표 III-2-4〉 CDA 자격 체계

자격 유형	필수 요건	이수 과목
기관 기반 영아교사 (center-based infant-todd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내 직업 및 기술 프로그램 (career and technical program) 중 유아교육에 등록 자격을 희망하는 영유아의 연령을 보육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 120시간의 실습을 완료하고 8개의 CDA 과목 영역에서 각각 10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 계획 아동의 신체 및 인지 발달 지원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 지원 가족과의 생산적인 관계 구축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전문성 책무 유지 아동 행동 관찰 및 기록 아동 발달 및 학습의 원리 이해
기관 기반 유아교사 (center-based prescho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환경에서 건강과 안전 증진 아동의 신체, 인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기술 향상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긍정학습의 원리 이해 가족 체계와 발달 이해 효과적인 가정 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전문성 책무 유지 연속적인 아동복지의 전반 아동 발달 및 학습의 원리 이해
가정 보육 교사 (family child care)		
가정 방문 교사 (home visitor)		

자료: Council for Professional Recognition 홈페이지. <https://www.cdacouncil.org/en/educator-pathways>. (2022. 10. 31. 인출).

[그림 III-2-7] 미국 주별 보육교사 최소 자격 현황

단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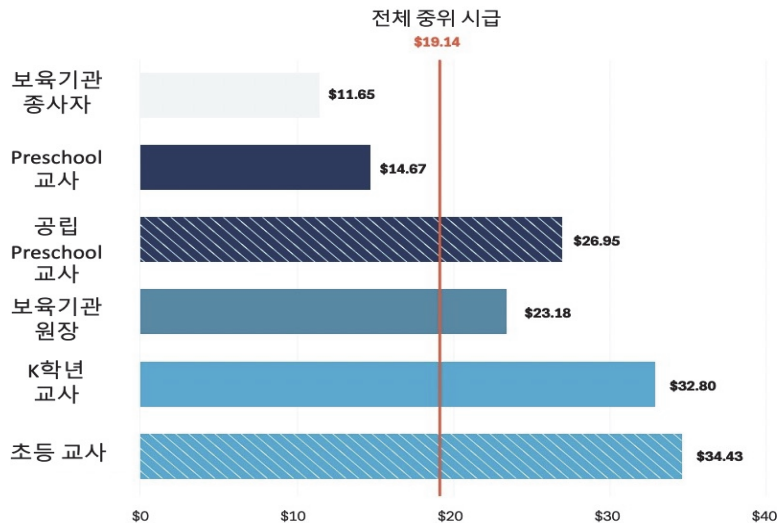
자료: McLean, C., Austin, L. J. E., Whitebook, M., & Olson, K. L. (2021). Early Childhood Workforce Index-2020, p. 78. Figure 3.5. Berkeley, CA: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trieved from <https://cscce.berkeley.edu/workforce-index-2020/report-pdf>.

나) 교사 처우

(1) 교사 보수

미국의 교사의 보수와 복지제도는 근무환경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2019년의 임금 데이터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전국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 중 하나로 나타나며 특히 유색인종 여성 교사일수록, 더 어린 아동(영아)과 근무할수록 전체 중위소득보다 적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McLean, Austin, Whitebook, & Olson, 2021: 22). 또한 미국 대부분(40개)의 주에서 보육교사의 보수는 자녀가 없는 성인 1인을 기준으로 산출된 생활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cLean et al., 2021: 23).

[그림 III-2-8] 미국 유아교육 종사자의 보수 현황: 2019년



자료: McLean, C., Austin, L. J. E., Whitebook, M., & Olson, K. L. (2021). Early Childhood Workforce Index-2020, p. 42 Figure 2.1. Berkeley, CA: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trieved from <https://cscce.berkeley.edu/workforce-index-2020/report-pdf>.

(2) 교사 복지제도

NAEYC의 인증 기준 중 교사의 복지와 관련된 항목은 6.A 지지적 근무환경에 나타나 있다. 6.A 지지적 근무환경은 교직원 복지, 역량강화, 그리고 전반적 업무 환경의 질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NAEYC 인증을 위한 평가 영역 중 교사 복지와 관련된 항목은 <표 III-2-4>와 같다.

〈표 III-2-5〉 NAEYC 평가 영역 중 교사 복지와 관련된 항목

영역	하위지표	내용
6. 교사 역량, 준비, 지원	6.A. 지리적 근무환경	• 6A.11 의료보험은 교직원 복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 6A.12 교직원 복지 패키지에 휴일과 병가, 휴가 또는 개인사유에 의한 연차를 포함한다.
		• 6A.13 교직원 복지 패키지는 교육 혜택을 포함한다.
		• 6A.15 교직원 복지 패키지는 퇴직 계획을 포함한다.
		• 6A.16 교직원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 아동과 직접 일하는 교직원이 4시간마다 15분 씩 휴식을 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6A.17 기관의 교직원 매뉴얼은 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짧고 즉각적인 휴식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자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9). NAEYC 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ssessments items, p. 86. Washington, DC: NAEYC.

다) 전문역량 강화

미국 NAEYC의 교사 전문역량 강화 항목은 영역 6(교사 역량, 준비, 지원)의 기준 6.D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6.B. 전문적 정체성과 인식의 일부 항목에 명시되어 있다. 6.D는 특히 핵심 역량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교사의 개방성과 기관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여부를 다루고 있다(NAEYC, 2021).

〈표 III-2-6〉 NAEYC의 전문성 개발 역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역량 •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아동의 지속적인 발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 • 학습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특별한 요구와 학습과 통합을 가장 잘 지원하는 방법 • 교육 팀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및 협업 기술 • 특별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 및 가족과 함께 일하기(예: 노숙, 부모의 군대 배치, 지역사회 불안)

자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9). NAEYC 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ssessments items, p. 82. Washington, DC: NAEYC.

NAEYC가 강조하는 전문성 개발 역량은 〈표 III-2-5〉와 같으며,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표 III-2-6〉과 같다.

〈표 III-2-7〉 NAEYC 평가 영역 중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된 항목

영역	하위지표	내용
6. 교사 역량, 준비, 지원	6.B. 전문적 정체성 과 인식	• 6B.3 교사는 지역사회의 다른 영유아 전문가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 6B.4 프로그램 전반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포함한다.
		• 6B.5 교직원들은 기관 외부의 조직 및 그룹에서 제공하는 전문적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6.D.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 6D.1 신규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 NAEYC 윤리행동강령에 따른 행동에 대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 6D.2 신규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 그들이 보육할 개별 아동에 대한 정보 검토가 포함된다.
		• 6D.3 신규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는 허용 가능한(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지도, 훈육 및 학급 경영 기법이 포함되어 있다.
		• 6D.4 신규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 기관의 일상적인 활동과 루틴을 포함한다.
		• 6D.5 신규 교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된 주제 중 보다 철저하게 후속 조치된 두 가지 예를 보여준다.
		• 6D.6 프로그램 전반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은 교직원이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암묵적 및 명시적 편견을 줄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6D.7 프로그램 전반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은 교직원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이해와 능력을 심화시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6. 교사 역량, 준비, 지원	6.D.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 6D.8 프로그램 전반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은 교직원이 긍정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소통 및 협업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6D.9 프로그램 전반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특화된 교육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6D.10 프로그램 전반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은 교사가 특별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의 상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예: 군인 가족의 아이들, 이민 가족, 이중 언어 학습자, 노숙자,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동,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동, 농촌 환경 또는 도시 환경 등).
		• 6D.11 지난 18개월 동안 실시한 직원 평가 중 자기 반성 또는 자체 평가 구성 요소를 포함한 두 가지 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자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9). NAEYC 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ssessments items, p. 86, 89. Washington, DC: NAEYC.

라) 권리보호

NAEYC의 인증 기준 중 교사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6.A 지지적 근무환경과 6.B. 전문적 정체성과 인식이다. 6.B 전문적 정체성 및 인식은 기관의 교직원들이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의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식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III-2-8〉 NAEYC 평가 영역 중 교사 권리보호와 관련된 항목

영역	하위지표	내용
6. 교사 역량, 준비, 지원	6.A. 지지적 근무환경	• 6A.1 교실에 어른들이 앉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좌석이 있다.
		• 6A.2 기관 시설에는 교직원들이 아동과 떨어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한 전용 또는 준전용 공간이 있다.
		• 6A.3 교직원이 자신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
		• 6A.4 야외 학습 환경에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좌석이 있다.
		• 6A.5 교직원은 전문적 계획과 교육과정을 위한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6A.6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조직 환경을 위한 교직원 관련 정책, 실제 또는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 6A.7 기관의 교직원 정책은 교육 계획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6A.8 기관의 서면으로 된 건강 및 안전 정책은 교직원이 아플 시 근무할 수 없는 시기 와 복귀할 수 있는 시기를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 6A.9 기관의 교직원 핸드북에 스트레스 관리, 우울증 예방 및 치료 및/또는 웰빙을 지원하는 자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6A.10 직원 핸드북과 부모 자료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보고하기 위한 서면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아동학대 또는 방임으로 기소된 직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절차는 피소된 직원과 기관 내 아동의 권리를 모두 보호한다.
	6.B. 전문적 정체성과 인식	• 6B.1 교사는 가족과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전문적으로 소통한다.
		• 6B.2 기관은 NAEYC 윤리 행동 강령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9). NAEYC 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ssessments items, p. 85-86. Washington, DC: NAEYC.

2) 호주

가) 자격체계 및 교사 처우

호주의 영유아 보육·교육 교사 자격증은 국가의 모든 자격증을 관리하는 호주 자격증 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에 기초하고 있으며, 10단계의 자격수준이 있다(김명순·신윤승·이세원·서재화, 2016: 164).

호주의 국가수준 품질 체계에 따른 평가항목 4.2 교육자 자격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은 자격증 III이다(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2020: 412). 호주의 교사 보수 및 복지는 각 주마다 상이하다. 빅토리아 주의 보수를 살펴보면 빅토리아 주에서는 자격증 III 취득 시 1.1단계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2023년 1월 10일 기준으로 책정된 1.1단계 교사의 연봉은 \$66,779이다(Victoria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Educators Agreement, 2020: 72).

〈표 III-2-9〉 호주의 자격수준

AFQ단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훈련기관	고급 교육기관(대학교)
10			박사학위(Doctoral Degree)
9			석사학위(Master's Degree)
8			우수학사학위(Bachelor Honours Degree) 대학원 수료증(Graduate Diploma) 대학원 자격증(Graduate Certificate)
7			학사학위(Bachelor Degree)
6		상급 직업학교 수료증 (Advanced Diploma)	준학사 학위(Associate Degree)
5		직업학교 수료증 (Diploma)	
4		자격증 IV	
3		자격증 III	
2		자격증 II	
1	Senior Secondary Certificate of Education	자격증 I	

자료: 1) 김명순, 신윤승, 이세원, 서재화. (2016). 영유아교사 전문성 관련체제 고찰: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p. 165.
 2)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홈페이지. <https://www.aqf.edu.au/framework/aqf-qualifications>.
 (2022. 11. 5. 인출).

나) 전문역량 강화

호주 ACECQA의 교사 전문역량 강화 항목은 영역 4(교직원 배치의 기준), 영역 4.2(전문성)이다. 전문성은 전문적 협력과 전문적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10〉 ACECQA 평가 영역 중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된 항목

영역	하위지표	세부지표
4. 교직원 배치	4.2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1 전문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과 교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서로의 강점과 기술을 인식하며 도전하고 학습한다. • 4.2.2 전문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기준은 실무, 상호 작용 및 관계에 대하여 안내한다.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2020).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p. 206.

〈표 III-2-11〉 ACECQA 평가 영역 중 전문역량 강화의 관찰지표 내용

세부지표	관찰지표 내용
4.2 전문성	<div>4.2.1 전문적 협력</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긍정적인 업무 관계와 개방적인 분위기를 보인다. • 신입 교사 및 교직원들은 다른 팀 구성원의 지원을 받는다. • 동료 교사들은 교사 및 교직원이 팀과 기관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교육 및 보육에 대해 현재 인정된 접근법과 연구에 대한 정보를 경영진, 교육자 및 교직원 간에 공유한다. • 교사들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특정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성찰한다. • 교사, 원장 및 교직원은 업무와 책임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팀원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반응한다. • 원장, 교직원 및 교사는 동료들과의 지원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교육을 확인하고 도전하며, 협력적으로 일한다. • 원장, 교직원 및 교사는 개별 아동을 가장 잘 지원하는 통합적 실제 및 전략을 논의하고 채택한다. • 원장, 교직원 및 교사는 현재의 경험, 지식 및 기술에 관계없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div>4.2.2 전문적 기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은 일상에서 아동, 동료 및 가족에 대한 돌봄, 공감 및 존중을 보인다. • 교직원은 아동, 동료,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전문성을 보인다. • 원장, 교직원 및 교사는 국가수준 품질 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근무한다. • 원장, 교직원 및 교사는 승인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2020).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p. 222, p. 224.

3) 뉴질랜드

가) 자격체계 및 교사 처우

뉴질랜드는 영유아 교육·보육이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두 영역의 통합을 위해 교사 자격체계를 일원화하고 자격수준을 다양화하였다(장혜진, 2020a: 1389). 뉴질랜드의 자격수준은 단순한 증명에서부터 박사학위까지 10수준(level)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격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하는 내용이나 참여할 수 있는 업무의 복잡성이 커진다(표 III-2-11 참조). 뉴질랜드 영유아 교사 자격체제에서 학사학위 수준은 7수준(level)(360학점)이며 학부 졸업 직후 임시교사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격체제에서는 2수준(level)부터 6수준(level)까지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적인 자격조건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2수준은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를 도울 수 있고, 3수준(level)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장혜진, 2020a: 1390-1392).

〈표 III-2-12〉 뉴질랜드 자격체계

AFQ 단계	자격(certificate)	수료증(diploma)	학위(degree)
10			박사학위(Doctoral Degree)
9			석사학위(Master's Degree)
8	학사 후 자격 (Post Graduate Certificate)	학사 후 수료증 (Post Graduate Diploma)	우수학사학위 (Bachelor Honours Degree)
7	졸업 자격 (Graduate Certificate)	졸업 수료(Graduate Diploma)	학사학위(Bachelor Degree)
6	자격	교사 수료증(Diploma) 120학점	
5	자격	교사 수료증(Diploma) 120학점	
4	자격 60학점		
3	자격 60 학점		
2	자격 60학점		
1	자격		

자료: 1) NZQA 홈페이지. <https://www.nzqa.govt.nz/qualifications-standards/understanding-nzqf/#heading2-0>. (2022. 11. 06. 인출).

2) NZQA 홈페이지. Pathways Map ECE qualifications version 2 (2021). <https://www.nzqa.govt.nz/assets/qualifications-and-standards/qualifications/Early-Childhood-Education-quals-review/Pathways-Map-for-ECE-qualifications-v2-April-2021.pdf>. (2022. 11. 06. 인출).

뉴질랜드의 영유아 교육 단체협약에 나타난 담임교사(early childhood teacher)의 최소 자격은 Q1 교사 수료(Diploma of Teaching: 5단계로, 초임 교사의 연봉은 \$49,862이다.²⁰⁾

나) 전문역량 강화

뉴질랜드의 영유아 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을 마친 후 임시자격(provisional certificated)을 취득한 뒤 보통 2년의 연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거친 뒤 정규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장혜진, 2020a: 1394).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또는 학교에서 담임교사로서 근무해야 하며 현장 경험이 있는 정규자격을 갖춘 교사가 멘토의 역할을 하게 된다(Teaching Council of Aotearoa New Zealand, 2022).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 전문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교사들을 위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Whakapiki i te Māori는 기관에서 마오리어를 51% 이상 사용하는 교사들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정체성, 다양성, 언어,

20)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ective Agreement of Aotearoa New Zealand 2020-2021. PDF 문서. https://www.nzei.org.nz/UploadedFiles/ECECA_2020-2021.pdf. (2022. 11. 06. 인출).

문화에 대한 기존 기술과 지식 강화를 목표로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영유아 학습 기회 강화(SELO) 프로그램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원장 및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컨설턴트가 파견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SELO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2-13〉 뉴질랜드의 교육부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분	대상	내용
프로그램 1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 충족에 지원이 필요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 및 관리 • 재정 관리 • 전략 계획 • 기관 관리 시스템 수립 • 기관 정책 및 정치 • 리더십과 팀 관계 • 인적 자원과 역할 및 책임 이해 • 건강 및 안전 • Te Whāriki 교육과정
프로그램 2	지역별로 필요한 역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조기 학습 환경 • 교수 학습 지원 • 교육과정 전달 및 조기 문해 및 수리 교육 • 리더십 • 교육과정 내 마오리 문화 통합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people-and-employment/professional-development-in-early-learning>. (2022. 11. 09. 인출).

〈표 III-2-14〉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역량 강화 자료

자료 유형	내용	자료 접근 방법
웹비나	• Te Whāriki의 소개 -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및 워크숍을 위한 5개의 비디오와 자료	웹사이트에 탑재된 비디오
	• Te Whāriki 웨비나 - 교육과정의 영역별 대상별 설명을 담은 10개의 비디오 및 슬라이드 자료	
	• 전문가 특강 웨비나 - 영아 교육 및 보육, 학교 환경, 원장을 대상으로 한 3개의 전문가 비디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강
	• 영재성을 주제로 한 온라인 프로그램 - 90분의 웨비나와 자료, 그룹 멘토링 자료	
비디오	• Te Whāriki 교육과정의 실제에 대한 비디오 자료 제공	웹사이트에 탑재된 비디오
워크숍 자료	• 교사 학습공동체 및 각 보육·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숍 자료 - 영유아 학습, 발달, 기관 특성에 따른 보육, 평가 등 주제에 대한 슬라이드	웹사이트 자료 탑재

자료: Te Whāriki 홈페이지, <https://tewhariki.tki.org.nz/en/webinars-and-workshops>. (2022. 11. 09. 인출).

공식적인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Te Whāriki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자료 및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3. 시사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을 알아보고, 해외의 보육 및 가정양육지원 사례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사업은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협력 및 상생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모아어린이집의 모태가 되었고, 중앙정부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에 시사점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보육 현장에서 10여 년 전부터 요구하여 온 교사대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광양 등 여러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앙사업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나 자녀, 가정 특성 등에 적절한 맞춤형 부모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 교육 연령을 3세로 낮추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양성과 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일본은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대기아동 해소 목적의 하나로 보육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보육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율을 높이고,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보육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사보육소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현직 보육교사의 취업 상담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넷째, Milestone Tracker(발달 추적기)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사례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도 유사한 앱을 개발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지원한다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핀란드의 가족 센터는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을 위해서 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와 정신건강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최근 개설한 가족 센터에서는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별적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자국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인접하는 국가의 가족까지 배려하여 양육을 지원하고 성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배려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놀랍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지원하는 가족 센터로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족 지원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정보도 공유하고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향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기의 집중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영유아기의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돕는 틱 탭 센터의 장점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의 육아휴직의 증가세와 육아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덴마크의 아버지 놀이방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공동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여덟 번째, 자격제도 개편 시에는 자격체계를 세분화하면서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는 영유아 교육·보육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교사 자격체계를 통합했으며 자격수준을 다양화하였다. 특히 자격수준에 따른 세부적인 조건과 역할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자격제도를 개편할 때 뉴질랜드 사례를 참고하여 자격수준은 다양화하되 자격수준에 따른 자격, 수료증, 학위 및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홉 번째, 교사를 위한 지지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NAEYC의 교사 복지 패키지에는 의료보험, 휴일/병가/연차, 교육 혜택, 퇴직 계획, 4시간마다 15분씩 휴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의 근무환경은 보육의 질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교사를 지지하는 근무환경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교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교사

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전문가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IV.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전망

제4장은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보육 수요를 전망하였으며,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 체계 구축, 아동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보육기반 강화 4개 분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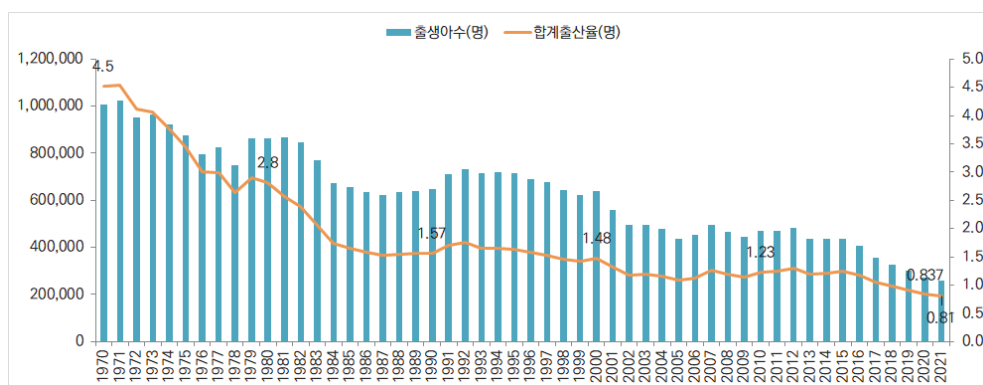
1. 인구구조 변화와 보육 수요 전망

가. 영유아 인구 지속 감소

1) 출생아 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통계청, 2022)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6년까지 40만명 선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 36만 명까지 줄고, 2020년에는 30만 명 선마저 무너졌으며, 2021년에는 26만명 선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IV-1-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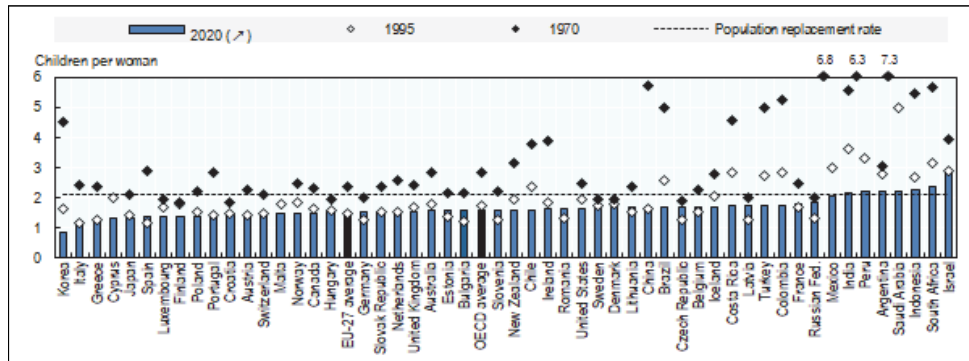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2022년에는 출산연령 인구 감소와 만혼, 비혼 증가로 혼인건수가 줄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²¹⁾. 또한 우리나라는 수년 전부터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평균 1.59명으로, 1970년 2.84명에서 1995년에는 1명 대로 떨어졌으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하락폭이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페루, 중국 다음으로 높다²²⁾.

[그림 IV-1-2]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1970, 1995, 2020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SF_2_1_Fertility_rates(<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2022. 11. 20 인출).

〈표 IV-1-1〉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일본	1.39	1.41	1.43	1.42	1.45	1.44	1.43	1.42	1.36	1.33
중국	1.59	1.60	1.60	1.61	1.62	1.62	1.63	1.69	1.70	1.70
오스트리아	1.92	1.93	1.88	1.79	1.79	1.79	1.74	1.74	1.66	1.44
뉴질랜드	2.09	2.10	2.01	1.92	1.99	1.87	1.81	1.71	1.72	1.61
덴마크	1.75	1.73	1.67	1.69	1.71	1.79	1.75	1.73	1.70	1.67
핀란드	1.83	1.80	1.75	1.71	1.65	1.57	1.49	1.41	1.35	1.37
노르웨이	1.88	1.85	1.78	1.76	1.73	1.71	1.62	1.56	1.53	1.48
스웨덴	1.90	1.91	1.89	1.88	1.85	1.85	1.78	1.75	1.70	1.66
프랑스	2.00	1.99	1.97	1.97	1.93	1.89	1.86	1.84	1.83	1.79
독일	1.39	1.41	1.42	1.47	1.50	1.60	1.57	1.57	1.54	1.53
영국	1.91	1.92	1.83	1.81	1.80	1.79	1.74	1.68	1.63	1.56
미국	1.89	1.88	1.86	1.86	1.84	1.82	1.77	1.73	1.71	1.64
캐나다	1.63	1.61	1.61	1.59	1.58	1.56	1.54	1.50	1.47	1.50
OECD 평균	1.71	1.71	1.68	1.69	1.68	1.68	1.66	1.63	1.61	1.59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합계출산율.

21) 7월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역대 최저...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KBS NEWS 2022.9.28.일자 기사)

2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50년 간(1970~2020년) 평균 1.25명이 감소하였고,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5.04명, 멕시코 4.75명, 페루 4.10명, 중국 4.03명, 한국 3.69명, 브라질 3.27명, 터키 3.24명으로 감소폭이 높음.

2) 장래 영유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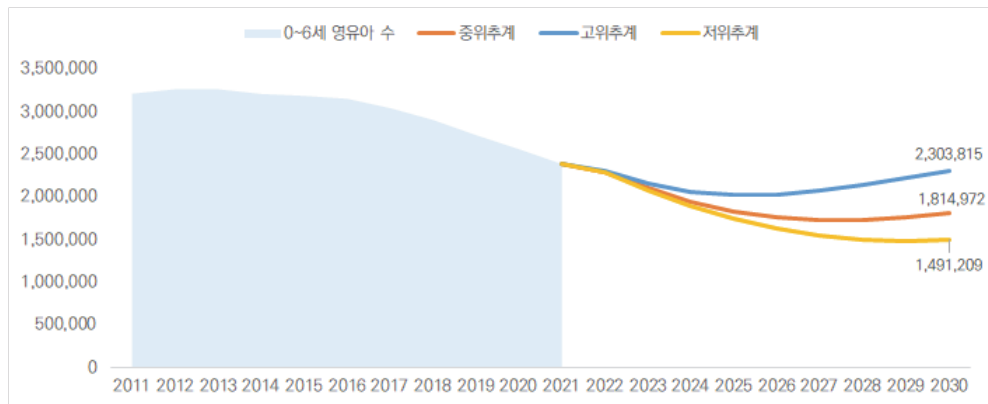
보육 정책 대상인 만0~6세 영유아 수도 지속 감소하여 2017년 310만명에서 2021년 239만 명 선까지 감소하였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영유아 수도 지속 감소하여 10년 뒤인 2030년에는 181만명(중위가정)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이 장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저위가정 수준, 즉 150만명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1-2〉 장래 0~6세 영유아 인구 추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저위	2,284,053	2,074,245	1,897,480	1,751,464	1,632,100	1,552,605	1,503,934	1,483,602	1,491,209
중위	2,295,053	2,103,055	1,945,263	1,831,524	1,759,916	1,731,098	1,734,556	1,762,753	1,814,972
고위	2,313,431	2,162,091	2,066,568	2,026,344	2,027,063	2,069,433	2,141,259	2,222,390	2,303,815

자료: 국가통계포털. 장래 인구 추계

[그림 IV-1-3] 0~6세 영유아 수 및 장래 영유아 인구추계



자료: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 (<https://jumin.mois.go.kr/> 2022. 3. 24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2022. 3. 24 인출).

나. 생애 초기의 중요성 및 사회적 관심 고조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생애 초기 단계의 투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였다. Heckman(2006)이 생애단계별로 투자 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미국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

(Perry Preschool Project, 2003)와 영국의 이피피이 프로젝트(EPPE Project, 2007)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미국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 2003)는 유아교육 1달러 투자 시 16.14 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영국의 이피피이 프로젝트(EPPE Project, 2007)는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에 약 1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초기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갔다. 우리나라는 아이사랑플랜(2009-2013)을 근거로 0~2세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²³⁾.

〈표 IV-1-3〉 OECD 주요국의 유아교육보육(ECEC)에 대한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오스트레일리아	0.49	0.52	0.54	0.57	0.60	0.66	0.66	0.65	-
덴마크	1.44	1.37	1.52	1.51	1.47	1.39	1.32	1.27	1.25
핀란드	1.03	1.03	1.05	1.09	1.11	1.09	1.12	1.10	1.06
프랑스	1.20	1.21	1.21	1.24	1.31	1.31	1.32	1.31	1.32
독일	0.44	0.46	0.47	0.53	0.58	0.59	0.60	0.63	0.67
일본	0.31	0.35	0.37	0.38	0.38	0.41	0.56	0.61	0.69
한국	0.57	0.59	0.59	0.72	0.91	0.89	0.90	0.88	0.86
뉴질랜드	0.98	1.03	1.04	1.01	1.01	1.01	1.02	1.00	0.95
노르웨이	1.19	1.21	1.22	1.21	1.25	1.30	1.33	1.39	1.36
스웨덴	1.49	1.47	1.48	1.56	1.59	1.59	1.56	1.59	1.58
영국	0.77	0.76	0.77	0.76	0.73	0.59	0.64	0.55	0.56
미국	0.37	0.38	0.37	0.35	0.33	0.33	0.33	0.33	0.33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Chart PF3.1.A.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국가 지원체계 강화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로 보육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 부문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어린이집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고, 특히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2012년에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45.6%까지 상승하였고, 2019년

23) 가구소득 대비 어린이집 보육비 지출 비중이 2004년 8.3%에서 2009년 7.4%, 2012년 3.5%로 낮아짐(서문희 외, 2012).

에는 50.1%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소폭 하락하였지만 가정 내 양육 부담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021년에는 다시 반등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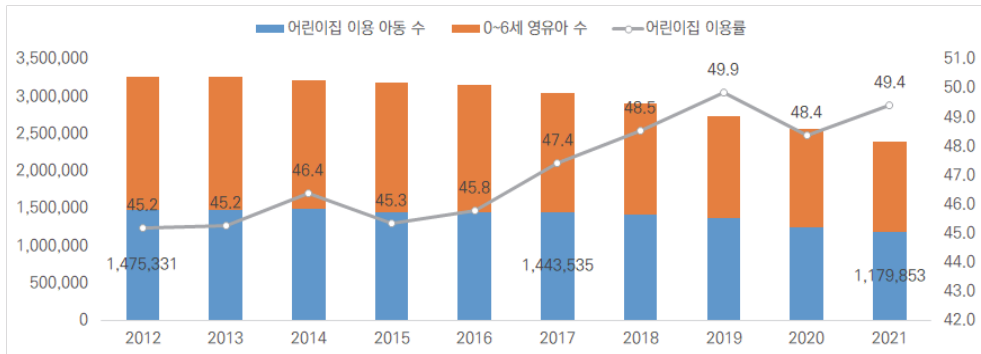
〈표 IV-1-4〉 최근 10년 간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추이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6세 영유아 수	3,255,160	3,284,476	3,210,156	3,187,718	3,153,489	3,044,577	2,904,953	2,726,957	2,552,100	2,387,76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1,475,331	1,477,151	1,488,435	1,454,417	1,443,784	1,443,535	1,409,660	1,394,755	1,239,888	1,179,853
어린이집 이용률	45.2	45.2	46.4	45.3	45.8	47.4	48.5	49.9	48.4	49.4

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에는 0~5세 아동 수를 의미하며, 만6세 이상 아동은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국가통계포털(각 년도). 1세별 주민등록인구(0~6세 인구).

〔그림 IV-1-4〕 어린이집 이용률: 2012~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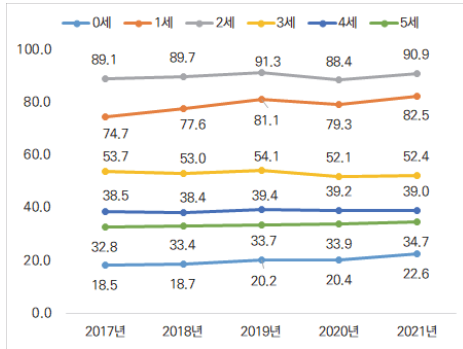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0세는 2017년 18.5%에서 2021년 22.6%로 지난 5년 간 4%p가 상승하였고, 1세는 같은 기간 동안 74.7%에서 82.5%, 2세는 89.1%에서 90.9%로 정부의 지원 확대에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에 반해 3세는 53.7%에서 52.4%, 4세 38.5%에서 39.0%, 5세 32.8%에서 34.7%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누리과정 시행 이후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요가 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 유치원 3법 등의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대립 국면 장기화²⁴⁾와 2020년 안산 유치원생 햄버거병 등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건강·영양·안전 등의 사건·사고²⁵⁾로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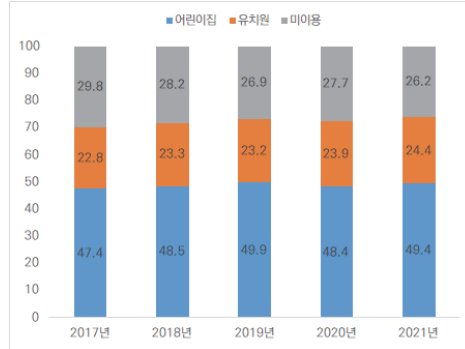
24) "사립유치원 비위 건수, 국공립보다 10배 많아...엑수는 263배"(연합뉴스 2018.10.31.일자 기사).
 '유치원 3법' 통과...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될 듯(세계일보 2020.01.14.일자 기사).
 한유총 사실상 '집단휴원' 선언...맞벌이 가정 '보육대란' 우려(연합뉴스 2019.02.28.일자 기사).

늘어난 것이다.

[그림 IV-1-5]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그림 IV-1-6]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통계.
행정안전부(2017, 2018, 2019, 2020, 2021). 주민등록인구 (<https://jumin.mois.go.kr/>)

<표 IV-1-5>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영유아 수: 2021년

단위: 명, %

구분	0~6세 영유아수 ¹⁾ (a)	어린이집 ²⁾ (b)	유치원 ²⁾ (c)	계 (b+c)	어린이집 (b/a)	유치원 (c/a)	전체 (b+c/a)	미이용
0세 반 ³⁾	528,579	119,621	-	119,621	22.6	-	22.6	77.4
1세	306,120	252,542	-	252,542	82.5	-	82.5	17.5
2세	332,157	301,914	-	301,914	90.9	-	90.9	9.1
0~2세 소계	1,166,856	674,077	-	674,077	57.8	-	57.8	42.2
3세	363,613	190,393	133,257	323,650	52.4	36.6	89.0	11.0
4세	412,739	161,020	207,528	368,548	39.0	50.3	89.3	10.7
5세	444,555	154,363	241,489	395,852	34.7	54.3	89.0	11.0
3~5세 소계	1,220,907	505,776	582,274	1,088,050	41.4	47.7	89.1	10.9
2021년	2,387,763	1,179,853	582,274	1,762,127	49.4	24.4	73.8	26.2
2020년	2,562,100	1,239,338	612,253	1,851,591	48.4	23.9	72.3	27.7
2019년	2,726,967	1,359,475	633,520	1,992,995	49.9	23.2	73.1	26.9
2018년	2,904,953	1,409,680	675,559	2,085,239	48.5	23.3	71.8	28.2
2017년	3,044,577	1,443,535	693,830	2,137,365	47.4	22.8	70.2	29.8

주: 1) 0~6세 영유아 인구수는 각 년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2) 어린이집 자료는 2020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20년 4월 통계 기준임.

3) 보육 연령 기준으로 0세반은 0,1세가 포함된 수치임. 연령반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4) 6세 이상은 제외하여 보육통계와 교육통계 상의 전체 이용 아동 수와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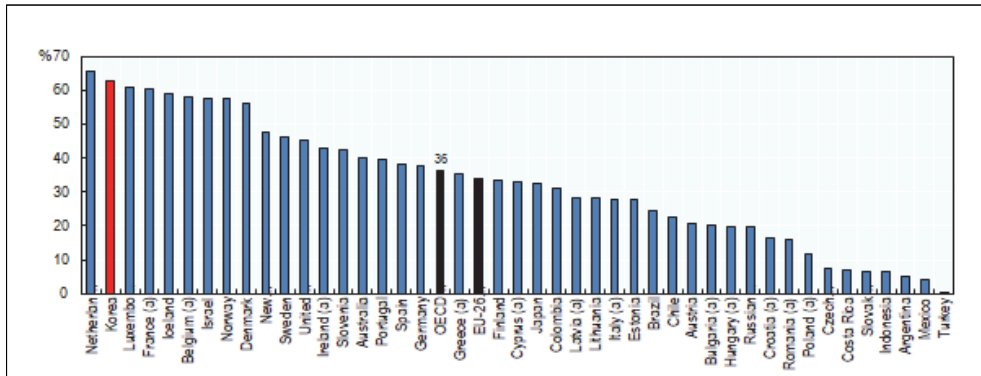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통계연보.

25) "안산 유치원 2곳서 식중독 109명... 14명 햄버거병 증세"(조선일보 2020.6.25.일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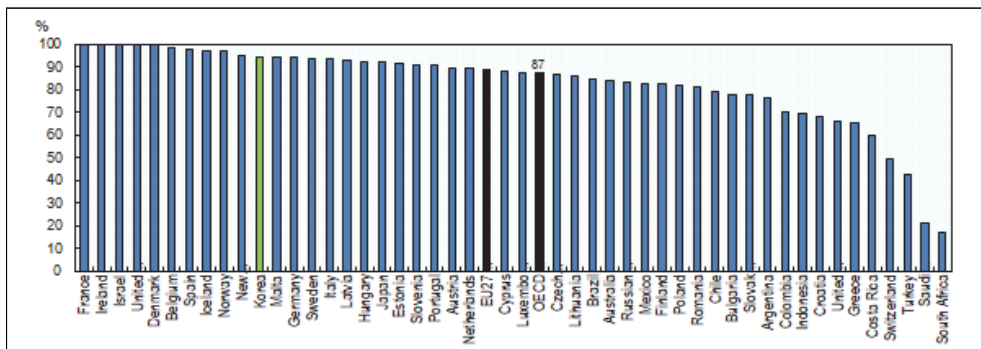
[그림 IV-1-7]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0-to2-year-old



자료: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 회원국의 ECEC 이용률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8년 기준 62.7%로 OECD 평균 36.1%보다 26%p 정도가 높다. 3~5세 유아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도 2017년 기준 94.5%로 OECD 회원국 평균 87.0%를 상회한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면서 유아의 기관 이용률이 상승한 것이다.

[그림 IV-1-8] Enrolment rat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and primary education, 3-to5-year-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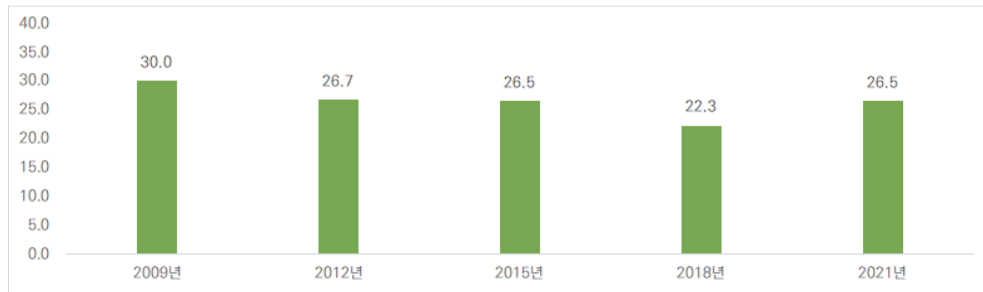


자료: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또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함께 어린이집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는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최초 이용 연령은 2009년 30.0개월에서 2012년 26.7개월, 2018년 22.3개월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조

사에서는 25.2개월로 다시 상승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 이용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그림 IV-1-9]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2, 2015, 2018, 2021).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률이 상승하고 어린이집 최초 이용시기도 빨라지지만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인구 절대 감소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1-6〉은 최근 3년(2019-2021) 간 어린이집 이용률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 이용 아동 수를 추정한 것이다.

〈표 IV-1-6〉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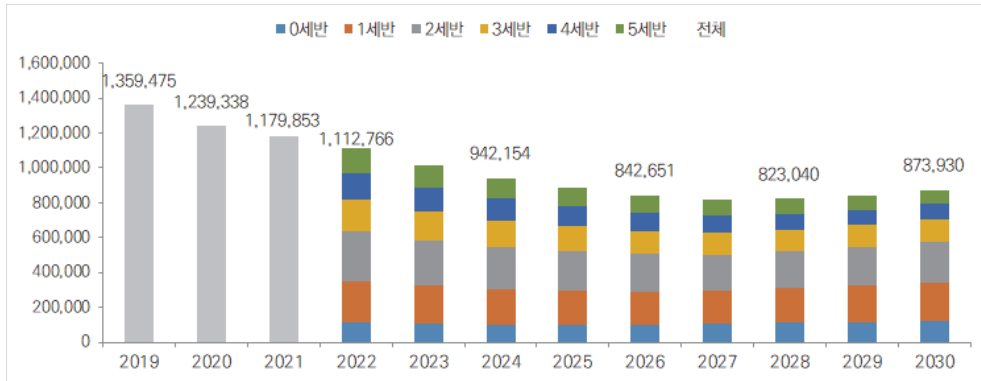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반	126,216	116,468	119,621	111,354	105,225	99,543	97,553	100,821	106,502	111,970	117,101	121,762
1세반	294,242	263,128	252,542	234,390	217,793	206,686	195,515	186,423	187,897	198,908	209,601	219,786
2세반	376,041	321,294	301,914	287,421	260,269	242,129	230,236	217,822	207,720	209,376	221,632	233,524
3세반	240,429	214,853	190,393	183,127	167,897	152,173	141,766	134,818	127,559	121,654	122,633	129,810
4세반	173,715	174,394	161,020	150,661	135,329	124,169	112,636	104,942	99,806	94,438	90,070	90,801
5세반	148,832	149,201	154,363	145,812	130,677	117,454	107,837	97,825	91,150	86,695	82,035	78,246
전체	1,359,475	1,239,338	1,179,853	1,112,765	1,017,190	942,154	885,543	842,651	820,634	823,041	843,072	873,929

주: 2019~2021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평균값을 적용하여 추계함.
 장래 영유아 수 자료는 중위가정 자료를 활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20, 2021). 보육통계.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장래인구통계(중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20년 1,239,338명에서 2027년 820,634명까지 줄고, 이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만명 선까지는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령별로도 202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0~2세는 반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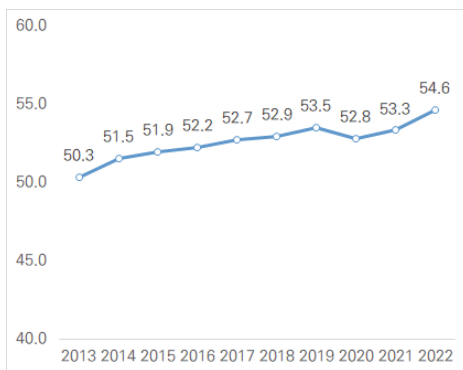
[그림 IV-1-10]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추계(연령반 별): 2022~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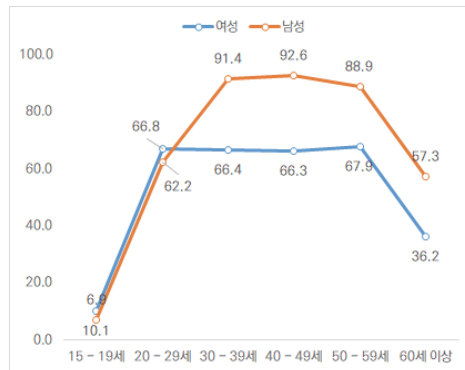
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여성의 고학력화, 사회 참여 확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은 2013년 50.3%에서 2022년 54.6%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그림 IV-1-10 참조).

[그림 IV-1-11]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그림 IV-1-12]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경제활동인구.

이를 연령별대별로 보면, 전형적인 M자형 커브를 나타내고 있으나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보육 서비스 확대 등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에 따라 결혼-출산-양육 주요

연령대인 20~29세와 30~39세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표 IV-1-7〉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5~19세	8.7	9.4	9.9	9.6	10.1	9.2	9.0	8.0	9.5	10.1
20~29세	62.0	63.7	64.3	65.3	64.9	65.2	64.3	61.8	63.9	66.8
30~39세	57.0	58.3	58.7	59.9	61.4	62.7	64.1	63.8	63.7	66.4
40~49세	65.9	66.7	67.6	67.4	67.5	67.4	66.7	65.5	65.6	66.3
50~59세	60.5	62.3	63.2	63.0	64.2	65.0	66.3	65.0	66.0	67.9
60세이상	29.0	29.7	30.0	30.6	31.3	31.5	33.6	35.0	35.4	36.2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경제활동인구.

한편,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022년 기준 46.3%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주 연령대인 30~49세 사이는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이다²⁶⁾. 또한 자녀 수 별로는 반비례하여 1명이 59.7%인데 반해 2명은 56.6%, 3명 이상 52.9%로 떨어진다. 자녀연령별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6시간으로, 6세 이하 33.4시간, 7~12세 36.2시간, 13~17세 37.4세로 자녀연령이 적을수록 취업시간도 줄어든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로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3년 16.4%에서 2021년 25.6%로 10%p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아버지 육아 휴직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49.3%에서 2021년 65.2%로 상승한데 반해 아버지 육아휴직 사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0.3%에서 4.1%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라. 어린이집 공급 구조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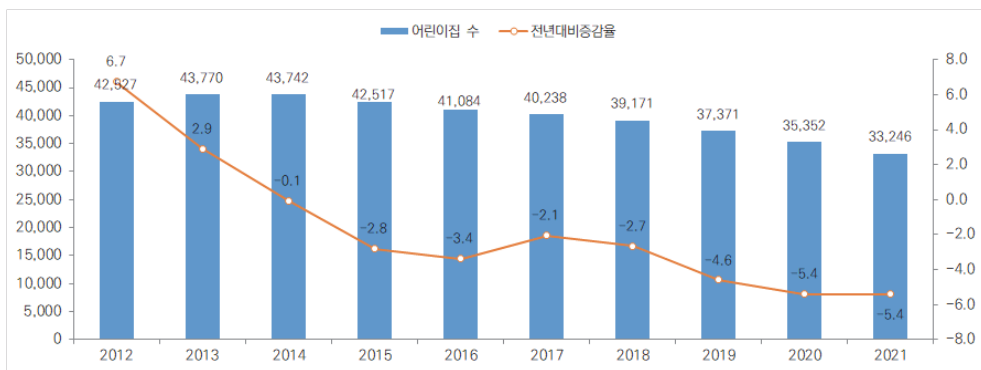
어린이집 수는 2021년 말 기준 33,246개소로 저출생 현상 장기화와 0~5세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간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5.3%에서 2021년 16.4%로 상승하였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출생아 수 감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3~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치

26) 가구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율은 15~29세 42.9%, 30~39세 53.3%, 40~49세 55.1%임(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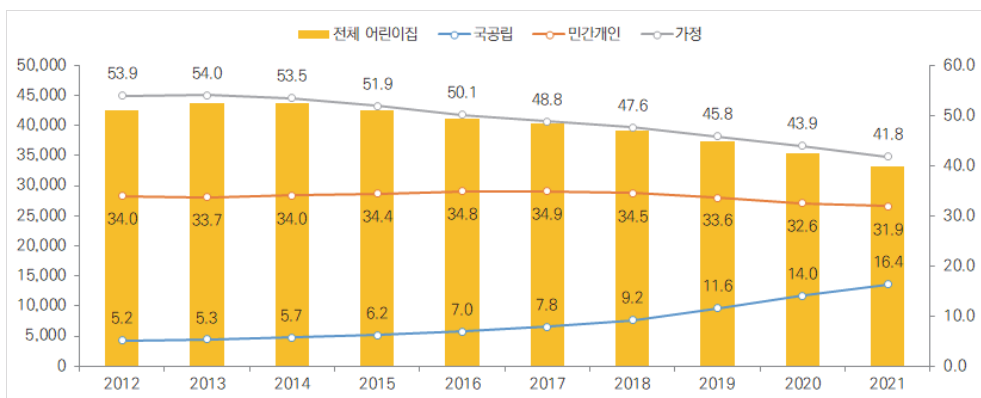
원 이용 아동 증가 등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매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면서 영아보육을 주로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폐원이 확대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전체 어린이집 중 절반이 넘는 54.0%에서 2021년 41.8%까지 떨어졌고,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보다 감소폭이 작아서 2011년 34.0%에서 2021년 31.9%로 줄었다.

[그림 IV-1-13] 최근 10년 간 어린이집 수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통계.

[그림 IV-1-14] 어린이집 유형별 비중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통계.

2.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 구축

가.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1) 추진 배경 및 현황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 지원의 형평성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전체 보육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로서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로 초등학교 미취학인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지원한다.

〈표 IV-2-1〉 양육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89,756	102,653	1,060,484	1,012,336	1,009,346	927,821	836,290	745,677	658,450	560,768
서울	11,049	12,613	228,427	216,708	211,400	188,728	168,859	146,901	129,490	109,533
부산	6,693	7,167	66,173	64,551	65,643	60,978	54,850	48,514	41,239	33,933
대구	6,844	6,644	47,008	45,109	45,167	42,346	37,360	33,870	29,799	23,602
인천	6,516	7,168	64,362	61,516	61,588	57,044	51,128	45,537	40,114	33,529
광주	3,601	4,655	28,491	27,069	26,305	24,386	21,210	18,697	17,094	15,192
대전	3,745	3,791	32,181	30,371	28,985	26,471	23,160	19,918	16,969	14,603
울산	1,388	1,372	27,232	26,178	27,379	25,592	22,970	20,029	17,287	13,791
세종	-	175	2,475	3,795	6,164	6,837	7,449	7,574	7,404	6,982
경기	17,764	20,004	282,710	268,594	269,077	250,923	228,352	209,208	187,918	170,335
강원	3,243	3,627	24,786	23,238	22,778	20,507	18,403	16,774	15,235	14,209
충북	3,104	3,815	31,235	29,509	29,092	26,904	24,280	21,753	18,981	15,798
충남	3,813	4,834	41,773	39,805	39,250	36,466	33,508	29,695	26,074	21,434
전북	4,990	5,774	30,311	28,682	27,946	24,934	22,313	19,324	16,646	13,565
전남	4,406	5,899	32,960	30,891	30,751	27,565	24,598	21,725	19,437	15,204
경북	5,791	6,861	46,136	44,355	44,915	40,367	35,732	31,352	27,407	21,883
경남	5,236	6,094	65,257	62,965	63,061	58,088	52,324	45,474	39,273	30,282
제주	1,573	2,160	8,967	9,000	9,845	9,685	9,794	9,332	8,083	6,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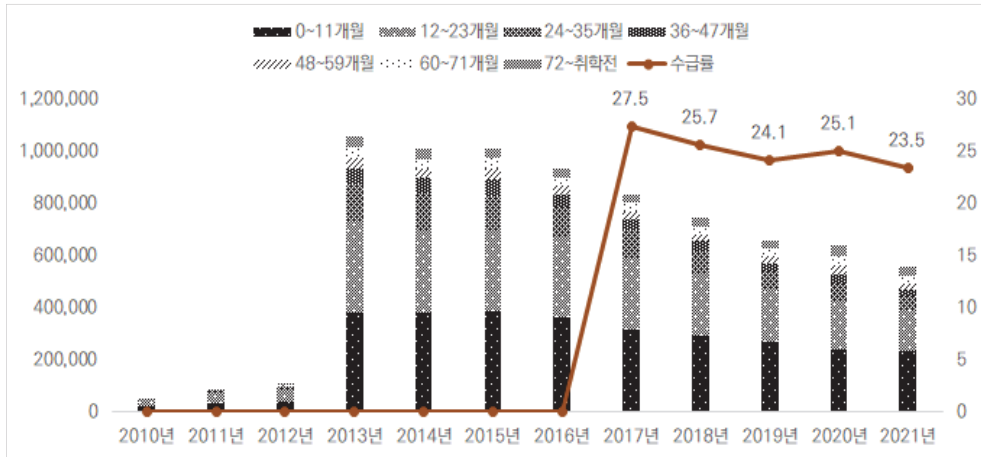
주: 일반, 장애아동, 농어촌 수당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통계.

양육수당 수급 아동은 2009년 도입 이래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수급 아동은 2017년 927,821명에서 2020년 658,450명까지 줄었다.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영아의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IV-2-1] 양육수당 지급 현황



자료: 양미선 외(2022).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영아수당을 지원하며, 소득 인정액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가정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함).

[그림 IV-2-2]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2021년					2022년 이후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아동수당		월10			아동수당		월10		
보육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시설미이용	영아수당 월30 → 월50 ('22년) ('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20	월15	월10				월10	
보육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지원			보육	시설이용	바우처 (보육료) 월50	보육료(바우처)지원	
		월50	월50	월28~36				월28~36	

* 영아수당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자료: 보건복지부(2022). 영아수당 사업안내. p.4.

영아수당 지원금액은 월 3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영아수당 예산은 2022년 기준 373,132백만원이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로 0,1세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0~1세 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2022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현금을 지급한다. 2023년에는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 만0세 매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출생아에게 지급한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제도와 통합되어 2023년부터 일몰된다.

한편,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영유아가 감소 추세이나 영유아 육아용품 시장 규모는 마해 확대되는 추세이며 육아용품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은 1.2조원, 2015년 2.4조원, 2020년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산율 저하에도 아동영유아용품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거래액은 201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조 9천억 원으로 35.1%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21. 2. 3.). 외동아를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고비용 제품 구매 욕구와 편리함을 중시하는 현 부모세대의 니즈가 맞물려 사회문화를 이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육아용품의 고급화로 인한 고비용 육아 문화는 저출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영유아 가구의 경우, 육아용품 대여 및 중고거래 지원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높다.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2016)의 ‘육아문화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가구 93.0%가 육아용품을 물려받아 사용한 경험이 있고, 75.3%는 중고 육아용품 구매 경험이 있으며, 경험자의 88.2%는 육아비용 감소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응답자 중 95.9%는 물려받아 사용할 의향이 있으며, 물려받고 싶은 품목으로 ‘도서완구(91.8%)’, ‘내구재(74%)’, ‘의류신발(73.9%)’을 꼽았다.

〈표 IV-2-2〉 장난감 및 도서 대여서비스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운영 센터	82	86	92	98	109
사업장	162	196	201	215	231

자료: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놀이실(체험실) 이용 현황.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 지원사업(<http://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대여 서비스 센터 현황(분소 포함)을 살펴보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난감 대여 건수와 이용자수가 도서 대여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보아 장난감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 장난감 및 도서 대여서비스 실적 현황

연도	총계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대여건수	이용자수	대여건수	이용자수	대여건수	이용자수
2016	2,404,090	2,017,612	1,911,887	1,437,399	492,203	580,213
2017	2,574,168	1,764,788	1,990,377	1,371,891	583,791	392,897
2018	2,783,150	1,956,665	2,094,530	1,448,340	688,620	508,325
2019	2,951,673	2,002,775	2,218,445	1,467,616	733,228	535,159
2020	1,306,366	772,839	975,391	604,430	330,975	168,409
총계	12,019,447	8,514,679	9,190,630	6,329,676	2,828,817	2,185,003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장난감 및 도서 대여서비스 현황.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 정양육지원사업(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40000/d1_600064/d1_600066.jsp).

영유아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2020)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카시트 미착용률이 38.5%에 이른다.²⁷⁾ 충남, 전북, 전남 함평군 등은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를 지원하고, 서울 광진구, 부산 연제구, 대구 북구, 대전 대덕구, 전남 곡성군, 경북 포항시 등에서는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를 대여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나(양미선 외, 2022),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수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경우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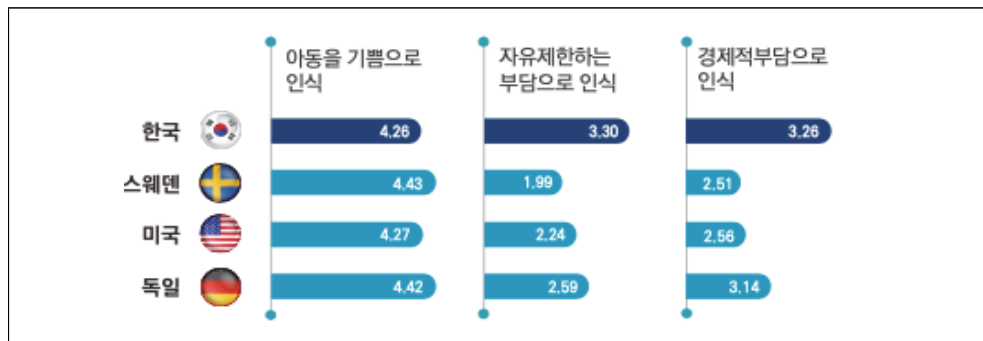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및 현황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경제 성장에 따라 우리 사회의 시민·권리의식도 성숙되었으나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27) 성인에 비해 교통사고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므로 유아용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하나 대중교통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사회적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인지하고 있지만 각자 이해와 관련된 경우 아동 권리가 무시되거나 포기되는 등 사회적 배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아동은 ‘기쁨·축복의 존재’였으나, 최근에는 ‘양육비 부담, 자유 제한’ 등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양면적 태도를 함께 보이고 있다.

[그림 IV-2-3] 아동의 대한 인식



우리 사회와 부모의 양면적 태도, 아동권리에 대한 지체된 인식이 아동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 아동 행복감을 저해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경험’ 체감도의 경우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종합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동과 가정, 아동이 속한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고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등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연관성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어가지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유엔권리협약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 915조에서는 부모 징계권 폐지를 강조하며 부모와 양육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에게 신체적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는 증가 추세이며 재학대 판정율도 높은 편으로 아동권리와 존중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자체 부모교육과 클로버 부모교육, 공통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부모교육은 전반적으로 부모역할, 양육 관련 내용을 주요 주제로 실시하고 있다.

〈표 IV-2-4〉 자체 부모교육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건강영양		안전		양육		부모역할		어린이집 정책 관련		기타 및 부모행사*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17	173	3,576	188	4,494	3,509	29,352	801	15,109	161	4,843	485	6,215
2018	290	4,200	259	6,075	4,141	30,597	835	16,490	209	3,679	783	8,163
2019	301	4,586	268	6,735	4,891	33,901	839	17,125	98	2,349	1,301	19,683
2020	115	1,810	211	6,783	2,639	23,807	404	8,584	25	354	606	13,184

주: *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 워크숍, 설명회, 행사 및 공연 등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자체부모교육.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통계>가정양육지원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표 IV-2-5〉 클로버 부모교육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센터명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17	전국	1,939	28,635	3,350	78,598
2018	전국	1,466	21,134	3,204	63,454
2019	전국	1,309	18,279	3,907	73,793
2020	대면	303	3,230	1,503	21,391
	화상	25	214	-	-
	비대면	4,357	45,793	-	-

주: 서울센터의 경우 서울전체 시군구가 공통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관계로 교육실시 센터에서 제외.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클로버 부모교육.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지원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표 IV-2-6〉 공통 부모교육 현황

단위: 회, 명

연도	센터명	자녀권리존중		가정 내 놀이 환경 점검		아동학대예방		포괄적 양육 정보 안내		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양육태도 점검		놀이일지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17	전국	856	15,231	330	4,855	410	7,667	260	4,891	-	-	-	-	-	-
2018	전국	598	10,285	388	4,605	347	6,535	279	5,511	410	5,417	367	6,702	-	-
2019	전국	598	9,973	359	5,294	375	7,942	-	-	603	10,318	643	10,738	-	-
2020	대면	231	2,893	151	1,627	116	1,364	27	280	349	4,301	354	4,397	-	-
	화상	-	-	-	-	-	-	-	-	-	-	-	-	-	-
	비대면	4,342	44,495	-	-	2,103	21,345	-	-	973	10,008	-	-	83	427

주: 1) 서울센터의 경우 서울전체 시군구가 공통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관계로 교육실시 센터에서 제외.

2)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부모교육의 경우, 자료 배포는 필수/교육 실시는 선택사항으로 진행함.

3) 2020년부터는 공통 부모교육은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병행하여 부모역할 증진, 부모-자녀 관계 형성 지원 지속 추진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공통 부모교육(자료집 보급, 비대면 교육, 화상 교육, 대면 교육). 센터지원>센터운영 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지원사업(<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이 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여성가족부 지원의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교육은 주로 공통사업과 자유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공통·자유 사업별 부모교육 유형은 <표 IV-2-7>와 같다.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모교육 중 영유아자녀 부모교육은 앞서 살펴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사업으로 여러 기관에서 부모교육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적 자료는 <부록 표 IV-2-1>에 수록하였다.

〈표 IV-2-7〉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명	사업내용
공통사업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예비/신혼기 부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포함한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예비부부·부모대상 고비용 혼례교육
	남성대상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자유사업	신혼기 가족교육	출산준비교실
	중년기 가족교육	공통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혼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노년기 가족교육	중년기 가족생활교육, 가족경영아카데미, 부부관계증진교육, 의사소통 교육 등
	자녀대상교육	노후준비교육, 은퇴설계교육, 노인대상 자기돌봄강화 프로그램 등
	자녀대상교육	독서아카데미, 창의력 교실, 진로교육, 폭력예방교육, 예절교육 등

자료: 건강가정진흥원(2017, 2018, 2019,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한편,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신체학대 보다 정서학대, 중복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정서학대와 중복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IV-2-8〉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

단위: 명, (%)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계	
2011	466 (7.7)	909 (19.6)	226 (4.9)	1,783 (29.4)	53 (1.1)	2,621 (56.6)	6,058 (100.0)	
2012	461 (7.2)	936 (20.2)	278 (6.0)	1,713 (26.8)	- -	3,015 (65.1)	6,403 (100.0)	
2013	753 (11.1)	1,101 (23.8)	242 (5.2)	1,778 (26.2)	- -	2,922 (63.1)	6,796 (100.0)	
2014	1,453 (14.5)	1,582 (34.1)	308 (6.6)	1,870 (18.6)	- -	4,814 (103.9)	10,027 (100.0)	
2015	1,884 (16.1)	2,046 (44.2)	428 (9.2)	2,010 (17.2)	0 (0.0)	5,347 (115.4)	11,715 (100.0)	
2016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0 (0.0)	8,980 (48.0)	18,700 (100.0)	
2017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0 (0.0)	10,875 (48.6)	22,367 (100.0)	
2018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0 (0.0)	11,792 (47.9)	24,604 (100.0)	
2019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9.6)	0 (0.0)	14,476 (48.2)	30,045 (100.0)	
2020	3,807 (12.3)	8,732 (28.3)	695 (2.2)	2,737 (8.9)	0 (0.0)	14,934 (48.3)	30,905 (100.0)	

주: 2012년부터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되어 0으로 표시됨.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 63.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동 연령에 따른 발달 특징을 이해하면서 자녀를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기본 원리로 ‘자녀권리 존중’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부모교육에서는 자녀양육 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양육 솔루션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양육방법 등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아이가 존중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근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표 IV-2-9>와 같이 부모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표 IV-2-9〉 자녀권리 존중 부모교육 운영 실적

단위: 회, 명

구분	2019		2020		2021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교육	598	9,973	248	3,072	621	7,900

자료: 중앙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40000/d1_600061/d1_600218/d1_600063.jsp)

〈표 IV-2-10〉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경험 및 만족

단위: %, 점, (명)

구분	이용경험					만족도			
	주1회 이상	월 1~3회	분기별 1~3회	연 1~3회	이용경험 없음	만족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1	31.5	9.9	39.0	17.4	46.4	3.5	0.7	(1,486)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3.4	35.2	10.8	34.7	15.9	47.4	3.5	0.7	(723)
유아	1.1	28.5	9.2	42.5	18.7	45.5	3.5	0.7	(763)
$\chi^2(df)/t$	23.1(4)***					1.9			
지역규모									
대도시	1.8	29.4	9.0	40.9	18.9	46.8	3.5	0.7	(684)
중소도시	2.4	33.5	11.1	38.5	14.6	46.6	3.5	0.7	(586)
읍면지역	2.3	31.7	9.3	35.1	21.5	44.3	3.5	0.6	(216)
$\chi^2(df)/F$	15.5(8)*					7.5***			
2018년 조사	1.9	22.8	14.3	31.9	29.2	51.5	3.5	0.62	(1,380)
2015년 조사	-					45.1	3.4	0.65	(1,171)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영유아 구분: 생활연령

3) 이용 경험은 ‘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만족도는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함.

4) 만족비율은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매우 만족’ 혹은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임.

5) 만족도는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5점으로 평정하여 2015년도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리코딩하여 산출함.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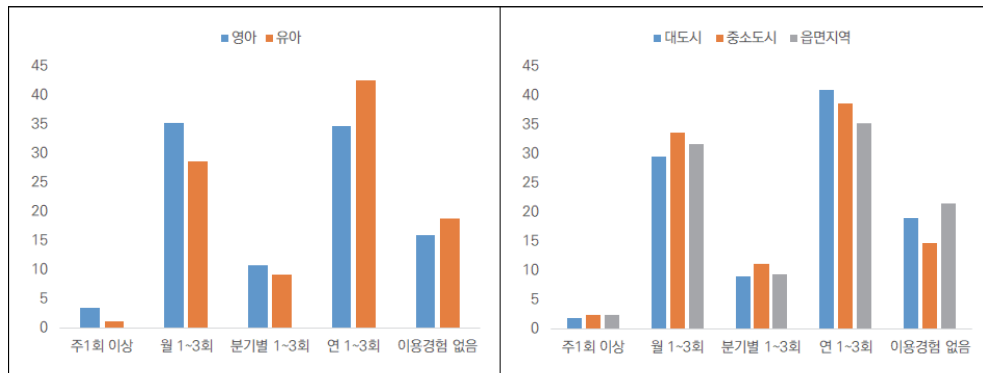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p. 162 <표 IV-2-14>를 수정하여 사용함.

* $p < .05$, *** $p < .001$

정부는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부모 간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외, 2021)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있으나 이용 경험과 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대한 이용 경험이 전혀 없는 영유아 부모 비율은 이전에 비해 감소했고, 만족한다는 비율도 46.4%로 낮았다.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대한 홍보와 이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임신육아종합포털에 대한 고도화 작업 및 모바일 체제 구축은 미비하며, 보육포털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림 IV-2-4] 자녀 연령 및 지역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이용 비율



가정양육 대상에 따른 맞춤 정보 제공을 위해서 가정양육 지원을 하는 경우 포괄적인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와 양육 방법 제공 등의 부모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영아 가정과 유아 가정, 또는 영유아 모두 있는 가정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의 차별화는 보여지지 않는다. 양육 대상에 맞는 부모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취약가정에 맞는 지원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은설 외, 2021). 또한 임신 육아 포털의 이용 경험자는 약간 증가했으나 만족도는 2018년에 비해 낮아졌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포털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고도화, 세밀화 등을 통해 기능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임신·육아 종합 포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은설 외, 2021).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다른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위상에 비해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는 아동권리 인식은 낮아 부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부모교육의 실시 내용을 통해 부모의 연령과 요구에 따른 교육 내용과 매체가 다를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이고 단순한 교육은 온라인을 선호하고 개별적인 고민은 직접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부응하는 다양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교육 참여 비율이 현격히 낮아졌는데, 매체와 내용을 MZ세대인 부모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표 IV-2-11〉 부모교육 경험 여부와 내용

단위: %(명)

구분	부모교육경험		부모교육 경험 내용							
	경험 비율	계(수)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양육방법	보호자 역할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 윤리 및 예절	가족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	미디어·인터넷 중독 예방	기타	(수)
전체	28.3	100.0(2,500)	80.9	42.2	39.8	9.0	24.1	24.2	2.2	(747)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0.1	100.0(1,231)	85.1	37.9	33.6	8.3	27.5	16.8	0.8	(275)
유아	35.2	100.0(1,269)	78.8	44.3	42.8	9.3	22.4	27.7	2.8	(472)
모취업여부										
취업	32.5	100.0(997)	80.2	41.0	41.7	8.6	25.2	24.4	2.8	(344)
휴직중	22.5	100.0(303)	87.0	47.8	34.1	12.3	27.8	31.4	0.0	(73)
미취업	26.3	100.0(1,174)	80.2	42.8	39.4	8.7	22.2	22.4	1.9	(324)
부재 등	17.5	100.0(26)	73.2	0.0	17.6	0.0	9.1	0.0	0.0	(6)
2018년	37.2	100.0(2,533)	78.7	48.2	35.8	10.9	26.7	15.6	0.1	(965)

주: 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 2018년 이하 자료: 이정원 외(2018). p. 618. 〈표 XI-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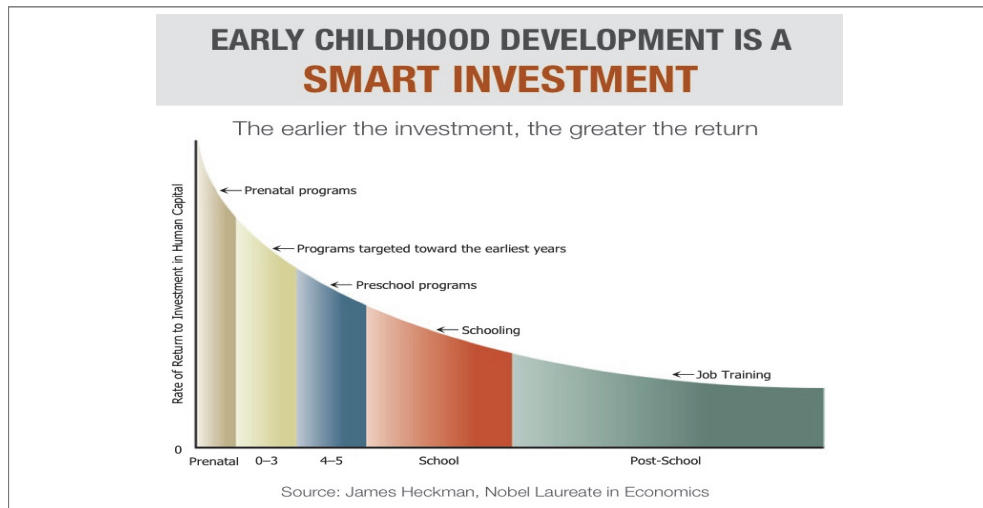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p. 562(표 XI-5-3) 외(표 XI-5-4) 부모교육 경험 여부와 경험 내용 인용함.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부모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경험한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내용은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와 양육 방법이었으며, 부모가 희망하는 교육 내용도 영유아 성장 관련 정보와 양육 방법이고 선호하는 교육방식은 집합교육이었다. 부모의 부모교육 경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모 요구 조사와

분석에 기초한 구체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와 대응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지침서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학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부모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역량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예비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 James Heckman(2000)에 따르면 예비 부모교육은 사회 환원율이 가장 높은 인적자원의 ‘교육투자’라고 28)을 강조한 바 있다. 가임기 부모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대상 부모교육은 지역사회 내 육아 인프라와 각종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산후우울의 예방, 신생아 아동학대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IV-2-5] 연령별 인적 자원 투자 대비 회수율



특히, 첫 아이 영아기 육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영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애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실재를 다루면서 초보 부모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신중년(선배시민)으로서 손자녀 육아의 보람과 가치를 독려하여 조부모 교육을 활성화한다. 영유아 양육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

28) Heckman, J. (2000)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Research in Economics* 54(1): 3-56.

자녀 발달주기 기반의 부모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의 각종 지원(예방접종지원,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보육료 등)과 온·오프블렌디드의 하이브리드형 부모교육을 연동한다. 자녀의 발달주기에 따른 발달과업, 아동 권리존중의 양육 등의 부모역할의 책무성을 교육하여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존중 문화 확산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여야 한다. 민법 915조(부모의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 국민 인식 개선 홍보와 대안적 부모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1) 추진 배경 및 현황

일과 생활 균형 추세에 힘입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다. 단,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휴가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보완으로 육아휴직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성이 2010년 98.0%에서 2020년 75.5%로 20%p 이상 하락한데 반해 남성 비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24.5%로 20배 이상 상승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표 IV-2-12〉 출산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수(2010~2020)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산전후휴가자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89,834	81,093	81,700	73,306	70,949
육아휴직자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90,123	99,199	105,165	112,040
여성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81,537	82,868	84,617
남성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12,043	17,662	22,297	27,423
여성 비율	98.0	97.6	97.2	96.7	95.5	94.4	91.5	86.6	82.2	78.8	75.5
남성 비율	2.0	2.4	2.8	3.3	4.5	5.6	8.5	13.4	17.8	21.2	24.5

주: 1)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로 '01.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2)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 DB자료(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지원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으며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보건복지부, 2022: p. 307).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13년 15개소에서 2021년 740개소로 확대되었고, 시간제 보육반도 21개 반에서 857개 반으로 40배 이상 늘어났다. 시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현황은 〈부록 IV-2-2〉에 정리하였다.

〈표 IV-2-13〉 연도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단위: 개, 개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시·도	4	16	17	17	17	17	17	17	17
시·군·구	8	66	126	155	155	153	154	164	177
관리기관	8	51	73	78	18	18	18	18	18
제공기관									
전체	15	83	216	347	382	373	402	578	740
어린이집	9	54	166	288	312	302	321	487	645
육아종합지원센터	4	27	48	57	68	70	80	90	95
기타	2	2	2	2	2	1	1	1	-
반									
전체	21	97	237	382	437	443	490	681	857
어린이집	15	62	174	305	339	337	360	534	702
육아종합지원센터	4	33	61	75	96	105	129	146	155
기타	2	2	2	2	2	1	1	1	-

주: 1) 관리기관은 해당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했으며, 2017년부터 18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함

2) 기타는 강동어린이회관, 강동육아누리도서관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1).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시간제 보육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그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향을 받았다. 2015년에 비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이용건수와 이용시간 모두 증가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시간제 보육 운영 중단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용 실적이 줄었다. 아동 1인당 시간제보육 평균 이용 건수와 이용시간도 증가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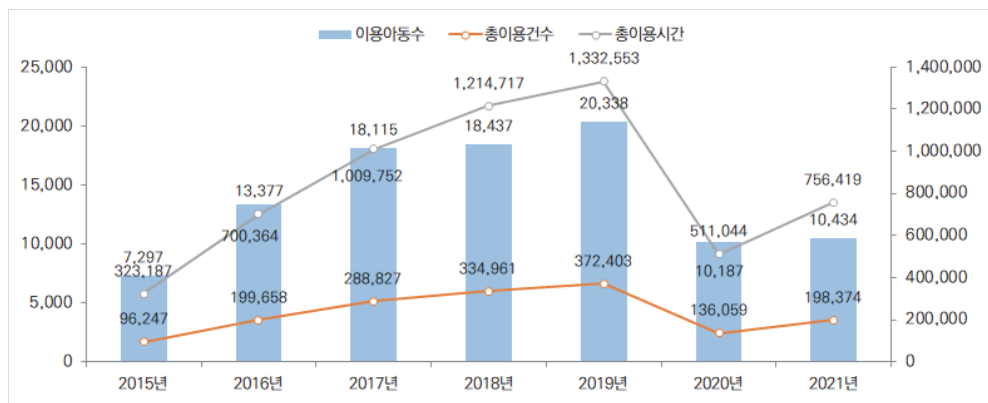
〈표 IV-2-14〉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

단위: 개소, 개, 명, 건, 시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관수	216	347	382	373	402	578	740
제공반수	237	382	437	443	490	681	857
이용 아동 수	7,297	13,377	18,115	18,437	20,338	10,187	10,434
총 이용 건수	96,247	199,658	288,827	334,961	372,403	136,059	198,374
총 이용 시간	323,187	700,364	1,009,752	1,214,717	1,332,553	511,044	756,419
기관당 기준							
평균 이용 건수	53	53	65	74	82	24	24
평균 이용 시간	179	185	228	269	294	89	91
반당 기준							
평균 이용 건수	47	48	58	63	68	20	20
평균 이용 시간	160	168	204	229	243	74	78
평균 이용 아동 수	8	8	9	9	9	3	3
아동 1인당 기준							
평균 이용 건수	6	6	7	7	7	6	8
평균 이용 시간	19	21	23	26	26	25	3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1).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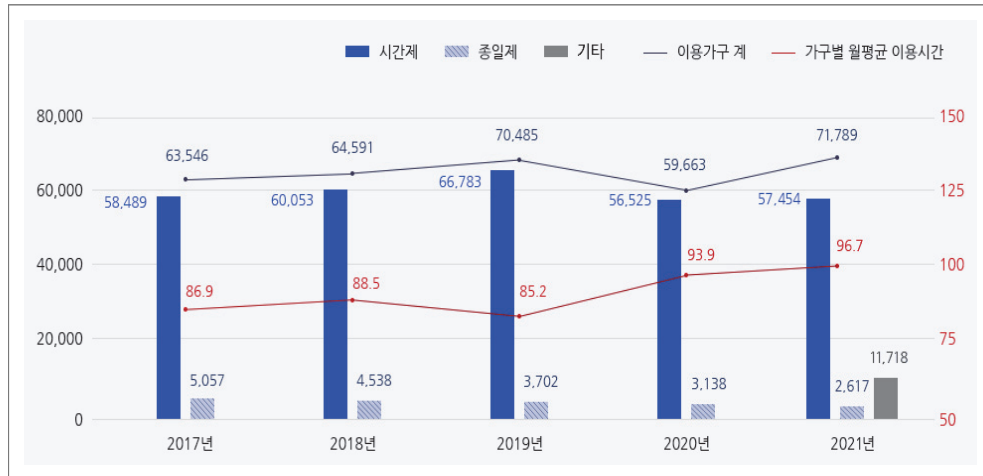
[그림 IV-2-6] 시간제 보육 이용 현황



자료: 양미선 외(2022).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와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일제보다는 시간제 이용 실적이 더 많다.

[그림 IV-2-7] 아이돌보미 이용자 현황



주: 기타: 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 인력
 자료: 여성가족부(2022).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 소개(https://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SITE_ID=FRONT&SEQ=16 2022. 4. 20 인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났듯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놀이, 여가 문화의 향유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영유아 놀이권 존중을 요구를 강화가 필요하다. 영유아 놀이권 존중과 함께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놀이 체험을 지원하여 영유아 놀이 경험 및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해졌다. 놀이실(체험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비해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IV-2-15〉 영유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현황

단위: 명

연도	센터명	영유아가정	어린이집	총계
		인원	인원 (교사 포함)	
2017	전국	1,817,972	389,727	2,207,699
2018	전국	1,808,520	381,525	2,190,045
2019	전국	2,002,757	447,170	2,449,927
2020	전국	374,256	91,835	466,091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놀이실(체험실) 이용 현황.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 지원사업(<http://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과거 가정 양육 지원은 양육비용 경감 등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 수당의 감소세를 반영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정양육 지원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가정에서 양육 시에 요구되는 다양한 장면과 부모의 양육 고민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용과 시간제 서비스 등의 비용과 공간적 지원 외 정보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이용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어린이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용 아동의 연령과 이용 기관에 따른 분석 후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표 IV-2-16〉 시간제보육 이용 기관 및 만족도,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서비스 제공기관		만족도				자녀양육 도움 정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만족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도움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86.3	13.7	79.4	3.9	1.0	(30)	88.7	4.3	0.8	(30)
생활연령										
0세	86.6	13.4	80.7	4.0	1.1	(12)	92.4	4.4	0.6	(12)
1세	77.7	22.3	65.8	3.6	1.1	(11)	79.5	4.0	1.0	(11)
2세	100.0	0.0	100.0	4.3	0.4	(7)	100.0	4.6	0.5	(7)
$\chi^2(df)/F$	2.2(2)		7.4(8)	2.0			3.7(6)	1.5		
2018년	57.8	42.2	68.7	3.7	1.0	(43)	77.5	4.0	1.0	(43)
2015년	13.9	86.1	71.4	3.85	0.66	(9)	84.2	4.06	0.64	(93)

출처: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 p. 329-330.

현재 시간제보육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기관은 어린이집이지만 집과 가깝거나 지역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다양성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 이용 경험은 더 낮고 거주 지역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 이용 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로 42.1%, ‘아이가 어려 종일 기관 이용이 부담되어서’ 24.1%, ‘자녀 양육 이외의 개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서’가 14.8%,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15.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2-17〉 시간제보육 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가 어려 종일기관 이용 부담	자녀 양육 이외에 개인시간 필요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	현재 종일제 기관 이용 할 수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24.1	14.8	42.1	15.8	3.2	100.0(101)
최연소자녀구분						
영아	29.9	14.9	27.6	22.0	5.6	100.0(46)
유아	20.2	14.7	52.0	11.5	1.6	100.0(55)
지역규모						
대도시	17.4	13.9	50.4	16.6	1.7	100.0(44)
중소도시	17.7	15.3	41.0	20.1	5.9	100.0(42)
읍면지역	65.5	16.1	18.4	0.0	0.0	100.0(15)
2018년	27.9	24.4	40.7	4.5	2.7	100.0(185)

자료: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p. 542-543.

*** $p < .001$.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경험을 확인한 결과, 잘 모르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 경험자의 비율은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영아종일제 돌봄 비율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18〉 아이돌봄 서비스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잘 모름	계(수)
2021년 조사					
시간제 돌봄	2.8	5.3	52.8	39.1	100.0(2,500)
영아종일제 돌봄	1.9	2.8	53.9	41.4	100.0(2,500)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2	0.6	43.4	55.8	100.0(2,500)
2018년 조사					
시간제 돌봄	2.0	5.1	59.9	33.0	100.0(2,533)
영아종일제 돌봄	3.6	2.4	58.2	35.7	100.0(2,53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0.3	1.1	40.8	57.8	100.0(2,533)
2015년 조사					
시간제 돌봄	1.7	4.6	52.3	41.4	100.0(2,593)
영아종일제 돌봄	2.5	1.9	53.7	41.9	100.0(2,59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0.7	40.6	58.7	100.0(2,593)
2012년 조사					
시간제 돌봄	1.1	3.5	95.4	-	100.0(1,468)
영아종일제 돌봄	0.2	1.9	97.9	-	100.0(1,46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출처: 김은설 외(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p.539.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의 대기 해소 및 편의성 제고가 시급

하며, 이용자 요구별 서비스 자동매칭 기능을 갖춘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영아수당의 지원으로 어린이집 수요보다는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만족도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와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규정(지침) 및 영아 일시보육 적응에 대한 이용자 교육 의무 이수화가 필요하다.

주거지 인근에서 놀이터, 도서관, 박물관, 공연예술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놀권리, 발달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부모자녀 간의 놀이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의 발달에 적합한 생태체험, 신체운동, 전래놀이, 인형극, 음악공연 등을 소규모 육아공동체 단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웃리치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 놀이 지원을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라. 육아 상담서비스 지원

1) 추진 배경 및 현황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서 위험군 통계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발달 지연 영유아 증가 추이, 고령출산으로 인한 장애 위험군 아동 증가 추세이다.

〈표 IV-2-19〉 연도별 장애영유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계	11,138	10,950	11,093	11,018	11,701	12,808	13,620	14,040	14,337	14,515
0세	37	33	29	31	26	46	46	41	43	36
1세	401	508	437	446	459	521	517	482	483	381
2세	1,023	1,097	1,088	1,067	1,066	1,047	1,157	1,066	1,014	916
3세	1,569	1,473	1,549	1,583	1,566	1,583	1,640	1,804	1,721	1,614
4세	2,322	1,967	1,908	2,032	2,196	2,293	2,313	2,482	2,898	2,825
5세	2,581	2,808	2,431	2,498	2,809	3,108	3,310	3,300	3,520	3,957
6세	3,205	3,064	3,651	3,361	3,579	4,210	4,637	4,865	4,658	4,786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1). 2020 영유아 주요 통계.

KOSIS(국가통계포털). 복지, 장애인 현황(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2&conn_path=I3).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체 장애영유아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발달지연 영유아의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3,649명), 지적장애(3,359명) 영유아가 가장 많고 이 두 가지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전체 장애 영유아(0~6세)의 48%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자폐(2,861명)가 많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 11.34%, 자폐성 장애 9.29%, 지적 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각각 1.55%, 1.46% 순이다.

〈표 IV-2-20〉 장애유형별 영유아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장애	영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영유아 비율
전체 장애유형	2,633,026	14,515	36	381	916	1,614	2,825	3,957	4,786	0.55
지체	1,207,368	423	4	15	48	77	87	92	100	0.04
시각	252,324	315	2	13	34	42	54	78	92	0.12
청각	395,789	1,139	30	140	171	165	187	215	231	0.29
언어	22,391	2,540	-	-	-	223	728	860	729	11.34
지적	217,108	3,359	-	-	68	225	570	944	1,552	1.55
뇌병변	250,407	3,649	-	198	550	697	714	802	688	1.46
자폐	30,802	2,861	-	-	21	147	440	911	1,342	9.29
정신	103,525	-	-	-	-	-	-	-	-	0.00
신장	97,530	25	-	3	6	5	3	4	4	0.03
심장	5,233	45	-	-	3	7	8	14	13	0.86
호흡기	11,544	10	-	3	1	-	2	2	2	0.09
간	13,808	97	-	8	11	19	19	22	18	0.70
안면	2,677	4	-	-	2	1	-	-	1	0.15
장루·요루	15,427	16	-	1	-	1	6	6	2	0.10
뇌전증	7,093	32	-	-	1	5	7	7	12	0.45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1). 2020 영유아 주요 통계.

출처: KOSIS(국가통계포털). 복지, 장애인 현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2&conn_path=I3.

최근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장애위험 상황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김미정·배성현·임예슬, 2021).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children at risk)는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생물학적 또는 환경적 위험요인에 의해 앞으로 발달 문제나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또래보다 높다. 이러한 장애 위험군 영유아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발달지체가 가속되어 학령기에 학업성취도와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은 시행 초기에는 낮았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전체 평균 83.0%로 전년(77.6%) 대비 5.4%p가 증가하였다. 영유아 연령별 수검율은 18~24개월(89.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9~12개월(87.9%), 4~6개월(87.2%) 순이다.

〈표 IV-2-21〉 영유아 건강검진율

단위: 명, %

구분	전체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2012	55.4	63.7	59.9	68.0	63.6	52.6	42.4	37.5
2013	63.7	70.2	67.5	75.0	75.2	64.6	52.3	41.9
2014	69.8	75.9	71.1	77.4	76.6	71.1	63.1	52.8
2015	69.5	78.5	74.2	77.1	75.7	69.9	60.3	50.6
2016	71.9	80.3	77.7	81.4	77.0	71.6	62.7	54.6
2017	72.1	80.6	77.5	81.4	78.6	72.0	63.1	55.0
2018	74.5	82.9	80.7	82.8	80.6	76.1	65.7	57.5
2019	77.6	85.9	83.2	86.7	82.9	78.4	69.8	61.5
2020	83.0	87.2	87.9	89.3	86.5	82.5	76.6	75.2

주: 1) 2009년 건강검진통계연보 발간 시작.

2) 2008년과 2009년의 통계는 영유아의 나이(개월수) 범주가 달라 표에 제시가 어려움(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KOSIS(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dbUser=NSI_IN_350, 2022022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2008, 2009, 2010, 2011).

영유아 건강검진의 주요 선별 목표 질환은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하고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을 수행한다. 또한 신체 계측(신장, 몸무게, 머리둘레), 신체 진찰소견(전신상태, 눈, 귀, 폐, 심장, 복부, 생식기, 사지, 척추, 신경, 피부, 머리/안면, 구강, 경부, 흉부), 시각, 청각, 발달평가 결과에 대한 월령별/성별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있다.

〈표 IV-2-2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현황

단위: %

검진결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양호	96.7	96.5	95.2	89.1	88.3	87.7	86.1	85.7	85.7
추후검사	2.1	2.2	2.2	8.8	9.4	9.9	11.3	11.6	11.3
정밀평가필요	0.9	0.9	1.0	1.9	1.7	1.8	2.1	2.2	2.4
지속관리필요	0.3	0.3	0.3	0.2	0.4	0.5	0.5	0.6	0.6
기타	0.1	0.0	1.3	-	0.1	-	-	-	-
총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KOSIS,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dbUser=NSI_IN_350,2022022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2008, 2009, 2010, 2011)

〈표 IV-2-23〉 영유아 건강검진 판정 결과

단위: 명, %

구분	수검인원	양호		주의		정밀 평가 필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2,064,086	1,663,881	80.6	228,624	11.1	171,581	8.3
4-6개월	253,608	219,276	86.5	19,046	7.5	15,286	6.0
9-12개월	263,976	218,489	82.8	29,880	11.3	15,607	5.9
18-24개월	287,267	231,220	80.5	34,794	12.1	21,253	7.4
30-36개월	302,792	243,960	80.6	35,404	11.7	23,428	7.7
42-48개월	324,685	257,244	79.2	35,458	10.9	31,983	9.9
54-60개월	322,235	252,054	78.2	37,426	11.6	32,755	10.2
66-71개월	309,523	241,638	78.1	36,616	11.8	31,269	10.1

주: 1) 주의: 건강에 이상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보호관리,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다음 연령 검사에서 유의하여 보아야 하는 영유아.

2) 정밀평가필요: 즉시 필요를 요하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영유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KOSIS(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5&co_nn_path=12).

2015~2020년까지 5년 간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지원율(지원 대상자 수 대비 지원인원)은 15% 이내 머물고 있어 부진한 상황이다. 예산 대비 집행 비율은 최저 49.0%(2020년) ~76.9%(2019년)로 지원율에 비하면 집행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대상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의 지원 실적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지원실적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표 IV-2-24〉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소득기준
영유아발달지원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 제공	0-6세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해결을 위해 음악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	만7-18세 정서행동문제 우려 아동청소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행동 위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언어, 놀이, 상담, 음악·미술 치료 등 조기 개입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표 IV-2-25〉 영유아 발달 장애비 지원율과 예산 집행율

단위: %, 명, 천원

구분	대상자	지원인원	지원율(%)	예산액(국비)	집행액(국비)	집행율
2020	15161	2340	15.4	608000	297768	49.0
2019	12530	1881	15.0	304000	233651	46.9
2018	8117	1076	13.3	182000	133954	73.6
2017	7015	852	12.1	182525	109021	59.7
2016	6734	1062	15.8	200206	135149	67.5
2015	6666	896	13.4	156238	113764	72.8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실적 내부자료.

〈표 IV-2-2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실적 현황: 대상자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3.4	15.8	12.1	13.3	15.0	15.4
의료급여		14.0	20.5	13.2	14.9	18.0	13.1
건보	차상위	17.2	17.5	17.9	19.1	22.5	23.4
	일반	13.1	14.9	11.6	12.8	14.5	15.4

주: 표의 수치는 대상자 중 지원인원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실적 내부자료.

영유아기 부모는 자녀 발달 및 양육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조언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발달지원을 위한 발달검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조부모 및 양육자 대상으로 양육 관련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영유아의 문제 행동, 영유아 발달, 양육 방법과 관련된 전문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보다 전문적인 온라인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유아 발달 검사 및 양육 상담 지원 요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IV-2-27〉 초기 부모 양육상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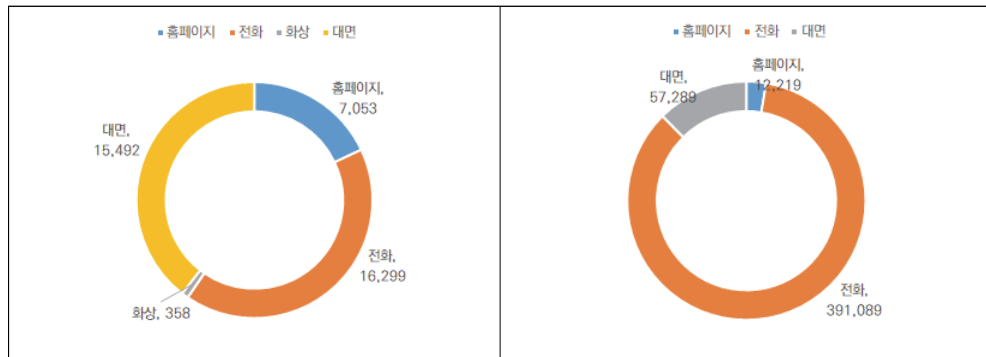
단위: 회, 명

연도	센터명	비대면 상담		대면 상담			
		홈페이지	전화	개별상담		집단상담	
		건수	건수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7	전국	6,315	40,059	30,581	29,900	622	3,283
2018	전국	7,455	49,582	29,203	29,390	474	2,996
2019	전국	7,934	56,086	33,985	34,541	736	4,395

연도	센터명	양육상담				센터이용 상담			외부기관 연계 상담
		홈페이지	전화	화상	대면	홈페이지	전화	대면	
2020	전국	7,053	16,299	358	15,492	12,219	391,089	57,289	-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양육상담 현황.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지원사업(<http://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그림 IV-2-8〕 초기 부모 양육상담 현황



온라인 육아커뮤니티는 주 양육자의 거주지역 기반으로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육아 고민을 공유하는 곳으로, 육아 외에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발생하였다. 육아커뮤니티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육아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온라인 육아커뮤니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영향력도 상당하다. 지역사회에서 양육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육아모임이 활성화되어 이에 참여하려는 양육자가 증가하고 있다.

육아자조모임은 육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실천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공동육아, 육아품앗이, 부모 소모임, 부모 동아리 등의 명칭은 다르나 그 성격과 목적을 유사하다. 육아자조모임을 통해 참여 부모들은 육아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부모효능감을 느끼며

자신을 포함한 가족,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조적인 양육모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으로 부모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고, 2022년부터 ‘공동육아지원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만6세 이하 영유아와 부모로 구성된 총 200개의 모임을 선정하여 활동비와 육아전문서비스를 지원한다.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계선 장애 등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부족하며 기관의 부적응과 아동의 장애 가능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발견될 수 있는 발달 지체, 경계선 아동에 대한 진단 및 정보에 대한 가족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발달지연 스크리닝과 발달 심리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직접적 상담과 지역 내 지원체계 연결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 검진율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감소 추세이나 검진 결과를 볼 때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연령대는 나이가 많은 54개월~71개월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달장애 지원비에 있어 지원율은 증가하는 반면, 집행율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집행율 감소의 이유나 의료수급자의 지원 실적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전문가 상담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육아커뮤니티와 자조모임을 통해 육아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많은 부모가 이용하나 종종 불특정 다수의 커뮤니티로서 역기능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김포 맘카페 보육교사 자살사건 등). 따라서 순기능을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3. 아동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가. 최적의 환경 조성

1) 추진 배경 및 현황

가) 교사대 아동 비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라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

는 15명, 4, 5세는 20명이다.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거나, 농촌 소규모 어린이 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은 교사대 아동 비율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표 IV-3-1〉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 편성		-	1명	2명	3명	3명
농어촌 특례 범위	기본보육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연장보육	7명 이내(0세 포함시 5명 이내)			20명 이내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최대 6명	최대 10명	최대 14명	최대 30명	최대 40명

주: 교사대 아동 비율 준수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 가능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급 편성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 교육청에 따라 상이하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만3세는 14~20명, 만4세는 18~25명, 만5세는 22~28명 사이로 일부 지역교육청을 제외하고 대체로 어린이집보다 높은 편이다.

〈표 IV-3-2〉 반(학급) 편성 기준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편성 기준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	지역교육청별로 상이

공립유치원은 지역교육청의 학급 편성기준을 준수하나, 사립유치원은 결원 등을 감안하여 학급 당 10% 정도를 초과하여 편성한다.

〈표 IV-3-3〉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2022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기본 과정			혼합반			방과후과정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서울	(공립)16 (사립)16~20	(공립) 22 (사립)22~25	(공립) 26 (사립)26~30	(공립)22 (사립)22~25	(공립)22 (사립)22~25	(공립)22 (사립)22~25	20명 내외		
부산	16	24	26	22	26	26	17	24	16
대구	18	24	28	20	26	24	18	26	
인천	18	23	25	20	20	23	20		

(표 IV-3-3 계속)

구분	기본 과정			혼합반			방과후과정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광주	16	22	24	22	22	22	22	22	
대전	15	22	26	22	22	22	22	22	16
울산	16	22	25	22	24	22	18	22	15
세종					(공립)22 (읍면)20		(공립)15 (읍면)14		
경기	14~18	22	26	16	22	22	16	20	
강원	16	22	24	16	20	20	14~18		
충북	15	20	23	17	17	19	17	18	20명 내외
충남	(공립)15 (사립)15	(공립)19 (사립)20	(공립)23 (사립)25	(공립)17 (사립)22~25	20	(공립)19 (사립)22~25	15	(공립)15 (사립)22~25	15
전북	14	18	22	16	18	18	14	16	15
전남					20		15		14
경북	16~18	22	24~26	20~24		20~24	16~18	20~24	
경남	(공립)16 (사립)19	(공립)21 (사립)25	(공립)24 (사립)28	(공립)18 (사립)24	(공립)20 (사립)24	(공립)18 (사립)24	(공립)16 (사립)19	(공립)18 (사립)24	
제주	20	22	26	20	22	22	20	18	16

주: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자료임.

자료: 17개 시도교육청(2022).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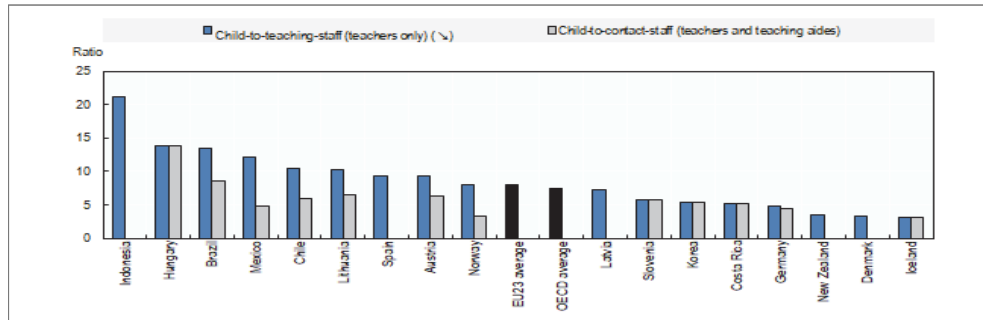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영아보육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2018년 기준 교사 1명당(교사만) 평균 7.5명으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영아보육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평균 5.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속한다.

〈표 IV-3-4〉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의 교사 대 아동 비율: 2018년

구분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및 보조교사)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만)	구분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및 보조교사)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만)
인도네시아	-	21.2	EU22 평균	-	8.0
헝가리	13.9	13.9	OECD 평균	-	7.5
브라질	8.6	13.5	라트비아	-	7.3
멕시코	4.8	12.2	슬로베니아	5.7	5.7
칠레	5.9	10.4	한국	5.4	5.4
리투아니아	6.5	10.2	코스타리카	5.2	5.2
스페인	-	9.4	독일	4.5	4.9
오스트리아	6.4	9.2	뉴질랜드	-	3.5
노르웨이	3.3	8.0	노르웨이	-	3.4
			아이슬란드	3.0	3.0

자료: OECD.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2. 7. 6 인출)

[그림 IV-3-1]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분야 교사대 아동 비율: 2018년



〈표 IV-3-5〉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 분야 교사/교직원 대 아동 비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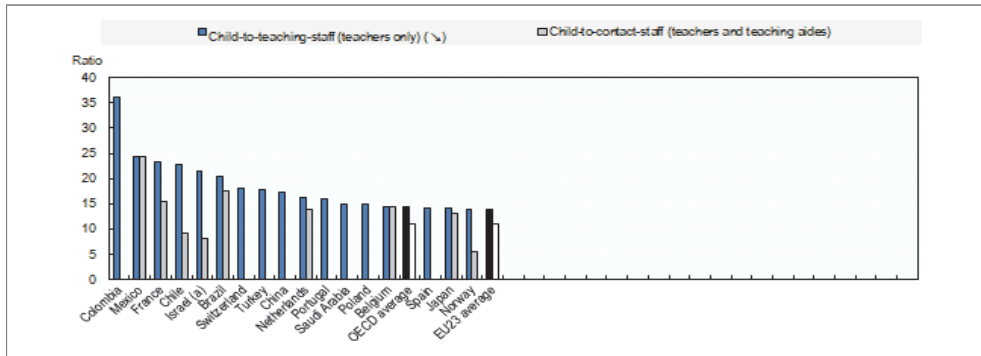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및 보조교사)	아동 대 교사 비율 (교사만)	구분	교사 대 아 비율 (교사 및 보조교사)	아동 대 교사 비율 (교사만)
콜롬비아	-	36.2	오스트리아	8.9	13.6
멕시코	24.3	24.3	코스타리카	13.5	13.5
프랑스	15.6	23.3	러시아 연방	11.9	13.1
칠레	9.3	22.8	한국	12.7	12.7
이스라엘	8.2	21.4	인도네시아	-	12.7
브라질	17.4	20.3	헝가리	12.4	12.4
스위스	-	18.2	미국	10.3	12.3
터키	-	17.8	이탈리아	12.2	12.2
중국	-	17.4	룩셈부르크	12.1	12.1
네덜란드	14.0	16.2	슬로바키아	11.6	11.8
포르투갈	-	15.9	리투아니아	6.7	10.3
사우디아라비아	15.0	-	그리스	10.2	10.2
폴란드	-	14.9	라트비아	-	9.4
벨기에	14.5	14.5	핀란드	-	9.4
OECDaverage	11.1	14.3	독일	8.5	9.4
스페인	-	14.2	슬로베니아	9.3	9.3
일본	13.0	14.0	덴마크	-	6.8
노르웨이	5.6	13.9	뉴질랜드	6.5	-
EU23 평균	10.9	13.8	아이슬란드	5.1	5.1
			스웨덴	6.1	-

자료: OECD,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2. 7.6 인출)

한편, 유아교육 분야 교직원(교사 및 보육교사 포함) 1명당 아동 수는 2018년 기준 OECD 평균 11.1명이며 교사 기준으로는 1명당 평균 14.3명이다. 우리나라는 교사 및 보조교사 포함한 기준으로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교사만을 기준으로 하면 낮은 편이다.

[그림 IV-3-2] 유아교육(primary education services) 분야 교사대 아동 비율: 2018년



NAEYC는 연령별 적정 집단크기와 교사대 영유아 비율로, 영아/2세(12~36개월)은 1:6, 유아(30개월~5세)는 1:10을 제시하고 있다.

〈표 IV-3-6〉 NAEYC 연령별 집단 크기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연령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	최대 집단 크기
신생아(출생~15개월)	1:4	8
영아/2세(12~36개월)	1:6	12
유아(30개월~5세)	1:10	20
유치원생(공립유치원 이용)	1:12	24

자료: NAEYC(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org/academy)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현장은 영아반과 3세반의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 필요한 연령으로 원장 38.8%가 3세, 17.2%는 0세, 17.1%는 1세, 13.4%는 4세를 꼽았다(양미선 외, 2012). 육아정책연구소(김은설 외, 2016)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78.3%가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적정 비율로 0세 2.1명, 1세 3.7명, 2세 5.6명, 3세 10.8명, 4세 14.5명, 5세 16.2명을 답하였다. 양미선 외(2019) 연구에서도 적정 교사대 아동 비율로 어린이집 원장은 0세 2.2명, 1세 4.0명, 2세 5.9명, 3세 11.6명, 4세 15.4명, 5세 16.2명을 답한 바 있어 0세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나) 어린이집 면적기준

어린이집 전용면적은 아동 1인당 4.29㎡이며, 보육실 면적은 2.64㎡이다. 어린이집 전

용면적에는 <표 IV-3-7>과 같이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등)과 기타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표 IV-3-7> 어린이집 및 보육실 전용면적 산정 방법

구분	어린이집 전용면적	보육실
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 기준으로 산정 - 산정대상: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기타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 복도, 계단 등) - 산정제외: 지하층에 설치한 시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 복도,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 기준으로 산정 - 산정대상: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보육실 면적은 아동 1인당 평균 3.7㎡로 설치기준보다 넓지만 교사가 활동하는 공간과 보육실 내 설치되어 있는 교구장 등을 감안하면 영유아가 실제로 활동하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표 IV-3-8> 영유아 1인당 면적

단위: ㎡(개소)

구분	보육실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	5.9	(3,300)	1.1	1.6	(239)	2.8	3.6	(750)
국공립	3.5	1.2	(508)	1.1	1.4	(39)	2.8	3.1	(189)
사회복지법인	3.6	1.4	(127)	0.9	1.0	(24)	2.7	2.0	(99)
법인·단체	3.6	1.1	(63)	1.1	1.1	(11)	3.2	3.8	(44)
민간	3.5	1.0	(1,071)	0.8	0.7	(95)	2.1	1.8	(342)
가정	4.0	8.9	(1,409)	1.4	3.2	(44)	13.4	12.6	(21)
직장	4.1	1.4	(121)	1.2	0.9	(27)	3.0	2.6	(55)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면적 조정은 보육실 내 밀집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의 교사의 보육활동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육실 내에서 아동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다) 설치인가 기준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등의 설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내 구비시설로 교사용 화장실 93.1%, 교사실 61.1%가 설치되어 있고, 보육교사 휴게장소로 교사실 61.1%, 휴게실 28.0%, 어린이집 내 기타 공간 32.2%, 외부 8.4%를 이용하고 있었다. 해외국가의 교사실 면적기준을 살펴보면, 영국은 교사 1인당 8~9㎡, 독일 8㎡, 프랑스 9㎡, 미국 7~7.4㎡, 호주 7.23㎡, 일본 5~6㎡으로 아동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상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옥외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놀이터 면적은 원칙적으로 영유아 1인당 3.5㎡ 이상이나 정원 규모별로 면적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표 IV-3-9〉 놀이터 면적기준

정원	면적 산정 기준	비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 기준 1인당 3.5㎡ 이상 놀이터 설치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정부는 그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영유아 1인당 놀이터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왔지만 현재 적용하는 기준은 2009년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 있어 보육 현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개정이 필요하다.

〈표 IV-3-10〉 영유아 1인당 놀이터 면적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1991-1998	1999-2004	2005-2008	2009-2020
놀이터 면적	2.5	2.5	2.5	3.5
어린이집 규모	(30인 이상)	(52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OECD 회원국(2011)의 실내외 공간 면적은 어린이집 기준으로 실내공간은 아동 1인당 평균 3.6㎡, 실외공간은 아동 1인당 8.9㎡이다. 시설면적과 보육실 면적은 프랑스보다 좁으나 캐나다나 홍콩보다는 넓고, 놀이터 면적은 일본을 제외하면 좁은 편이다.

〈표 IV-3-11〉 OECD 보육시설·유치원 최소 면적기준

단위: m²

국가(지역)	실내공간		실외공간	
	어린이집 (Child care)	유치원 (Kindergarten/Preschool)	어린이집 (Child care)	유치원 (Kindergarten/Preschool)
OECD 평균	3.6	2.9	8.9	7

자료: OECD(2011).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CEC - Action area 2: Broadening perspective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startingstrongiiiqualitytoolboxforececactionarea2_broadeningperspectivesthroughinternationalcomparison.htm.

〈표 IV-3-12〉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시설기준 국제 비교

단위: m²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홍콩
시설 면적	4.29	8.4	5.3-6.3	-	9.25	2.75-4	1.8-3.2
보육실 면적	2.64	2.2-5	2.5	1.6-3.3	5.45	-	-
놀이터면적	3.5	7.0	9.6	3.3	-	7.0	2.0

자료: 양미선 외(2020). 영유아 수 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인적·물적 자원 이용 합리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실내놀이터(실내유희실)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중 74.7%, 옥외놀이터 30.6%, 옥내 중간놀이터 2.6%, 옥상놀이터 4.9%이고, 실내놀이터 면적은 아동 1인당 평균 1.1m², 실외 놀이터는 아동 1인당 평균 2.8m²이다.

〈표 IV-3-13〉 아픈 아동 돌봄 장소 및 담당자

단위: %(개소)

구분	돌봄 장소					돌봄 담당자					계(수)
	보육실	양호실	교사실 (회의실)	원장실	기타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타	
전체	19.2	18.4	17.1	35.8	9.4	75.9	16.1	4.0	0.3	3.7	100(3,300)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8.3	20.3	16.6	50.8	4.1	70.5	17.7	6.0	0.1	5.6	100(508)
사회복지법인	9.5	26.1	14.3	43.0	7.1	65.3	21.1	8.0	0.8	4.9	100(127)
법인·단체	6.1	21.7	16.6	51.6	4.0	73.0	13.6	8.0	-	5.3	100(63)
민간	11.0	22.6	18.0	41.7	6.7	75.6	13.4	6.3	0.5	4.2	100(1,071)
가정	31.9	12.7	17.4	23.6	14.4	80.8	16.8	0.1	-	2.3	100(1,409)
직장	7.6	30.8	11.3	46.4	3.9	57.0	20.9	15.6	2.5	4.1	100(121)
어린이집 규모											
20명 이하	28.9	14.7	17.2	26.5	12.8	80.9	16.6	0.1	0.1	2.3	100(1,773)
21~39명	10.1	15.3	22.2	45.1	7.3	80.5	14.2	0.1	0.2	5.0	100(589)
40~79명	7.1	21.3	16.4	50.5	4.7	72.9	18.2	1.9	0.6	6.4	100(654)
80명 이상	5.7	41.8	8.2	40.4	3.9	42.3	11.6	42.1	0.6	3.4	100(284)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진·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의 한계로 아픈 아동 발생 시 별도 격리 조치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픈 아동 돌봄장소로 원장실(35.8%)>보육실(19.2%)>양호실(18.4%)>교사실(17.1%)>기타(9.4%) 순으로 응답하여 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규모별로는 20명 이하는 보육실(28.9%), 21명 이상은 원장실(40~50%)이 다수를 차지하여 어린이집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서는 휴게실 또는 양호실 등 아픈 아동 돌봄 제공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 문제점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0세반과 3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 어린이집 현장은 적정비율로 만0세 1:2, 만1세 1:4, 만2세 1:6 만3세 1:12, 만4세 1:15, 만5세 1:16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0세반(1:2)과 3세반(1:12)의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 2012년 누리과정 지원 이후 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가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유아반 구성이 어렵고, 연령별로 정원충족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3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0세 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일부 지자체(서울, 인천, 대전, 경기, 서울노원구, 전남 광양시 등)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서울시는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0세반과 3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새 정부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아동 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작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보육통합시스템 상에 등록된 보육실 면적은 설치기준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으나 교사 활동공간과 보육실 내에 설치된 교구장을 고려하면 공간이 설치기준보다 넓다고 할 수 없다. 코로나 등 감염 위험의 최소화, 영유아의 충분한 놀이 및 활동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육실 면적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면적기준 조정을 통해 보육실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보육교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보육실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력 배치기준은 어린이집 정원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실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족구, 독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빈번히 발병하고 있어 의심 증상 발생 아동을 일반 아동과 격리 조치하여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의무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제작하는 등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교육활동 준비 외에 행정사무 및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면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사실도 보육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원장(교사 겸직)의 사무 공간 확보 등의 차원에서 의무 설치 대상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가 자연환경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외놀이터에서의 놀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공기의 오염, 이상기온,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어 실외놀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실내 대체놀이터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감염병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영유아를 격리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의무실과 보육활동 준비 또는 교사의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휴게공간(휴게실)이 필요하다. 일정 이상 규모가 되는 어린이집부터 영유아를 위한 의무실(양호실)과 교사실(휴게실) 설치를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의 자연친화적인 실외놀이터 설치와 실내조경 공간이 포함된 실내대체 놀이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1) 추진 배경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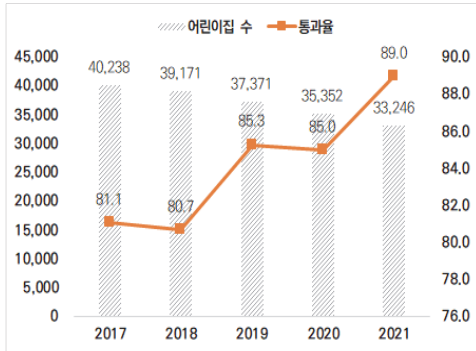
가) 어린이집 평가제

정부는 2017년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시행(통합지표 적용)하고 지표 개정(4개 영역, 21개 지표, 79항목) 및 점수제에서 등급제(A,B,C,D)로 전환하며 100%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질 관리 사각지대 존재, 아동 권리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8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개정하고, 2019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 평가제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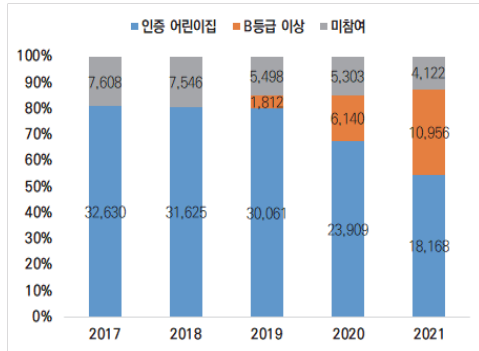
어린이집 평가제 전환으로 미참여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1년 기

준 전체 어린이집 중 89.0%가 평가에 참여하였고, B등급 이상이 참여 어린이집 중 29.1%를 차지하였다.

[그림 IV-3-3] 인증(B등급 이상) 어린이집 비율



[그림 IV-3-4] 평가(인증) 어린이집 추이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2). 내부자료.

그러나 평가 고등급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이슈 및 평가과정의 한계로 제도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 요구가 증대되었다. 보육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준비 시 어려움으로, 업무 과중(82.8%)>평가절차 변경에 따른 혼선(39.0%)>환경 정비 어려움(27.9%)>지표 이해 부족(16.8%)>컨설팅 부족(13.3%) 순으로 꼽아 지표 교육 및 컨설팅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양미선 외, 2022). 또한 2~3년 주기의 일회성 평가, 부모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과의 중복 평가, 서류 부담, 교직원 및 부모의 제한적 평가 참여, 평가 참여 후 사후관리 부족, 단편적 평가결과 제공 등이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가 그간 ‘보육의 질’을 평가하기보다 관리감독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현안 발생 시마다 일부 영역의 지표를 강화(예: 안전영역)하여 왔고, 법령위반(예: 비상재해대비시설, 유통기한 등), 행정사항(아동학대 등) 발생 시 등급 조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 평가에 대한 어린이집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키운 측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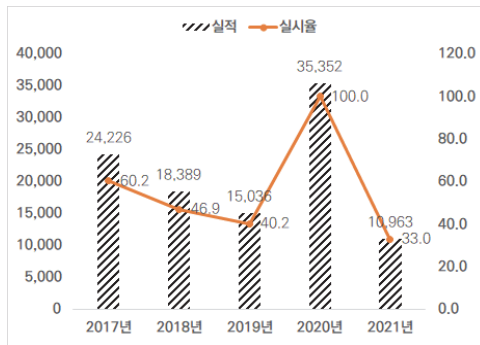
나) 부모모니터링

부모 참여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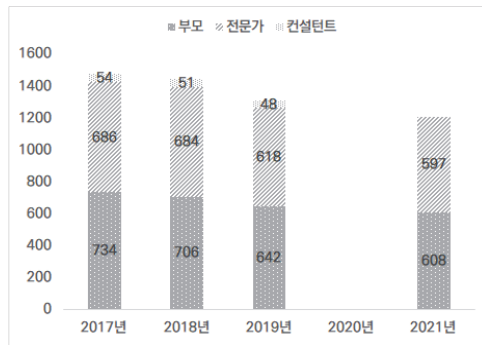
위하여 2013년부터 부모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부모가 어린이집 건강·안전·위생 분야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어린이집 운영 이해를 제고하고, 상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어린이집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다.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건강관리(3), 안전관리(4), 급식관리(4), 위생관리(4)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와 전문가가 조를 이루어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 한다.

부모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감소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 16,019개소에서 2015년 27,948개소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보건복지부, 2022).

[그림 IV-3-5] 부모모니터링 실시 현황



[그림 IV-3-6]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주: 2020년은 자체모니터링(어린이집 자원 부모가 자체 지표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하는 것을 말함) 실적임.

자료: 보건복지부(2022). 부모모니터링 매뉴얼.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2.5명이 자체 부모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자체 부모모니터링 운영 시 어려움으로 부모 위원 섭외(36.0%), 부모의 지표 이해 부족(24.9%), 방문 일정 조율(29.5%), 지표의 모호성(5.6%) 등을 지적하였다.

그간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유사·중복 지표는 통합 또는 감축하였고, 안심보육 위해 신규 지표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물량 조정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지도점검 등과의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모모니터링 사업관리기관을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일원화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부모모니터링을 자체 부모모니터링으로 전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지도점검

지도점검에서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여부, 법령 등 각종 기준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 지출 여부 등을 관리감독 한다. 정부는 그간 정부 정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적 수행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지도점검 사항 개정 및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 현지조사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집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현지조사 지침을 현행화 하여 배포하고,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3-14〉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항

구분	2017년	2018년~현재
영역 및 점검 사항 수	운영일반(12) 재무회계(9) 아동·종사자관리(8) 건강·영양·안전(21)	설치운영 일반(8/11) 아동보육교직원관리(7/14) 급식위생안전(2/10) 통학차량관리(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2/9)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2/3) 재무회계(2/16)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8)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
보건복지부(2019). 어린이집 현지조사 지침.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유해미 외, 2018)에 의하면, 보육 담당 공무원의 어린이집 방문 비율은 77.0%이고 방문 횟수는 평균 1.27회 정도이었다.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문제점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나, 유사 중복 문제가 여전하며, 개별 관리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 및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는 법적 관리감독 기능보다는 ‘보육의 질’ 평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선하고, 법적 준수 및 기본사항 등은 별도 관리하며, 어린이집 평가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와 연계된 사전 컨설팅 및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및 컨설턴트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71.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만, 컨설팅 받지 않은 이유는 불필요(32.3%)>다른 경로 컨설팅(24.6%)>정보 부족(14.9%)>신청했으나 받지 못함(1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율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보육교직원이 자체 평가에 참여하여 상시적으로 질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참여하는 자체 부모모니터링의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참여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체크리스트 문항(10개)을 개발한 바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체 부모모니터링 운영 시 어려움으로 부모 위원 섭외(36.0%) 부모의 지표 이해 부족(24.9%)>방문 일정 조율(29.5%)>지표의 모호성(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평가와 부모모니터링 등의 중복 점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참여하는 자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모 모니터링을 현장점검이 아닌 개선 및 컨설팅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1) 추진 배경 및 현황

가) 영유아 발달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도 매년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을 매월 확인하거나(59.7%) 입소 시 및 이후 정기적으로 보호자 확인 및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32.3%),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고(7.8%), 별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0.2%) 순이었다(보건복지부, 2021).

〈표 IV-3-15〉 영유아 예방접종 확인 방법

단위: %(개소)

구분	보호자 제출 서류만 확인	입소 시 및 이후 정기 보호자 확인 및 서류 제출 요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해 매달 확인	별도 확인하지 않음	계(수)
전체	7.8	32.3	59.7	0.2	100.0(3,300)
국공립	5.8	29.0	64.7	0.4	100.0(508)
사회복지법인	7.3	34.7	57.7	0.2	100.0(127)
법인·단체	6.6	23.1	69.8	0.5	100.0(63)
민간	9.0	34.6	56.5	-	100.0(1,071)
가정	7.9	32.1	59.8	0.1	100.0(1,409)
직장	6.5	29.6	62.9	1.1	100.0(121)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미접종 아동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 지도,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2021)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접종 안내 후 접종 여부를 재확인하거나(69.5%) 보호자에게 안내(29.7%), 별도 조치하지 않는 것(0.8%)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예방접종 안내 미수용 부모 거절 비율은 24.1%(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민간 순으로 거절 부모 비율 높음), 거절 사유 생활기록부 기록하는 어린이집 67.3%이었다(보건복지부, 2021).

한편,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결핵 포함) 실시 비율은 90.7%로 대부분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다.

〈표 IV-3-16〉 보육교직원 대상 건강검진(결핵 포함) 실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실시	일부만 실시, 나머지 실시 계획	전체 실시 할 계획	실시 계획 없음	계(수)
전체	90.7	5.9	1.7	1.7	100.0(3,300)
국공립	90.9	6.6	1.4	1.1	100.0(508)
사회복지법인	89.6	6.7	2.7	1.0	100.0(127)
법인·단체	88.8	9.7	1.6	-	100.0(63)
민간	91.7	5.1	1.5	1.7	100.0(1,071)
가정	90.0	5.9	2.0	2.2	100.0(1,409)
직장	90.1	8.1	1.0	0.7	100.0(121)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어린이집 평가, 부모모니터링 등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외에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등원 및 출근 전 문진표를 작성 및 모니터링하거나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 시 신고하거나 공기정화를 위해 환기를 실시하는 등의 대응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표 IV-3-17〉 코로나19 등 감염성 질환 대비 이행 정도 개요

단위: %, 점(개소)

구분	전혀 실행하 지 않음	실행 하지 않음	실행하 는 편	반드시 실행	계(수)	4점 평균
1) 등원 및 출근 전 문진표 작성 및 모니터링	1.7	3.2	10.2	84.9	100.0(3,300)	3.8
2) 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0.2	0.2	2.7	96.9	100.0(3,300)	4.0
3)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 공기정화 및 1일 2회 이상 수시 환기 실시	0.1	-	1.2	98.6	100.0(3,300)	4.0
4)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2회 이상 수시 소독	0.1	0.2	5.7	94.0	100.0(3,300)	3.9
5) 내·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 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1.8	7.5	27.6	63.0	100.0(3,300)	3.5
6) 대비 환경 강화(비말 최소화, 급식시 가림막 설치 등)	6.3	16.9	28.6	48.3	100.0(3,300)	3.2
7) 원 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발열검사 및 기록 관리	0.1	-	1.8	98.1	100.0(3,300)	4.0
8) 감염병 질환 의심사례 발생 시 등원 및 출근 금지	0.1	0.1	2.6	97.2	100.0(3,300)	4.0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표 IV-3-18〉 코로나19로 인한 연간 휴원 일수: 2020년

단위: %, 일(개소)

구분	휴원 비율		연간 휴원 일수				
	휴원율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18.7	(3,300)	26.9	43.0	1.0	309.0	(616)
국공립	15.0	(508)	40.2	67.9	1.0	309.0	(76)
사회복지법인	21.2	(127)	34.2	44.5	1.0	200.0	(27)
법인·단체	22.6	(63)	36.5	50.3	1.0	274.0	(14)
민간	18.4	(1,071)	30.2	42.0	1.0	304.0	(197)
가정	19.2	(1,409)	19.6	31.8	1.0	253.0	(271)
직장	25.5	(121)	26.0	42.8	1.0	173.0	(31)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정부는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2020년 한해동안 휴원한 어린이집은 18.7%, 연간 휴원일 수는 26.9일이다(보건복지부, 2021).

어린이집에서는 영아, 장애아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나 기본보육 외에 추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해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연장형보육(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영아전담이나 장애아보육, 연장형보육 등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표 IV-3-19>는 소수이다.

〈표 IV-3-19〉 취약보육 현황: 2021년

단위: 개소, 명, %

구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다문화
어린이집	344	178	1,317	175	7,671	283	145	-
정원	14,418	8,457	113,084	14,935	409,278	20,200	7,553	-
현원	10,432	6,264	5,578	1,465	19,949	112	401	41,462
정원충족률	72.4	74.1	4.9	9.8	4.9	0.6	5.3	-
교사	2,316	2,684	1,988	102	5,589	98	144	-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보육통계.

영유아 가족의 특성 및 근로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담당 교사 채용, 운영비 부담 등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이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 보육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0〉 연장형보육 유형별 이용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개요

단위: %(개소, 명)

구분	재원 비율							영유아 비율				
	영아	유아	영유아	(수)	2018년			영아	유아	(수)	2018년	
					영아	유아	영유아				영아	유아
연장보육	74.1	29.9	79.2	(3,300)	-	-	-	18.0	15.5	(112,055)	-	-
야간연장보육	21.8	10.7	24.0	(3,300)	16.5	7.7	18.5	4.8	2.9	(112,055)	3.3	1.0
야간12시간보육	0.3	0.1	0.3	(3,300)	-	-	-	0.1	0.1	(112,055)	-	-
24시간보육	0.3	0.2	0.3	(3,300)	0.3	0.2	0.3	-	-	(112,055)	0.1	-
휴일보육	7.5	3.2	7.9	(3,300)	1.3	0.7	1.5	1.7	1.0	(112,055)	0.2	0.1

주: 재원비율은 가구유형별 영아/유아/영유아가 1명 이상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을 의미함.

영유아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대비 가구유형별 영아 및 유아 비율을 의미함.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표 IV-3-20〉과 같이, 어린이집 대부분 영유아에게 연장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야간 연장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4.0%, 야간12시간보육과 24시간보육 등은 1% 미만, 휴일보육은 7.9%로 소수이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1)에서 취업모 가정(영아 34.3%, 유아 23.4%), 장애부모(영아 0.7%, 유아 0.5%), 다문화가정(영아 3.5%, 유아 2.3%), 취약계층(영아 1.2%, 1.1%)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21〉 가구특성별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및 영유아 비율 개요

단위: %(개소, 명)

구분	재원 비율							영유아 비율				
	영아	유아	영유아	(수)	2018년			영아	유아	(수)	2018년	
					영아	유아	영유아				영아	유아
취업모 가정	97.1	41.9	98.4	(3,300)	-	-	-	34.3	23.4	(112,055)	55.0	51.8
장애부모	11.2	6.3	14.0	(3,300)	-	-	-	0.7	0.5	(112,055)	-	-
다문화가정	47.8	26.6	53.6	(3,300)	39.2	22.2	47.2	3.5	2.3	(112,055)	2.9	1.3
취약계층	21.7	17.7	28.3	(3,300)	17.3	14.5	26.1	1.2	1.1	(112,055)	1.0	0.7

주: 재원비율은 가구유형별 영아/유아/영유아가 1명 이상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을 의미함.

영유아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대비 가구유형별 영아 및 유아 비율을 의미함.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2021년 기준 장애아전문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각각 178개소, 1,317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는 소수이지만 장애 영유아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수교사 채용 및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표 IV-3-22〉 장애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유형

단위: %(개소)

구분	장애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비율	(수)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미지정	계(수)
전체	3.5	(3,300)	6.2	12.4	81.4	100.0(113)
국공립	15.8	(508)	1.2	2.5	96.3	100.0(81)
사회복지법인	8.7	(127)	9.1	81.8	9.1	100.0(11)
법인·단체	4.7	(63)	-	-	100.0	100.0(2)
민간	1.8	(1,071)	27.8	16.7	55.6	100.0(18)
가정	0.0	(1,409)	-	-	-	100.0(1)
직장	0.8	(121)	-	-	100.0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장애아 통합 또는 전문 어린이집 미지정 이유를 조사한 결과(보건복지부, 2021), 지정 기준 미충족(66.7%)이 가장 많고, 지정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정 시 운영이 어렵다(6.8%)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일반 어린이집 중 24.6%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수교사 및 지원 인력을 늘리고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한다면 현장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 영유아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양성교육 강화(68.1%)>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대상 전문가 순회교육 실시(16.2%)> 장애 영유아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12.4%) 순으로 높았다.

〈표 IV-3-23〉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중 자격요건 충족 교사

단위: %, 명(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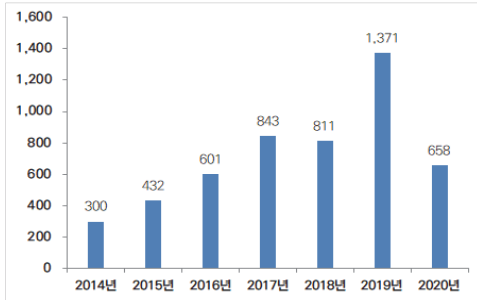
구분	특수교사					장애 영유아 위한 보육교사				
	배치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배치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6.4	(250)	2.3	2.1	(66)	54.8	(250)	3.6	3.0	(137)
국공립	50.4	(98)	1.6	0.9	(49)	87.2	(98)	3.4	2.6	(86)
사회복지법인	44.4	(17)	4.8	3.7	(8)	71.7	(17)	7.0	4.5	(12)
법인·단체	20.6	(8)	3.5	2.9	(2)	39.9	(8)	4.3	3.7	(3)
민간	9.0	(80)	4.1	2.9	(7)	33.6	(80)	3.3	2.9	(27)
가정	-	(41)	-	-	(0)	17.7	(41)	1.5	0.9	(7)
직장	-	(5)	-	-	(0)	32.4	(5)	2.2	2.9	(2)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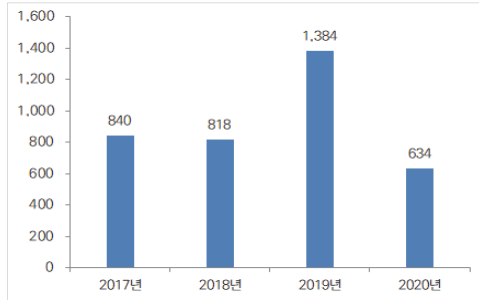
한편, 부모들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왔다. 그간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인상('17년 22만원→ '22년 26만원)하고, 보조교사('17년 19,724명 → '21년 30,458명)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마음성장프로젝트 사업 등을 도입·운영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추세이었으나('17년 843건→'19년 1,371건) 코로나 19 확산으로 잠시 주춤하였다('20년 658건), 아동학대 행위자 보육교직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17년 840건→'19년 1,384건) 2020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20년 634건)(아동권리보장원 통계자료).

[그림 IV-3-7]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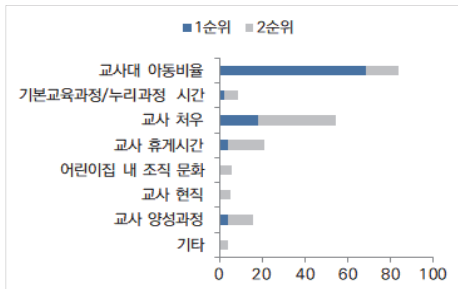


[그림 IV-3-8]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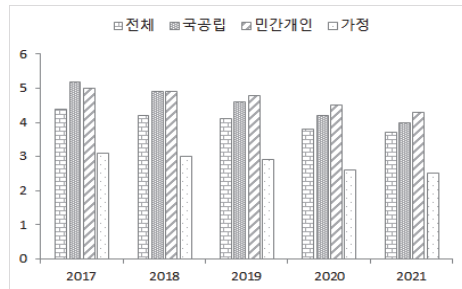
아동학대의 교사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감정조절 및 통제력 등 한계, 환경요인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과도한 업무량, 장시간 근무, 낮은 처우 순으로 나타났다(육아정책연구소, 2019). 또한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는 전체 평균 '17년 4.4명에서 '21년 3.7명으로 지속하고 있고,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2018년 96.9%에서 2021년 99.5%로 증가하고 있다(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그림 IV-3-9] 아동학대 원인: 환경요인



자료: 양미선 외(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IV-3-10]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및 열람 범위 확대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장의 70.4%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및 열람범위 확대의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2) 문제점

경계성 아동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아동, 정서장애, 성행동 문제 등 교사의 특별한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증가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결과와 어린이집 그리고 상담 및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장애 위험 영유아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 영유아발달 검사-상담-치료를 위한 연속 지원 연계의 절차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내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상담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경계성 아동 또는 장애의 위험이 있는 아동, 정서장애, 성행동 문제 등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한다. 친환경 급식, 급식단가 조정을 통한 질 높은 영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식단표를 제공하고, 식단표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영유아 부모 등의 유기농 및 친환경 식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8개 시도, 142개 시군구는 급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비용, 친환경쌀 또는 지역우수농산물 등 현물 지원)

어린이집 이용 가족 특성 및 근로형태가 다양화되었으나, 보육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의 확보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1년 전국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 확보 위한 정책으로 특수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42.0%), 어린이집 특수교사 승진 및 승급 체계 마련(10.7%)>특수교사 양성 규모 확대(39.5%)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교사에 대한 장애 영유아 교육의 필요성의 확대가 요구된다. 장애 영유아 및 경계선 아동 증가에 따른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을 확대·설치한다.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 확보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일반 교사에 대해 장애아보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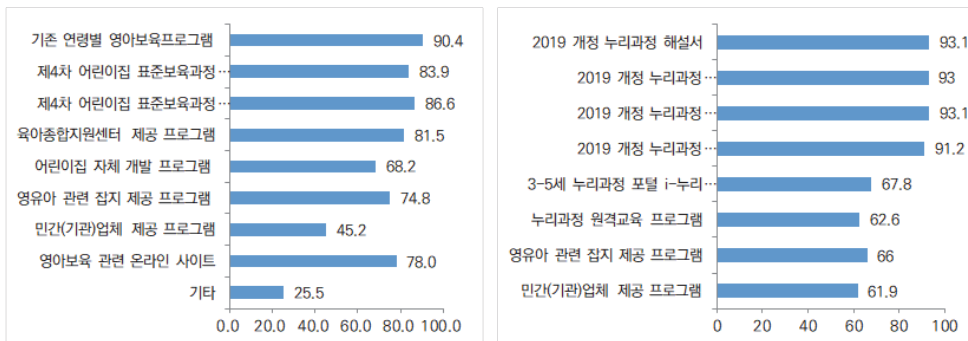
보육교사 업무 경감 및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에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지속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보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교직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보조교사 지원 등과 연계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해 사후 지원하도록 한다.

라.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1) 추진 배경 및 현황

영유아의 놀이권, 행복권 확보를 위해 2019년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해설서 등 자료를 보급하였고, 이 외에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사 연수, 보육과정 컨설팅, 학습공동체 운영,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 및 공유,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그림 IV-3-11] 0~2세 표준보육과정 자료 활용 비율 [그림 IV-3-12] 3~5세 누리과정 자료 활용 비율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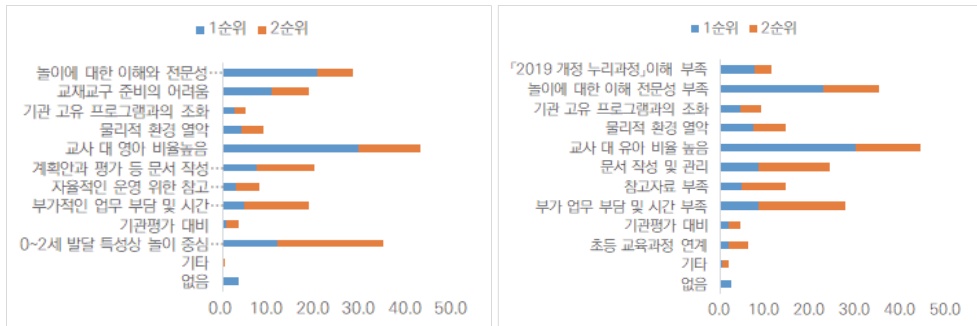
2) 문제점

2020년 3월부터 개정 고시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 적용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개정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자료가 교육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활용도도 저조하다.

교육부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및 놀이 실행자료를 개발 보급하였고, 3~5세 누리과정 포털 I-누리, 누리과정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연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 활용 비율은 90.4%이나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 활용 비율은 각각 83.9%, 86.6%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개정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교사 연수 대부분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

태조사에서 0~2세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2세 발달 특성상 놀이중심운영 어려움,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3~5세 누리과정 어려움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놀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부가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13] 0~2세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그림 IV-3-14]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과정 관련 사례 및 콘텐츠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놀이중심 보육과정 사례를 공유하고 보육과정 자료를 공급하며, 보육과정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내 자율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보육과정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이 필요하다.

4.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가.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1) 추진 배경 및 현황

가) 보육교사 양성체계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학점 이수제 방식으로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최소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며, 학점은행(2급)과 기타 보육교사 교육원(3급)을 통해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양미선 외, 2021)에 따르면, 3년제 이상 대학과정을 졸업한 보육교사는 90% 이상으로 대부분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1〉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학력수준

구분	양성 방식	양성기관	학력수준				
			고졸	3년제 이하 대학	4년제	대학원 이상	기타
보육교사 ¹⁾	학점 이수제	일반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학점은행, 기타 보육교사 교육원	8.9	47.8	36.6	6.2	0.5
유치원교사 ²⁾	학과 중심제	일반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	39.1	44.9	16.0	-

주: 보육교사 학력수준은 3년제 이하 대학 재학 2.4%, 4년제 대학 재학 2.8%, 대학원 재학 0.8%가 포함된 결과임.

자료: 1)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p.242.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p.110.

나) 보육교사 자격체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재직하는 보육교사 중 3급 보육교사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2021년 3급 보육교사는 민간어린이집 1,437명, 가정어린이집 1,214명이다.

〈표 IV-3-2〉 자격급수별 보육교사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총계
1급	34,751	8,327	3,555	66,111	41,290	471	9,010	163,515(69.3)
2급	15,908	3,543	1,425	25,343	16,285	203	6,527	69,234(29.3)
3급	397	87	55	1,437	1,214	11	79	3,280(1.4)
총계	51,056 (21.6)	11,957 (5.1)	5,035 (2.1)	92,891 (39.4)	58,789 (24.9)	685 (0.3)	15,616 (6.6)	236,029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DW시스템.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9,566명(12.7%)에서 2021년 923명(3.6%)으로 줄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고졸 학력의 3급 과정을 폐지한 바 있다.

〈표 IV-3-3〉 자격급수별 자격취득기관 현황: 2017~2021년

단위: 명(%)

구분	2급						3급	합계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소계	보육교사 교육원	
2021	4,782 (18.6)	10,499 (40.9)	438 (1.7)	591 (2.3)	8,453 (32.9)	24,763 (96.4)	923 (3.6)	25,686 (100.0)
2020	5,100 (19.0)	11,262 (41.9)	426 (1.6)	667 (2.5)	8,249 (30.7)	25,704 (95.7)	1,168 (4.3)	26,872 (100.0)
2019	4,681 (16.5)	12,763 (45.1)	564 (2.0)	629 (2.2)	8,248 (29.1)	26,885 (95.0)	1,422 (5.0)	28,307 (100.0)
2018	4,615 (15.5)	13,983 (47.1)	629 (2.1)	826 (2.8)	7,918 (26.7)	27,971 (94.2)	1,711 (5.8)	29,682 (100.0)
2017	5,612 (10.9)	14,901 (29.0)	1,122 (2.2)	1,313 (2.6)	26,204 (51.0)	49,152 (95.6)	2,252 (4.4)	51,404 (100.0)

자료: 권기남(2022).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능하고 존중받는 보육전문가' 양성.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p. 37 토대로 작성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은 '보육교사3급-보육교사2급-보육교사1급-원장'으로 구분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체계를 비교하면 〈표 IV-3-4〉와 같다. 유치원 교사가 보육교사보다 자격체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최소 학력 또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더 높으며, 교직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표 IV-3-4〉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체계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 (교원의 자격)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자격구분	3급-2급-1급-원장	(준교사)-2급-1급-(수석교사)-원감-원장
최소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전문대학 졸업(이상)
이수과목	2급: 17과목 51학점 이상 3급: 22과목 65학점 (교직과목 미포함)	전공영역 50학점 이상, 교직영역 22학점 이상 (총 72학점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교육부(2021). 내부자료.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교사 자격기준은 각각 〈표 IV-3-5〉, 〈표 IV-3-6〉에 정리하였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둘다 자격 급수에 따라 자격기준이 상이하다.

〈표 IV-3-5〉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제21조 관련)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 (2022. 4. 29. 인출).

〈표 IV-3-6〉 유치원교사 자격기준(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 (2022. 4. 29. 인출).

〈표 IV-3-7〉 수석교사 자격기준

구분	내용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 (2022. 4. 29. 인출).

특히, 유치원 교사의 경우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유·초·중·고등 수석교사의 역할은 동료교사 수업 멘토링, 신입교사 멘토링, 교수학습 평가방법의 개발과 보급, 원내 각종 연수와 워크숍 주도 등이다. 유·초·중·고등 수석교사의 선발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1차 서류심사, 2차 수업능력 심사, 3차 동료교사 면담, 90시간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²⁹⁾).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현행 단순한 보육교사 자격체계(3급-2급-1급)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과잉 자격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아져 직무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세분화된 자격체계를 통해 전문성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 유형 및 어린이집 규모 등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교사 자격체계를 세분화하고 선임교사제를 도입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보육교사의 진입장벽이 여타 전공 영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전문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성과정에 따라 수업연한, 교육과정 등에서 편차가 크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이나 개발과정에 개입하기 어려워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질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보육교사 수급 조절이 불가하다. 학과제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정착하여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분석에 따른 양성교육과정 개편, 인성소양과정 반영, 실습기준 강화 등 보육교직원의 양성교육 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나.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1) 추진 배경 및 현황

가) 보수교육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를 법적 근거로 한다.

집합 보수교육기관은 총 91개소, 온라인 보수교육기관은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별직무 교육과정에 한하여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기관은 2021년 기준으로 삼성복지재단, (사)아이코리아, 안산대학교,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한국성서대학교 등 이다.

29) 임용 이후에도 매년 90시간 연수를 받아야 함.

〈표 IV-3-8〉 지역 및 유형별 보수교육기관: 2021년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원 ¹⁾	30	4	-	1	2	2	1	2	-	6	-	-	1	1	1	5	3	1
대학(부설) ²⁾	60	7	5	3	4	3	1	1	1	16	2	2	3	3	4	-	4	1
기타 ³⁾	1	1	-	-	-	-	-	-	-	-	-	-	-	-	-	-	-	-
총계	91	12	5	4	6	5	2	3	1	22	2	2	4	4	5	5	7	2

주: 1) 교육원: 3급 양성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2) 대학(부설): 대학(교) 및 대학 부설기관 등 포함(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사회교육원 등)

3)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등

자료: 보건복지부(2021. 10). 보육정책 참고자료. p. 127.

보수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는 2020년 기준 124,150명이며, 이중 집합교육 43,773명(35.3%), 온라인 80,377명(64.7%)이 참여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온라인 교육 이수자가 크게 늘어났다. 집합교육 중에서는 승급교육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일반 직무, 1급 순이다. 장기미종사자 교육 참여자도 8.4%나 된다. 집합 보수교육 참여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표 IV-3-9〉 2020년 보수교육 실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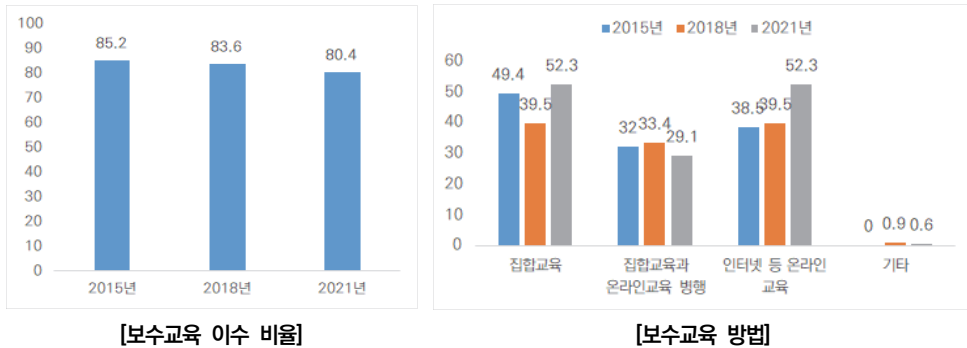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90,302	98,419	103,064	101,522	96,734	124,150	100.0
승급교육	30,277	33,824	31,880	28,608	26,830	25,720	20.7
원장사전	3,775	7,563	10,167	9,847	9,018	8,711	7.0
1급	22,227	22,655	19,158	16,959	16,443	15,323	12.3
2급	4,275	3,606	2,555	1,802	1,369	1,686	1.4
집합 일반직무	14,839	12,372	9,784	7,234	7,768	17,886	14.4
원장	7,009	5,663	5,113	3,978	3,646	3,458	2.8
교사	7,830	6,709	4,671	3,256	4,122	3,973	3.2
장기미종사자 교육*	-	-	-	-	-	10,455	8.4
특별직무	352	313	220	132	77	167	0.1
온라인 특별직무	44,834	51,910	61,180	65,548	62,059	80,377	64.7

주: * 장기미종사자교육은 '20.3월 시행

자료: 보건복지부(2021. 10). 보육정책 참고자료. p.128.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보육교사 중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는 2015년 85.2%에서 2021년 80.4%로 감소 추세이다. 보수교육 방법 중 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 방법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IV-3-1] 보수교육 이수 비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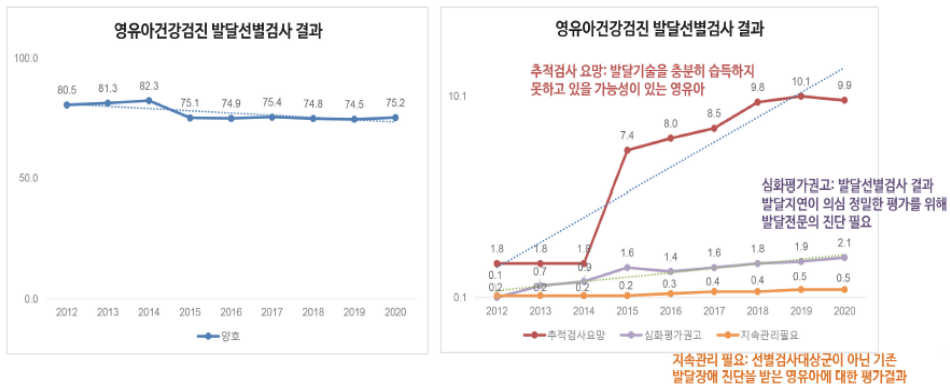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p. 283.

나) 취약보육 및 디지털 역량

발달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발달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심화평가 권고(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정밀한 평가를 위해 발달전문가의 진단 필요)’ 영유아 수가 [그림 IV-3-2]와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IV-3-2]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자료: 배성현(2022). 사각지대 없는 보육·양육환경 조성: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p. 61.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특수교

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및 특수교육 또는 재할관
련 교과목 8과목 24학점 이수자)의 배치 현황을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사를 배치한 어린
이집은 26.4% 정도이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은 54.8%로 특
수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미선 외, 2021: 359).

〈표 IV-3-10〉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개소)

구분	특수교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배치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6.4	(250)	2.3	2.1	(66)	54.8	(250)	3.6	3.0	(137)
국공립	50.4	(98)	1.6	0.9	(49)	87.2	(98)	3.4	2.6	(86)
사회복지법인	44.4	(17)	4.8	3.7	(8)	71.7	(17)	7.0	4.5	(12)
법인·단체	20.6	(8)	3.5	2.9	(2)	39.9	(8)	4.3	3.7	(3)
민간	9.0	(80)	4.1	2.9	(7)	33.6	(80)	3.3	2.9	(27)
가정	-	(41)	-	-	(0)	17.7	(41)	1.5	0.9	(7)
직장	-	(5)	-	-	(0)	32.4	(5)	2.2	2.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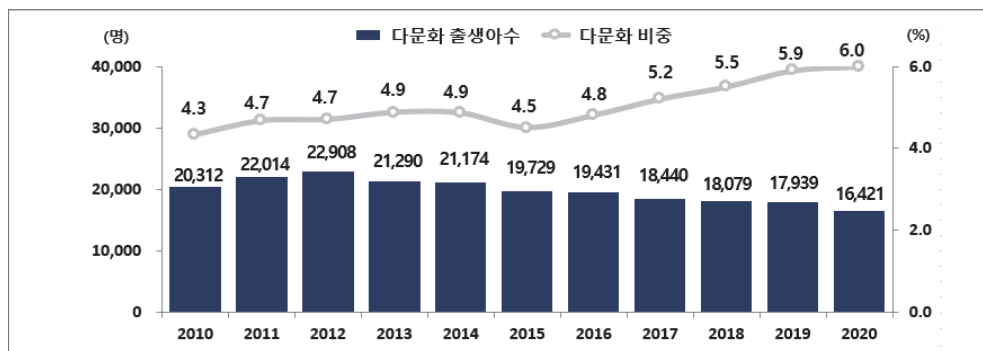
주: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장애영유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359.

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다문화 출생아 수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출생아 중에서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출생아 비율은 2015년 4.5%에
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6.0%에 이른다.

[그림 IV-3-3]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 2010~2020년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2.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정서지원, 인지발달, 한글지도, 이중

언어 순으로 높아(양미선 외, 2021), 다문화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이와 관련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표 IV-3-11〉 다문화가정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단위: %, 점(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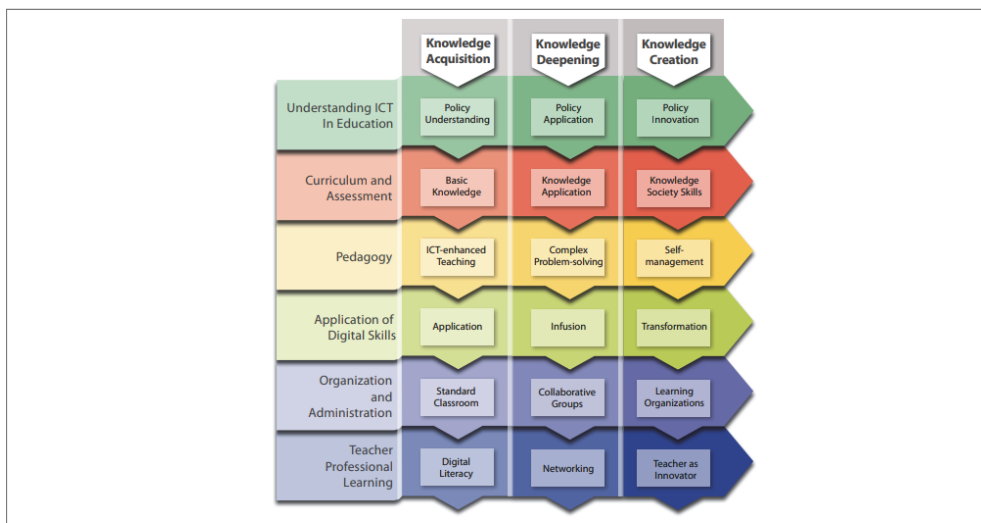
구분	사회·정서지원		이중언어		인지발달		한글지도		(수)
	‘필요’ 비율	평균	‘필요’ 비율	평균	‘필요’ 비율	평균	‘필요’ 비율	평균	
전체	88.2	3.3	78.0	3.1	84.2	3.2	82.6	3.2	(1,767)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p. 367.

라)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 개념으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UNESCO, 2018: 10). UNESCO(2018)에서는 교사를 위한 ICT 역량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그림 IV-3-4]와 같다.

[그림 IV-3-4] 교사를 위한 ICT 역량 프레임워크



자료: UNESCO(2018). UNESCO ICT competency framework for teachers. p. 10.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은 에듀테크 및 디지털 적용에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이슈로 유아 놀이중심교육과의 접목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적합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유아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 개인 맞춤형 교육

강화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에듀테크 및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으로 가장 기대되는 교육적 목표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평등성 실현, 교육자원 공유를 통한 개방형 교육체제 실현, 창의적 교육, 디지털 지원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 강화를 선택하였다(박창현 외, 2021).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특수교사는 26.4%이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도 54.8%로 장애 영유아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법적 의무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역별, 기관별 보수교육기관 간에 운영 측면에서 질적 편차가 발생한다.

보육교직원 맞춤 보수교육 인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별 보육교직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예. 맞춤컨설팅, 동료코칭/동료멘토링, 학습공동체 참여 등)의 보수교육 인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수교육 수강저축제를 운영하여 연간 상시 필요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와 이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플랫폼과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래대응 보육교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보수교육(예. 아동학대 예방교육,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실제) 기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전문역량 강화, 보수교육(예.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기본+심화교육) 기반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전문역량 강화, 보수교육(예. 장애영유아통합보육, 다문화보육 기본+심화교육) 기반 취약보육(장애아, 다문화) 전문역량 강화 그리고 보수교육(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ICT 기술 함양을 통한 교수방법) 기반 디지털 전문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1) 추진 배경 및 현황

가) 보육교사 권익보호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30.1%가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권리침해 주체와 관련해서는 ‘부모’라는 응답이 71.9% (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양미선 외, 2021: 297).

〈표 IV-3-12〉 보육교직원, 부모 등으로부터의 권리침해 여부 및 가해자 유형

단위: %(명)

구분	권리침해 피해 여부			권리침해 주체				
	피해 비율	(수)	χ^2 (df)	원장, 대표자, 위탁업체	동료 보육교직원	부모	기타	없음 (수)
전체	30.1	(3,300)		33.0	14.6	71.9	1.9	- (993)
국공립	31.4	(657)		38.3	16.5	66.0	3.9	- (206)
사회복지법인	31.8	(359)		27.2	15.8	79.8	2.6	- (114)
법인·단체등	35.9	(217)	18.8(5)**	25.6	19.2	74.4	1.3	- (78)
민간	29.2	(791)		31.2	16.0	74.0	1.7	- (231)
가정	25.9	(954)		32.8	8.5	72.1	0.4	- (247)
직장	36.3	(322)		38.5	17.1	68.4	1.7	- (117)

주: 권리침해 주체는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297.

** $p < .01$

현직 보육교사 1,022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서도 어린이집 업무 수행 중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조용남, 2020: 24). 보육교사의 마찰·갈등 대상은 학부모와의 마찰·갈등 44.0%, 동료교사와의 마찰·갈등 38.7%, 원장과의 마찰·갈등 26.0% 순으로 나타났다(조용남, 2020: 21).

〈표 IV-3-13〉 어린이집에서의 마찰·갈등 내용

단위: %(명)

구분	(수)	%	케이스 중 %
학부모와의 마찰·갈등	(450)	31.1	44.0
원장과의 마찰·갈등	(266)	18.4	26.0
동료교사와의 마찰·갈등	(396)	27.4	38.7
기타 대상	(11)	0.8	1.1
마찰·갈등 경험 없음	(324)	22.4	31.1

주: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조용남(2020). 보육교사 권익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p. 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 중 38.0%가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교사 보호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1%, 이용자(부모) 대상 보육교사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5.6%를 차지하였다(양미선 외, 2021: 306).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서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사내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보육교사의 건강권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이를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이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표 IV-3-14〉 보육교직원 건강진단

구분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15., 2019. 12. 31., 2021. 3. 30.>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22. 4. 29. 인출).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은 직무수행 시 신체건강문제(40.5%), 정신건강문제(25.1%)를 현재 겪고 있거나 겪은 적이 있고, 84.6%는 신체건강 문제, 11.0%는 정신건강문제로 병원진료 경험이 있었다. 신체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91.8%로 가장 많고, 소화기 질환도 48.9%를 차지하였다(양미선 외, 2021: 287, 289-290).

〈표 IV-3-15〉 보육교사의 신체건강 문제 경험 여부 및 유형

단위: %(명)

구분	신체건강 문제 경험 여부			신체건강 문제 유형						
	경험 비율	(수)	X ² (df)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신경 및 순환계질환	전염성 질환	기타	(수)
전체	40.5	(3,300)		91.8	14.6	48.9	15.1	15.0	7.0	(1,337)
국공립	42.9	(657)		92.6	14.2	51.8	16.3	20.2	9.9	(282)
사회복지법인	34.3	(359)		92.7	21.1	56.9	16.3	17.9	6.5	(123)
법인·단체등	46.1	(217)	23.0(5)***	88.0	20.0	45.0	16.0	13.0	7.0	(100)
민간	39.4	(791)		92.0	16.0	47.4	16.7	14.1	6.1	(312)
가정	37.9	(954)		93.9	9.9	44.2	11.9	10.2	4.4	(362)
직장	49.1	(322)		87.3	14.6	53.8	15.8	17.7	9.5	(158)

주: 신체건강 문제 유형은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진·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287.

*** $p < .001$.

신체건강 문제를 경험한 보육교사 중 84.6%만 진료 경험이 있었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참고 견딜만하다는 응답이 59.7%로 많았다(양미선 외, 2021: 287).

한편, 정신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스트레스가 96.6%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밖에 정신건강 문제 유형으로는 무기력증 23.9%, 불면증 21.4%, 소진 20.3% 순이었다.

〈표 IV-3-16〉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문제 경험 여부 및 유형

단위: %(명)

구분	정신건강 문제 경험		정신건강 문제 유형								
	경험 비율	(수)	스트레스	소진	강박증	무기력증	우울증	불안 증세	불면증	기타	(수)
정신건강	25.1	(3,300)	96.6	20.3	18.5	23.9	18.6	18.6	21.4	2.4	(829)
국공립	27.5	(657)	96.1	25.4	17.1	29.8	23.8	23.2	19.3	1.7	(181)
사회복지법인	26.2	(359)	98.9	19.1	23.4	27.7	21.3	20.2	28.7	4.3	(94)
법인·단체등	24.9	(217)	96.3	24.1	20.4	29.6	16.7	22.2	24.1	-	(54)
민간	25.0	(791)	97.5	16.2	15.7	17.2	16.2	16.2	22.2	3.0	(198)
가정	20.5	(954)	94.9	11.2	17.9	16.3	12.2	15.3	14.8	3.1	(196)
직장	32.9	(322)	97.2	34.9	21.7	34.0	24.5	17.9	27.4	0.9	(106)
$\chi^2(df)$		23.3(5)***									

주: 정신건강 문제 유형은 중복 응답 결과임.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289.

*** $p < .001$.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보육교사 중 11.0%가 진료 경험이 있었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참고 견딜만하다는 응답이 58.1%로 가장 많았다(양미선 외, 2021: 290).

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

1) 추진 배경 및 현황

가) 보육교사 근무형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가 2021년 기준 72.5%(171,10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조교사 12.9%(30,458명),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7.7%(18,163명), 누리과정(비담임) 보조교사(30시간 미만) 3.0%(7,076명) 등의 순이다. 보조교사 전체 인원(보조교사 30,458명+누리과정 보조교사 9,050명)은 전체 담임교사 수 대비 23.1%로, 담임교사 5명당 1명의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담임교사 수 대

비 10.6%로 담임교사 10명당 1명의 연장보육반 전담교사가 지원되는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1: 174).

〈표 IV-3-17〉 보육교사 근무형태별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담임교사	방과후 보육교사	24시간 보육교사	야간 연장교사 (월급여형)	야간 연장교사 (단시간형)	보조교사	누리과정 (비담임) 보조교사 (30시간 이상)	누리과정 (비담임) 보조교사 (30시간 미만)	대체 교직원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	대체교사	소계
계	171,102	235	147	4,598	126	30,458	1,974	7,076	20	18,163	2,186	236,085

주: 2021. 12. 31.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1 보육통계. p.174.

〈표 IV-3-18〉 직무별 보조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	-	-	16,846	18,163
보조교사	19,724	25,385	32,411	28,737	30,458
누리과정 보조교사(30시간이상+30시간미만)	9,439	9,374	9,343	9,136	9,050
대체교사(1일8시간)	1,602	1,802	2,154	1,686	2,186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보조교사가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조교사 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증가하였다.

나) 연장보육반 근무

2018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운영되는 연장보육반을 담임교사가 겸임하거나 교대로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36.3%이고, 직장어린이집에서 겸임 또는 교대 근무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양미선 외, 2021: 260). 겸임 또는 교대 근무하는 횟수는 겸임 월 평균 9.5회, 교대 월평균 5.5회이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상이하여 겸임은 직장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많고,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았다.

〈표 IV-3-19〉 연장보육반 겸임 및 교대 근무 여부 및 횟수

단위: %, 회(명)

구분	겸임 교대 근무		겸임 또는 교대 근무 횟수							
	담당 비율	(수)	겸임				교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수)
전체	36.3	(3,051)	9.5	8.4	1.0	30.0	(310)	5.5	4.7	1.0 30.0 (796)
국공립	43.2	(623)	8.0	8.4	1.0	30.0	(61)	4.3	3.0	1.0 20.0 (208)
사회복지법인	42.9	(324)	10.4	8.4	1.0	26.0	(31)	5.1	4.5	1.0 22.0 (108)
법인·단체등	49.5	(194)	6.4	6.9	1.0	20.0	(11)	4.8	4.5	1.0 30.0 (85)
민간	31.5	(730)	8.0	7.3	1.0	25.0	(58)	4.5	3.9	1.0 20.0 (172)
가정	22.4	(870)	9.9	8.7	1.0	30.0	(98)	7.8	6.3	1.0 30.0 (97)
직장	57.1	(310)	12.8	8.4	1.0	30.0	(51)	7.6	5.7	1.0 30.0 (126)
$\chi^2(df)/F$	171.3(5)***		2.8*				15.5***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260.

* $p < .05$, ** $p < .01$, *** $p < .00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중 연장보육반 전담교사가 배치된 어린이집은 76.1%로 많고, 기본보육반 담임교사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34.2%로 높았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교사 겸직 원장 비율이 34.1%로 높았다(양미선 외, 2021: 342).

〈표 IV-3-20〉 연장보육반 담임교사 배치 비율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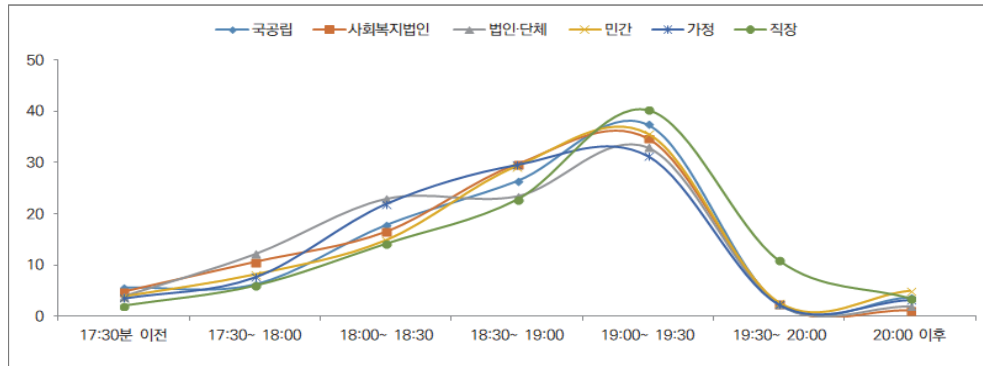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영아반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교대 근무	교사겸직 원장	기타	(수)
전체	76.1	5.1	13.4	12.3	34.2	15.9	2.4	(2,838)
국공립	77.5	8.8	14.0	19.8	46.7	0.9	3.8	(462)
사회복지법인	63.7	9.9	11.9	11.6	45.1	1.4	1.8	(102)
법인·단체	65.4	8.1	11.3	12.8	51.4	0.9	2.9	(53)
민간	75.4	7.9	14.8	12.7	35.6	3.8	2.5	(906)
가정	78.1	-	12.0	9.4	24.4	34.1	1.8	(1,201)
직장	71.1	16.9	16.5	10.8	58.1	1.4	3.9	(114)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342.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연장반 현원이 연장반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서가 31.2%로 가장 많고, 연장반 월 이용시간 미충족 20.9%, 채용 희망자가 없어서가 18.6% 순이었다. 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중 가장 늦게 하원하는 시간대를 알아본 결과, 19시에서 19시 30분 사이가 34.1%로 가장 많았다(양미선 외, 2021: 341).

[그림 IV-3-5] 어린이집 유형별 연장보육 이용 영유아 중 가장 늦은 하원시간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341.

다) 보육교사 근로시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1일 총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평균 9시간 44분으로, 2018년 대비 37분이 증가하였다.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시간도 2018년 대비 12분 증가하였다(표 IV-3-24).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연장보육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연장반을 겸직 또는 교대 근무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등의 부가 업무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3-21〉 보육교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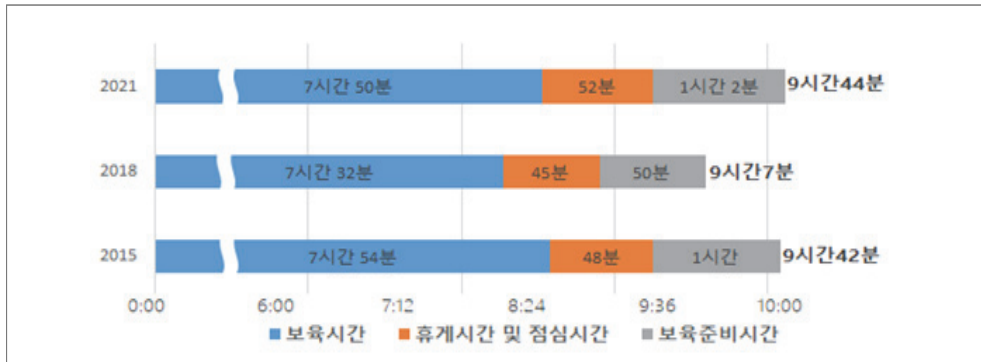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보육 시간	보육준비 및 기타업무	점심 시간	휴게 시간	1일 총 근로시간 (A)	주당 당직 근로시간 (B)	주당 총 근로시간 (A×5+B)	(수)
2021년	7시간 50분	1시간 2분	10분	42분	9시간 44분	1시간 58분	50시간 31분	(3,300)
2018년	7시간 32분	50분	7분	37분	9시간 7분	50분	46시간 26분	(3,400)
2015년	7시간 54분	1시간	30분	18분	9시간 42분	-	48시간 18분	(4,063)
2012년	-	-	-	26분	9시간 28분	-	-	(4,000)

자료: 1)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258.

2) 유해미, 강은진, 권미경, 박진아, 김동훈, 김근진, 김태우, 이유진, 이민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 pp. 269-270.

[그림 IV-3-6] 보육교사 근로시간



라) 휴가권

보육교사는 1년차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를 사용할 수 있다.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보육교사 중 94.2%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였고, 사용 휴가 일수는 1년 평균 12.3일이었다(양미선 외, 2021: 279).

마) 보육교사 급여 및 수당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육교사 평균 기본급을 하회하고 있다.

〈표 IV-3-22〉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급여(기본급 및 수당)

단위: 만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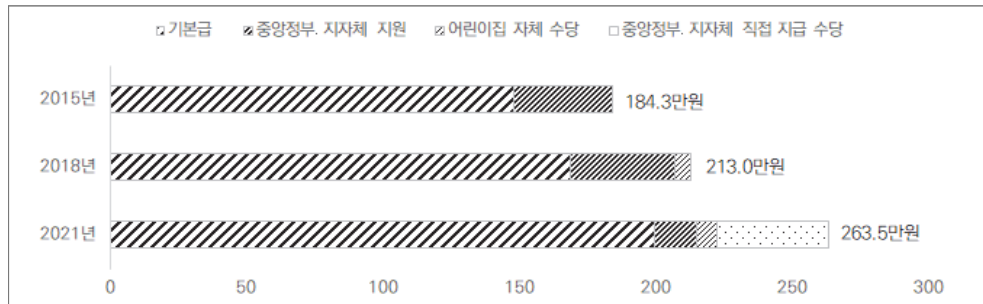
구분	기본급	어린이집 수당	정부지급 수당	지자체지급 수당	월평균 총액	(수)
2021년	204.4	13.7	31.4	26.9	276.4	(3,300)
국공립	228.9	14.1	32.4	25.3	300.8	(657)
민간	184.3	12.0	32.1	28.8	257.2	(791)
가정	183.1	9.8	27.5	28.8	249.2	(954)
2018년	168.6	6.1	22.7	19.6	217.0	(3,400)
국공립	212.6	12.4	24.6	17.7	267.3	(490)
민간	162.3	5.1	23.9	19.4	210.7	(959)
가정	156.9	3.7	20.6	21.4	202.6	(1,105)

자료: 1)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278.

2) 유해미·강은진·권미경·박진아·김동훈·김근진·김태우·이유진·이민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78.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기본급은 2021년 기준 204.4만원이며, 어린이집 수당 13.7만원, 정부 및 지자체 수당 58.3만원을 합하면 월평균 총액이 평균 276.4만원이었다(양미선 외, 2021: 278).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기본급과 수당 모두 상승하였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가 많이 상승하였다.

[그림 IV-3-7]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급여(기본급 및 수당)



자료: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p. 216.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기본급과 수당) 외에 중앙정부,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으로부터 각종 수당을 지원 받고 있다. 어린이집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육교사 급여 보전을 위해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유치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양미선, 2022: 6).

<표 IV-3-23>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교육청 교사 지원 수당

구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비고
중앙정부	영아: 근무환경개선비(26만원) 유아: 누리과정 수당(36만원)	-	-
지자체, 지역교육청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복지수당, 명절수당, 생일수당 등	교사처우개선비, 기본급보조, 장기근속수당 등	지자체, 지역교육청에 따라 상이

자료: 양미선(2022). 보육·유아교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제3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자료집. p. 6.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 조항이 없다. 2022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대체교사는 국공립 1호봉 수준 권고에 미포함되어 있다. 기본 호봉을 보장하거나 경력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개편(학력 인정, 국공립 영유아반 지원비율 개선 등)하여 유능한 보육교사의 유입과 근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지원수당 개편(담임수당/특수근무수당/농어촌수당(현재) + 장기근속수당(지자체 수당에서 이동) + 직책수당(신설) 포함)과 국가지원수당을 반영한 보육교사 급여 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한편, 대체교사 부족으로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기본보육 담임교사와 원장의 겸직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육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중 전담교사는 76.1%이나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34.2%는 기본보육반 담임교사가 교대 근무하거나 15.9%는 교사 겸직 원장이 담당(가정어린이집)하고, 13.4%는 영아반 보조교사, 12.3%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5.1%는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맡고 있다. 비담임 상근교사(선임교사)를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임교사 전면 도입 이전까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조·대체교사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업무 부담경감 위한 보조인력 지원을 확대한다(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그리고 휴게시간과 휴가권을 보장하며 휴게시간 사용과 연차유급휴가 자율적인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직급별 업무분장을 표준화한다. 담임교사, 선임교사(원감), 원장 업무분장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업무분장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5. 보육기반 강화

가. 어린이집의 안정적·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1) 추진 배경 및 현황

가) 보육료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 대하여 표준 보육비용과 부모부담의 차액을 정부가 기관보육료³⁰⁾로 지원한다. 2022년 기준 만0세

499천원, 만1세 439천원, 만2세 364천원, 여기에 기관보육료를 더하면 만0세는 1,069천원, 만1세 749천원, 만2세 574천원을 지원받는다.

〈표 IV-4-1〉 영아 보육 비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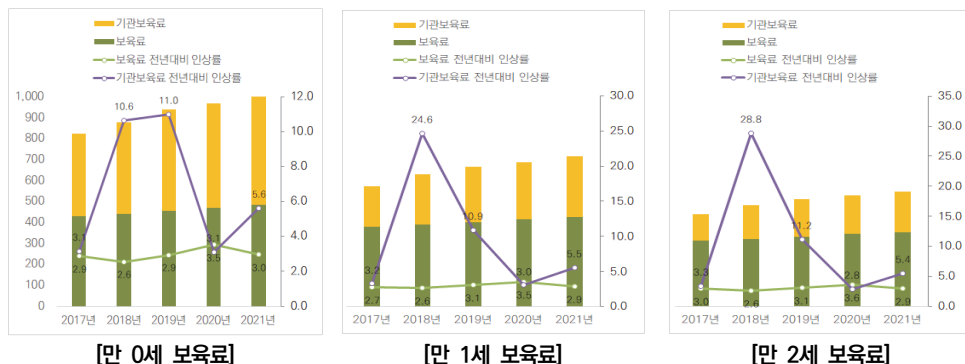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기관보육료			보육료 지원단가			보육비용		
		만0세	만1세	만2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0세	만1세	만2세
2017년	종일반	395	191	125	430	378	313	825	569	438
	맞춤반	395	191	125	344	302	250	739	493	375
2018년	종일반	437	238	161	441	388	321	878	626	482
	맞춤반	437	238	161	344	302	250	781	540	411
2019년	종일반	485	264	179	454	400	331	939	664	510
	맞춤반	485	264	179	354	311	258	839	575	437
2020		500	272	184	470	414	343	970	686	527
2021		528	287	194	484	426	353	1,012	713	547
2022		570	310	210	499	439	364	1,069	749	574

주: 보육료 지원단가는 인건비 지원시설의 보육료임.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육사업안내.

2018년 이후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관보육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0세 기관보육료 인상률은 2017년 전년대비 3.1%에서 2018년 10.6%, 2019년 11.0%로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3.1%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5.6%로 반등하였다. 만1세와 만2세는 2018년 각각 전년대비 24.8%, 28.8%로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내었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다시 반등 추세를 보였다.

[그림 IV-4-1] 최근 5년 간 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인상률



30) 2021년 부모보육료가 기관보육료로 사업명이 변경됨.

유아 보육료는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 200천원에서 2013년 220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20년 240천원, 2021년 260천원, 2022년 280천원으로 최근 3년간 2만원씩 인상되었다.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된 2013년 정부는 2016년까지 지원수준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누리과정 예산 책임 공방이 5년 간 이어지면서 2013년 지원단가가 2019년까지 동결되었다.

〈표 IV-4-2〉 3~5세 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13~2020 ¹⁾	2021	2022
지원단가	220	260	280

주: 1) 2011~2012년 3,4세 보육료 지원단가 동일, 5세 2012년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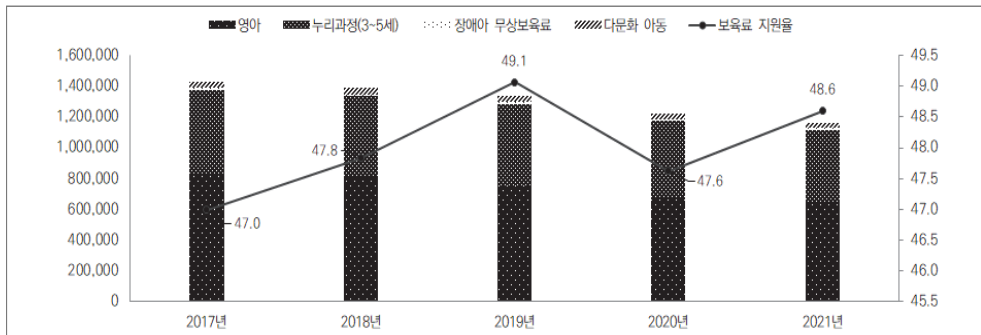
2)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4년 24만원으로 인상 계획을 발표, 예산 부족으로 2020년까지 2013년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함.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육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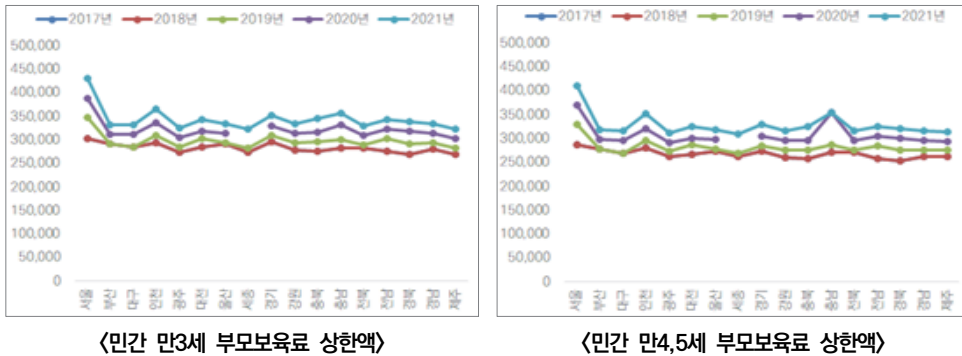
2014년 11월 경기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격화되었다. 2016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예산을 3년 동안 ‘유아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2019년에는 2020년에 일몰되는 유아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 5년 더 연장되고 지원단가도 2만원 인상되었다.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보육료 지원율은 증가 추세에서 코로나19로 2020년 47.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1년 기준 48.6%에 이른다.

[그림 IV-4-2] 보육료 지원 아동수 및 보육료 지원율



[그림 IV-4-3] 최근 5년간 시도별 부모보육료 상한액 추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외에 부모로부터 상한 수준 내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추가로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그림 IV-4-3]와 같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비용 부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6개 시도, 23개 시군구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등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에게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이원선 외, 2021).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부모부담 보육료를 내는 아동은 2015년 29.4%에서 2018년 10.1%, 2021년 10.1%('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나)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 시간(09:00~16:00)외에 연장보육(16:00~19:30)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연장 및 휴일보육 운영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서, 연장보육 이용 아동 비율은 26.8%이고, 연장보육 이용 시 급식 또는 간식 이용 아동은 평균 50.5%으로 절반 수준이다(김은설 외, 2021).

한편,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일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실제 주 6일 운영에 해당하는 휴일보육 어린이집은 매우 제한적이다.

〈표 IV-4-3〉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수			이용 아동 수		
	야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	야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
2017	8,245	306	252	5,538	280	695
2018	8,104	309	234	5,265	200	583
2019	8,015	312	153	5,809	143	549
2020	7,769	298	152	3,804	124	478
2021	7,671	283	145	4,322	112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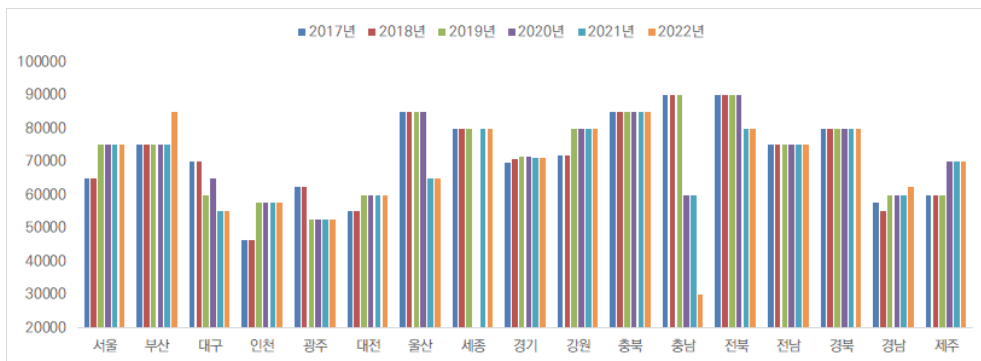
주: 시간연장보육이 2021년부터 야간연장으로 사업명이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다) 기타필요경비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 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필요경비에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 55.1%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며, 아동 1인당 평균 1.8개, 월평균 53.3천 원을 부담한다(‘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표준보육과정 중심의 일과 운영과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특성화비를 지원하는 시도는 매년 확대되고 지원단가도 상승하였다.

[그림 IV-4-4] 최근 5년간 시도별 특별활동비 상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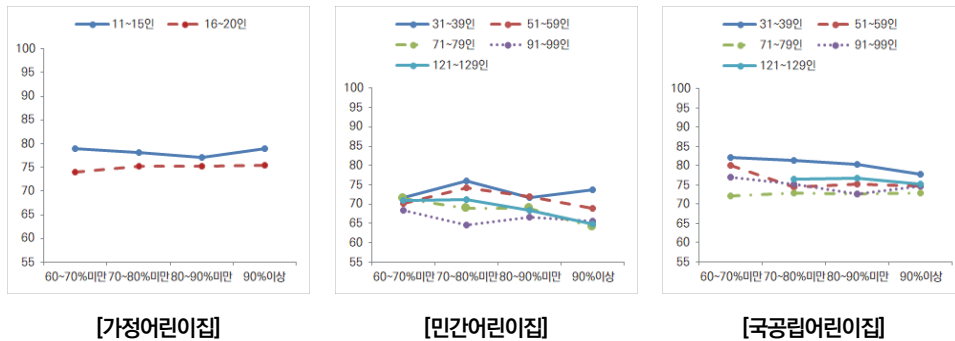
주: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의 상한액이 상이한 경우 중앙값 적용

자료: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특별활동비 산한액 내부자료.

한편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산출기준이 상이하고,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 정원충족률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보육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육료 지원단가가 그간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고, 이러한 현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정원충족률 하락으로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인건비 부담은 70~80%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IV-4-5]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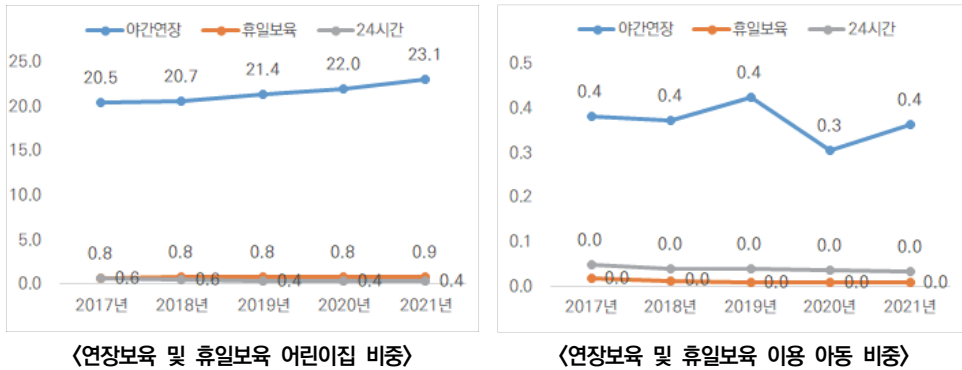


라) 연장보육

전체 어린이집 중 야간연장 보육 운영 어린이집은 증가 추세이나 이용 아동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5일제 보편화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제 도입 등으로 토요일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토요일보육 운영 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토요일보육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은 5.9%로 저조하고, 운영횟수도 월평균 2.4회로 적으며, 이용 아동 수는 어린이집 1개소 당 3.0명에 그치고 있다(양미선 외, 2021).

[그림 IV-4-6]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 및 이용률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토요보육³¹⁾ 이용 아동 수가 적고,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토요보육 운영 시 보육교사 평균 1.3명과 기타 보육교직원 0.7명이 근무하고 있고, 토요보육 이용률은 0.3%로 매우 저조하다(양미선 외, 2021).

서울, 경기,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공립, 서울형 및 인천형 등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별 어린이집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는 세입세출 자료로는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 급여(수당), 원장 직책급, 기타 운영비 및 재산조성비 등의 세목 및 세세목 등의 지출내역 파악하기 어렵다. 정부는 '13년 재무회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어린이집의 의무 사용을 계획하였으나 민간시장 개입 등의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어, 현재는 단위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정보공시에 세입세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지출 구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필요경비 및 상해보험료(아동 및 보육교직원 대상), 아침저녁급식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5개 시도와 32개 시군구에서 필요경비, 11개 시도와 시군구 64개에서 상해보험료를 지

31)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의 150%를 지원하고, 특수보육 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원하고 있다. 상해보험료 등 입학준비금, 아침저녁급식비 등의 필요경비 지원 확대에 따라 필요경비의 범위나 인정 범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0년 ‘특별활동 관리 방안’ 마련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위주의 일과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운영이 크게 줄었고, 표준보육과정의 놀이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일과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시설, 숲 놀이터 등의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항목별 산출기준 및 최종 산출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현 표준보육비용은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6개 모형으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의 항목별 단가를 산출한다. 2018년 표준보육비용 산출 시 일부 항목 산출 기준의 불명확성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매년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 등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장보육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료 지원단가 및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인건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장형보육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운영 및 지원기준을 고도화하고, 현 연장형 보육에는 기본시간(7:30~16:00)외 수요가 적은 운영시간 및 운영일을 일괄 포함하되, 실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일수 및 휴일보육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성이 있다.

나. 공공보육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1) 추진 배경 및 현황

가) 국공립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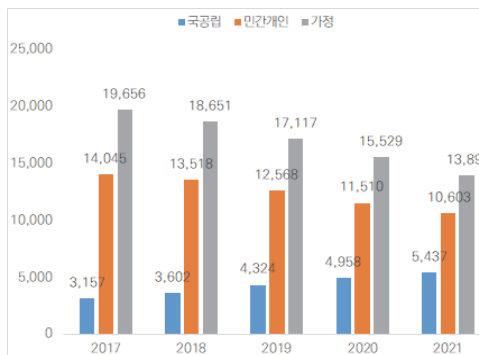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목표를 제시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희망하는 보육정책의 1순위로 국공립 확충(22.0%)을 꼽았고,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도 직장(4.62점), 법인단체등(4.23점), 국공립(4.15점) 순으로 공공보육에 대한 부모 선호도는 여전하다(김은설 외, 2021).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을 다양화하여 2017년 대비 2021년 2,280개소가 증가(72.2%)하였고, 전국적으로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기존 시설 전환(장기임차) 중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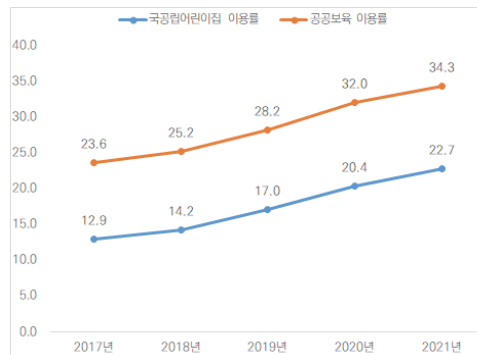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철도 공단 역사내 철도어린이집(평내호평, 여주역 등), 집합건물(오피스텔)내 국공립(하남시) 등의 확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 성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2021년 기준 22.7%, 공공보육 이용률로는 34.3%에 달하며, 2017년 대비 각각 9.8%p, 10.7%p가 상승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법인, 개인 등이 주로 위탁·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률 증가와 원장의 겸직 금지 등으로 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 등) 위탁이 줄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출신의 개인 위탁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위탁 비율은 2018년 54.6%에서 2021년 68.2%로 지난 4년 간 14%p가 상승하였다.

[그림 IV-4-7] 국공립어린이집 수



[그림 IV-4-8] 국공립 및 공공보육 어린이집 이용률



주: 공공보육 이용률 산출 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통계. 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포함하여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통계.

나) 공공형어린이집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679개소에서 2013년 1,492개소로 2배가 늘었고, 2017년 이후 2,300여 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성 확보와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지정 및 운영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교직원 교육, 재무회계 및 운영기준 컨설팅, 정보공시 관리 등 품질관리를 추진하였다.

〈표 IV-4-4〉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 및 이용 현황

단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소 수	679	778	1,481	1,621	1,796	2,101	2,265	2,356	2,311	2,311	2,330	2,286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2). 내부자료.

2021년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양되어 지역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법령 기반 필수 지정·운영 기준 규정 등 운영매뉴얼이 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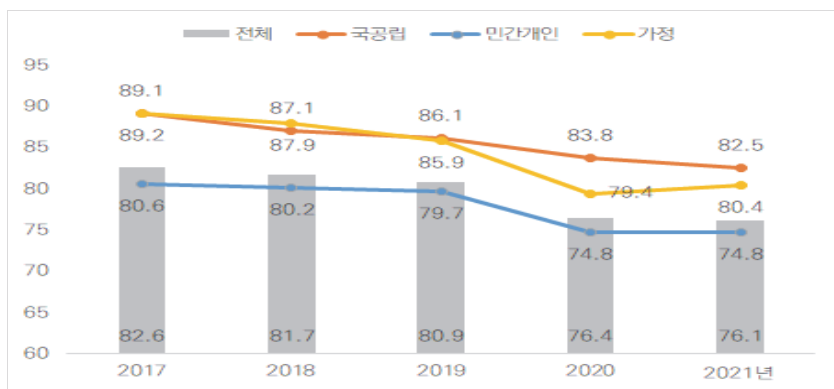
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지침상 기존의 정부지원시설 및 미지원시설 개념이 변화하였다. 정부의 재정 지원 측면에서의 어린이집 유형을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으로 재유형화 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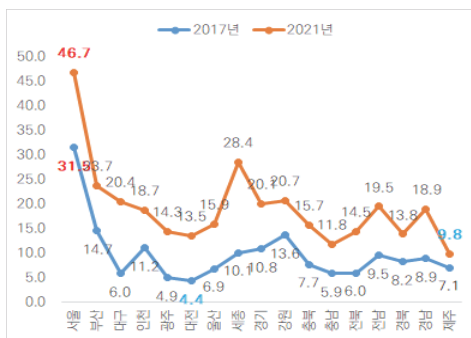
출산율 하락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하락과 폐원 증가가 가속화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또한 동반 하락 중이다. 폐원어린이집 수 2019년 3,170개소에서 2020년 3,238개소, 2021년 1,921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IV-4-9]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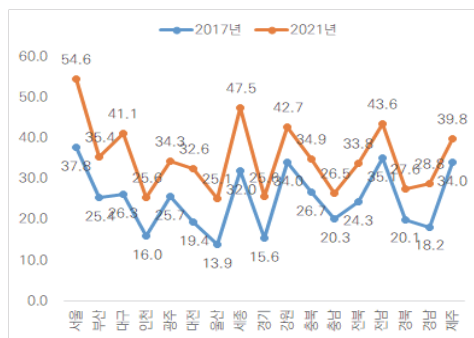


출생아 수 감소, 어린이집 폐원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규모의 공급이 필요하다(LH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1091개소 중 284개소 공실, 경향신문, 2022. 10. 5.).

[그림 IV-4-10]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그림 IV-4-11] 시도별 공공보육 이용률



주: 공공보육 이용률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린이집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또한 재정자립도, 지자체 관심도 등에 따라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의 지역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격차가 2017년 27.1%p에서 2021년 36.9%p로 커졌다.

개인위탁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위탁 주체, 신규·변경(재위탁) 선정기준 개정, 재무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 재무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서울 동작구는 자치구 내 보육청을 설치 및 운영하여 보육교직원 직접 고용, 순환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환 또는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의 품질관리 강화 요구가 증대되었다. 따라서 한국보육진흥원은 2017년 이후 인가된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 및 전환 포함)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책무성, 보육과정과 운영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하락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어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상향 조정 및 반당 인건비 지원기준의 완화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취약보육이 실시되

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는 취약보육을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아동 대상의 보육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영아보육은 현재 취약보육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 연장형 보육이 취약보육으로 추가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2개 이상의 취약보육 실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취약보육 실행 여부는 미점검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외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인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어린이집은 공공보육으로 분류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이 아니므로 설치주체 상 민간영역에 해당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공공보육 간의 개념상 혼선이 초래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였으나 시설의 기본 속성은 사적 재산에 해당되고, 직장어린이집은 설립주체가 사업체이며, 인건비 지원 예산은 국고나 지방비가 아닌 고용보험이 출처이다. 일부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육에서 제외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세입은 수익자부담금인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보육료와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재정측면에서는 설립유형에 무관하게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공공형어린이집 지방 이양에 따른 선정기준, 지원수준 등 지역 격차 발생이 예상된다. 서울, 인천, 광양, 대전 등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수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 3~5세 민간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해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보육의 지역적 균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진입을 꺼리는 보육취약 지역에서 공공보육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과도하게 확충되어, 재정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보육의 품질 향상을 통해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성과 평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실화하고,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일부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품질 관리를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취약보육 제공 및 특별한 요구를 가진 대상 발굴을 통해 취약보육을 다변화한다.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지원 기준 현실화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간다.

공공보육 이용률 제고를 넘어선 공공성의 패러다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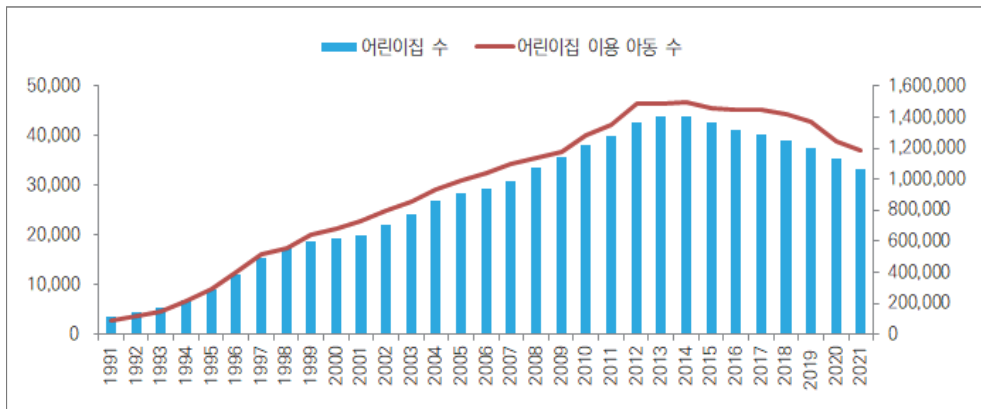
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대상의 지원기준 현실화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간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및 운영 기준을 고도화하고 지자체별 공공형어린이집 우수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립한다. 대표자 또는 원장의 사유화 가능성과 문제 발생 시 내부고발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2018. 10. 25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관리강화 방안’ 중 일부분이 실행 중이다.

다.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1) 추진 배경 및 현황

저출생 장기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어린이집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3,770개소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1년 33,246개소까지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021).

[그림 IV-4-12] 연도별 어린이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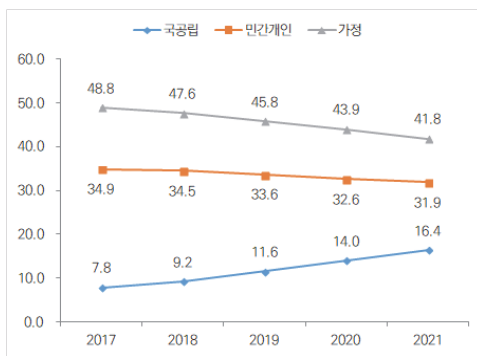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은 2,000개소 이상 늘어났으나, 출생아 수 감소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매년 1,000~2,000여 개소 정도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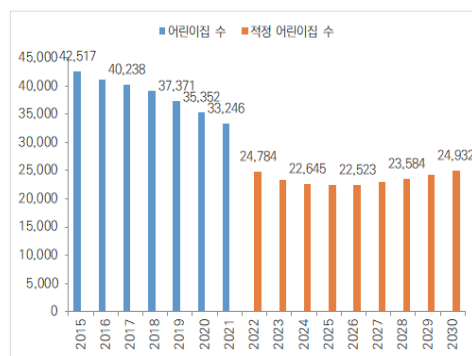
였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17년 7.8%에서 '21년 16.4%로 2배 이상 상승하고, 가정 6%p, 민간 3%p 하락하였다.

또한 재정 악화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폐원이 증가하고 있다. 적정 어린이집 규모가 2026년 22,523개소 정도로 현재보다 1만 여 개소 정도가 줄어야 하고, 장래 영유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20,000~25,000개소가 적정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림 IV-4-13]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비중



[그림 IV-4-14] 적정 어린이집 수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저출생,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건전성 악화,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 중심으로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 정원충족률 2011년 전체 평균 82.0%에서 2021년 78.1%로 하락하였다.

〈표 IV-4-5〉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민간가정 어린이집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가정				민간			
		1~10인	11~15인	16~20인	계	21~39인	40~41인	50인 이상	계
대도시	수	19	544	4,563	5,126	1,250	777	1,959	3,986
	비율	0.4	10.6	89.0	100.0	31.4	19.5	49.1	100.0
중소도시	수	51	809	7,312	8,172	1,722	930	2,173	4,825
	비율	0.6	9.9	89.5	100.0	35.7	19.3	45.0	100.0
농어촌	수	13	207	2,010	2,230	986	263	1,439	2,688
	비율	0.6	9.3	90.1	100.0	36.7	9.8	53.5	100.0
전체	수	83	1,560	13,885	15,528	3,958	1,970	5,571	11,499
	비율	0.5	10.0	89.4	100.0	34.4	17.1	48.4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일람 현황 12월 말 기준

〈표 IV-4-6〉 가정어린이집 지역규모별 정원충족률

단위: %, 개소

구분	1~10인				11~15인				16~20인			
	평균	최소값	최대값	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수
대도시	51.7	0.0	90.0	19	71.6	0.0	100.0	544	79.0	0.0	100.0	4,563
중소도시	63.2	0.0	100.0	51	74.8	0.0	100.0	809	80.7	0.0	110.5	7,312
농어촌	61.2	0.0	100.0	13	72.5	0.0	100.0	207	78.6	0.0	100.0	2,010
합계	60.3	0.0	100.0	83	73.4	0.0	100.0	1,560	79.8	0.0	110.5	13,885

자료: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일람 현황 12월 말 기준

〈표 IV-4-7〉 민간어린이집 지역규모별 정원충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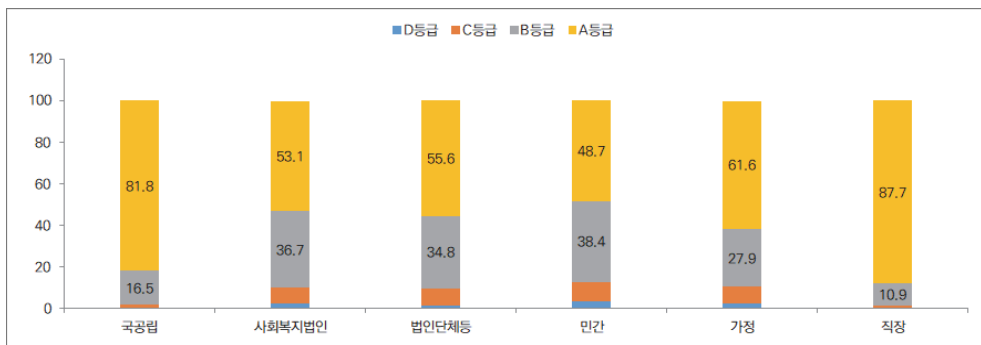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21~39인				40~49인			
	평균	최소값	최대값	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수
대도시	72.7	0.0	100.0	1,250	74.7	0.0	100.0	777
중소도시	74.3	0.0	102.6	1,722	76.5	0.0	100.0	930
농어촌	68.9	0.0	100.0	986	78.8	0.0	100.0	263
합계	72.5	0.0	102.6	3,958	76.1	0.0	100.0	1,970

자료: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일람 현황 12월 말 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인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IV-4-15]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 결과



2) 문제점 및 개선사항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접근성이 악화되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아동 수 감소로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정원충족률 하락에 따라 기

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 보육교사 급여 수준이 최저 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인적·물리적 자원의 한계로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은 경우 운영관리 측면에서 취약하므로, 이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아동수 급감에 따른 어린이집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지속가능성 모색 및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육취약지역 중 영유아 인구희소지역의 지원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취약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적 설치 지역인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해당된다. 원아 모집이 어려운 국공립어린이집의 한시적 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해 운영을 안정화하고,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주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였고,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6개 교육청(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은 외국 국적을 가진 유아에게 2022년부터 유아학비(누리과정비)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폐원 희망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어린이집 수급을 조절하고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거나, 현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재정상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폐원 희망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영유아 급감으로 인해 휴원 중인 농어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업 시작 당시의 90%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기준이 현재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아져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어린이집 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V.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정책 우선순위 분석

제5장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내외 환경 요인과 기본계획(안)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대내외 환경요인

가. 대외 환경요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요인을 1,2,3순위로 알아보았다.

〈표 V-1-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대외 환경 요인: 1+2+3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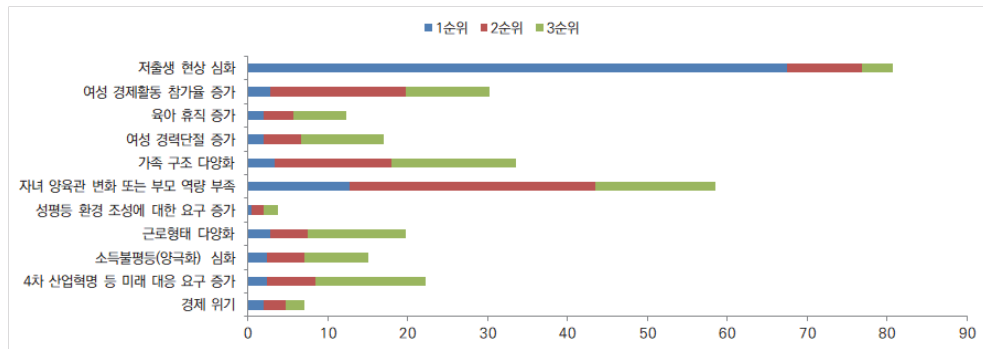
구분	저출생 현상 심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육아 휴직 증가	여성 경력 단절 증가	가족 구조 다양화	자녀 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가	근로 형태 다양 화	소득 불평 등(양 극화) 심화	4차 산업혁 명 등 미래 대응 요구 증가	경제 위기	계(수)
1순위	67.5	2.8	1.9	1.9	3.3	12.7	0.5	2.8	2.4	2.4	1.9	100.0(212)
2순위	9.4	17.0	3.8	4.7	14.6	30.7	1.4	4.7	4.7	6.1	2.8	100.0(212)
3순위	3.8	10.4	6.6	10.4	15.6	15.1	1.9	12.3	8.0	13.7	2.4	100.0(212)
1+2+3순위	76.9	19.8	5.7	6.6	17.9	43.4	1.9	7.5	7.1	8.5	4.7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1순위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67.5%가 저출생 현상 심화를 꼽았고, 12.7%는 자녀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가족구조 다양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근로형태 다양화, 소득불평등 심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응 요구 증가 등은 각각 3% 내외로 소수이었다. 2순위는 자녀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이 30.7%로 다수를

차지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17.0%, 가족 구조 다양화 14.6%,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응 요구 증가가 6.1%, 여성경력 단절 증가 14.6% 순이었다. 3순위는 가족 구조 다양화 15.6%, 자녀 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15.1%,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응 요구 증가 13.7%, 근로 형태 다양화 12.3%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1,2,3순위를 합산하면, 저출생 현상 심화가 76.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43.4%,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19.8%, 가족 구조 다양화 17.9% 순이었다.

[그림 V-1-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대외 환경 요인: 1+2+3순위



〈표 V-1-2〉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요인 1순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표 V-1-2〉 제 특성별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요인: 1순위

단위: %(명)

구분	저출생 현상 심화	여성 경제 활동 참가 율 증가	육아 휴직 증가	여성 경력단 절 증가	가족구 조의 다양화	자녀 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가	근로 형태 다양 화	소득 불평 등(양 극화) 심화	4차 산업혁 명 등 미래 대응 요구 증가	경제 위기	계(수)
전체	67.5	2.8	1.9	1.9	3.3	12.7	0.5	2.8	2.4	2.4	1.9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72.2	5.6	0.9	-	0.9	9.3	0.9	1.9	2.8	3.7	1.9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62.5	-	2.9	3.8	5.8	16.3	-	3.8	1.9	1.0	1.9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72.2%와 육아종합지원센터 62.5% 둘 다 공통적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요인으로 저출생 현상 심화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자녀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9.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5.6% 순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녀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이 16.3%, 가족구조의 다양화 5.8% 순이었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대외 환경요인 2,3순위를 응답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나. 대내 환경요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요인을 1,2,3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가 27.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20.8%,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18.9%, 어린이집 폐원 증가 14.2% 순이었다. 2순위로는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가 각각 27.8%, 27.4%로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12.7%, 자녀양육지원 정책으로의 전환 11.3% 순이었다. 3순위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20.3%,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16.0%,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 15.1% 순이었다.

〈표 V-1-3〉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요인: 1+2+3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폐원 증가	보육교사 전문성(역 량)에 대한 요구 증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어린이집 건강영양 안전 사고 증가	유보통합 에 대한 요구 증가	자녀양육지원 정책으로의 전환('23년 부모급여 도입 및 시행)	보육 재정 안정성 확보 요구	계(수)
1순위	14.2	27.4	18.9	0.5	20.8	6.1	12.3	100.0(212)
2순위	9.9	27.8	27.4	1.4	12.7	11.3	9.4	100.0(212)
3순위	9.0	15.1	20.3	12.3	16.0	11.8	15.6	100.0(212)
1+2+3순위	33.1	70.3	66.6	14.2	49.5	29.2	37.3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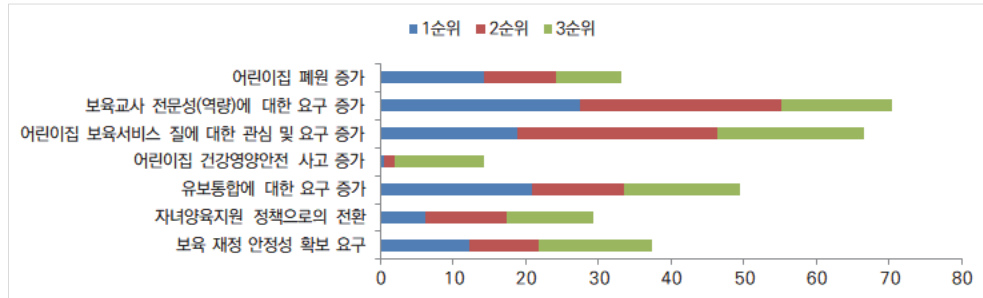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1,2,3순위를 합산하면,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

경요인으로 70.3%가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를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66.6%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49.5%는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33.1%는 어린이집 폐원 증가 순이었다.

[그림 V-1-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대내 환경 요인: 1+2+3순위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요인 1순위를 제 특성 별로 살펴보면 <표 V-1-4>와 같다. 보육관련 보육/연구원은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순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를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표 V-1-4>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 요인 1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폐원 증가	보육교사 전문성(역량)에 대한 요구 증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어린이집 건강영양 안전 사고 증가	유보 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자녀양육 지원 정책으로 의 전환	보육 재정 안정성 확보 요구	계(수)
전체	14.2	27.4	18.9	0.5	20.8	6.1	12.3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4.8	34.3	18.5	0.9	25.0	1.9	4.6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3.5	20.2	19.2	-	16.3	10.6	20.2	100.0(104)
χ^2 (df)	23.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요인 2,3순위를 제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AHP 분석

3장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³²⁾으로 제시한 추진전략별 세부과제에 대해 AHP 조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조사 개요

보육·유아교육, 사회복지 등 학계(정책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 189명을 대상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에 대해 먼저, 항목별 중요도 산출을 위한 값을 배정하고 일치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치성 분석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대고유치(Principal Eigenvalue) $\lambda_{\max}$ 를 구하고,

정방행렬[A] X 가중치행렬[W] = 가중치벡터행렬[Y] 이고,

$$(Y_1/W_1 + Y_2/W_2 + \dots + Y_n/W_n)/n = \lambda_{\max}$$

$\lambda_{\max}$ 를 이용하여 일치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구하고,

$$CI = \lambda_{\max} - n / (n - 1)$$

, $\lambda_{\max} \geq n$ (단, n = 행렬의 차원)

최종적으로 일치성지수 CI를 가지고 일치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구하고, 이 일치성비율(CR)을 가지고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CR = CI/RI$$

32) 본 연구에서 추진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3차 포럼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을 구성함.

나.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우선순위

1) 과제1. 가정양육지원

가정양육지원 분야 4개 세부과제 양육비용 지원 강화,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부모양육 역량 강화,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육아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간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는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육아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양육비용 지원 강화 순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영유아 검사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알고 이용하는 부모는 많지 않고 제한적이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발달단계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어,³³⁾ 이를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표 V-2-1〉 가정양육지원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순위

구분	가중치	급	비율	우선 순위	최대 고유치 (λmax)	일관성 지수 (CI)	일관성 비율 (CR)
양육비용 지원 강화 (부모급여,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0.2140	0.8561	4.0003	4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역량 강화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의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등)	0.2570	1.0279	4.0003	3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 확대, 육아용품 대여, 놀이 및 체험지원 인프라 확대 등)	0.2576	1.0304	4.0003	2	4.0003	0.0001	0.0001
육아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단계별 검사상담서비스 연계, 지역 중 심 돌봄 지원 강화 등)	0.2714	1.0858	4.0003	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또한 부모급여 지원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긴급 또는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기관은 많지 않고, 육아용품 대

33) 어린이집 교사 75% "코로나19로 아동 언어발달 지연"(연합뉴스, 2021. 5. 24일자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4069200530> 2022. 11. 28 인출

여 및 놀이 및 체험시설 등의 인프라도 부족하여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2) 과제2. 보육서비스 질 제고

전문가들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의 세부과제 중 최적의 보육 환경 조성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순이었다.

교사대 아동 비율과 보육 면적 등의 물리적 환경 기준이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대아동 비율 조정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교사의 업무 과중, 보육실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문가들은 최적의 보육 환경 조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아 및 경제선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³⁴⁾ 장애전문 또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여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애아 대상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표 V-2-2〉 보육서비스 질 제고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순위

구분	가중치	곱	비율	우선 순위	최대 고유치 (λ_{max})	일관성 지수 (CI)	일관성 비율 (CR)
최적의 보육 환경 조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보육면적 확대, 설치 인가 기준 개선 등)	0.2980	1.1926	4.0018	1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련 참여 확대 등)	0.2291	0.9169	4.0015	4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아동발달 지원, 장애아 대상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등)	0.2372	0.9492	4.0015	2	4.0016	0.0005	0.0006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표준보육과정 내실화, 보육과정 컨설턴트 양성,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	0.2356	0.9429	4.0015	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34) 영유아초등생 발달장애 1년 만 20.3% 급증(의학신문, 2022. 10. 19일자 기사).

3) 과제3.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순으로 가중치가 높았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도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학계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단계적 유보통합을 발표하였지만, 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³⁵⁾ 다른 과제에 비해 가중치를 높게 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도 추진하였던 보조대체교사 지원, 휴게시간 보장 등의 과제도 현장에서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택한 것 같다.

〈표 V-2-3〉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순위

구분	가중치	곱	비율	우선순위	최대 고유치 (λmax)	일관성 지수 (CI)	일관성 비율 (CR)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자격기준, 양성체계 개편 등)	0.2758	1.1041	4.0029	1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보수교육 체계 개편, 수강저축제, 교육플래폼 등)	0.2398	0.9598	4.0029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0.2210	0.8845	4.0027	4	4.0028	0.0009	0.0010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보조대체교사 확대,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수당 체계 개편 등)	0.2634	1.0544	4.0027	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4) 과제4. 보육기반 강화

전문가 조사에서 보육기반 강화 세부과제 중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가 다른 과제에 비해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린이집 재정지원 체계 마련, 보육의 양적질적 사각지대 예방,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및 홍보 강화 순이었다.

35) 30년 숙원 '유보통합'... 교사 선발·처우 일원화가 최대 난제(세계일보, 2022. 5. 31일자 기사)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목표를 초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렇지 않는 지역도 많아 지역 간의 편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들의 품질 향상에 대한 지적이 많아 우선순위 과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V-2-4〉 보육기반 강화 추진전략 세부과제 우선순위

구분	가중치	급	비율	우선 순위	최대 고유치 (λmax)	일관성 지수 (CI)	일관성 비율 (CR)
어린이집 재정지원 체계 마련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 취약보육 기준 합리화, 필요경비 제도 개선 등)	0.2461	0.9846	4.0008	2			
공공보육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지역 균형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품질 향상, 공공성 개념 민간 분야 확대 등)	0.2697	1.0788	4.0008	1	4.0008	0.0003	0.0003
보육의 양적·질적 사각지대 예방 (어린이집 소규모화 대응 품질 제고, 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 등)	0.2501	1.0007	4.0008	3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및 홍보 강화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등)	0.2341	0.9367	4.0008	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3.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 우선순위

2장은 추진 전략과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추진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가. 추진 전략

〈표 V-2-1〉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추진 전략 중 주요 전략을 1,2순위로 조사한 것이다. 1순위를 보면,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보육기반 강화가 각각 35.8%, 3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20.8%, 가정양육지원 11.8% 순이었

다. 2순위로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 33.0%,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30.2%, 보육기반 강화 20.3%, 가정양육지원 16.5%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한 결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가 6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보육기반 강화가 각각 53.8%, 51.9%로 비등하고, 가정양육지원이 28.3%로 가장 낮았다.

〈표 V-3-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 중 주요 전략: 1+2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양육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보육 기반(공공보육, 안정적 비용 지원, 보육사각지대 예방 등) 강화	계(수)
1순위	11.8	20.8	35.8	31.6	100.0(212)
2순위	16.5	33.0	30.2	20.3	100.0(212)
1+2순위	28.3	53.8	66.0	51.9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 중 주요 전략 1순위를 응답자 유형별로 알아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중 46.3%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꼽은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7.5%가 보육 기반 강화를 꼽아 의견 차이를 보였다.

〈표 V-3-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 중 주요 전략 : 1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양육 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보육 기반(공공보육, 안정적 비용 지원, 보육사각지대 예방 등) 강화	계(수)
전체	11.8	20.8	35.8	31.6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5.6	22.2	46.3	25.9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8.3	19.2	25.0	37.5	100.0(104)
$X^2(df)$	16.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나.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

1) 가정양육지원

가정양육지원 분야의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한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발달단계별 검사상담 서비스 연계가 17.5%,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이 13.2%, 부모 급여 10.4%

순이었다. 2순위는 지역중심 돌봄 지원 강화가 20.8%,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18.4%, 놀이 체험 지원 인프라 확대 17.0%,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13.2% 순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이 45.3%, 발달단계별 검사상담 서비스 연계 33.1%,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31.6% 순이었다.

〈표 V-3-3〉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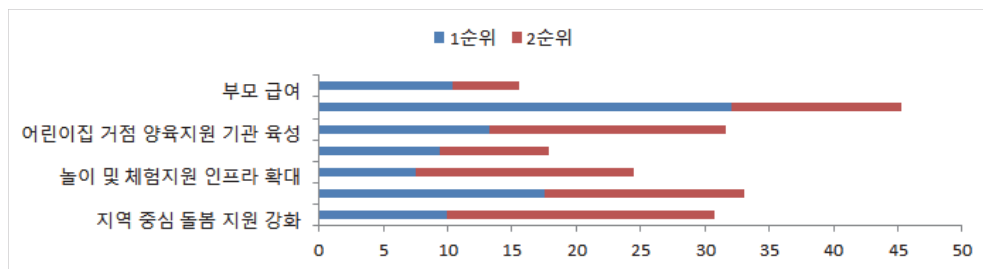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부모 급여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시간제 보육 확대	육아 용품 대여	놀이 및 체험지원 인프라 확대	발달단계별 검사상담 서비스 연계	지역 중심 돌봄 지원 강화	계(수)
1순위	10.4	32.1	13.2	9.4	-	7.5	17.5	9.9	100.0(212)
2순위	5.2	13.2	18.4	8.5	1.4	17.0	15.6	20.8	100.0(212)
1+2순위	15.6	45.3	31.6	17.9	1.4	24.5	33.1	30.7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그림 V-3-1〉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표 V-3-4〉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 급여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시간제 보육 확대	놀이 및 체험지원 인프라 확대	발달단계별 검사상담 서비스 연계	지역 중심 돌봄 지원 강화	계(수)
전체	10.4	32.1	13.2	9.4	7.5	17.5	9.9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1.1	34.3	13.9	14.8	8.3	6.5	11.1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9.6	29.8	12.5	3.8	6.7	28.8	8.7	100.0(104)
χ^2 (df)	23.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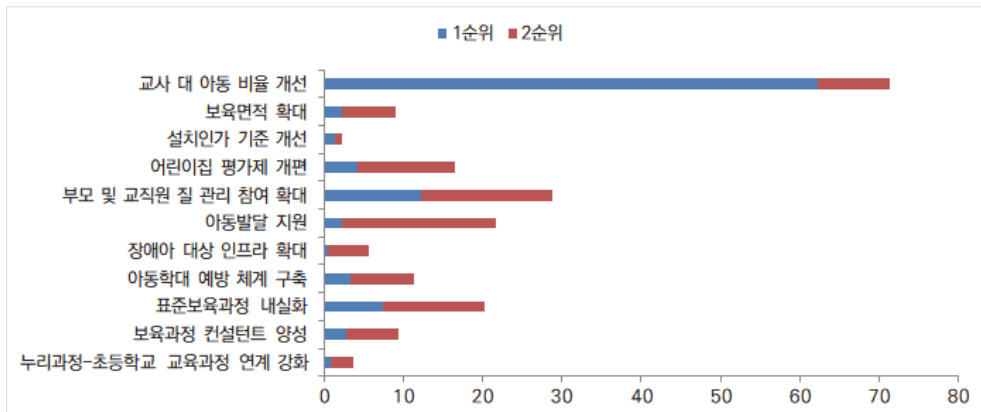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1순위로 응답한 결과를 응답자별로 살펴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은 세부과제 중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을 선택한 비율이 34.3%, 시간제보육 확대 14.8%,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13.9% 순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과 발달단계별 검사상담 서비스 연계가 각각 29.3%, 28.8%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2)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이 6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리 및 참여 확대 12.3%, 표준보육과정 내실화 7.5%,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4.2% 순이었다. 2순위는 아동발달 지원과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리 참여 확대가 각각 19.3%, 16.5%로 높고,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과 표준보육과정 내실화가 각각 12.3%, 12.7%를 차지하였다. 1,2순위를 합산하면,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이 7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리 참여 확대와 아동발달 지원, 표준보육과정 내실화가 각각 20~30% 사이에 분포하였다.

[그림 V-3-2]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표 V-3-5〉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 면적 확대	설치 인가 기준 개선	어린이집 평가 제 개편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리 참여 확대	아동 발달 지원	장애아 대상 인프라 확대	아동 학대 예방 체계 구축	표준 보육 과정 내실 화	보육 과정 컨설 턴트 양성	누리과정-초 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	계(수)
1순위	62.3	2.4	1.4	4.2	12.3	2.4	0.5	3.3	7.5	2.8	0.9	100.0(212)
2순위	9.0	6.6	0.9	12.3	16.5	19.3	5.2	8.0	12.7	6.6	2.8	100.0(212)
1+2순위	71.3	9	2.3	16.5	28.8	21.7	5.7	11.3	20.2	9.4	3.7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1순위를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통적으로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가장 많이 지목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응답비율이 월등히 많다. 그 다음으로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리 참여 확대, 표준보육과정 내실화를 꼽았다.

〈표 V-3-6〉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 면적 확대	설치 인가 기준 개선	어린이집 평가 제 개편	부모 및 교직 원 질 관리 참여 확대	아동 발달 지원	장애아 대상 인프라 확대	아동 학대 예방 체계 구축	표준 보육 과정 내실 화	보육 과정 컨설 턴트 양성	누리 과정- 초등 교육 과정 연계 강화	계(수)
전체	62.3	2.4	1.4	4.2	12.3	2.4	0.5	3.3	7.5	2.8	0.9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49.1	1.9	2.8	5.6	17.6	1.9	0.9	4.6	10.2	3.7	1.9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76.0	2.9	-	2.9	6.7	2.9	-	1.9	4.8	1.9	-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3)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개편이 58.5%로 가장 높고, 보육교사 수당체계 개편 8.5%, 보조/대체교사 확대 7.5%, 보육교직원 교육 플랫폼 구축 6.1% 순이었다. 2순위는 보수교육 체계 개편이 21.2%로 높고, 다음으로 보조대체교사 확대 13.2%, 보육교사 교육플랫폼 구축 11.8%,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11.3% 순이었

다. 1,2순위를 합산하면,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개편이 67.9%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수교육 체계 개편 25.9%, 보육교사 수당체계 개편 24.5%, 보조/대체교사 확대 20.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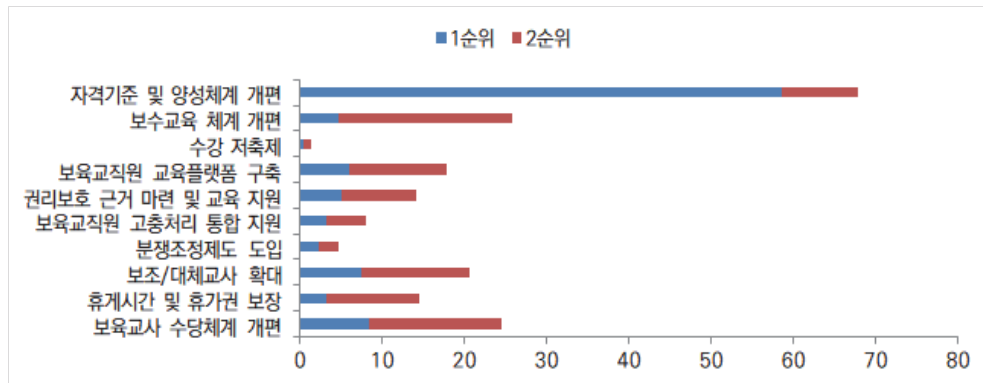
〈표 V-3-7〉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자격 기준 및 양성 체계 개편	보수 교육 체계 개편	수강 저축제	보육교 직원 교육 플랫폼 구축	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보육교직 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분쟁조 정제도 도입	보조/ 대체교 사 확대	휴게 시간 및 휴가권 보장	보육교사 수당체계 개편	계(수)
1순위	58.5	4.7	0.5	6.1	5.2	3.3	2.4	7.5	3.3	8.5	100.0(212)
2순위	9.4	21.2	0.9	11.8	9.0	4.7	2.4	13.2	11.3	16.0	100.0(212)
1+2순위	67.9	25.9	1.4	17.9	14.2	8	4.8	20.7	14.6	24.5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V-3-3〉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1순위를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 67.5%와 육아종합지원센터 49.0%가 공통적으로 다수가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개편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표 V-3-8〉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자격기 준 및 양성체 계 개편	보수교 육 체계 개편	수강 저축 제	보육교 직원 교육플 랫폼 구축	권리보 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보육교 직원 고충 처리 통합 지원	분쟁조 정제도 도입	보조/ 대체교 사 확대	휴게 시간 및 휴가권 보장	보육 교사 수당 체계 개편	계(수)
전체	58.5	4.7	0.5	6.1	5.2	3.3	2.4	7.5	3.3	8.5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67.6	6.5	-	6.5	1.9	2.8	1.9	3.7	3.7	5.6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49.0	2.9	1.0	5.8	8.7	3.8	2.9	11.5	2.9	11.5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4) 보육기반 강화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1,2순위로 알아보았다. 1순위로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가 25.9%,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 균형 배치 18.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0%, 보육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강화 15.1%, 어린이집 소규모화 대응 품질 제고 10.4% 순이었다. 2순위는 어린이집 소규모화 대응 품질 제고가 1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강화 17.0%, 표준보육비용 사율 고도화와 필요경비 제도 개선이 각각 11.8%, 11.3% 이었다. 1,2순위를 합산하면,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 균형 배치, 보육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강화가 각각 37.7%, 33.0%, 32.1%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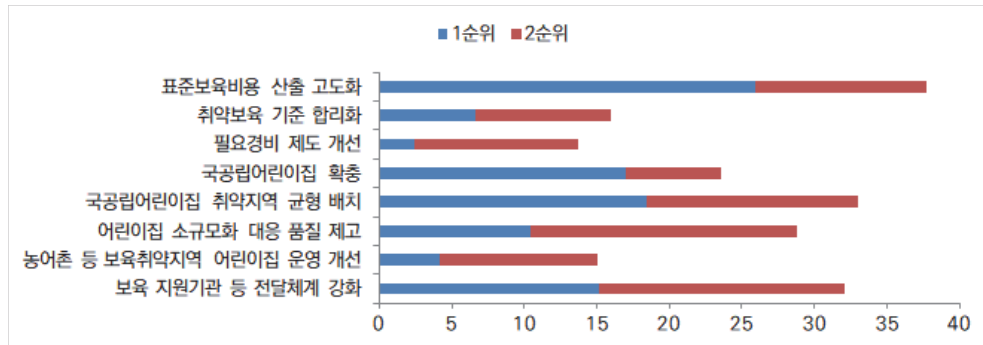
〈표 V-3-9〉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단위: %(명)

구분	표준보육 비용 산출 고도화	취약보육 기준 합리화	필요경비 제도 개선	국공립어 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 이집 취약지역 균형 배치	어린이집 소규모화 대응 품질 제고	농어촌 등 보육취약지 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	보육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강화	계(수)
1순위	25.9	6.6	2.4	17.0	18.4	10.4	4.2	15.1	100.0(212)
2순위	11.8	9.4	11.3	6.6	14.6	18.4	10.8	17.0	100.0(212)
1+2순위	37.7	16	13.7	23.6	33	28.8	15	32.1	(2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그림 V-3-4]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2순위



〈표 V-3-10〉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	취약보육 기준 합리화	필요경비 제도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 균형 배치	어린이집 소규모화 대응 품질 제고	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	보육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강화	계(수)
전체	25.9	6.6	2.4	17.0	18.4	10.4	4.2	15.1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5.0	6.5	0.9	22.2	23.1	10.2	6.5	5.6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6.9	6.7	3.8	11.5	13.5	10.6	1.9	25.0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1순위를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보육관련 교수/연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두 다수가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취약지역 균형 배치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았다.

4. 시사점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내외 환경 요인과 기본계획(안)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추진 전략 및 세부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저출생 현상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관 변화

와 부모의 역량 부족 등을 감안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 특히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가정양육지원 분야에서는 육아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에서는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보육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등의 과제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므로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양육지원 분야에서는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보육서비스 질 제고는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개편, 보육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 등의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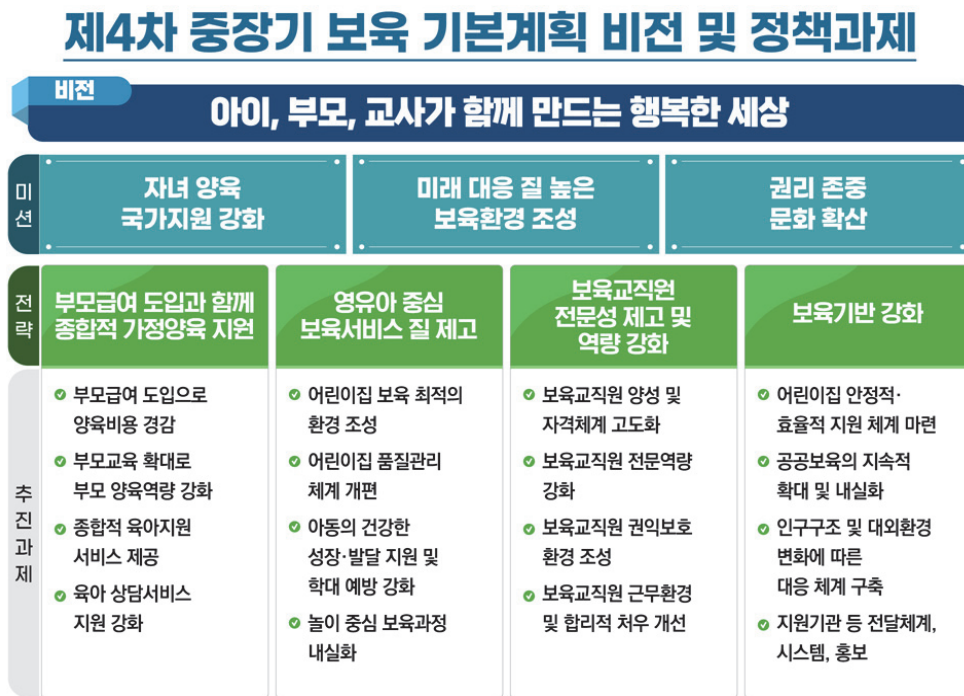
VI.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안)

제6장은 TF 운영과 1~3차 포럼 및 공청회, 학계 및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정리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였다.

1. 기본 방향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서는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안하였다.

[그림 VI-1-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기본 방향



제1차(2006~2010)와 3차(2018~2022)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추구’를 비전으로 삼았고, 아이사랑플랜(2009~2012)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아동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까지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비전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안)은 제1~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추구한 비전은 이어가되, 주 양육자인 부모, 보육교사도 행복하여야 아동이 행복할 수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육교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량을 발휘하여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미션으로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권리 존중 문화 확산’ 등 세 가치를 제안하였다.

우선, 정부는 그간 보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부모보다는 기관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기 또한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부모의 취업 여부, 가족 특성 등에 따라 영유아가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요인으로 저출생 현상 심화를 꼽았고, 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므로 보육 현장은 이를 대응해 나갈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질 높은 보육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아진 반면 보육 현장은 이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기후 변화와 4차 산업 혁명 등에 발맞추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②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④ 보육기반 강화 4가지를 제시하였다. 추진 전략 별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2. 세부 추진과제

가. 전략 1 :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전략 1.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육아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VI-2-1〉 전략 1.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1-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급여 도입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 육아물품 대여 인프라 확대
1-2.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어린이집 →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 아동 발달주기 기반 교육개발 제공 및 부모 책무성 강화
1-3.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놀이와 체험 지원 인프라 확대 - 육아지원 및 기관 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1-4. 육아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에 따른 검사 상담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 - 부모 자조기능과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지원 강화

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가) 부모급여 도입

새 정부는 부모급여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득 손실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차가 크고 영유아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유아 부모의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애 초기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는 만0세 월 70만원, 만1세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표 VI-2-2〉 부모급여 지원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만0세	월20만원	-	-	월30만원	-	월70만원	-	월100만원
만1세	월15만원		-	월30만원	-	월35만원	-	월50만원
만2세	월10만원		월10만원	-	월10만원	-	월10만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나) 육아물품 대여 인프라 확대

‘부모급여’ 도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영유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육물품 대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난감, 도서 등의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소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장난감, 도서 외에 아기침대, 식탁 의자, 승용완구, 차량 이용용품(유모차, 카시트),³⁶⁾ 백일·돌상용품 등 양육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대여 사업을 활성화한다.

2)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가)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정부는 교사이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돕고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 주도로 부모교육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지원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녀의 연령 및 발달주기, 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부모교육이 지원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임신육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2014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어린이집 입소대기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나,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치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집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36)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모차, 카시트 등을 대여하거나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표 VI-2-3〉 부모교육 확대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 내용	- 다부처 부모교육 자료 통합 및 아동발달 단계별 자료 개발	-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 다부처 부모교육 콘텐츠 통합 서비스 제공	- AI 활용한 자녀발달주기, 부모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양육정보 서비스

나) 거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어린이집 육성

부모교육이 정부 지원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부모교육이 대부분이며, 부모교육 참여율 또한 저조하다. 부모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연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양육지원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특성, 부모의 요구에 기반한 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다양한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을 거점 양육지원기관으로 육성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비롯한 부모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표 VI-2-4〉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 내용	- 거점 양육지원기관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거점형	- 거점 양육지원기관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민간가정 어린이집 거점형 확대	- 거점 양육지원기관 전국 확대 (시군구별 사업량 할당 및 확대)

다) 아동 발달주기 기반 교육개발 제공 및 부모 책무성 강화

부모 연령 및 요구에 기반한 부모교육 내용과 매체, 교육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자녀 발달주기(태내기,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초등전기 등)를 고려한 적절한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또한 부모 생애단계(산전, 초보부모, 동생 출산, 어린이집 입소 직전, 학교 입학 등)별로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는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모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3)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부모급여 시행에 따라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가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 부모의 취업 및 가족특성 등에 따라 단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간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용자가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종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요구에 따른 운영 모형³⁷⁾을 다양화한다.

〈표 VI-2-5〉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 내용	- 14개 시군구 - 120개소, 160개반	- 30개 시군구 - 200개반	- 50개 시군구 - 300개반	- 70개 시군구 - 400개반	- 100개 시군구 - 500개반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도자료.

나) 놀이와 체험 지원 인프라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현재 중앙 1개소, 시도 18개소, 시군구 108개소 총 127개소로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제한적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숲 체험, 생태놀이터³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인프라가 충분치 않다. 우선 영유아가 놀이와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영유아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놀이지도사를 양성 및 배치하며, 놀이터 안전지킴이 등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한다.

37)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2022년에 추진함. 어

38) 서울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숲놀이, 생태놀이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동행할수록 더 매력있는 서울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2888398218> 2022. 11. 30 인출)

다) 육아자원 및 기관 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정부 부처와 지자체마다 육아 자원과 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이 중첩되어 효율화가 필요하다.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특성별로 사업을 특성화하고,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4) 육아 건강·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가) 발달에 따른 검사·상담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발달 지연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출산으로 인한 장애 위험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발달지원을 위한 발달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달지체, 경계선 아동에 대한 진단 및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발달지연 스크리닝과 발달 심리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직접적 상담과 지역 내 지원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발달 검사-육아상담-치료와 교육의 연계가 순차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예방적 보편적 서비스로 건강검진 결과에 기반하여 발달지원 상담기관을 연계하고, 발달 및 전문적 중재 개입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치료교육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통적으로 육아상담 및 가정 육아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사례 관리의 양과 질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 및 배치하여 양육상담 및 사례관리,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다) 부모 자조기능과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지원 강화

부모들은 육아커뮤니티와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다수의 부모가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역기능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양육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아버지 자조모임, 조부모 자조 모임 등)을 구성 및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³⁹⁾ 등 지역사회 내 공동체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가. 전략 2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전략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VI-2-6〉 전략 2.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2-1.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 - 영유아 당 보육면적 확대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합리화
2-2.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율평가 도입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내실화
2-3.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장애아 대상 보육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
2-4.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 교육의 체계적 관리 - 보육과정 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표준보육과정 고도화 -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1)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가)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

그간 현장에서는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현장에서는 만0세와 만3세반의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줄이고,

39)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영유아-보육교사 간 질 높은 상호작용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이 시급하다.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시 보육료와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사업을 전 연령에 걸쳐 추진하기 보다는 만0세반에서 만1세반, 만3세반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적정 교사대아동비율 모형을 개발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한다.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요구가 높은 0세반과 장애아전담(통합)반 등 어려움이 많은 연령반을 시작으로 연령을 확대한다.

〈표 VI-2-7〉 교사대아동 비율 개선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 내용	적정 교사대 아동비율 모형 개발	1차 시범사업 추진 (만0세반(영영아), 장애아전담(통합)반 대상)	2차 시범사업 추진 (만0세반 확대)	본 사업

나) 영유아 당 보육면적 확대

어린이집 전용면적 및 보육실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보육 정원 산정 시 어린이집 내 전체 보육실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교사는 면적 산정 시 제외하므로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은 실제 면적기준보다 좁을 수 있다. 보육실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전용면적 및 보육실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기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시 보육실 면적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므로 신규 설치 어린이집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라는 이유로 2009년 이후 관계 법령보다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은 일반 법(소방법, 건축법 등) 규정 준용을 통해 합리화한다.

어린이집 내에는 수족구, 독감, 코로나19 등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별도 격리 조치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교사가 교육활동 준비 외에 행정사무 및 휴식 등

에 필요한 공간들이 부족하다. 어린이집 내 어린이집 면적, 정원 수 등 여건을 고려한 의무실과 교사의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휴게공간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놀이를 통한 영유아 발달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시 실내외 놀이터 적정 면적기준을 개선한다.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안)은 신규 설치 어린이집에 우선 적용하고 종전 어린이집 중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 용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표 VI-2-8〉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 내용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개선 용역 실시	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신규 설치 어린이집 적용	전체 어린이집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용자지원 사업)

2) 어린이집 품질 관리 체계 개편

가)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평가 고등급 어린이집 내에서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이슈로 제도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의 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문서 중심의 평가로 인한 현장의 업무 부담 또한 적지 않았다. 어린이집 평가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구조적 질에서 과정적 질 평가로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등과 중복되는 평가지표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설치운영 기준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서류를 통한 평가지표는 최소화한다. 단, 상시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표(예: 실내외 공간 청결성,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실내외 공간 및 시설설비 안전성 등)는 기존 지표를 유지하되 단편적인 평가(Y/N)에서 통합적인 평가로 전환한다.

〈표 VI-2-9〉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 개정 -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실시 (500개소, 하반기) - 현장평가자 교육 - 보육과정 컨설턴트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결과 기초로 평정기준(Rubric) 마련 - 우수 어린이집 선정 위한 평가기준 마련 - 2기 어린이집 평가제 추진(하반기)

나)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율평가 도입

어린이집의 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체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평가 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결과 외에 자체 평가결과, 부모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다)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내실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은 그동안 전문가와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영양안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왔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어린이집-가정 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타 어린이집이 아닌 재원 아동의 부모가 부모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한다.

〈표 VI-2-10〉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내실화 위한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지침 개정 -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정 - 부모 및 전문가 교육 - 2022년 미 실시 어린이집 우선 대상 실시 (전체 어린이집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모니터링 지표 개선 - 전국 어린이집 대상 실시 - 보육통합시스템 부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는 매년 전체 어린이집의 50% 정도를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과 함께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3)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장애 위험, 정서장애, 성행동 문제 등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증가로 보육 교사의 보육과정 운영 및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발달검사를 조기에 시행하여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상담, 치료 등을 요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교사가 장애 위험, 정서장애, 성행동 문제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을 조기에 선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유기농 및 친환경 식단에 대한 요구 등 영유아 건강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친환경 급식비를 고려하거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나) 장애아 대상 보육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장애영유아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장애아 보육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장애 위험 영유아를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확대·설치하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장애아 시설 및 설비 등을 추가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 처우 문제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 담당 교사를 교육하고 장애통합 등 시설의 인력을 지원하며, 장애아보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일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 교육을 확대한다.

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에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지속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보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자율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권익존중과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보육교직원 윤리 강령을 보급하고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아동학대 발생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자체 점검 활용을 통해 예방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4)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가) 표준보육과정 교육의 체계적 관리

표준보육과정 교육을 의무화한다. 표준보육과정 교육 이수율과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연동한다. 보육과정 교육을 강화한다. 놀이중심 보육과정 현장을 지원한다.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보육과정 AI 자료,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를 제작 및 제공한다.

나) 보육과정 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표준보육과정 고도화

보육과정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과정 컨설턴트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컨설턴트를 선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육과정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통해 보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유형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육과정을 컨설팅하고 학습공동체, 연구회 운영 등 교사를 지원한다.

다)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새 정부는 취학 전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표준보육과정(0-2세), 누리과정(3-5세), 초등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 연령별 놀이중심 연계 사례를 개발하고 영아용 놀이중심 보육프로그램을 개정한다. 만 5세 담당 보육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육(유아교육)-초등교육 연계 공동지침과 매뉴얼을 개발한다.

다. 전략 3 :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전략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VI-2-11〉 전략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3-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상향 개편 - 선임교사 도입 및 확대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3-2. 보육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맞춤형 보수교육 인정체계 마련 (보수교육 수강저축제 운영) - 보육교직원 교육 플랫폼 구축 - 미래대응 핵심직무역량 기반 보수교육 개편 - 보육교직원 직군 및 경력별 보수교육 운영 다각화
3-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 보육교직원 분쟁조정제도 마련 - 보육교직원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인식 확산 - 보육교직원 신체·심리 건강지원 확대
3-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대체교사 맞춤형보조인력 지원 확대 -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 직군별 단위업무 분석 및 표준화 - 보육교직원 수당 및 호봉체계 개편

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가)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상향 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직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은 유치원 원감 자격 기준에 준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도 유치원 원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원감 자격(1급+3년 경력+재교육)+3년 경력+재교육의 자격 기준(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별표1)을 갖춰야 한다.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승급교육 이수시간을 상향하여 유치원교사와의 승급교육 시수 격차를 해소한다. 보육교사 승급교육 이수 방식은 현행 시간채움이 수제에서 집중이수제로 전환한다. 집중이수제로 전환 시, 집중 휴가기간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부족한 일수는 승급 연수기간을 추가 인정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표 VI-2-12〉 보육교사 승급교육 이수 방식 개선(안)

현행	개선(안)
시간채움 이수제 (말, 평일 저녁 시간 등을 이용, 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근거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	집중이수제 (보육활동과 병행하지 않고, 방학 등을 활용한 일정 연수기간에 교육에만 집중하여 이수하는 방식)

나) 비담임교사 제도 도입 및 확대

현행 단순한 자격체계는 지각된 과잉자격⁴⁰⁾의 부정적 영향과 전문성 개발 기회 제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놀이중심 보육 과정 운영으로 교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수 전문성 요구가 증대되었다.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교사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하여 2급-1급-수석-(원감)⁴¹⁾-원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원 자격체계와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육교사 자격체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멘토 교사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비담임교사 자격체계를 도입한다. 교사 자격체계를 3급-2급-1급-원장에서 2급-1급-중간관리자(가칭: 비담임교사)-원장으로 개편한다. 또한 제도 도입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표 VI-2-13〉 비담임교사제 도입 및 확대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 내용	비담임교사제 모형 개발 연구용역 실시 (비담임 교사 역할과 권한, 책임, 자격 요건 등)	비담임교사제 시범사업 추진	비담임교사제 전체 어린이집 대상 실시

다)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교사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하여 학과제 경로로 양성되는 유치원교사와의 양성체계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⁴²⁾에 따라 보육교사 양성학과 최초 인정 조건 및 추진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보육교사 양성학과

40) 지각된 과잉자격(perceived over-qualification)은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질(교육,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을 의미한다(Erdogan & Bauer, 2009).

41)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음(유아교육법 제20조 1항)

평가인증기관을 설치하고,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정을 위한 평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학과 졸업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도입한다. 보육교사 양성 학과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제고 및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제를 도입 및 시행한다.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을 위해 최초 학과인정 완료 후, 해당 학과 대상 매 4년 주기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한다.

대학 중심의 학과제 양성체계 도입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보육교사3급 양성) 및 학점은행제교육기관(보육교사2급 양성)을 통한 보육교사 배출 경로를 제한한다. 보육교사교육원 및 학점은행제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한다.

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운영, 보육현장 수요 변화,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 개편을 추진 및 적용한다. 취약보육(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보육) 및 경계성 발달장애아 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에 관련 교육내용을 강화한다. 유치원 교사 수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에 교직원으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교직과정을 도입한다.

장애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과정을 개편 및 적용한다. 대면교육 중심으로 자격과정을 개편하여 보육교사 2급 양성기관에서 보육교사 2급 자격과정과 별도의 자격과정으로 운영하며, 국가자격증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2)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가) 보육교직원 맞춤형 보수교육 인정체계 마련

개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맞춤 형태(예. 맞춤컨설팅, 동료코칭/동료멘토링, 학습공동체 참여 등)의 보육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역 대학의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보육교직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수교육 인정체계를 마련한다.

보육교직원의 개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시간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수강저축제*를 운영한다. 다양한 형태의 보수교육 인정체계에 기반한 수강저축제 적용을 위해, 전국단위 보육이력통합관리시스템(가칭)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 후 전면 도입한다.

나) 보육교직원 교육 플랫폼 구축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을 위한 원격 교육이 가능하고, 개별 보육교직원별로 전체 필수 의무교육의 이수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의무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의무교육은 보육교사 1인이 연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하고, 최소 21개 교육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다) 미래대응 핵심직무역량 기반 보수교육 개편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 변화, 보육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핵심직무역량(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역량,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역량, 취약보육(장애아통합보육, 다문화보육) 역량, 디지털 활용 교수역량 등) 기반 보수교육 내용을 개편 및 시행한다. 미래경쟁력을 갖춘 보육교사 전문역량 함양을 위한 보육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직무역량 개발 연구를 선행 실시한다.

라) 보육교직원 직군 및 경력별 보수교육 운영 다각화

원장, 선임교사, 담임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연장반전담교사, 보조교사, 특수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등 직군별로 기초, 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선택이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선임교사 및 담임교사는 경력에 따라 필수선택 교육과정(3년 이내-기초과정, 3년 이상-심화과정, 5년 이상-전문과정)을 이수한다. 보육교직원 직군 및 경력별로 보육교직원에게 요구되는 핵심직무역량을 차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교육과정을 세분화한다.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가)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 전문가로서의 보육교직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교사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하여 교권 관련 법령에 근거한(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교사에게 보장되는 교육활동 자율권, 의

사에 반한 면직 금지권,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권, 징계 등에 대한 소송심사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권리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차원에서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보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대책과 어린이집에 특화된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법률·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원스탑고충상담창구(가칭)를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한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인력풀을 구성하여, 원스탑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나간다. 이 때, 고충민원 신청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나) 보육교직원 분쟁조정제도 마련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보육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보육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인식 확산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홍보 정책을 마련하고 실시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권리 존중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교사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교사권리 옴부즈퍼슨(가칭)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 특화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라) 보육교직원 신체·심리 건강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보육업무 특성 상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예. 독감예방접종)을 지정하고 비용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보육교직원의 감정노동 종사자로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 해결 및 심리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화된 심리건강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매 3년 주기로 정기 종합심리검사 실시 후, 심리건강 정상군/저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차별화⁴²⁾된 심리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가) 보조대체교사 맞춤보조인력 지원 확대

비담임 상근교사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 중심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중심 보육교직원의 교육 참여, 연차 휴가 사용 등을 보장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유능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지원을 활성화(∼'27)한다. 만족도 조사, 평가 등을 활용하여 담임교사 부재 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체교사를 확보한다.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 특수교사)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연계 청소, 교재교구 정리, 행정업무 등 어린이집 요구에 맞는 보조인력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활성화한다.

나)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보조교사 지원 활성화 및 비담임 상근교사 배치 의무화 추진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된 휴게시간 1시간 준수 및 실질적 사용⁴³⁾을 보장한다. 대체교사 확대 및 비담임 상근교사 배치 의무화를 기반으로 대체인력풀 및 대체인력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일괄 사용(예. 집중휴가기간)하지 않고 개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속 연수

42) * 고위험군 지원 로드맵 : 대상자 1회차 종합심리검사 실시 - (고위험군 분류) - 전문가 연계 상담 및 심리치료 의무 실시 - (종료) - 2회차 종합심리검사 실시

* 정상군 지원 로드맵 : 대상자 1회차 종합심리검사 실시 - (정상군 분류) - 심리건강 증진 프로그램 자율 참여

43) 근로시간 중 1시간 동안 관리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한다.

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정해진 일수만큼 연차휴가의 자율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및 휴가권의 실질적 사용을 보장하고, 효율적 실시 방안에 대한 노하우 공유 기회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노무관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다) 직군별 단위업무 분석 및 표준화

보육교직원 직군별로 단위업무를 분석하여 직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직군별 명확한 책임 및 권한 부여를 통한 업무효율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현장 실무 중심으로 보조교사, 대체교사, 연장반전담교사, 담임교사, 선임교사, 원장 등의 단위업무를 분석하며, 시범 적용 이후 직무 표준안을 제안한다. 어린이집 특성(규모)에 따라 권장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라) 보육교직원 수당 및 호봉체계 개편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장기근속수당을 국가지원수당으로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24~), 보육교직원의 처우 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단, 보육교사가 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속연한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보육교직원 초임호봉 확정 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수업연한*을 반영한 호봉 산정 체계를 도입하여 교육연한에 따른 합리적 처우를 보장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한다.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교사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하여 교육연한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급여 체계와의 격차를 해소한다. 전문대학은 2/3년, 대학교는 4년의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라. 전략 4 : 보육 기반 강화

전략 4.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어린이집의 합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공공보육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VI-2-14〉 전략 4. 보육 기반 강화

추진 과제	세부 추진내용
4-1. 어린이집의 합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비용 산출 세분화 및 고도화 통한 안정적 지원 추진 - 연장보육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운영 및 지원 기준 합리화 - 어린이집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 지원체계 강화 - 필요경비 제도 개선
4-2. 공공보육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 및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균형 배치 - 공공보육의 품질 향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책무성 강화와 공공형어린이집 중심의 민간영역 공공성 강화
4-3.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취약지역 내 어린이집 운영 개선 - 어린이집의 합리적 설차운영 기준 정비 - 어린이집의 소규모화 대응 위한 운영 지원
4-4.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육진흥원의 통합지원 기능 강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효율화 - 임신육아포털 고도화 및 홍보 강화

1) 어린이집의 합리적 재정지원 체계 마련

가) 표준보육비용 산출 세분화 및 고도화 통한 안정적 지원 추진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정책의 변화, 현장의 요구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표준보육비용 산출의 다양화를 통한 현장 밀착형 촘촘한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보육 정책 및 보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산출 모형(어린이집 규모)을 개발하고, 항목(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비, 시설비 등) 및 산출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보정하기 위해 매년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별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누적관리하여 정기 산출 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표준보육비용 소위원회’를 두어 산출결과를 심의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 연장보육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운영 및 지원 기준 합리화

기본과정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많으나, 인건비 등

의 운영비 지원기준과 운영기준 등의 한계로 운영을 기피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영유아가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형 보육 운영 및 지원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건비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2022년 기준 월 1,025천원이며(주 20시간), 이 외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1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운영일 관련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을 개정한다. 현행 어린이집의 운영일은 ‘주6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5일 이상’으로 개정하고 토요일보육을 휴일보육에 포함시키며 운영시간도 일요일, 공휴일과 동일하게 7:30~19: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한다.

〈표 VI-2-15〉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운영일 관련사항 개정(안)

현행	개정(안)
2. 어린이집의 운영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운영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1) 어린이집은 주 <u>5일 이상</u> ,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지원기준을 개정한다.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에 따라 기본보육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급간식비, 관리비 등)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지원기준(보육료, 인건비 등)을 마련한다. 연장형보육, 특히 야간보육 지정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인건비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다) 어린이집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 지원체계 강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비용구조가 상이하므로,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유형 및 규모, 정원충족률에 따른 세입세출 구조를 파악하여 안정적 지원구조를 마련한다. 원장 급여(기본급, 수당, 직책급 등)와 보육교직원 급여(기본급, 수당) 등 세부 지출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정 지출 사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보육통합시스템(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자료)과 어린이집 정보공시(세입세출 보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라) 필요경비 제도 개선

특별활동 등 필요경비 운영기준을 개선한다. 먼저, 특별활동 외 기타 필요경비 항목(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특성화 비용) 및 수납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특별활동과 시도 특성화비를 통합하고 운영기준을 개선한다.

〈표 VI-2-16〉 특별활동 외 기타 필요경비 항목 및 수납기준

현행		통합(안)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특별 활동비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특별 활동비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을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구입하는 교재교구비나 외부 강사가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 외부 강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시도 특성화비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자료: 보건복지부(2022). 보육사업안내.

특별활동 운영 내실화를 위해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한 업체 등록제를 운영한다.

2)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 및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균형 배치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60%를 달성한다.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에 기초한 신규 설치와 전환 및 장기임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을 발굴하고(예: 철도역사국공립어린이집, 오피스텔형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방식을 다변화한다. 농·어촌 지역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표 VI-2-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연차별 추진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추진내용	450개소	450개소	450개소	450개소	-

주: 장래인구 추계 자료 활용하여 재산정 예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지역별로 균형있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배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보육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지역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의 폐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폐합한다.

나) 공공보육의 품질 향상

공공보육의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신규 설치, 전환, 장기임차 국공립어린이집별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7년 이전 인가 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대상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방분권형 공공보육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국보육진흥원과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협력 모형을 추진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을 공공보육 품질 향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한다. 유아반 인건비 지원 기준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유아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현원 기준 반영 방식을 개선한다. 현원 3세반 8명 미만, 4세반 11명 미만 유아반의 교사 인건비 미지원 기준 대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반별 운영비 지원(안) 기준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취약보육 요구에 대응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실행력을 제고한다. 취약보육 개념의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 대상을 발굴한다. 토요보육, 환아보육 등 신규 취약보육 유형 발굴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별 취약보육 수요조사 실시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운영모집 공고 시 지역내 필요 취약보육을 명기한다. 그리고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아보육을 위한 기본설비 의무화 및 구축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련 기능을 보강한다. 전환 또는 장기임차 어린이집의 시설 현행화 과정에서 장애아보육 관련 시설설비 보강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취약보육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및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체계를 강화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

및 담당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지원 기능을 부여한다. 농산어촌 및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 소재 센터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보육을 지원(어린이집과 유관기관 연계형, 언어발달지원 집중 지원형, 통합사례관리형 등)한다.

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책무성 강화와 공공형어린이집 중심의 민간영역 공공성 강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기관보육료 외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고, 그 비율이 전체 수입의 40~50%를 차지하므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체계적인 회계관리를 통해 재무 회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회계시스템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이 회계관리 실무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원장 대상의 재무회계교육을 수준별로 다양화하고, 어린이집 유형별 맞춤형 회계 컨설팅(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회계증빙서류 미비 개선을 위한 관련 내용 등), 지역 내 순회 컨설턴트 등을 지원한다. 거짓 등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된 회계 적발을 위해 특별 조사를 정례화하고 고의적인 허위등록, 부정수급, 월급반환 등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열린어린이집이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체화한다.

지방분권화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신규지정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을 고도화한다. 운영비 산정 및 지급방식의 전면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로 구분된 운영비 지원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위한 방문컨설팅 및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및 컨설팅 의무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 사각지대 예방

가) 보육취약지역 내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역 특수성,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특수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개선하여 어린이

집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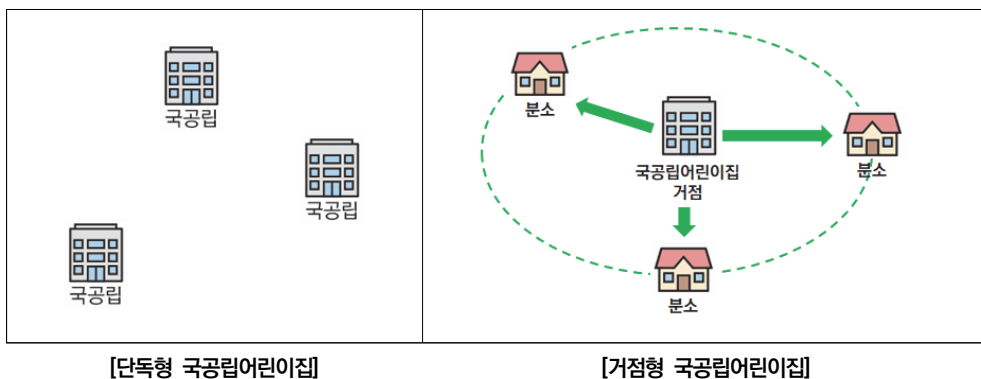
지역의 보육환경 진단 및 보육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지역별 보육수요, 보육서비스 공급의 양적 및 질적 충분성, 서비스 이용의 편이성 등을 평가하여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발굴한다.

농산어촌 등 영유아 인구 희소지역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육취약지역 중 영유아 인구 희소지역 거주 외국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확보 및 해당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한다.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을 포함하고, 수탁하는 공공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내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또는 전담인력을 필수 설치하도록 한다.

단위 어린이집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프라를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분소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원장 등 인력배치 기준, 급간식 조리, 어린이집 평가 및 부모모니터링,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등 제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화천시와 정선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화천시는 소규모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을 활용, 이를 국공립 화천어린이집 분소로 설치하여 간동분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VI-2-1] 영유아 희소 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모델



나) 어린이집의 합리적 설치·운영 기준 정비

어린이집 운영상 최소한의 효율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비한다. 어린이집의 인가 최소 정원을 국공립어린이집은 21인, 직장과 가정어린이집은 11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장기임차 가정어린이집은 최소 정원 기준에서 예외로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시 1개 이상의 유아반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로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립유형별로 정상적인 운영과 최소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최소 규모를 산출하고, 자발적인 폐원 결정 시 퇴로를 마련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어린이집 운영을 단독 목적사업⁴⁴⁾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설치와 재정지원, 종사자 자격 등의 운영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사회복지법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의 사회복지법인에 어린이집을 단일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부합하지 않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다룰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관 변경을 통해 초등 돌봄, 노인 돌봄 등의 사업으로 목적사업 추가 또는 변경 시 리모델링비와 설치비를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재산 귀속 관련 규정을 추가한다.

다) 어린이집의 소규모화 대응 위한 운영 지원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즉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규모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폐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할 경우 보육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운영관리 컨설팅, 교사교육, 표준보육과정 공동 편성운영, 부모교육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보육교사 역량 강화, 업무 부담 경감, 규모의 경제 및 공유경제 실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보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표준화하고 어린이집 간 자체 협력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

44)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중 83.0%(‘22년 8월 기준 전체 1,271개소 중 1,056개소)가 단독 법인에 해당된다.

폐원 희망 어린이집 대상 조정 가능한 대안 마련을 통해 지역내 보육서비스 수급을 조절한다. 폐원 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 또는 지역 돌봄시설(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로 전환하여 활용하거나, 폐원 희망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 외에 폐원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를 매입하여 인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및 도서대여점, 아동보호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기부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공공성 및 역량강화 재교육을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을 지원한다.

3. 맺는 말

본 연구는 대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부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각계 요구를 반영하여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를 살펴보고, 지난 5년 간 영유아 인구 및 보육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장래 보육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국내외 보육 및 양육 관련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비전, 정책 목표, 추진 전략,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최종안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고찰하고, 인구 및 보육교육 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자녀양육 및 보육제도 중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살펴보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였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보육 관련 공무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3차에 걸쳐 포럼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부모 등으로 자문회의 및 간담회 구성하여 정책 과제별 요구 및 제안, 조사표 검토 및 분석 방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의 비전으로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

상'을, 미션으로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권리 존중 문화 확산' 등 세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①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②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④ 보육기반 강화 4가지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5년 마다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본 연구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과제들은 보완하고, 저출생 심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 및 어린이집 폐원 증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계획에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7개 시도교육청(2020). 내부자료.
- 경기도(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 권기남(2022).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능하고 존중받는 보육전문가’ 양성.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권미경·문무경·김영민(2019).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 방안 연구(I): 육아문화 분석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이강근(2016). 이스라엘의 육아정책.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김명순·신윤승·이세원·서재화(2016). 영유아교사 전문성 관련체제 고찰: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 김미정·배성현·임예슬(2021). 경기도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인력 운영 매뉴얼 개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김진석(2018).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월간 복지동향, 233, 47-52.
- 대전광역시(2020). 보육사업안내.
- 도남희·이정원·박진아·김동훈·신나리·정유나·김태우(2021). 세종특별자치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세종특별자치시·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양미선·송기창·김문정(2021).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혜·전홍주·차기주·박신영·김교령(2019).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외사례 및 개선과제 연구.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박창현·조숙인·정영식·윤지연(2021).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영유아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배성현(2022). 사각지대 없는 보육·양육환경 조성: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미래 보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 변선영·황해익·이강훈(2020).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평가 연구. 2020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47-252.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2009-2012).
- 보건복지부(2021).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
- 보건복지부(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8).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보건복지부(2019). 어린이집 현지조사 지침.
- 보건복지부(2019, 2020, 2021, 2022).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2020). 어린이집 일람 현황
- 보건복지부(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 보건복지부(2021).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 보건복지부(2021). 보육정책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22).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2). 영아수당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 2018).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 통계.
- 보건복지부(2021). 2005-2020년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실적 내부자료.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 실태조사-가구조사.
- 김은설·최윤경·권미경·최효미·김나영·김자연·박은영(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 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보육 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시간제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1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서울 동작, 전남 광양(2020). 사업안내 공고문.
- 서울특별시(2022).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관련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2022).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관련 내부자료.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2). 우리동네 보육반장 추진 계획 내부자료.
- 서울특별시 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34400/d2_34500.jsp 2022. 4. 10. 인출.
- 서초구(2021).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내부자료.
- 아동권리보장원(2020). 내부자료.
- 양미선(2022). 보육·유아교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제3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자료집.
- 양미선·김나영·박은정·오미애·송신영(2022).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발간 정).
- 양미선·이윤진·김동훈·조숙인·김근진·구자연·오미애·김문정(2021). 2021년 전국보육 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05). 새싹플랜(2006-2010).
- 유해미·강은진·권미경·박진아·김동훈·김근진·김태우·이유진·이민경(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
- 육아정책연구소(2021). 2020 영유아 주요 통계.
- 육아정책연구소(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안) 수립 위한 3차 포럼 자료집.
- 이경인·김은숙·양다교·김명찬(2017). 유보통합에 대비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고

- 찰: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3), 151-180.
- 이미화·여종일·엄지원(2012). 2013~2017 보육 중장기 발전방향.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인천광역시(2020). 2020년도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안내.
- 장혜진(2020a). 뉴질랜드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신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1387-1410.
- 장혜진(2020b). 한국과 호주의 유아교육기관 평가지표 비교: 건강과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0(3), 131-157.
- 조막래·안현미·이혜숙(2022). 서울시 제 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조용남(2020). 보육교사 권익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차기주·박은혜(2019a). 미국 유아교육과 보육 종사인력의 자격과 학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6(1), 245-273.
- 차기주·박은혜(2019b). 미국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역사 및 유형이 국내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4(3), 25-49.
- 통계청(2021).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7, 2018, 2019,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한국교통안전공단(2020).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통계연보.
- 한국보육진흥원(2021).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내부자료.
- 행정안전부(2017, 2018, 2019, 2020, 2021). 주민등록인구.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2020).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Sydney: ACECQA.

European Commission/EACEA/Eurydice. (2021). Teachers' and school heads' salaries and allowances in Europe-2019/20. Eurydice Facts and Figur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McLean, C., Austin, L. J. E., Whitebook, M., & Olson, K. L. (2021). Early Childhood Workforce Index-2020. Berkeley, CA: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trieved from <https://cscce.berkeley.edu/workforce-index-2020/report-pdf>.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9). NAEYC 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ssessments items. Washington, DC: NAEYC.
- National Survey of Early Care & Education. (2021). Center-based early care and education providers in 2012 and 2019: Counts and characteristics. IL: National Survey of Early Care & Education.
- Heckman, J. (2000)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Research in Economics*, 54(1), 3-56.
- OECD(2011).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CEC – Action area 2: Broadening perspective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 UNESCO(2018). UNESCO ICT competency framework for teachers.

【웹사이트】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주민등록인구(2017, 2018, 2019, 2020, 2021), 장래인구통계(중위가정), 경제활동인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KOSIS,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4&dbUser=NSI_IN_350, 2022 0223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2008, 2009, 2010, 2011).
- 뉴질랜드 Ministry of Education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people-and-employment/professional-development-in-early-learning> 2022. 11. 9. 인출.
- 덴마크 Fars-legestue, <https://www.farforlivet.dk/activity/fars-legestue-noerrebro> 2022. 11. 7. 인출.
- 덴마크 Fars-legestue, <https://www.farforlivet.dk/aktiviteter> 2022. 11. 7. 인출.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american-families-plan/> (2022. 11. 7. 인출.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wlfareInfoReldBztpCd=01> 2022. 4. 9. 인출.

서울특별시 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34400/d2_34500.jsp 2022. 4. 10.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소개. https://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SITE_ID=FRONT&SEQ=16 2022. 4. 20. 인출.

여성가족부(2022).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소개. https://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SITE_ID=FRONT&SEQ=16 2022. 4. 20. 인출.

일본 후생노동성(2021). 新子育て安心プランの概要(신육아안심플랜의 개요). <https://www.mhlw.go.jp/content/11920000/000717624.pdf> 2022. 11. 20. 인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공통 부모교육(자료집 보급, 비대면 교육, 화상 교육, 대면 교육).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지원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놀이실(체험실) 이용 현황.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 지원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양육상담 현황.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지원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자체부모교육.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통계>가정양육지원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장난감 및 도서 대여서비스 현황.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가정양육지원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40000/d1_600064/d1_600066.jsp.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21). 2020년 클로버 부모교육. 센터지원>센터운영지원>전국센터 사업별 통계> 가정양육지원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ccef/com>

- 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 중앙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4/d1_40012.jsp 2022. 4. 9. 인출.
- 중앙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4/d1_40012.jsp 2022. 4. 9. 인출.
- 중앙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7/d1_600068.jsp 2022. 4. 9. 인출.
- 중앙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7/d1_600068.jsp 2022. 4. 9. 인출.
- 충남형 부모교육 이력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cnbumo.or.kr/main/index.php>
- 통계청 홈페이지.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홈페이지. <https://www.aqf.edu.au/framework/aqf-qualifications>. 2022. 11. 5. 인출.
- CDC's Milestone Tracker App. https://www.cdc.gov/ncbddd/actearly/milestones-app.html?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2022. 11. 7. 인출.
- Council for Professional Recognition. <https://www.cdacouncil.org/en/education-pathways> 2022. 10. 31. 인출.
- Milestone Tracker App checklist. <https://www.cdc.gov/ncbddd/actearly/milestones/checklist/2-Month-Checklist-form.html> 2022. 11. 7. 인출.
- Milestone Tracker App checklist. <https://www.cdc.gov/ncbddd/actearly/milestones/checklist/2-Month-Checklist-form.html> 2022. 11. 7. 인출.
- Ministry of Education 홈페이지. <https://www.education.govt.nz/early-childhood/people-and-employment/professional-development-in-early-learning>. 2022. 11. 9. 인출.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19). NAEYC early learning program accreditation standards and assessments items,

p. 86. Washington, DC: NAEYC.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Pathways Map ECE qualifications version 2 (2021).

<https://www.nzqa.govt.nz/assets/qualifications-and-standards/qualifications/Early-Childhood-Education-quals-review/Pathways-Map-for-ECE-qualifications-v2-April-2021.pdf>. 2022. 11. 6. 인출.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Understanding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Framework <https://www.nzqa.govt.nz/qualifications-standards/understanding-nzqf/#heading2-0>. 2022. 11. 6. 인출.

NZQA 홈페이지. <https://www.nzqa.govt.nz/qualifications-standards/understanding-nzqf/#heading2-0>. 2022. 11. 6. 인출.

NZQA 홈페이지. Pathways Map ECE qualifications version 2 (2021) and version 1 (2016). <https://www.nzqa.govt.nz/assets/qualifications-and-standards/qualifications/Early-Childhood-Education-quals-review/Pathways-Map-for-ECE-qualifications-v2-April-2021.pdf> 2022. 11. 6. 인출.

OECD Family Database.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OECD Family Database. SF2.1. Fertility rates. <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OECD. Family Database. PF4.2: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Te Whāriki 홈페이지. <https://tewhariki.tki.org.nz/en/webinars-and-workshops>. 2022. 11. 9. 인출.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ective Agreement of Aotearoa New Zealand 2020-2021. PDF 문서. https://www.nzei.org.nz/UploadedFiles/ECECA_2020-2021.pdf. 2022. 11. 6. 인출.

Tip-Taf. <https://www.tip-taf.com/#!english/c1fj4> 2022. 11. 4. 인출.

Victoria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Educators Agreement 2020 PDF 문서. <https://elaa.org.au/wp-content/uploads/2021/04/Victorian-Early-Childhood-Teachers-and-Educators-Agreement-2020.pdf>. 2022. 11. 3. 인출.

【신문기사】

- 연합뉴스(2021. 5. 24). “어린이집 교사 75% ‘코로나19로 아동 언어발달 지연’”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6769> 2022.10.23. 인출.
- 이데일리(2022. 2. 23).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또 사상 최저’…인구절벽 가속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82886632233472&mediaCodeNo=257> 2022.10.23. 인출.
- 연합뉴스(2018.10.31). “사립유치원 비위 건수, 국공립보다 10배 많아…엑수는 263배” <https://www.yna.co.kr/view/AKR20181031079551001?input=1195m> 2022.10.23. 인출.
- 세계일보(2020.01.14). ‘유치원 3법’ 통과…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될 듯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113515162?OutUrl=naver> 2020.10.23. 인출.
- 연합뉴스(2019.02.28). 한유총 사실상 '집단휴원' 선언…맞벌이 가정 '보육대란'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25500004?input=1195m> 2022.10.23. 인출.
- 조선일보(2020.6.25). “안산 유치원 2곳서 식중독 109명… 14명 햄버거병 증세”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369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2.10.23. 인출.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0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부록

부록 1. 시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부록 2. 부록 표

부록 3. 2차 포럼 토론문

부록 4. 3차 포럼 토론문

부록 5. 전문가조사 조사표

부록 1. 시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 이후 수립)

〈부록 표 1-3-1〉 시도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	제 5차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	대구광역시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0~2024)	제1차 대전시 아이돌봄 기본계획(2021~2025)
비전: 다 함께 키우고 함께 누리는 서울보육 정책목표 · 영유아 중심의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권 보장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	비전: 인천, 보육가치 높이고 보육신뢰 높이고! 정책목표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현장 · 지역사회 중심 민·관 보육 협력	비전: 대구, 아해(兒孩)를 품다 정책목표 · 영유아의 안전을 품다 · 부모의 마음을 품다 · 보육교직원의 보람을 품다	비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전 정책목표 · 온돌 네트워크 구축 · 수요별 공적돌봄 확대 ·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 온돌 문화 확산
과제 1. 영유아 중심의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1-1 영유아 중심, 놀이중심 보육의 내실화 1-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1-3 취학아동 조기발견 체계 마련 및 전문 자원 강화 1-4 어린이집 감염병 위험 대응력 체계화 과제 2.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보육의 질 제고 2-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질 관리 체계 마련 2-2 운영주체의 공공성 강화 및 확산 2-3 어린이집 공적인력 지원체계 강화 2-4 부모 참여 내실화 2-5 영유아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과제 3.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강화 3-1 보육교사 직급체계 도입 3-2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3-3 보육교직원 일-생활 균형 지원 내실화 3-4 보육교직원 건강권 보장 강화 3-5 보육교직원 소통채널 도입 과제 4.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 4-1 가정양육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완화 4-2 긴급보육지원 서비스 확대 4-3 마을단위 공동육아 지원 확대 4-4 인권존중 보육환경 내실화 4-5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과제 1. 영유아 놀 권리 보호 1-1 영유아 특화 놀이/문화체험공간 확충 1-2 자연친화 생태체험 기회 확대 과제 2.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 2-1 틈새제로(Zero) 맞춤형보육서비스 내실화 2-2 장애영유아 맞춤형보육 서비스 체계 개선 2-3 다문화 및 외국인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과제 3. 부모 양육역량 제고 3-1 가정양육 지원 체계 확립 3-2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3-3 부모역량 강화 과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4-1 보육의 공공자원 확대 및 확충 4-2 어린이집 운영 지원 효율화 4-3 보육서비스 질 관리 과제 5. 아동학대 대응체계 효율화 5-1 아동학대 예방환경 조성 5-2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환경 조성 5-3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강화 5-4 피학대아동 사후 관리 체계 구축 과제 6. 영유아 안전환경 조성 6-1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강화 6-2 안전보육환경 강화 과제 7.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7-1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내실화	과제 1.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1 공공보육시설 확충 1-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성 강화 1-1-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1-1-3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1-2 지붕있는 놀이터 조성 1-2-1 지붕있는 놀이터 조성 1-2-2 아이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기반 구축 1-3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1-3-1 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 1-3-2 우수 보육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1-3-3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과제 2. 자녀양육을 책임지겠습니다 2-1 부모양육 부담 경감 2-1-1 유아 차액 보육료 지원 2-1-2 가정양육수당 지원 2-1-3 부모 추가비용 경감, 특별활동비 2-2 취약보육지원 확대 2-1-1 장애아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 2-1-2 다문화 영유아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 2-1-3 취약계층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2-3 다양한 돌봄서비스 연계 2-3-1 시간제보육 서비스 강화 2-3-2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2-3-3 아이돌봄연계 서비스 연계 2-4 부모참여기회 확대	과제 1. 온돌 네트워크 구축 1-1 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랫폼 '대전아이' 구축 1-2 대전형 아이돌봄 '가점온돌방' 조성 1-3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1-4 아이돌봄협의회 운영 과제 2. 수요별 공적돌봄 확대 2-1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설치 2-2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2-3 아이돌봄지원 서비스제공기관 확대 2-4 아이돌봄미 인력 확대 2-5 대전형 시간제보육 운영 과제 3.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3-1 돌봄활동가 양성 및 파견 3-2 아이돌봄미 역량 강화 3-3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3-4 온돌연구회 운영 3-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6 창·체합형 프로그램 개발 3-7 스마트돌봄 기반시설 구축 과제 4. 온돌 문화 확산 4-1 돌봄공동체 형성 및 지원 4-2 온돌 공유대회 개최 4-3 온돌 시민참여단 운영 4-4 온돌 돌봄봉사단 운영 4-5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	제 5차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2022~2026)	대구광역시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0~2024)	제1차 대전시 아이돌봄 기본계획(2021~2025)
체계 구축	7-2 보육교직원 교육 접근성 다양화 7-3 미래형 보육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과제 8. 보육교직원 일-생활 균형 실현 8-1 보육교직원 임금체계 개선 8-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8-3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 과제 9. 보육교직원 권리 보장 9-1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강화 9-2 보육교직원 건강권 보호 과제 10. 육아지원 협력체계 확립 10-1 민·관 보육협력 소통체계 활성화 과제 11. 육아종합 자원센터 기능 강화 11-1 시 육아종합자원센터 역할 확대 11-2 구 육아종합자원센터 확충 과제 12. 종합육아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12-1 종합육아 정보제공 시스템 활성화 12-2 육아정책 홍보 활성화	2-4-1 지역사회 부모교육 활성화 2-4-2 스마트 양육정보 제공 2-4-3 열린 어린이집 참여 활성화 과제 3.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3-1-1 수요자 중심 보육교직원 교육 3-1-2 보육교직원 공동체 지원 3-1-3 아동학대 예방 및 인성교육 강화 3-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3-2-1 보육교직원 인건비 현실화 3-2-2 대체·보조교사 지원 확대 3-2-3 보육교직원 심리정서 지원 3-3 안심보육 컨설팅 활성화 3-3-1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른 지원 3-3-2 상시 보육 컨설팅 활성화 과제 4.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 안심 보육환경 조성 4-1-1 보육환경 개선 지원 4-1-2 연령별 건강·급식 위생 관리 강화 4-1-3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4-2 어린이집 운영 건전성 제고 4-2-1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4-2-2 보육정보시스템 운영 4-3 보육지원체계 내실화 4-3-1 육아종합자원센터 확충 4-3-2 보육행정인력 확충 및 전문화	

세종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2021-2025)	제4기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 (2022-2026)	충청북도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2022-2026)
비전: 아이와 부모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세종 정책목표 · 공공보육 강화 · 보육품질 개선 · 부모 양육지원 확대 · 유·보 연계 운영 강화	비전: 행복한 아이 믿음직한 강원보육 전략목표 · 질 높은 보육환경과 서비스 제공 · 부모와 아동의 욕구를 지향하는 탄력적인 운영	비전: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존중 받는 보육 실현 정책목표 · 보육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 공보육 기반 강화 및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 육아 친화적인 문화 및 인프라 활성화 · 보육교사가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조성
과제 1. 공공보육 내실화 1-1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강화 1-2 공공보육 위탁운영 표준화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모델 개발 과제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1 생활권별 거점 신축 2-2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전환 2-3 장기임차 방식 전환 과제 3. 어린이집 환경개선 3-1 노후시설 리모델링 강화 3-2 어린이집 시설·보강비 지원 과제 4. 교사 근무환경 개선 4-1 교사 업무부담 경감 4-2 교사 상담·힐링 지원 확대 과제 5. 교사 역량강화 5-1 교사 재교육시스템 구축 5-2 내부 장학시스템 구축 과제 6.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 6-1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6-2 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6-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과제 7. 지역사회 육아인프라 균형 발전 추진 7-1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7-2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7-3 읍면지역 영유아-부모 문화시설 확충 과제 8.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양육환경 구축 8-1 공공 정보제공 플랫폼 활성화 8-2 수요자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8-3 부모를 위한 육아멘토 육성 및 지원 과제 9.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9-1 시간제보육 활성화 9-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9-3 취약보육지원 강화 과제 10. 유·보 관리·운영 주체 연계 강화 10-1 유·보 연계 협의회 활성화 10-2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수급계획 조사·운영 과제 11. 교사 연수 연계 강화 11-1 누리과정 공동 우수사례 발굴 및 공동 교사연수 추진 11-2 유·보 연계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과제 1. 보육 인프라 구축 및 공공성 강화 1-1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지원 1-1-1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1-1-2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환경 개선 1-1-3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및 운영 지원 1-2-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확대 및 운영지원 과제 2.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2-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1-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1-2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2-2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 2-2-1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2-2-2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2-3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2-3-1 보육교직원 재교육 지원 과제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3-1 취약 보육 지원 강화 3-1-1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3-1-2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 3-1-3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3-2 보육의 탄력성 제고 3-2-1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 지원 3-2-2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3-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3-3-1 도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3-3-2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 3-3-3 어린이집평가 지원 3-3-4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3-3-5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지원 과제 4. 보육 부담 경감 4-1 가정 외 보육 부담 완화 4-1-1 보육료 지원 4-1-2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4-1-3 저소득가정 어린이집 추가 비용 지원 4-2 가정 내 보육 부담 완화 4-2-1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지원 과제 5. 신뢰와 안전성 제고	과제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구조 개선 1-1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 모니터링 1-2 지역교육청의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어린이집 재원아 수 필수 고려 1-3 외국인 영유아 대상 보육료 지원 과제 2. 보육환경(물리적, 정책적)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2-1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지원 2-2 충북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2-3 감염병 확산 시 대응력 강화 2-4 기후변화 대응 과제 3. 스마트 보육지원 시스템 구축 3-1 보육교사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3-2 육아정보종합 제공 및 홍보 시스템 활성화 과제 4.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보육 내실화 4-1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질 관리체계 마련 4-2 정원 미충족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목적사업 변경 기준 완화 4-3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 과제 5. 안심보육 확대 5-1 노후 CCTV 교체 5-2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5-3 안전 관련 정기적 점검 수수료 지원 5-4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이수율 편이성 제고 과제 6.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6-1 현장으로 찾아가는 개별 컨설팅 6-2 지역사회 내 보육과정 학습공동체 활성화 6-3 영아 보육과정 운영지원비 지원 과제 7.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7-1 어린이집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7-2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과제 8. 전달체제로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8-1 충청북도 및 시군 육아종합 지원센터 간 역할 고도화

세종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2021-2025)	제4기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 (2022-2026)	충청북도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2022-2026)
과제 12. 인프라 공유체계 구축 12-1 어린이 체험교육원 설치·운영 12-2 부모교육 연계 강화	5-1 부모 참여를 통한 신뢰 구축 5-1-1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및 지도점검 강화 5-1-2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5-2 안심투명보육 환경 조성 5-2-1 영유아 정신건강 및 발달장애 지원 5-2-2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도입 5-3 아동 안전권 강화 5-3-1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계가입 지원 5-3-2 교사·부모·아동 대상 아동권리 교육 확대	과제 9. 가정 내 양육 보호자의 육아 부담 완화 인프라 확충 9-1 지역 내 실내놀이터 설치 및 영유아 전용 복합공간 마련 9-2 도내 창의놀이터 설치 과제 10.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비용 부담 경감 10-1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10-2 유아 입학준비금 지원 과제 11. 수요자 맞춤형 보육 내실화 11-1 시간제보육 이용 방식에 따른 운영 다변화 11-2 등원 후 유증상 영유아의 돌봄체계 마련 과제 12. 부모의 양육 역량 제고 12-1 영유아 권리 존중에 근거한 놀 권리 교육 및 홍보 12-2 취약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서비스 확대 과제 13. 보육교사의 권리 신장 13-1 보육사업분쟁조정위원회(안) 설치 13-2 「보육교직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13-3 보육교사의 안전공제회 공제로 지원 과제 14. 보육교사의 적정 배치 14-1 영아 보조교사 확대(단기) 14-2 충북형 비담임교사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장기) 과제 15. 보육교사의 직업윤리 및 직무능력 고양 15-1 부적응 영유아를 위한 긍정적 행동 코칭 역량 강화 15-2 소집단 및 방문 중심의 교육 활성화

충청남도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1-2025)	경상남도 2022년 보육정책	경상북도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
비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목표 ·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모두가 만족하는 충남형 보육 · 3~5세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	비전: 함께 키우는 행복한 경남보육 정책목표 · 수요자 맞춤 보육 서비스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안심보육 환경 조성	비전: 행복한 아이, 지속가능 보육 정책목표 · 아이·부모·교직원 역량 강화 · 보육서비스 질적 가치 제고 · 공보육 기반 지속적 강화 · 스마트한 보육 지원 시스템
과제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1-1 만3~5세 단계적 무상보육 1-2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1-3 소규모 연합어린이집 설치 지원 1-4 공보육 시설 확충(국공립) 1-5 취약보육 지원(장애, 다문화) 과제 2.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2-1 어린이집 안전관리체계 구축 2-2 깨끗한 숨, 건강한 먹거리(로컬푸드) 지원 2-3 아동학대 없는 행복한 어린이집 2-4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과제 3. 영유아의 건강성 성장 지원 3-1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3-2 아동 발달평가 지원 3-3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자연놀이돌) 3-4 작은놀이돌 지원 보급 3-5 아동건강관리 지원 (소아당뇨 등) 과제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4-1 누리과정 컨설팅 및 표준보육과정 교육 4-2 영아전담 보육교사 역량강화 지원 4-3 보육 인식개선 사업 4-4 보육교직원 심리정서(힐링) 지원 4-5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 체계 개선 과제 5. 가정양육 자원체계 강화 5-1 가정 양육수당 지원 5-2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돌봄 지원 - 24시간제, 시간연장, 아이돌봄 등 서비스 연계 5-3 충남형 부모교육 추진 (부모교육 스마트 이력제 구축) 5-4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과제 1. 보육비용 경감을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지원 1-1 영아수당 지원 1-2 가정양육 수당 지원 1-3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과제 2.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2-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기능보장 지원 2-3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4 열린어린이집 및 부모모니터링단 2-5 수요자 맞춤형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2-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과제 3.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3-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3-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강화 3-3 냉난방비 지원 3-4 취사원 인건비 지원 3-5 안전보험료 지원 3-6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3-7 영아반 운영활성화	과제 1. 영유아 개별 맞춤보육 1-1 영유아 권리 존중 실천 1-2 영유아 개별화보육 프로그램 1-3 영유아 발달 체크 및 상담 지원 과제 2. 부모의 육아 역량 개발 2-1 주제별 부모교육 강화 2-2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2-3 자녀 양육상담 지원 2-4 SMART부모 교육과정 운영 과제 3. 교직원 핵심 역량강화 3-1 원장 역량강화 교육 3-2 교사 역량강화 교육 3-3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과제 4. 표준보육과정 자율적 운영 활성화 4-1 영유아·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지원 4-2 교수·학습 환경 개선지원 4-3 인성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과제 5. 경북형 SMART 어린이집 확대 5-1 SMART교사 전문과정 운영 5-2 경북형SMART어린이집 선정 운영 과제 6. 어린이집 자율적 질 관리 체계구축 6-1 어린이집 평가제 수행 자립화 6-2 어린이집 질 관리 개선기법 보급 6-3 총체적 보육 질 관리(TQC) 컨설팅 지원 6-4 어린이집 자율적 질 관리 사례공모 과제 7.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7-1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7-2 가정양육수당 지원 7-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과제 8. 보육인프라 확충 8-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2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8-3 장난감 도서관 확대 과제 9. 수요자 맞춤지원 9-1 맞벌이 부모 지원 9-2 장애아·다문화 보육 이용편의 제공 9-3 시간제 보육 내실화 과제 10. 안심보육환경 전문화 10-1 건강 및 영양관리 강화 10-2 환경 개선 기능보강

충청남도 제4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1-2025)	경상남도 2022년 보육정책	경상북도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
		<p>10-3 아동학대 및 성행동 문제 예방관리</p> <p>과제 11. 시설운영 투명성 제고 11-1 열린어린이집 참여 활성화 11-2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지원</p> <p>과제 1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2-1 대체교사 확대 지원 12-2 보육인력 지원 12-3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12-4 보육교직원 직무 상담 지원</p> <p>과제 13. 보육서비스 전문화 추진 13-1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적정화 13-2 다양한 보육 콘텐츠 개발 보급 13-3 지역사회 전문기관 NET-WORK 활성화</p>

부록 2. 부록 표

〈부록 표 II-2-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개 추진 과제 중 목표 달성 미흡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계(수)
전체	21.7	26.9	20.8	30.7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2.2	25.9	21.3	30.6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1.2	27.9	20.2	30.8	100.0(104)
χ^2 (df)	0.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II-2-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4개 추진 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계(수)
전체	19.3	23.6	27.8	29.2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1.3	26.9	23.1	28.7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7.3	20.2	32.7	29.8	100.0(104)
χ^2 (df)	3.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II-2-3〉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계(수)
전체	9.0	37.3	17.9	35.8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0.2	27.8	26.9	35.2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7.7	47.1	8.7	36.5	100.0(104)
χ^2 (df)	15.5(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1$

〈부록 표 II-2-4〉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로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이용률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계(수)
전체	9.9	32.5	16.5	41.0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3.0	32.4	17.6	37.0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6.7	32.7	15.4	45.2	100.0(104)
χ^2 (df)	3.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II-2-5〉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가장 미흡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편	계(수)
전체	37.3	35.4	27.4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37.0	39.8	23.1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37.5	30.8	31.7	100.0(104)
χ^2 (df)	2.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II-2-6〉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과정 개편	계(수)
전체	34.0	42.9	23.1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35.2	42.6	22.2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32.7	43.3	24.0	100.0(104)
χ^2 (df)	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II-2-7〉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계(수)
전체	23.6	28.8	34.0	13.7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7.6	38.0	29.6	14.8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9.8	19.2	38.5	12.5	100.0(104)
χ^2 (df)	11.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부록 표 II-2-8〉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계(수)
전체	21.2	33.5	31.6	13.7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3.9	49.1	25.0	12.0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8.8	17.3	38.5	15.4	100.0(104)
χ^2 (df)/F	25.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01$

〈부록 표 II-2-9〉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계(수)
전체	21.2	33.5	31.6	13.7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3.9	49.1	25.0	12.0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8.8	17.3	38.5	15.4	100.0(104)
χ^2 (df)/F	25.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01$

〈부록 표 II-2-10〉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계(수)
전체	26.4	48.6	25.0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4.1	48.1	27.8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8.8	49.0	22.1	100.0(104)
χ^2 (df)	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II-2-11〉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 미흡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계(수)
전체	26.4	48.6	25.0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4.1	48.1	27.8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8.8	49.0	22.1	100.0(104)
χ^2 (df)	1.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II-2-12〉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 추진 필요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 내 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취약보육 지원 개선	계(수)
전체	25.5	38.7	35.8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21.3	44.4	34.3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9.8	32.7	37.5	100.0(104)
χ^2 (df)	3.6(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IV-2-1〉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세부 내용

단위: 명, 회

연도	대상	세부분류	참여인원			합계	진행 회가수
			남	여	비구분		
2017	남성	남성대상교육	13,971	3,000	16,838	33,809	1,152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3,431	4,116	2,034	9,581	343
		영유아자녀 부모교육	1,044	6,058	2,074	9,176	384
		초등저학령기자녀 부모교육	769	7,714	3,320	11,803	436
		청소년기자녀(중년기) 부모교육	954	6,291	623	7,868	432
		성인가자녀(노년기) 부모교육	1,010	4,022	6,961	11,993	158
		조부모 교육	203	2,045	979	3,227	103
		소계	7,411	30,246	15,991	53,648	1,856
2018	남성	남성대상교육	4,868	984	8,252	14,104	455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1,664	2,220	641	4,525	146
		영유아자녀 부모교육	719	4,157	1,262	6,138	329
		초등저학령기자녀 부모교육	525	3,268	3,638	7,431	247
		청소년기자녀(중년기) 부모교육	372	2,343	200	2,915	118
		성인가자녀(노년기) 부모교육	85	257	5,107	5,449	41
		조부모 교육	164	1,395	0	1,559	61
		소계	3,529	13,640	28,017	28,017	942
2019	남성	남성대상교육	2,373	526	5,478	8,377	248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1,065	1,453	1,023	3,541	109
		영유아자녀 부모교육	615	2,626	1,305	4,546	194
		초등저학령기자녀 부모교육	326	2,016	2,409	4,751	140
		청소년기자녀(중년기) 부모교육	112	908	1,169	2,189	68
		성인가자녀(노년기) 부모교육	11	63	1,973	2,047	10
		조부모 교육	643	2,962	100	3,705	97
		소계	2,772	10,028	7,979	20,779	618
2020	남성	남성대상교육	2,745	914	1,415	5,074	263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예비부모교육	287	453	1,778	2,518	40
		영유아자녀 부모교육	437	1,604	595	2,636	123
		초등저학령기자녀 부모교육	92	764	784	1,640	79
		청소년기자녀(중년기) 부모교육	171	429	346	946	58
		성인가자녀(노년기) 부모교육	11	35	53	99	5
		조부모 교육	0	11	1,517	1,528	3
		소계	998	3,296	5,073	9,367	308

자료: 건강가정진흥원(각연도),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부록 표 IV-2-2〉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단위: 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72	74	80	93	101
부산	35	36	41	66	92
대구	32	31	28	39	43
인천	17	17	22	30	38
광주	12	12	15	29	34
대전	21	17	16	23	55
울산	14	14	13	16	16
경기	52	52	54	73	81
강원	12	12	12	21	28
충북	13	13	15	27	37
세종	3	3	5	8	8
충남	14	16	15	21	25
전북	17	16	17	22	22
전남	17	18	24	36	51
경북	17	15	17	23	36
경남	17	14	17	39	51
제주	17	13	11	12	22
총계	382	373	402	578	74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21).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16721/fileData.do>.

〈부록 표 V-1-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 요인 2순위

단위: %(명)

구분	저출생 현상 심화	여성 경제 활동 참가 율 증가	육아 휴직 증가	여성 경력단 절 증가	가족구 조의 다양화	자녀 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가	근로 형태 다양 화	소득 불평 등(양 극화) 심화	4차 산업혁 명 등 미래 대응 요구 증가	경제 위기	계(수)
전체	9.4	17.0	3.8	4.7	14.6	30.7	1.4	4.7	4.7	6.1	2.8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7.4	17.6	1.9	7.4	17.6	27.8	1.9	4.6	8.3	3.7	1.9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1.5	16.3	5.8	1.9	11.5	33.7	1.0	4.8	1.0	8.7	3.8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V-1-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 요인 3순위

단위: %(명)

구분	저출생 현상 심화	여성 경제 활동 참가 율 증가	육아 휴직 증가	여성 경력단 절 증가	가족구 조의 다양화	자녀 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가	근로 형태 다양 화	소득 불평 등(양 극화) 심화	4차 산업혁 명 등 미래 대응 요구 증가	경제 위기	계(수)
전체	3.8	10.4	6.6	10.4	15.6	15.1	1.9	12.3	8.0	13.7	2.4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9	7.4	6.5	10.2	14.8	17.6	2.8	13.9	7.4	14.8	2.8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5.8	13.5	6.7	10.6	16.3	12.5	1.0	10.6	8.7	12.5	1.9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V-1-3〉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 요인 2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폐원 증가	보육교사 전문성(역 량)에 대한 요구 증가	어린이집 보육서비 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어린이집 건강영양 안전 사고 증가	유보통합 에 대한 요구 증가	자녀양육 지원 정책 전환(23 년 부모급여 도입 및 시행)	보육 재정 안정성 확보 요구	계(수)
전체	9.9	27.8	27.4	1.4	12.7	11.3	9.4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5.6	32.4	31.5	1.9	12.0	8.3	8.3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4.4	23.1	23.1	1.0	13.5	14.4	10.6	100.0(104)
X ² (df)	9.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V-1-4〉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 요인 3순위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폐원 증가	보육교사 전문성(역 량)에 대한 요구 증가	어린이집 보육서비 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어린이집 건강영양 안전 사고 증가	유보통합 에 대한 요구 증가	자녀양육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23년 부모급여 도입 및 시행)	보육 재정 안정성 확보 요구	계(수)
전체	9.0	15.1	20.3	12.3	16.0	11.8	15.6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3.7	13.0	22.2	14.8	19.4	11.1	15.7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4.4	17.3	18.3	9.6	12.5	12.5	15.4	100.0(104)
X ² (df)	10.7(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V-2-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 2순위

단위: %(명)

구분	가정양육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보육 기반(공공보육, 안정적 비용 지원, 보육사각지대 예방 등) 강화	계(수)
전체	16.5	33.0	30.2	20.3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13.0	35.2	33.3	18.5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20.2	30.8	26.9	22.1	100.0(104)
X ² (df)	3.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V-2-2〉 가정양육지원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부모급여 부담금여	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시간제보 육 확대	육아용품 대여	놀이 및 체험지원 인프라 확대	발달단계 별 검사상담 서비스 연계	지역 중심 돌봄 지원 강화	계(수)
전체	5.2	13.2	18.4	8.5	1.4	17.0	15.6	20.8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6.5	9.3	19.4	12.0	-	14.8	12.0	25.9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3.8	17.3	17.3	4.8	2.9	19.2	19.2	15.4	100.0(104)
X ² (df)	15.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 p < .05

〈부록 표 V-2-3〉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 면적 확대	설치 인가 기준 개선	어린이집 평가 제 개편	부모 및 교직 원 질 관리 참여 확대	아동 발달 지원	장애 아 대상 인프라 확대	아동 학대 예방 체계 구축	표준 보육 과정 내실 화	보육 과정 컨설팅 양성	누리 과정- 초등 학교 교육 과정 연계 강화	계(수)
전체	9.0	6.6	0.9	12.3	16.5	19.3	5.2	8.0	12.7	6.6	2.8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9.3	2.8	1.9	13.9	17.6	13.9	4.6	11.1	13.0	8.3	3.7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8.7	10.6	-	10.6	15.4	25.0	5.8	4.8	12.5	4.8	1.9	100.0(104)
X ² (df)	15.2(1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V-2-4〉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자격기 준 및 양성체 계 개편	보수교 육 체계 개편	수강 저축제	보육교 직원 교육플 랫폼 구축	권리보 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보육교 직원 고충처 리 통합 지원	분쟁조 정제도 도입	보조/ 대체교 사 확대	휴게시 간 및 휴가권 보장	보육교 사 수당체 계 개편	계(수)
전체	9.4	21.2	0.9	11.8	9.0	4.7	2.4	13.2	11.3	16.0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7.4	25.0	-	12.0	11.1	4.6	-	13.9	7.4	18.5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1.5	17.3	1.9	11.5	6.7	4.8	4.8	12.5	15.4	13.5	100.0(1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표 V-2-5〉 보육기반 강화 분야 세부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순위

단위: %(명)

구분	표준보 육비용 산출 고도화	취약보 육 기준 합리화	필요경 비 제도 개선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 집 취약지 역 균형 배치	어린이 집 소규모 화 대응 품질 제고	농어촌 등 보육취약 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	보육 지원기 관 등 전달체 계 강화	계(수)
전체	11.8	9.4	11.3	6.6	14.6	18.4	10.8	17.0	100.0(212)
보육관련교수/연구원	9.3	8.3	13.0	7.4	14.8	19.4	14.8	13.0	100.0(108)
육아종합지원센터	14.4	10.6	9.6	5.8	14.4	17.3	6.7	21.2	100.0(104)
χ^2 (df)	7.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관련 의견 조사」 조사결과임.

부록 3. 2차 포럼 토론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차 포럼

■ 개요

- 주 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현장 의견 수렴
- 일 정: 2022년 8월 31일(수) 10:00~12:00
-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쥔트홀(31층)

■ 차례

일 정	세부 내용	
10:00	개회(참석자 소개)	사회: 도남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0:00~10:10	인사말	배금주 국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10:10~10:15	개요	양미선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0:15~10:30	1분과: 보육기반 강화	신나리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0:30~10:45	2분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권기남 교수(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10:45~11:00	3분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김정화 교수(목포대학교 아동학과)
11:00~11:15	4분과: 가정양육지원	강정원 교수(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11:15~12:00	토론 및 질의응답	1분과: 권혜진 교수(나사렛대학교 아동심리교육학과)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2분과: 이미정 교수(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함미영 지부장(민주노총 보육교사노조) 3분과: 김지현 교수(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정경진 센터장(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4분과: 신혜원 교수(서경대학교 아동학과) 김영신 센터장(서울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1~4분과: 유보영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12:00	폐회 및 오찬	

1분과: 보육기반강화 토론

권혜진 교수(나사렛대)

보육의 목적과 목표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가정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임. 보육기반강화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효율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고,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임. 어린이집 운영은 특히 효과성, 보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런 의미에서 [제4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에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 되어야 함. 제4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도출이 필요함

1.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감소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어린이집의 유지와 폐원은 경제논리(효율성)으로만 결정할 수 없는 이유임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로 나타난 측면이 검토되어야 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순수 폐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확인(폐원지역, 폐원이유 등)이 필요함.
- 적정어린이집 수에 비해 현재 1만개 이상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역적으로 적정어린이집 수에 대한 분석이 좀더 촘촘히 이루어져야 함.
- 관련하여 추진계획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연계가 필요함. 기관보육 외에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하여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이 다소 모호함. 전략이 포괄하고 있는 추진내용 및 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해 보임
 - 보육취약지역 선정 지표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함. 보육취약지역의 공공보육 목표를 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함.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육적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높은 수준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추진계획에 포함된 [어린이집 설치 인가기준 정비]에는 주로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음. [제4차중장기발전계획]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면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교사대 아동 비율, 적정 영유아 1인당 면적, 실내외 놀이환경 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 모형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반영한 영유아보육법령 및 설치기준의 수정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공공성 개념의 확장을 통한 보육인프라 내실화

- 공공보육확충에 있어서도 지역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제 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통해 영유아에게 동일 출발선이 제공될 수 있어야함
 - 공공보육 확충 목표 설정 시 지역마다 적절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현재 공공보육 확충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보육 확충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적절한 대응 전략이 세워져야 함
 - 설립 주체의 책무성 측면 : 공공보육 진입관리, 재위탁 관리체계 강화
 - 공공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에 걸맞는 투명성, 안전성, 전문성, 참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현재는 관리시스템이 부재함. 보육진흥원이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육아종이 일부 지원하고 있음. 어린이집 운영자의

선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으로 공공적인 운영이 상시화 될 수 있어함.

- 보육인프라 내실화에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인프라도 확충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함

3. 비용 지원 체계 고도화

- 실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는 원인 파악이 필요함. 비용지원 역시 시설유형별 부모부담 차이, 시설유형별 교사 인건비 격차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관건임.
 - 보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처우와 직결되어 있음.
 - 결국 교사 인건비 지원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안정화의 관건이 될 것임.
 - 정부는 근무환경개선비, 지자체 처우개선비 등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나, 실질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비용지원 체계 고도화는 교사 인건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

4. 단계적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 강화

- 유보통합은 현시점에서 영유아의 전생애적 발달의 연속성 보장, 영유아기 교육과 보호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의 필요성, 인구변화와 함께 미래 교육·보육환경의 변화가 실제적인 유보통합의 필요성으로 부각되고 있음
 - 유보통합 역시 영유아가 자신이 사는 지역, 다니는 기관 등에 따른 격차 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보호,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조성(복지부)

□ 과제목표

-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주요내용

-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대상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 기대효과

- 부모급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및보육 서비스 질 획기적 제고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해소(교육부)

□ 과제목표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해소

□ 주요내용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추진

□ 기대효과

-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 경감

- 두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공통적 과제목표를 통해 유보통합의 방향성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유보통합을 해야하는 당위는 영유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환경 체제개편을 통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함.

즉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보호를 받으며 차별받지 않으며 영유아의 의사표현 존중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영유아 최선 이익이 실현되는 방향이어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는 기관중심의 통합 중심이 아니라 영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교육, 보육, 양육, 돌봄, 문화 등을 포괄하는 아동친화적 통합추진계획이 도출되어야 함. 또한 초등학교로의 전이 및 초등돌봄체제도 함께 구상될 필요가 있음

중장기 기본계획 1분과 토론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1.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 장기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원아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임. 무상 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대한 수급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 저출생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태어난 영유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 및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져주어야 하는 중대사가 됨.
- 이런 측면에서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함. 단 서울형 모아어린이집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사하다면 서울의 경우에는 다가치보육과 모아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듦.
- 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보육 문제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농어촌지역에 많이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근거리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함.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분소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원장이 운영가능한 어린이집을 돌아 다니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현재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음. 분소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어린이집 평가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보다 명확한 모형이 제시되어야 함.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정비의 내용은 주로 폐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임.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된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이들 물적자원을 재활용하고 인적자원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함.
- 그러나 폐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보수교육 및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취업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으로는 교사의 역량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적정 역량을 갖춘 교사는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폐쇄 희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이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투입 재산의 회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함.

2. 공공성 개념의 확장을 통한 보육인프라 내실화

- 보육의 공공성에 기반한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아반 인건비 지원 기준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동의함. 다만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국공립을 신축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장래 이용 원아의 감소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수준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기관 간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기하여야 함. 그리고 정기적인 질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질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3. 비용 지원 체계 고도화

- 무상보육으로 인한 국가부담이 증가하여 무상보육의 범위를 재개념화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함. 부모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책임을 지니므로 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함. 보육이 요구되는 가정의 특성과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

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도출되기 바랍.

- 반별 운영비 제공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도모를 위하여 모든 보육교사의 급여 1호봉 보장을 주장하였으나 경력을 무시한 1호봉 보장은 미봉책에 불과함. 최저임금을 받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지원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야 함. 더불어 최소 정원 규모 의무화가 전제가 되어야 반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직을 겸직하지 않도록 가정어린이집 인력 배치기준을 수정하고 원장이 담당하는 반에 보육교사를 지원하거나 원장 급여를 지원해주어야 함. 또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재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4. 단계적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 강화

- 유보통합의 단계별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어야 함. 유아반의 보육교육과정은 동일하지만 교육보육시간이 상이하고 교사 자격 또한 다름. 또한 유보통합 시 영아반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유보통합을 통해 이용시간이 다양해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경우에 유보통합의 의미를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임.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과정 운영시간과 어린이집 기본반의 운영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 기관별로 운영시간이 다르게 하여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유보통합 시 영아반만 운영하는 기관, 유아반만 운영하는 기관, 영유아반 모두를 운영하는 기관, 반나절(주간 또는 야간) 운영 기관, 온종일 운영 기관, 시간제 운영 기관, 24시간 운영 기관 등으로 제시된다면,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영유아교사의 자격체계, 자격부여 방식 및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연한의 고도화를 주장하였는데 (가칭) 영유아교사 1급, 2급, 3급 등으로 세분화하고 1급은 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양한 전공과 학력을 지닌 교사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시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공정성을 높일 것임. 그리고 3급은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2급부터 정교사 직을 수행하며, 1급 위로 주임교사, 수석교사, 원감, 원장 등의 승진체계를 갖추어 보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2분과(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토론문⁴⁵⁾

이미정 교수(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원격교육기관을 통한 학점은행제임
- 원격교육기관을 통한 자격증 취득 문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모두 문제임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방송통신대학교
보육교사2급 자격증	2,3,4년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원격)학점은행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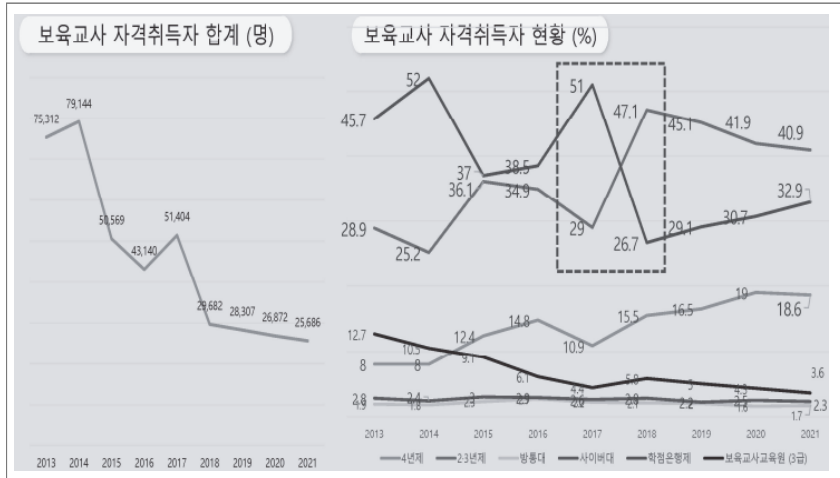
-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현황(2019~2020)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공대학	합계
인원(명)	2,615	5,182	1,267	70	146	9,280
비율(%)	28.2	55.8	13.7	0.8	1.6	100.0

출처: 2020년 교육통계연보(2019.3.1.~2020.2.29.). 교원자격증발급현황. 서유희 한유진(2022)재인용)

45) 이 토론문의 일부 내용은 이미정(2022). 제5차 유보통합정책 포럼 쟁점토론회.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양성체계 통합방안 고찰”에서 발췌함.

- 보육교사 자격취득자 현황



2,3년제
전문대
학점은행제

4년제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2022년 내부자료, 강은진(2022) 재인용

- 유치원정교사 자격증도 원격교육(방송통신대)을 통해 발급되며, 이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원격교육(사이버대학)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해 보아야 하는 문제임. 특히 일반 4년제 대학의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발급수의 약 50%에 육박하는 수⁴⁶⁾가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발급된다는 점은, 사이버대학의 보육교사 배출과 함께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임.
-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 취득의 문제
 - 이는 일반 사이버대학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임. 학점은행제의 대부분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원격교육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 평생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더 평생교육 소관부서인 교육부와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됨.
 - 대면교육이 강화된 2017년 이후 원격교육 비율이 대폭 감소했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루어 이미 잘 적응되었음을 보여줌. 주목할 부분임. 특히 학령인구절벽 환경에서 2,3년제 자격증 배출 비율이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는 보육교사의 경우 대부분 원격교육의 강세로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시

46) 2021학년도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입학정원 2,700명, 일반 4년제대학 유아교육과 입학정원 2,303명으로 일반 4년제 입학정원보다 더 많음.

사점입

- 발제문의 <표3>도 2018년엔 대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원상복귀 하는 양상을 보이고, 대조적으로 2,3년제 대학은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학점은행제가 동일한 자격증을 비용과 시간면에서 대학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학점은행제: 1년반, 총 100만원~150만원 정도, 대학은 2~4년, 한학기 등록금만 300~500만원 소요)
- 그동안 가장 문제시 되어온 보육교사교육원(3급 배출)이 모두 원격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으로 전환함(동일학위와 2급자격증 제공, 가장 싼 교육비)
- 학점은행제는 대학보다 짧은 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2학기만 더 추가하면 전문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이후 자격증 통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보아야 할 논점임.
- 보육교사3급 자격증 취득의 문제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 3급은 2021년에 전체 보육교사의 2% 미만으로 지금은 그 영향력이 미미함. 3급 **폐지 혹은 보조교사**. 폐지 시 연수기관으로의 역할 전환
- 유치원 준교사 문제: 실제 배출 없음
-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 수급문제 고려해야함 - 인건비 보조 등의 접근도 필요함.

□ 학과제 중심 문제 / 학점이수제 문제

- : 학점 이수제 방식보다는 학과제 양성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사실상 학과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2,3,4년제 대학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이 17과목 51학점이 된 이후에는 이수 학점이 많아져서 실제로 보육관련 학과에서만 취득이 가능해짐. 따라서 오프라인 대학의 경우에는 보육교사도 실질적으로 학과제 양성방식임.
- 그동안 보육교사 자격증을 많이 이수하던 대표적인 타학과가 사회복지학과였는데, 지금은 보육교사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모두 상향 조정되어 한 학과에서 두 개 자격 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짐.
- 4년제 대학에서도 타 학과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을 하지 않는다면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2,3년제 대학에서는 복수전공제도가 없음. 그러므로 오프라인 대학에서 발급되는 보육교사는 이미 학과제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는 실정임.

- 모든 제도와 정책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와 환경을 반영해야 하는데, 10년전의 보육환경과 현재의 환경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10년전의 연구를 현재의 학과제 연구에 동의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배됨.

□ 보육진흥원의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방안(2020)의 문제점

- 권기남, 조용남, 민미희, 김유미(2020).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연구. 보육진흥원
- 보건복지부에서 학과제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모든 양성기관의 소관부처와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부처의 문제가 제기됨
- 이미 자격취득이 가능했던 양성기관(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교육기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을 중지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임
- 처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원격대학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승인하지 않았어야 하는 문제임. 이는 고등학교 유아교육전공학생들에게 보육교사3급 자격증 발급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거부한 사례와 비교됨
- 흔히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므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정작 유치원자격증, 간호사자격증 등은 학점은행제로 취득 불가능함. 보육교사도 그렇게 해야 함. 시행령의 개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 초창기에 허용된 원격교육기관인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서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부분도 교육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음. 그러나 유치원자격증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자격증 남발은 철저히 막음.

□ 학과제 도입과 연동된 보육관련학과 평가제 도입 문제

- 보육관련학과 평가 지표(연구)가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양성기관평가지표와 매우 유사한 점은 보육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매우 안타까움. 교육부의 교원 양성기관 평가 목적의 주요 핵심은 교육의 질 고양과 더불어 유치원 양성기관 입학정원 감축인데, 보육관련학과가 처한 현실은 유아교육학과와 매우 다름.
- 학과제 도입과 학과평가제도의 목적은 보육의 질 고양에 있겠지만, 현재 학령인구절벽 사태와 저출생 등의 치명적인 환경적 요인을 간과한 발상임. 따라서 보육의 질고양이라

는 당초 목적과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학령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서 대학의 운영이 심각한데, 복지부의 학과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교원 충원 등의 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선 대학본부의 재정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됨.
- 결국 우수한 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오프라인 대학은 모두 소멸되고 원격교육 기관만 남아 오히려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 원격교육의 부실함에 대한 우려는 이미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타당함이 인정됨.
- 특히 학과제도입연구(권기남 외, 2020)에서 “학과제를 도입하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제한을 유예하는 충분한 제도기간을 부여하여” 보육교사 수급을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그 유예기간 동안에 오프라인의 전전한 보육관련학과는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고 보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 학점은행제와 원격교육을 통한 보육교사만 배출될 것임.
- 보육교사가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정식 ‘국가교원체제’에 편입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학과제 도입과 평가제는 우수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소멸로 이어질 것임. 주무부서는 현장에 대한 평가와 제재에 집중하기보다 학과, 교사, 어린이집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의 학과제 전환과 그에 연동된 학과평가가 우선이 아니며, 이는 유보 통합 이후에 유-보 동일 선상에서 논의할 필요 있음.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 등 원격교육기관의 근거법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되었지만, 결국 소관부처는 모두 교육부이기 때문에 유보통합(교사 통합) 후에 논의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됨.

□ 자격증 별 현재 교원양성기관

최초 취득 자격증	기관	이수연한
유치원정교사 2급	2,3년제 전문대학	2~3년
	4년제 대학	4년
	방송통신대학(4년제)	4년
	교육대학원	2.5년

최초 취득 자격증	기관	이수연한
보육교사 2급	2,3년제 전문대학	2~3년
	4년제 대학	4년
	방송통신대학(4년제)	4년
	대학원	2년
	2,3,4년제 사이버대학	2~4년
	학점은행제	1년6개월 혹은 2년부터 자격증 취득 시까지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교육원	1년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개편 시 정식 국가교원체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함.

- 발제문에서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하여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을 개편한다고 했으면, 현행 국가교원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함. 보육계에서 또 다시 새로운 명칭인 “선임교사” 제도를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제안은 납득하기 어려움.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수석교사 제도가 있으나 이는 정식 자격체계가 아니며 반드시 거쳐야 원감 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 오히려 인사적체와 연동되어 생긴 제도에 가까운데, 그것을 보육계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봄. 그것도 같은 이름도 아닌 “선임교사” 라는 새로운 명칭을 또 만드는 것은 이후 유보통합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됨. 그대로 **“원감” 직급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 발제문의 내용을 보면 “선임교사”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으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대체교사 혹은 보조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명확한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대체교사 혹은 보조교사의 역할은 그야말로 대체교사 혹은 보조교사가 해야 하며, “선임교사”는 “원감”으로 대체하여 원감의 역할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봄.

□ 유보통합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교직과정” 도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교직과목 22학점
 - 유치원자격증 취득 시에만 요구되고, 보육교사는 교직 미이수
- 기존 교직과목의 문제점
 - 초중등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과 동일하여 유치원교사에게는 부적절함
 - 일부 교직과목은 유치원교사 전공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과목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물론 동일하지는 않지만 보육교사자격 이수교과목과도 내용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

교직과목		보육교사 자격 이수과목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보육과정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어린이집 운영관리 아동생활지도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특수아동의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아동권리와 복지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4주) 교육봉사활동(60시간)	보육실습(4주 + 2주) 보육실습(4주 + 2주)

□ 유치원자격 이수교과목의 경우 영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됨. 통합교사의 교육대상을 0 ~ 5세 영유아로 전제할 때 영어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보강될 필요가 있음.

□ 교직과목 논의 시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수과목의 재정비

- 0~5세 영유아를 교육 보육할 수 있는 통합 교육과정 마련이 중요함
- 전공 이수 전체 교과목에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영아교육 내용을 철저히 보강할 필요 있음. “유아○○교육과목”은 모두 “영유아○○교육과목”으로 영아교육내용 보강. 영아교육 부분은 심지어 보육교사 자격 이수교과목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강이 시급함
- 보육교사 자격 이수교과목에도 영아 관련 과목은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영유아사회정서지도 등 4개 교과목에 불과함
- 영아놀이, 영아보육과정 등 단독 교과목의 신설이 요구됨
- 교직과목의 재정비 필요: 초중등 교직과목의 획일적 적용에서 벗어나, 영유아교사의 교직원 함양에 필요한 실질적 교직과목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영아대상 현장실습, 유아대상 현장실습 분리 강화될 필요 있음
- 영아, 유아 대상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교사의 돌봄 역할 강화내용 보강
- 예비교원의 인적성 검사, 성인지교육 등의 균등한 적용 필요

2.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도 이미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은행제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고, 몇 년 지나지도 않은 현재에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 입안임을 자인하는 형태이어서 황당함.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 허용 정책과 동일한 프로세스임을 자각할 필요 있음.

□ “보수교육” 용어 변경 및 내용과 방식의 개편이 시급함.

- 일본식 표기인 “보수교육” 용어를 “연수”로 변경하여 통일할 필요 있음.
- 현행 보수교육은 승급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뉘는데, 승급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함. 그런데,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성된 직무교육 중 특별직무교육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데, 교사들이 접근성과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교육을 받고 있음.
- 그러나, 특별직무교육은 영아교육, 장애아교육, 방과후 교육으로 구성되나, 현재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보육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임. 일반직무교육이 보다 일반적인데도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거의 대부분 특별직무교육으로 해결하는데,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승급교육 시수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좋으나, 현재 유치원 원감, 원장 승급교육이 몇 년씩 어마어마하게 밀려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또한 유치원(원장 연수 1개월 이상 숙박 연수, 전액 국비)처럼 기간 등을 상향조정할 때 소요될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학과제 도입과 해당학과 승인제도의 문제

- 보육교직원 자격취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프라인대학이 아니라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은행제인데, 학은제는 개편하지 않고 오프라인 대학만 통제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정책으로 보임.
- 보육교사 양성학과 인증제 도입 방안: 유보통합을 앞두고 평가인증기관을 설치하겠다는 정책이 납득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오히려 이런 비용과 에너지를 아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자격증 남발 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임.
- 발제문에 보면 “학점은행제 존속여부 검토 필요” 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명실공히 보육교직원 자격증 관련 핵심 문제점은 오히려 존속시키는 미온적 개혁태도로 보임.
- 15쪽 <표6>에 근거하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승급교육을 빼고 일반 직무교육만 보

면 온라인(특별직무교육) 이수자가 82%임.

- 일반직무교육의 내용 등을 새로 정비하고 개발할 일이 아니라,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이 오히려 일반 직무교육으로서 훨씬 적합성이 높음. 교사 근무 연수에 따라 서로 다른 일반 직무교육을 새로이 개발할 일이 아니라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매우 시의적절한 많은 교육들을 보수교육 이수저축제도로 사용하면 간단하게 내실화될 부분임.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를 구축하는 것 보다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임.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 모든 주무부서는 해당 업무기관에 대하여 **통제와 보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함.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보육계에 대하여 보호보다는 통제에 더 큰 비중이 있는듯함.
 - CCTV설치 이후 유치원 대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비율이 훨씬 높음. 영아보육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주무부서의 보호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임.
 -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은 함량 미달의 교원 자질의 문제가 가장 큰데, 온라인 학점은 행제의 큰 구멍은 그대로 둔 채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내실있는 오프라인 대학만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 CCTV설치 등 핵심을 벗어난 정책을 돌아볼 필요 있음.
 -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통제 수준과 평가수준에 형평성을 확보해야 함.
 - 27쪽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교사 관련 법령, 교사 자율권, 신분보장권, 소송심사청구권 등은 모두 교원의 신분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유보통합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는 내용임.
 - 보육교직원에대한 신체적, 심리적 지원 등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사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 교직원의 신분 보장 등 보다 큰 틀의 내용이 개선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스트레스 등이 많음에 주지할 필요 있음.

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므로, 유보통합 추진 전단계로서 최대한 유치원 국가교원체계의 교원 조건에 근접하게 개선해야 함.

- 교사 급여수준을 일반적인 유치원(국가교원체계) 교사 급여수준에 근접시켜야 함. 각종 수당과 어린이집 지원 금액의 형평성도 맞추도록 해야 함. 아래 두 개의 표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현황 비교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내부자료, 2022)

□ 교사 호봉제도도 유치원 국가교원체계의 교원 조건에 근접하게 개선해야 함.

- 유치원교사의 경우 교육연한과 경력(교육대학원 등)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전문대 졸업자 초임 호봉 : 7호봉/ 4년제 졸업자 초임호봉 : 8호봉/ 사범대졸업자 초임호봉 : 9호봉

어린이집 교사 초임호봉 : 1호봉(교육연한 등 전혀 반영안함)

- 호봉은 처우와 연동되므로 중요. 국가교원체계에 근접하게 개선해야 함.
- 현재 어린이집 연장반교사, 보조교사 등이 미충원은 유치원 국가교원체계의 교원 조건에 근접하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임.
- 발제문 41쪽 등: 선임교사의 역할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와 동일시하는 인식은 문제가 있으며, 선임교사는 원감제도로 개편되어야 하고 그 역할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함.
- 대체교사 보조교사 확보는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
- 선임교사제도를 만들어 대체교사 역할까지 담당시킨다면 또 다른 유보 격차를 만들게 됨.

구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월 2,800,000원	월 2,800,000원
교사 인건비	월 2,800,000원	(1) 월 약 2,500원 (보육료에 포함) (2) 월 약 50,000원 (사립유치원)
운영시간	월 2,800,000원	월 2,800,000원
보육교사 / 누리과정 운영자비	월 2,800,000원	월 2,800,000원
학급 운영비	월 2,800,000원	월 2,800,000원
교사 지원	월 2,800,000원	월 2,800,000원
누리과정 지원	월 2,800,000원	월 2,800,000원
총계	월 2,800,000원	월 2,800,000원

구분	유치원(교육부)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무상급식 지원	22년도 전국 무상급식 지원 예정 - 연부제 : 11개 시도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경북) - 지방자치 : 2개 시도 (전남, 경남) (서울, 부산, 대구, 경남) - 선형성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보육료에 포함 - 어린이집 급식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어 원형보육 급식 급여 지원 규정이 적용된 실정
교육과정	유치원 급식(22년 서울유 보육법) - 평균 3,000원	어린이집 급식(22년 보육사업비) - 평균 1,500원 - 연부제 2,500원
교육과정	6개 시도 지원	사립유치원 -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 - 22년 1월말 기준 월 150만 원, 사립 월 30만 원 지원
교육과정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 교육부 예산 50%에 대해 정부유치도교육청이 1:1 대응 지원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 교육부 예산 50%에 대해 정부유치도교육청이 1:1 대응 지원
교육과정	교육혁신지원사업 지원 -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 (교육, 장학, 교사, 무상 등) - 총액 : 100만 100원 한도 지급 - 경기 : 100만 100원 한도 지급 - 사립유치원에 교육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비 50만 원 지원	보육혁신지원사업 지원 - 보육혁신사업 소액으로 교육혁신지원사업 지원 - 총액 : 100만 100원 한도 지급 - 경기 : 100만 100원 한도 지급 - 사립유치원에 교육혁신지원사업으로 운영비 50만 원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함미영 지부장(민주노총 보육교사노조)

1.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 보수교육 운영체계 현황 및 문제점

-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 매년 실시되는 법정의 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대부분 보육교사들은 근무중이 아닌 퇴근 후 평일 저녁, 주말에 교육을 이수 하고 있음.
-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근무중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체교사 지원이 쉽지 않음. 상시 지원 사유 1순위 이나 인력부족으로 대체교사 신청이 어렵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육교사 1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수는 10일로 제한되어 있어 연차사용을 했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 됨.
- 근무중이 아닌 퇴근 후 평일 저녁, 주말에 교육을 이수 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 지급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 발생과 휴일에 쉴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대체교사 지원 일수를 1인 교사에 10일로 한정 짓지 않고 현실에 맞게 지원 일수 조정이 필요.
- 대체교사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선임교사 및 보조교사 대체.
- 근무시간 이후 교육 이수 시 시간외근무로 수당이 지급됨을 인식하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교육은 근무 중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 직장내괴롭힘 현황 및 문제점

-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괴롭힘을 줄어들지 않고 있음. 2021년 보육교사노동실태조사(직장갑질119, 보육지부) 결과 중 보육교사 10명 중 7명(57.6%)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괴롭힘 가해자의 78%가 원장을, 61.4%는 대응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인으로는 보육교사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부당한 대우에 문제 제기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음.
-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서로 영유아 보육 시 온전한 마음의 보육은 어려우며 보육의 질 또한 기대할 수 없음.
- 원장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 받아도 가해자 분리조치 및 원장교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 반복.

□ 개선 방안

- 보육사업안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명확한 내용과 예방 방법, 발생 시 조치사항 명시.
- 괴롭힘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캠페인 및 괴롭힘 금지교육 의무.
- 원장으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위탁취소 및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 감정노동보호조치 현황 및 문제점

- 영유아의 하루 일과 및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보육교사는 감정노동자이지만 인식이 부족함.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폭언, 아동학대 의심, 지속적인 항의, 가학적인 사과 등 수많은 감정노동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보육교사는 언제나 친절하고 미소를 짓도록 조직내부나 사회적으로 강제되어 있어 부당한 상황을 거부하지 못함.
- 학부모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부당한 감정노동 발생 시 원장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정노동자보호법의 사업주 의무사항인 구체적 대응매뉴얼 개발 보급이 되지 않음.

□ 개선 방안

- 보육교사도 감정노동자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내 문구 게시.
- 어린이집 자체별로 제작하기 어려운 대응매뉴얼 제작 보급.
- 원장의 보호조치 해태 등으로 인한 피해 심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학부모와의 갈등 시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 역할 강화와 책임감 부여

□ CCTV열람기준 현황 및 문제점

- CCTV 설치 목적은 아동과 보육교사, 설치물의 안전이지만 보육교사의 안전을 사유로 당사자인 보육교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열람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됨.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할 경우 의심장면을 확인 할 수 없어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법적인 도움 또한 받지 못한 채 어린이집을 스스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함.
- 학부모와 원장의 무분별한 CCTV 열람과 근태감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보육교사의 괴롭힘 도구로 활용.

□ 개선 방안

-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 인권침해 요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 보건복지부가 나서 개정 요구.
- 무분별한 근태감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3.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 보육현장 현황 및 문제점

-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인해 보육교사의 돌봄 부담은 가중되어 양질의 보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휴게시간, 휴가 등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여 가정연계학습 시간을 만들어 강제적인 연차를 소진.
-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조항이 없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
- 보육사업안내에는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이라 되어 있으나 여전히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

-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 분장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급별 업무 분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교사겸직 원장 허용으로 담임교사, 대체교사, 연장전담교사 업무 과중.
- 농어촌 초과보육, 탄력보육 허용으로 인한 높은교사대 아동비율로 영유아의 안전한과 양질의 보육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교사의 업무 과중은 늘어남.

□ 개선 방안

- 효율적인 교사대아동비율 법적기준 마련.
-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의무교육에 적용 후 자체 점검.
- 어린이집 표준계약서, 직급별 업무 분장 매뉴얼 보육사업안내 수록.
- 농어촌 초과보육, 탄력보육, 교사겸직 원장 전면 폐지.

보육서비스의 질

김지현 교수(명지대학교 아동학과)

1. 어린이집 최적의 환경 조성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화는 필수적인 개선 방안
-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 산출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유자격자를 포함하면 안됨.

* 한국의 교사 대 유아 평균 비율이 12.7이라는 점 확인 필요

-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0세반, 3세반 대상 우선 비율 하향화에는 동의하나, 0세반에서 1세반, 3세반에서 4세반으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영유아의 심리적 웰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조교사의 1세반, 4세반 우선 배치 의무화 등을 동시 고려

□ 스마트 보육행정 시스템 활성화

- 불필요한 종이서류 낭발, 어린이집 평가 시 서류 검토에 대한 시간 소요, 어린이집 평가 현장관찰 시에만 열람 가능한 서류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의 문서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출석 및 원격수업 기관 평가 시스템, 유치원 평가시스템 참고

□ 설치 인가 기준 개선

- 면적 기준 상향화는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화에 따른 자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의무실, 교사실은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필요

*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의무실 설치 관련, 보육실에서 환아(영아)를 돌보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정부의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함.

- 실외놀이터(대체놀이터)가 아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실외 놀이환경(예: 근린공

원, 산책로, 텃밭, 동산 등) 등을 실외놀이 환경으로 인정 필요(반드시 놀이터에서만 실외놀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2.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경기도에서 제안한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 후 지원과정’ 제도 도입 필요(입학 전 선별 검사 의무 실시 또는 정보 공유 체계 반드시 필요)
- 다만,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 선별, 개입, 사후 발달관리 지원 등의 과정에서 부모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일정 횟수 이상 필수로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치료사 상주를 넘어 전담팀 배치하여 상시적 컨설팅 현실화
-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집 평가제 간 일관성 있는 지침 제공을 위해 상호 간 협력 강화

□ 다양한 보육 아동 존중

- 워라벨을 추구하는 MZ세대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야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등에 대해 재원을 투자하기보다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제, 영아수당의 현실화 등을 통해 타부처와 협업하여 새로운 보육 수요 반영 필요
- 장애영유아가 다니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부모의 의료기록 공유 거부로부터 비롯될 수 있음. 저소득층 가정과 마찬가지로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보를지자체와 어린이집 간 공유하여 장애위험영유아의 보육에 맞는 인적, 물적 환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및 관리

- 개정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보급 및 홍보 시급
- CCTV로 발생하는 교사인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지원은 구성원에 대한 심리치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전반에 걸쳐 제공

3.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 표준보육과정 교육의 체계적 관리
 - 영아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
- 표준보육과정 관련 사례 및 콘텐츠 보급
 - 유아 사례는 i-누리 포털 활용 가능
 - 영아 사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지양, 사례를 발굴하여 디지털화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

4. 어린이집 품질관리체계 개편

- 상시적인 질 관리체계 마련
 - 어린이집 평가,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에서 다루는 평가지표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중복평가로 비롯되는 어린이집의 어려움 해소
 - 어린이집 평가는 보육의 과정적 질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 법률 등의 사안과 차별화
- 상시적인 질 관리체계 마련
 - 현재 보육평가 결과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이 결과서를 바탕으로 교직원 자체 개선 노력, 컨설턴트의 컨설팅, 부모와의 평가결과 공유 등에 있어 제한적
 - ‘사전 컨설팅 - 평가 - 사후 관리’가 일련의 과정으로 경험되도록 운영
 - 평가가 보육의 질 개선으로 귀결되도록 체제 개편
- 보육담당 공무원의 보육 전문성 향상
 - 담당 공무원 수 확대, 정기적인 교육 강화 등은 동의하나, 잦은 교체가 문제
 - 공보육이 이루어지는 현 실정에서 차별적인 보육공무원의 역량 요구
 - 보육경력을 갖춘 보육공무원 직을 신설하여 일반공무원직과 별도로 운영하며 보육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차 포럼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에 대한 제언

정경진 센터장(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수립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16년)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고(OECD 평균 1.68명) 반면, 영아의 시설이용률은 무상보육 도입으로 36%로 OECD 평균(34.4%)이상으로 단기에 급증함. 그러나 현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2023-2028)배경이 되는 정책 환경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21년 기준 0.84명으로 저출산 기조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 및 전국어린이집 수가 급격히 줄고 있음. 오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포럼에서 3분과 '보육서비스 질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내용 순서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최적의 환경 조성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0세의 시설이용률 증가와 유아(3~5세)반 현원률 감소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0세반 보육이 불가피한 상황임. 육아정책연구소(2019)연구 자료에서 적정교사 아동비율을 0세 2.2명의 응답에 대한 분명, 보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부담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한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 개선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같은 0세(6개월~24개월)반이라고 해도 월령차이에 따라 돌봄의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0세반을 최소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장 낮은 개월 수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교사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을 제안한다. 추진계획 우선순위에서 장애아전담이나 통합어린이집은 동의하나, 농어촌 특례지역보다 영아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현원 충족률이 높은 대도시부터 우선순위

로 시행되길 기대한다.

- 유아 3세반도 1:15→1:12로 축소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나, 유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농어촌특례지역 및 소도시지역의 만3세 유아의 현원 충족률을 고려했을 때 미지원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의 재정 부담률에 대해선 30%에서 50%의 지원을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스마트 보육행정 시스템 활성화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문서관리 기능은 홍보가 미진하여 활용도가 낮기보단 현장은 잘 갖춘 표준화된 문서양식보다 문서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보육교직원 채용 및 교육이 필요함. 또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은 원장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진입장벽이 높아 문서양식에 대한 접근권한을 넓히는 게 우선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 설치인가 기준 개선

- 영유아 1인당 보육면적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개선이라고 사료되나, 의무실 설치기준과 감염병 대응체계로 인한 별도 격리 조치 공간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설치이후에 보육교직원 중 어느 직군이 맡아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세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정원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의무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원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겸직할 수 있어, 의무실이 설치되면 겸직을 하고 있는 원장이 의무실에 있는 영유아를 온전히 돌보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의무실(휴게실)설치 부분은 기존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별도로 면적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요구한다면 어린이집은 예산뿐만 아니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실 설치공간에 대한 부분은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에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의무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마련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

- 최근 경계선상의 성장 발달을 보이는 아동의 증가로 가정에서 부모는 양육의 어려움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와 부모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검사 도구 `한국형(K-DST)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안은 급격한 양육환경의 변화에 매우 고무적인 제안이다. 모든 발달검사 도구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시행이 어려워 정착, 심각성을 보이는 영·유아의 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도 강제성이 없어 시행초기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어린이집 입소 시 건강검진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은 부모의 의무이행 사항이 되었다. 영·유아 발달검사 또한 어린이집 입소하기 전과 연령(유아반)대로 검사의무횟수를 정해 부모가 강제성을 갖고 참여를 독려하여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발견 및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 기준액을 인상하는 부분은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이후, 어린이집은 물가가 인상되고 친환경 등 식자재 부분에 질을 높임으로써 급식비 기준 액 이상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어 어린이집에 철저한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규모, 원장의 자발성 정도에 따라 급식관리 실태가 상이하므로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 전문가 및 부모 등의 협의체를 지자체에서 구성하여 어린이집 대상의 영양 및 급식관리 실태를 상호점검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거나 개선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체제 구축 및 관리

- 어린이집 아동학대 지속 발생이유는 육아정책연구소(2019)연구결과, 교사원인 중 장시간 근무가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한다. `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교사 1일 총 근무시간도 9시간 43분으로 조사되고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실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2021년 어린이집 운영체계의 변화로 기본반과 연장반을 구분·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연장반 교사확보의 어려움과 예산부족으로 기본반 교사가 순번당직제로 18시 넘어서 까지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 유치원 교사가 2시까지 유아를 돌보는 것과 비교하면 보육교사의 긴 돌봄 시간은 2020년 놀이중심의 4차 표준보육과정의 개정되었음에도 영유아 놀이지원에 대한 연구와 자율적인 학습공동체의 모임 등의 연구조성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마련의 장애요인이 되고, 근무시간 내에 영유아를 돌보면서 청소와 보육일지 등 각종 행정업무를 작성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보육교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적상호작용이 증가하는

보육환경이 만들어져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 및 예산확보를 적극 개선하여 보육교사가 진정한 휴게시간 권리 및 영유아 돌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

□ 표준보육과정 교육의 체계적 관리

- 2020년 4차 표준보육과정이 개정되었으나 평가제에 도래한 어린이집 외에 교육이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짐. 유아반의 자격이수 의무교육처럼 영아담임교사도 지침개정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비와 연동하여 교육이수 독려가 필요하다. 놀이중심 4차 표준보육과정은 보육교사의 다양한 보육관련 전공배경과 관심, 역량에 따라 보육과정 적용의 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크다. 보육교사의 보육과정 적용 수준을 일정부분 올리기 위해 소그룹 교육 및 컨설팅, 학습공동체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최근 충청북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2022~2026년)설문에서도 보육교사들이 4차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재교육 방법을 현장 개별컨설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실적인 '보육과정 운영방안 지원'에 따른 정부의 예산기준(안)을 지자체에 내려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수준을 높이고,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 상시적인 질 관리체계 마련

- 2005년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어 17년경과 후,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에 상당한 기여가 컸다. 그러나, 평가제는 어린이집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현장평가를 통해 설치기준 및 운영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점검사항을 영유아 보육법령 근거를 토대로 지표로 만들어 어린이집 개원 전 안전한 설치 및 준비된 보육환경 마련으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부모모

니터링, 지도점검 등의 중복점검은 현장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평가결과 반영 및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지도점검 횟수 조정 및 지도점검 지표 내용 중 평가제, 부모모니터링 지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점검지표생략 등의 진행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관리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보육담당 공무원의 보육 전문성 향상

- 공무원들이 보육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방대한 업무 범위, 복잡한 업무체계, 다양한 민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정부, 시·도 등 지자체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보육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지 못하고 타 부서로 옮겨가기 때문에 보육정책의 연계성 있는 추진이나 전문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장기간 보육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여건(예: 인사평가에 인센티브 반영)조성과 직무관련 정기적인 교육 및 의무교육 등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보육정책의 중심에는 영유아가 있고, 부모가 있어야 하며,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보육관련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제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은 다양한 현장의 보육관련 구성원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영유아, 부모, 교사들의 행복한 삶이 더해지는 보육정책수립이 세워지길 기대해 본다.

가정 양육지원 토론문

신혜원 교수(서경대학교 아동학과)

1. 부모 양육역량 강화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부모 양육역량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보다 이른 연령부터 교육되어야 함.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 역량 강화는 아동학대와 같은 건강한 양육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음. 또한 부모 역량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2019년까지 ‘자녀권리존중’ 과 ‘아동학대예방’ 교육 참여 인원이 ‘양육’에 대한 교육 참여 인원보다 매우 적음. 2020년 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아동학대예방 참여 인원수가 양육에 대한 참여 인원수와 유사함.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신념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은 기초부모교육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연령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가능함. 육아지원 비용 지원과 연계된 부모교육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만, 필수적인 부모교육 내용의 경우 1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혹은 몇 회 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 사료 됨. 또한 예비 부모시기부터 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념과 태도 및 실생활 적용에 대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사료 됨.
- 생애발달 주기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부모교육 내용과 매체 활용 및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개별 아동 및 부모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함.

- 여성가족부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남성 대상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참여 인원이 매우 적음. 발달시기별로 부모들이 참여하기에 수월한 방식인지, 내용은 적절한지,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은 아닌지, 홍보는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여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각 가정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한 양육 지원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도 높으므로 개별적 상황을 적용한 양육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함. 사례관리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족의 상황과 영유아교육기관의 상황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 아동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높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 즉, 부모, 영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 국가가 협력하여 각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적극 활용되어야 함.
 - 특히, 아동발달전문가의 전문성이 중요한데, 영유아 교육, 가족 및 부모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이어야 함.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진단 받은 아동이라면 소아정신과나 심리상담치료사의 지원이 적절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동은 부모와 영유아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양육되고 있음. 따라서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각 가정 및 부모에 대한 이해, 영유아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한 양육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에 적합한 아동발달 전문가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 됨.
 - 최근 자녀 양육에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되었으므로 자녀의 발달 시기별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협력하는 양육의 실체나 아버지 특성이 반영된 부모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보육 포털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고도화 작업 및 모바일 체제 구축이 시급함.
- 국가의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MZ세대의 부모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양육지원이 되기 위해서 모바일 체제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임.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달 받아야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양육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거나 문의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체제가 접근성이 높음. 따라서 부모교육의 참여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오프 블렌디드의 하이브리드 형 체제 구축이 필요함.

2.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 독박 육아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고 안정된 육아가 되도록 시간제보육서비스와 아이 돌봄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24시간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에게 몇시간만이라도 아이 돌봄을 맡기거나 아이가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체험 지원 등의 서비스는 부모가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가능한 많은 부모들이 육아지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거점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이 효과적임.
- 아이 발달 수준에 적절하고 안전한 놀이환경 및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부모입장에서 육아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거점 기관을 찾기 때문임.

3. 육아 상담서비스 지원

-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 개별 특성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가 활용이 필요함.
- 영유아 조기 검진 등이 활성화되어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매우 고무적임. 또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매우 고무적이라 사료 됨.
- 다만,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의 경우는 개별적인 특성과 각 가정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영유아의 어려움은 영유아를 둘러싼 가족과 교육기관의 영향이 매우 밀접하므로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상 영유아의 어려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시스템을 모색해야 함. 따라서 발달전문가이면서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이해와 교육기관의 상황 및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모든 정보들을 토대로 컨설팅하며 어려움을 상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 됨.
- 어린 연령부터 영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를 위해 영유아 교육기관과 부모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긴밀히 협조하여 각 영유아에게 적합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확립과 홍보가 필요함.

- 육아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육아 커뮤니티를 활성화 해야 함.
 -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건강한 육아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캠페인이 필요함. 영유아의 개인적인 특성과 병리적인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육아는 각 가정의 특성인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을 토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며 1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캠페인 등을 통해 건강한 육아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예비부모 시기부터 건강한 육아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지역사회 산부인과 및 예비부모 교육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대면 육아 자조모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임에서 요청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자조모임을 통해 건강하고 정확한 정보와 육아의 실재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문화의 자조모임이 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임.

4. 양육비용 경감

- 가정 양육인 경우에 지급되는 양육비 지원 금액 증가의 목적에 적합하게 가정이 건강한 양육환경이 되도록 확인하는 체계가 함께 운영되어야 함.
 - 부모 역할에 대한 책무 수행이 담보되는 부모교육 조치뿐만 아니라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정이 건강한 육아 환경이 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등이 함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 이를 위해 가정방문사 등과 같은 전문 직업군을 발굴해서 가정방문을 통해 각 가정의 양육환경에 대한 컨설팅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필요한 육아 정보 및 지식을 안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육아지원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육아물품 대여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가의 지원이 효과적이 되도록 유의해야 함.

- 양육친화적 지역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하되 해당 산업체의 사업을 위협하거나 또는 해당 산업체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인 부모에게 최대 손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사료 됨.

마무리

- 우리나라 가정 양육지원 정책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왔고 필요한 사업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사료 됨. 또한 각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이제는 이 사업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선별하고 각 사업들의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영유아를 중심으로 각 가족과 영유아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과 관리하는 전문가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 됨.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차 포럼

영유아와 양육자의 행복한 동행과 성장을 위한 가정양육지원의 방향 모색

김영신 센터장(서울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라 가정양육지원은 과거 양육비용 경감 등의 초점에서 점차 가족의 다양성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녀 발달주기 및 부모 생애 요구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시간제보육 및 영유아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본원을 비롯한 6개의 권역별 분소에서 장난감도서관과 시간제보육,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부모-자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방과 영유아 놀이체험실 등의 one-stop 가정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공통부모교육을 비롯하여 생애주기별 다회기 자체부모교육(예비부모교육, 영아기 부모교육, 유아기 부모교육, 조부모교육, 아버지교육)과 부모상담, 부모 자조모임지원(함께키움공동육아), 가족문화체험행사(서초구축제한마당) 등의 가정양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본 토론자는 가정양육지원사업과 관련한 4개의 과제(4-1. 부모 양육역량 강화, 4-2.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4-3. 육아 상담서비스 지원, 4-4. 양육비용 경감)의 추진배경과 현황,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된 향후 가정양육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내용, 추진 계획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함. 이는 영유아와 양육자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국가정책사업을 실행하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차원에서의 제안임을 밝힘

첫째,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가정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화 및 내실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즉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top-down’ 방식의 공통적 가정양육지원에 대한 지침과 운영규정(매뉴얼)이 제공됨과 동시에 ‘bottom-up’ 방식의 각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 발굴하는 등 적절한 조화와 공존이 필요함

둘째,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정양육서비스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지역 내 관련 기관에서 중복적인 가정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별 기관의 강점을 반영한 양육지원 서비스의 선택적 제공이 필요함. 예) 영유아전문상담실 운영 또는 발달전문가 연계 육아상담 등

셋째,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양육지원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예) 시간제보육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넷째, 지역적 특성 및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양육지원 서비스 내용(content)의 적합성과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편리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공간(환경) 확충이 필요함. 예) 시간제보육 및 공동육아방 설치운영 시 등 기존 시설(예; 거점형 어린이집)의 유휴공간 활용 등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4개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4-1. 부모양육역량 강화

-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 부모교육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정부지원 부모교육 사업(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달체

계를 스마트화하여, 자녀 발달주기별, 부모 요구에 따른 양육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 예) 서초구 ‘건강부모e음’ : 관내 다양한 부모교육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기관별 정보 격차 및 관내 교육과 보건·복지 정보 소외자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모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 정보 및 보건·복지 지원 원스톱 서비스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시스템(굿 콘텐츠 서비스 인증, '19.10.21). 하지만 개별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적인 업무 등으로 인하여 담당자 간 활용도 차이가 있음

□ 아동권리존중(학대예방) 부모교육 체제 구축과 부모교육의 책무성과 연계된 육아지원 비용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자녀 발달주기 기반의 부모교육 제공 및 부모 생애 요구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육아지원 비용 지원(영아수당, 육아수당, 부모급여 등)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양육 역량 강화뿐 아니라 부모 역할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필수적인 공통주제에 대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일상에서 부모가 직면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자의 요구를 반영한 부모교육이 필요함. 필수적인 공통부모교육에 대한 내용은 표준화하여 체계화(내실화)하고, 지속적인 신규 교육내용 개발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공통부모교육의 주제에 맞는 교육명(네이밍)도 고려해야 할 것임(예;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4-2.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 시간제보육의 양적 확대와 실효성 있는 질적 운영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시간제보육실 설치·운영(예; 어린이집 정원 충족 미달 시 유휴공간을 활용). 자원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설치된 기존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간제보육실 운영을 통해 비용 절감, 근접성, 물리적 환경, 급간식 제공으로 인한 영아의 건강지원 측면 등에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이용자의 유형(규칙적 이용 시, 일시적 이용 시)에 따른 다양한 운영모델 필요
- 영아발달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보육환경 마련(6~12개월, 13~36개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1:3 → 1:2 등), 시간제보육 이용 전 부모 사전교육 의무 이수화(예; 어린이집 입소 전 부모 오리엔테이션)
- 다수의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는 제공기관에 시간제보육관리자 필수 배치(시간제보육교사 연차휴가 및 회계 및 질 관리를 위한 지원, 부모 사전 OT 진행 등)
- 휴게시간 확보 등 시간제보육교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처우개선(보육준비시간 및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의 어려움)

□ 가정의 놀이와 체험 지원 인프라 확대를 통한 영유아 놀이권 보장

-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의 연계 필요
- 놀이 인프라 지원(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운영,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택배서비스(가정으로 백일상, 돌상, 대여, 육아용품 및 전통놀이세트 등)
- 이용 접근성과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공동육아방(부모-자녀 놀이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양육지원 one-stop service 제공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옴

4-3. 육아 상담서비스 지원

□ 육아 커뮤니티의 자조 기능 지원 활성화

- 서울시 보육반장사업(보육반상회, 지역 내 양육가정에 정보제공, 자원 발굴, 상담 등)
-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공동체, 자조모임 등에서 부모들의 소통과 자조 등의 순기능 활성화(예: 서초구 함께키움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사업)

4-4. 양육비용 경감

□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양육지원사업 등과의 통합을 통한 육아물품 대여 인프라 확대

-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뿐 아니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즉 지역적 특성과 요구도(만족도, 운영실적 등)를 반영한 정기적인 놀잇감 구입 및 유지관리 필요함. 예) 서초구 찾아가는 장난감 택배 서비스 : 특별한 날과 관련한 용품 대여(백일상, 돌상, 백일상 대여), 육아용품 대여, 우리가족 스튜디오(가족사진

촬영과 연계) 등. 단,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육아용품 대여 지원(예; 침대-당근마켓 활용)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함

영유아기는 이후 성장·발달·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임. 이 시기에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비언어적 시도와 행동, 언어, 정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의미있는 성인과 주고받는 ‘질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지 함께 하는 시간이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온전한 시간을 갖는 것’을 뜻함.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바라보는 곳, 그곳을 함께 바라보며 따라가고 지원해 주는 양육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영유아와 양육자의 행복한 동행과 성장을 위한 가정양육지원’이 실현되기를 기대함

부록 4. 3차 포럼 토론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차 포럼

■ 개요

- 주 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 현장 의견 수렴
- 일 정: 2022년 10월 14일(금) 14:00~16:30
- 장 소: 한국보육진흥원 6층 회의장 (유튜브 '육아정책연구소TV' 생중계)
- 주 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

■ 차례

일 정	세부 내용
14:00	개회(참석자 소개) 사회: 도남희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4:00~14:10	인사말 최중균 실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14:10~14:25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 강정원 교수(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14:25~14:40	아동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김정화 교수(국립목포대학교 아동학과)
14:40~14:55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권기남 교수(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14:55~15:10	보육 기반 강화 신나리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5:10~15:20	휴식
15:20~16:20	토론 좌 장: 서영숙 명예교수(숙명여자대학교) 토론자: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조막래 연구위원(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센터장(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원세연 과장(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이중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함미영 지부장(민주노총 보육교사지부)
16:2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차 포럼

「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 대한 몇 가지 의견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 현대국가에서 보육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던 가족의 재생산 기능을 상당부분 대체 하기에 이르렀고, 자본주의의 성장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 저출생 등으로 영유아 양육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보육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커짐. 세계 각국에서 보육이 주요 정치 의제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 및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양됨(Unicef, 2020).
- 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안) 전반에서 보육 현안에 대응한 정책과 향후 5년간 보육의 발전 방향이 담겨있음. 제안하신 안에 대체로 공감하며, 덧붙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음.

1. 기본 계획의 전반적 구성

□ 정책 환경 변화의 적극적인 반영 필요

- (저출생)저출생으로 인한 보육환경 변화 반영. 2022년 2분기 출생율 0.75명이 의미하는 바는 대다수 영유아가 ‘외동’이 될 것이라는 것임. 이에 덧붙여 첫 출산 시기 32.6 세(통계청, 2022)가 될 때 까지 많은 여성들이 상당기간의 직장생활로 인해 자신의 경력과 수입 등이 가져다주는 모든 생활에 익숙해 있고, 이를 중요하게 여길 것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정책
- (가족구조의 다양성과 취약가정)늘어나는 한부모 등 양육에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유아가 안정적인 애착과 풍부한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

성 제기

- (신규정책 시행에 따른 변화 반영)부모급여의 확대 등 신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시간제 보육 이용자 수요 증가, 가정내 육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육아 인프라 확충 요구 등 새롭게 등장할 육아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
- (유아교육과의 이원체제 현실 반영) 보육과 유아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원체제로 인한 운영 여건 차이 등을 해소하는 정책 방안 마련. 이를테면, 초등 취학 직전 만5세 유아에 대한 공공보육 공급체계와 공급량의 차이 해소책, 두 기관의 교사 자격 이동 가능성의 형평성과 관련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국정과제 ‘유보통합’과 연관된 정책 제안 필요. 이를테면, 재정의 안정성 확보추진, 두 기관이 교사처우 수준 및 처우 체계 간극 해소 방안(예: 직급 체계 및 자격요건에 따른 차등 처우 방안 마련 및 안정성 추진,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전달체계의 공공적 역할 기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통합과 세부과제의 배치) 전반적으로 개별 과제별로 제안되어 자칫 사업이 분절되거나 중복될 우려를 갖게 함. 제안된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큰 틀에서 통합하고, 이의 전달방식, 관련 인력의 조달 계획, 세부 사업 등이 어떻게 연관되고 결정될 것인지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비전과 미션 및 정책 추진 과제 구성

- (영유아 중심의 비전) 보육은 출생 후부터 초등입학 전까지 일상의 돌봄을 포괄하면서 보다 형식적인 체계를 갖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본 계획의 비전은 추상성과 대상자 포괄성을 벗어나야 할 것임.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은 보육정책 실행의 결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보육정책이 영유아, 부모, 교사를 모두 포괄하더라도 결국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비전은 영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또는 결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영유아 중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우수한 생애 첫 영유아 배움의 토대 구축 등이 있을 것임.



[그림 1] 영유아기 보호(돌봄)와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효과)보육계획이 영유아와 가족에게 미칠 단기, 장기 효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으면 함. 미션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권리 존중 문화 확산’, ‘자녀 양육 국가지원 강화’는 비전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보육기본 계획 시행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월드뱅크(2020)는 각국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가져올 결과를 ‘건강한 영유아 발달 도모’, ‘가족 복지 증진’, ‘생산성 확대 및 경제적 효과’, ‘더 나은 여성 고용’으로 보고 있음. 앞으로 5년간 기본계획 실행이 가져다 줄 구체적인 효과내지는 영유아에 대한 영향이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함.
- (용어의 정리 및 통일) ‘아이’ 등의 용어 사용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아이’와 ‘영유아’, 그리고 추진과제에서도 ‘아동’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음. 미션 중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의 경우, 좀 더 결과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 되었으면 함 .
- (미션과 전략과의 연관성) 미션과 전략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함. 연구진 4개 분과 구성에 기반하여 4개 전략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4개 전략의 ‘권리 존중 문화 확산’미션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추진과제의 ‘권리존중 문화 확산’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도 어려움. 추진과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어떤 의미와 배경에서 ‘권리존중 문화확산’을 포함하였을지 가늠이 가능하지만, 다소 비약적이고, 추상적으로 보임.

- (미션과 추진전략 및 과제 중 유사 사업 통합과 조정) 4개 연구 분과에 기반하여 추진 과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추진전략간 추진과제의 유사성이 확인되어 사업 중복과 사업의 효과 저하의 가능성이 있음. 이를테면, 가정양육지원 중 발달 상담 등과 보육서비스 질 중 영유아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의 검사, 상담, 치료 등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 가능성이 있음. 이는 가정과 연계한 보육의 중요성이 제기함. 유사 기능 사업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함.
- (주요 추진 사업 목록 제시 및 중점과제 선정) 4개분과에서 도출된 4개 전략의 추진 과제 중 유사 핵심 추진 사업의 목록을 결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미션의 내용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영유아 발달지원과 관련한 내용 중 중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가정양육'과 '서비스 질'에 포진되어 있지만, 정작 발달경계선상의 영유아를 위한 지원과 개입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질 지가 나타나지 않음. 중점 과제의 한 가지 예로 발달경계선상의 아동지원은 초등이상 학교상담사 배치와 보건교사 등의 배치를 통해 그 당위적 필요성을 재론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 사항으로 발달경계선상의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구체안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가정양육지원과 보육의 질에 지역사회 자원연계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함. 세계 각국은 보육유아교육기관과 가족간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아울러 보육유아교육이 다른 서비스와 적절하게 통합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포함될 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봄(황옥경, 2022). 이런 맥락에서 기본 계획에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인력의 보육참여를 이끌어 내는 보육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기구 연결망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임

2. 4대 전략과 관련하여

□ 가정양육 지원 관련

- (육아지원의 큰 틀로 통합) 전반적으로 육아지원의 세부 내용들이 분절되어 있음. 육아지원의 큰 틀에서 통합하고 세부 사업내용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리 할 수 있으면 함. 이를 테면 부모 역할 지원의 위해 '부모교육 등' 이 있고, '가정 내 놀이체험 지원', '가정 내 상담서비스' 등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음.
- (육아인프라 연결망) 양육비용 부담 관련 지역사회 영유아 양육친화 환경 조성 및 지

역사회 육아 인프라 연결망을 구축하여 워킹타임 동안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주 정책 실행과제에 포함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부모 역할 지원) 생애 첫 부모가 된 부부의 부모 역할 혼란이 상당히 관찰되고 있는 바, 그리고 각종 확인안된 육아 정보가 난립하는 상황이므로 정부 주도의 ‘임신전’, ‘0~5세 발달과 육아’, ‘생애 첫 부모역할’ 등에 대한 안내 책자 및 관련 영상 제작 등 필요.
- (‘부모교육’ 용어 사용의 문제)세계적으로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는 부모로서의 책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보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과증시키고 부모의 수동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영유아 기관과 부모의 협력을 통한 영유아 양육이 부각되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황임. 보육기본계획에서 ‘부모교육’의 용어 사용을 탈피하여 ‘부모 교육플랫폼 구축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보다는 ‘부모 및 보호자의 육아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으로 수정할 수 있었으면 함. 가능한 부모 지원 및 부모와의 협력 혹은 파트너십의 용어로 대체할 수 있었으면 함.
-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 ‘지역사회 어린이집을 거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전달체계가 존재하고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 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임.
-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의 구체화) ‘시간제 보육서비스 개편 확대’ 중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공간 확보와 인력 배치,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 함. 부모급여로 인하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본계획에서 이 정책을 특화 하여 가정내 육아지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다 강조하여 제안할 수 있었으면 함. 현재 안은 시간제 보육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인력은 누가 가능하고,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어 부모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가 모호함. 이를테면, 메시 클래스 운영, 뮤직과 움직임 클래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서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보육서비스 품질 관련

- (교사대 영유아 비율) 교사대 영유아 비율의 결정에는 공간, 이용시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서구국가의 경우, 초등취학 전 영유아의 기관이용율과 주당 총 이용시간이 낮은 수준이므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의 수치로만 교사 대 영유아 비의 국가

간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서구 국가에 비해 기관 취원 시기가 빠르고, 주당 이용시간도 현저히 높은 상황이므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재조정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

- (노후한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영유아 보육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은 우수한 보육에 대한 부모 및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반가운 변화 임. 다만, 노후한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할 것임.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심미감과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계획을 포함하여, 보육의 질적 우수성에 대한 믿음을 키울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평가제 개선) 평가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 항목과 컨설팅 대상 항목의 분류가 필요할 것임. 평가항목의 경우에도 어느 범주까지 포괄해야 하는가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이를 테면, 영유아 발달 평가를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일부 서구 국가는 영유아 발달평가가 포함됨. 컨설팅의 경우도 대상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평가제가 보다 실효적으로 어린이집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개편되도록 개편 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학대예방강화의 추진 과제명 포함의 적절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 및 안전한 보호 강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음. ‘학대예방’ 강화라는 추진과제 명의 제시가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움. 추진과제도 ‘보육교직원 윤리의식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체계 개편’ 정도 임. 과제명의 수정을 검토해 보셨으면 함.
-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의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개선과 연계) 놀이중심 보육과정 실행의 보육환경과의 연관성은 높음. 놀이중심 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개보수를 연계한 사업시행 계획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관련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개편 추진 방식) 유보통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 자격개편 안은 유보통합 시행 추이의 직접 영향을 받는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연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또한 유보 통합교사 자격 기준 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현장 교사 직위의 불균형을 해소와 직급체계 기준 조

정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임. 선임교사제도의 도입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보육교사 자격 최저 학점 기준 도입 등이 우선 시행 될 수 있을 것임.

- (학과제 도입과 유치원 교사 자격의 어린이집 교사 자격 부여 문제) 학과제 도입 제안의 배경과 근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 도입이전에 몇 가지 우려가 되는 결과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 그리고 보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학과제를 도입하면 최근 저출생 등으로 일부 보육관련 학과가 폐과되는 현실에서 유아교육과 출신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근무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보육현장에 별 무리가 없다는 확신이 필요함. 필요한 확신 중 하나는 3~5세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점 이수하고, 반일제 교육을 담당하도록 훈련하는 유치원 교사자격이 0~5세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으로 충분하다는 것임. 사실, 그동안 유치원 교사의 어린이집 교사 자격의 적절성 논란은 많이 간과되어 왔고, 유치원교사에게 어린이집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제기된 적은 거의 없음. 2년제 대학 이상의 보육관련 학과 학생들이 보육교사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 기초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교직 미이수만을 근거로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 두 기관의 교사 자격제도의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 하고, 교사 자격의 간극을 줄이는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임.
- (학과와 학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격기준과 자격체계의 도입안)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차이를 해소하려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현 양성기준을 고려하여 학과와 학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교사 자격기준과 자격체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에서 인정하는 동일 교사 자격 급수 체계를 정하고, 각 급수체계별 진입경로와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 검토(황옥경, 2022)



[그림 2] 교사 자격 체계와 기준 요건 방식에

-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중 휴가권 관련)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중 휴가권은 영유아의 발달과 보호권과 연관된 것으로 정책제안시 이 두 관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통상 인권 당사자간의 권리 보호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교사의 휴게시간도 아동의 발달과 보호를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일괄 운영 등은 재고하고 최선의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임

□ 보육기반 강화 관련

- (표준보육비용의 다양화) 표준보육비용 산출의 다양화는 보육이용자 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는 비용 산출방식의 전환으로 다양화의 유형을 어떻게 세분화할지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준보육비용 다양화는 보육운영현태와 직결 되므로 구체안의 제시되면, 미래 보육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임.
- (시간제 보육비용의 현실화안 제시 필요) 현재 시간제 보육비용의 이용요금은 현실적이지 않음. 2023년 부모급여의 지급으로 발생한 시간제 보육수요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시간제 보육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함.
- (만5세아에 대한 공공보육 공급방식 재고)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전 유아의 유치원 이용 아동과의 공급주체와 기관 공급방식의 형평성을 재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제안되어야 할 것임. 유치원 이용아동의 공급주체의 공공성과 인력 자격요건 등이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차등이 없어야 할 것임.
- (공공보육 공급계획의 수립) 보육 공공성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즉 국가와 개인이 만나는 수단. 공공보육은 가정과 사적영역의 담론을 공적영역 담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심을 함께 엮는 작업. 공공보육 수요와 공급현황 진단과 이에 따른 공급방식의 다변화와 공급의 안정화 필요. 도서 산간 등 지역 영유아에 대한 공공보육 공급 방안의 다양화 제안 필요. 특별 보육상황으로 지역기관에서 개별 영유아에 대한 개별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공보육을 도입 필요
- (지원 전달체계 간의 법률상 역학 관계 정리)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전달기관의 역할 과 책임의 관계 명시
- (항구적 예산확보 경로 구축)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이 제공될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임, 2022년까지로 예정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재정 지원과 같이 보육예산 지원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재정의 안정확보 기반 구축이 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황옥경, 2021).

참고문헌

- 황옥경(2022). 유보통합 가능성 논의, 복지이슈 Today, 서울시복지재단, 115. 8.
- 황옥경(2022). 유보통합교사의 전문성과 수월성 확보 방안, 유보통합 정책 포럼 4차 유보 통합쟁점 토론회 발표자료집.
- 황옥경(2021). 보육공공성과 보육 질 향상을 위한 몇가지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포럼 발표 자료집.
- Unicef(2020). Build to Last. A framework in support of universal quality pre-primary education.
- World Bank(2020). Better Job and Brighter Future: Investing in Childcare to Build Human Capital.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차 포럼 토론문

조막래(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1. 정책 비전 및 전략 우선순위 조정 검토

- 정책 비전에 정책 방향이 더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보완 필요
 - 영유아, 양육자, 교사는 보육정책의 주요체임. 다만, 보육정책에 있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책 흐름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현 정부에서도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어 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함
 - 전략간 층위에 대한 고민 필요: 첫 번째 전략에서 부모급여라는 세부정책이 들어와 다른 전략과의 층위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세부 추진과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되어야 함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임. 이에 2000년대 초부터 보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기조는 지속되어 왔고 우선 과제였음(아래 표 1 참조)

표 1 연도별 보육계획 현황

구분	1991-2004	2005-2006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2013-2017)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 (2018-2022)
			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목표	가정 복지 증진 도모	영유아의 안전한 육성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정책 과제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아이의 건강한 성 장발달 최우선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신뢰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 추진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생태계 조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개편 보육서비스품질향상 부모양육지원확대
세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증설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보육기반 조성 부모육아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 서비스제공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 맞춤형지원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사업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수요와 맞춤형보육 양육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보육여건 조성 신뢰와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이용률 40%로 확대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적정처우 보장 영유아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시기별 중장기보육계획

출처: 조막래(2019)

2. 전략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계획 시 추가 고려사항

□ 공공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및 질 향상 방안 모색

-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보육기반 강화 과제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정부의 돌봄 책임의 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함
- 공공인프라 확충이 곧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특히 그간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개인위탁 증가, 민간의존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 우수 위탁체 선정 을 위한 지표개선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조막래, 202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세부과제로 명시하고,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

수립 필요

- 유아반 인건비 지원 기준 개선 필요하다는 연구진 의견에 동의함. 고경력 교사의 유아반 배치 기피요인이 됨. 다만, 인건비 지원시설의 재정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보육교사 평균 근무기간과 정원충족율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 가정양육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과제 관련

- 부모급여 도입과 같은 정책적인 요인, 플랫폼노동, 비정형 노동 일자리 증가 등의 노동시장 요인, 가족 다양성 증가, 양육부담의 증가로 인한 심리정서 이슈, 영유아 정서장애, 발달지연 증가 등으로 가정양육 정책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 다만 정책 간 상충지점이 없는지 촘촘한 설계가 필요함. 영아중심의 부모급여 지원으로 영아기 현금지원이 증가하게 됨.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100만원으로 계획된 부모급여는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의 경제적 수요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고,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가져와 계층화를 강화할 우려가 있음. 프랑스 역시 양육수당이 여성노동에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어 왔음(유은경, 2016). 박선권(2022) 역시 현금지원의 확대와 제도 간 중복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양육가구 비용부담: 양육비용부담은 양육물품의 고급화로 접근하기보다 양육가구 소비실태 관련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양육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친인척 돌봄비용 부담, 아이돌봄서비스, 키즈카페 이용 등 돌봄관련 비용지출 등 부담요인 다양)
- 양육자 대상 교육: 양육자에 대한 교육의 가시적인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그 효과는 가장 강력함. 교육내용의 내실화, 정보접근성 강화에 적극 동의함. 다만, 남성의 양육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양육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지속되어왔음(이완정 외, 2019; 김송이, 2019)

□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필요

- 영아수당, 부모급여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시간제보육서비스 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계획이 필요(예시, 소규모 폐원어린이집의 시간제전용 어린이집 기능전환)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대한 촘촘한 분석 필요

- 양육자 관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미스매치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다양화된 서비스 수요-등하원 지원, 영아전담서비스, 긴급돌봄, 야간돌봄 등-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 취약보육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장애증가, 중증화, 영유아 발달 장애,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 최근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이들 454명을 대상으로 언어와 인지 발달 문제를 처음 조사한 결과, 인지발달평가 결과 약 25%, 언어발달평가 결과 약 35%가 '위험군'으로 나타남⁴⁷⁾
- 조기발견 체계를 확립하고, 상담 및 치료 지원, 양육자-돌봄기관-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장애영유아의 경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내 전담서비스기구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특수교사, 상담사 등의 인력을 확대해야 함. 현재 인력으로는 장애전담 및 장애통합어린이집 현장 지원 및 전담교사에 대한 상시 수퍼비전 지원은 한계가 있음
- 취약보육에 대한 검토가 장애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다문화 영유아의 증가에 따른 정책 수립이 필요함. 다문화 보육에 대한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조건

- 재정, 인력, 공간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으며, 영아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부추진 계획이 모호한 상황.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양적·질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필수정책으로써 적극 시행해야 함
- 서울시 시범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조막래, 김송이, 2021; 조막래 외, 2022) 영유아-보육교사의 상호작용의 질 개선, 양육자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증가, 어린이집 운영개선(안전사고 감소, 인력배치 어려움 개선, 운영효율성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남

47)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082237

- 적정 공간기준 명료화 필요: 서울디자인재단(2020)에서는 영유아 1인당 8㎡이상, 보육실 면적은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서울디자인재단, 2020). 서울시의 경우 신축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7㎡이상으로 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음(서울시 보육사업안내, 2022)

□ 선임교사 제도 도입목적의 명료화와 세부계획 시 고려사항

- 선임교사 제도 도입의 목적을 명료히 해야 함. 유보통합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수석교사를 염두에 둔 제도라면, 선임교사 자격, 역할의 명료가 필요함. 선임교사라는 직위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큰 틀에서 어린이집 인력구조, 승진체계 도입이라는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함. 또한 자격기준에 따른 적절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함
- 지난 8월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선임교사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한겨레.8.29일자)⁴⁸⁾. 이는 대체교사 구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답임을 맡지 않는 정규인력으로 배치하는 인력의 성격이었음. 보육교사1급 취득 후 7년 이상 보육교사 경력이있는 교사로, 평소 인사나 복무관리 등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원감역할을 하고 필요 시 대체·보조교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 아동인권선임교사 사업 운영 검토: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명을 아동인권선임교사를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학대 징후 발견 및 조치 연계,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지역별 소그룹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인센티브로 선임교사수당을 지급함(10만원 범위 내). 선임교사 직위 도입 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멘토역할, 아동인권선임교사 역할, 대체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답임교사 외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책 검토 필요

- 최근 일부 광역시도에서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북).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규정,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갈등 중재,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설치를 검토할 필요 있음
- 답임교사 외 연장, 보조, 야간연장, 특수교사, 조리원 등 답임교사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책 검토 필요함.(장애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채용의 어려움, 조리사 대체인력 확보 등)

48) 한겨레신문 2022.8.29. “어린이집 ‘대체교사’ 못 구해 예산 남아...직고용 선임교사 도입”

토론문

김미정 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

1. 들어가며

□ 추진배경

- 저출생 장기화,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한 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함.
- 저출생, 기후변화(기후 위기), 세계적 경기 둔화 전망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취약해진 보육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적극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기임.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근본적 변화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봄. 한정된 재원을 특정 영역에 과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정책영역 간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보육기반을 강화하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2. 과제별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안

□ 1-2.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 지역사회 어린이집을 거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 : 예컨대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지역 양육지원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수준에서 역할만 부여한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동발달주기 기반 교육 제공 및 부모 책무성 강화 : ‘육아지원 비용 등과 연계된 부모 교육 책무성 부여’는 어떻게 합법적으로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보편적

현금지원의 경우 교육 이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두기 어려운데, 부모교육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 방식으로 부모급여 일부금액을 추가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바람.

□ 1-4. 육아 상담서비스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관리 기능 강화 : 앞서 영유아건강검진 발달 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률이 15%로 낮다고 하였음. 발달적 위험을 가진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지원 체계에서 제외된 영유아들이 많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에 대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려면, 영유아 발달지원, 필요서비스 기관 연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초기 상담과 정보제공, 기관 연계, 그리고 정밀검사비 지원 등에서 누락/제외되거나 취약가정 사례에 대해 초기 검사나 상담 및 치료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개별 사례에 대해 일정기간 사례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도 전문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함.

□ 2-1. 어린이집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보육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대표적 과제임. 시범사업으로 0세, 3세 등 특정 연령에 우선 적용하더라도 전 연령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리라 봄. 농어촌 특례인정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고, 부득이 허용하더라도 0세아 제외, 수당 중 일정비율이상 교사처우 개선 지급하거나 보조교사 배치를 필수조건으로 해야 함. 또한 휴게시간은 기준인원의 2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상 위험성이 커 개선이 필요함.

□ 2-3.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예방 강화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영유아발달검사-상담-치료 연속 지원체계,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위한 현직교사 교육 강화 부분은 1-4와 연계하여 내용상 통합 조정이 필요함.
- 보육교사들에게도 관련한 교육은 필요하나, 보육교사에게 조기발견과 적절한 교수지원, 행동지원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정밀검사비 지원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발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유아보호자 입장에서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고려하면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필요(경기도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발달지원상담원을 배치하여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음).
- 장애아 대상 보육서비스 인프라 및 교사 역량 강화: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 확보 및

처우개선 시급(인력지원(보조교사지원확대)))’이 제시되어 있는데, 유아특수교사, 치료사 등 전문인력의 충족률이 낮은 현실에서 전문인력 확보 위한 적정수준의 인건비 책정과 지원이 필수적임.

□ 3-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 3-1-1.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상향 개편 : 내용 중 ‘집중이수제로 전환시 여름방학, 겨울방학 집중휴가기간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부족일수는 승급연수기간을 추가하여 이수하도록 지원’ 부분인데, 상당수 교사들이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휴가 중 교육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되므로 적절한지 검토 필요.

□ 3-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 3-3-1.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 세부과제명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여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은 법적 근거 마련 부분과 별도로 추진하고 권리보호 매뉴얼 마련은 3-3-2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음. 특히 교육의 경우 보육교직원만이 아니라 원장, 영유아보호자 모두에게 권리존중 보육문화, 보육교직원 권리침해 관련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8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권익보호위원회, 고충처리 전담기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3-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육교직원에 대해 교원과 같은 수준의 권익보호가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3-3-2.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지원: 원스톱 고충처리 상담창구를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 관련, 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시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이 있으므로,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노무, 상담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3-3-5. 보육교직원 신체·심리 건강지원 확대: 올해 경기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⁴⁹⁾ 결과, 조사대상의 약 70-80%가 두통, 전신피로, 상·하지 근육통, 허리통증과 같은 건강문제를 경험하였고 불안감(40.3%), 일상생활에 지장을

49) 김미정(2022). 경기도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실태 및 지원방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줄 정도의 슬픔, 절망감(17.9%), 죽고 싶다는 생각(6.4%) 등 심리적 문제도 적지 않았음. 보육교사들은 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만성적 신체건강이나 심리 문제를 다루는데 장기간의 치료·상담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건강 회복 지원이 필요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위한 공가나 확진시 병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음. 이를 보육교직원의 공가, 병가 사용을 지침으로 보장하고 대체인력 지원 필요.

□ 3-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 3-4-2. 보육교사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임. 비담임 교사 배치 의무화 추진이 바람직하며, 우선 연장보육 전담교사/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이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이와 함께 업무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함(지도점검, 모니터링 등 서류업무와 스마트 알림장 사진업로드 등).

□ 4-1. 어린이집의 안정적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어린이집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안정적 지원 : 설립유형,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아동 현원 규모와 정원충족률 변동에 따라 수입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 하에서는 어린이집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보육재정 지원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사립학교 재정지원방식 참고/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제안한 방식과 같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현원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 등)

□ 4-2. 공공보육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 및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균형 배치 : 국공립 확충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와 적정 공급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함. 국공립 편중 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배치에서 정기적인 정원충족률 모니터링으로는 한계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시 지역의 보육수요와 공급(현재까지의 추이와 향후 전망 포함)을 고려한 균형배치를 위해서는 지역별 중장기 보육수요를 기초로 하고 공립유치원의 설치계획과 연동하여 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소관부처와 근거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화되지 못하였음.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

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인프라 확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4-3.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 (81쪽)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보편 지원으로 가는 것이 합당함. 현원감소가 두드러지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이나 외국인 인구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 한해 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임.

토론문

김미정 센터장(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보편적 보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영유아 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의 심화, 디지털기술의 발달,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우리 사회 생활 양식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육·양육에 있어 정책수요자의 요구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4차 중장기 보육계획에서는 ‘아이,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보육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 과제로 부모 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지원,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보육기반 강화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장기 보육계획은 보육의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고 수요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체감도가 높은 기관 서비스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보육발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1. 부모 양육역량 강화의 자율성과 책무성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권리실현은 ‘보호가 보장되는 가정환경에서 충족된다.’고 하여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 도입 등 신규 육아지원정책에 따라 기존 기관 중심의 보육에서 부모의 가정양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면서 가정배경에 의하여 영유아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권리를 존중받고 심신의 건강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육아지원 방안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육아지원 비용(영아 수당, 육아 수당, 부모 급여 등) 지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의 기질과 발달 특성에 맞추어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대상의 다양한 양육 역량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의 생애 주기에 따른 양육역량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모 양육역량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홍보영상, 브로슈어 등)를 강화하여 전 국민적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양육자들의 역량교육 참여 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역량 교육은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보다는 교육 이수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누적·관리하고 포인트 구간별로 인센티브(부모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 육아용품 및 문화시설 이용 쿠폰 제공, 세금 혜택, 부모교육 참여를 위한 특별 휴가 지원 등)부여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한다.

둘째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요구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교육 운영의 질 개선을 위하여 부모요구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다. 인센티브가 양육역량 교육을 이수하는데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자녀 양육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보다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 부처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다양한 부모교육 자료가 개발 보급되어 운영 중 이므로 효과적인 전달 및 이수를 위해 각 기관의 콘텐츠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 편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은 정부 부처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개발한 내용을 자녀의 발달에 따른 생애 주기별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류한다. 기본과정은 모든 부모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 과정으로 구성하고,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이수한 양육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 및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콘텐츠는 향후 추가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통 부모교육 이외에도 자체 부모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운영 중에 있으므로 지방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합포털시스템에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하고 합의를 통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양육 역량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대상의 확대와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중요하다. 교육대상은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나 부모가 된 다음부터 출발이 아니라 어린시기부터 결혼과 출산이 주는 삶의 긍정적 측면과 가족 구성원이 갖는 사회적 의미(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계승, 발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를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에 대한 기회 및 접근성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나 취약계층 부모를 위한 직장이나 가정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원하고 초중고 대학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교육을 편성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방식을 혼합한 블렌디드 수업(Blended learning)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양질의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 방법을 다각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 보육교직원 역량교육 지원 기반 강화

양질의 영유아 교육 환경을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교사의 전문성이다. 특히 영유아의 개별화된 발달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변화된 보육 환경에서 요구되는 보육교직원의 역량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현재 보육교직원 교육은 보수 교육 체계 외에 별도의 직급별·경력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의 성장 단계별, 보육 상황별 개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 교육관리체계 안에서 전문성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지속 발전 가능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개별화된 보육교직원의 맞춤형 보수교육 인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직급별·경력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교육이력 관리 체계를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플랫폼과 전국 단위 보육이력통합관리 시스템(가칭)으로 이원화하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보육교직원통합정보에 e-러닝 기능을 추가하여 보수교육 이외에도 직급별·경력별 전문성 교육 관리체계를 통합한다면 보육교직원들의 교육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이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직원통합정보에서는 보육교직원 스스로 직급별·경력별 전문성 교육 참여 일정을 확인 후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 후 자신의 교육이력을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시스템 내 상시적으로 교직원들의 교육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과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탑재하여 교육에 대한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한다.

보육교직원들이 장기 비전을 갖고 역량 강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수 사항을 누적 관리하는 보수교육수강 저축제는 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연계하거나 누적된 점수 구간별로 인센티브를 (직무 및 승급교육 시 해당 과목 교육시간 인정, 심리·정서프로그램 제공 등)차등 부여하는 것은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보육교직원 역량교육은 보육환경의 변화에서 요구되는 미래 대응 핵심직무 역량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급과 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설계가 중요하다. 직급별·경력별 교육과정은 기본 의무과정과 선택 심화과정으로 구분하고 선택 심화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변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 놀이 중심 보육과정, 디지털 활용 역량(원격교육, AI·빅데이터) 기후·환경 위기 등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 실습 위주의 소그룹 컨설팅 등과 같은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그룹의 참여형 교육 및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지원되어야 하므로, 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연계하여 교육과정별 전문가 양성과 운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교육과 전문가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재정 충당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직급별·경력별 보수교육과정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별 실제 사례(영유아 놀이 중심 사례 등)는 보육교직원통합정보 교육 자료실에서 보육교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사 스스로 주도하는 자율연수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그간의 보육교직원 교육이 원장 및 보육교사 중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직군별 보육교직원(연장 보육 담임교사, 보조교사, 기타 보육교직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은 담임교사지만,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는 기타 보육교직원 모두 교육의 전반에서 영유아들과 다양한 형태로 접촉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 내에서 모든 교직원들과 교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기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바람직하다.

넷째 보육교직원 역량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교육시간과 보육 일

정의 중복, 대체인력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직원의 교육 참여 편의성 및 접근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상근하는 '비담임'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 직무연수 참여 및 업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담임'은 평상시엔 보육교사 업무를 돕는 보조교사로, 담임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학습공동체 모임 등 참여 시에는 해당 반의 담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재교육 참여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비담임'은 교사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일과 중 휴게시간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개인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주어 보육교사의 직무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에 상근하는 교사이므로 담임교사의 연차 사용 시 영유아가 적응의 어려움 없이 친밀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순(2015).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체계의 다각적 고찰 및 현행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김수빈(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평생학습타임즈 칼럼. (2020.05.07.)
- 대한민국정부(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2025).
- 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정 (2021). 2022-2027 유아교육,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pp143-193.
- 박은미, 지성화(2019).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 서윤희, 한유진(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유치원 교원양성체제의 현황 및 쟁점. 제1차 유아교육보육 정책 포럼.
- 조막래, 안현미, 이해숙(2020).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규호, 김경자, 온정덕, 천윤영(2013). 교육과정의 질 관리 개념 및 개선방향 탐색. 교육과학연구. 44(4), 99-12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차 포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 포럼 토론자료

원세연 과장(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1. 인구구조·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양육환경 및 지속 가능한 보육체계 구축

- (과제) 저출생 장기화,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로 어린이집 수 지속적 감소
 - (4-3) 인구구조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p78~)
 - (어린이집 폐원 증가) 적정 어린이집 수는 2026년 22,523개소 정도로 현재보다 1만여 개소 줄어야 함.
 - (소규모 어린이집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보육취약지역 내 어린이집 운영 개선
-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운영 악화 가속화 추세
 - 부산 지역 어린이집은 총 497개소 폐지(최근 3년간)

[표 1]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내 어린이집 폐지 현황('22.9월 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9
폐지 어린이집 수 (개소,비율)	전 체	91	145	135	139
	민간·가정	86(94.5%)	134(92.4%)	128(94.8%)	124(89.2%)

- 폐지의 주된 원인은,
 - ①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곤란
 - ② 팬데믹 등 가정보육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 감소
 - ③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지 및 국공립 신축(전환) 등으로 파악 됨.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 ① 어린이집 폐원 시 아동 및 보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내
- ②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공보육시설 확충 등 수급계획 시행
-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이나,
- 부모급여 도입 등의 정책은 아동 보호자의 양육선택권 강화로 긍정적 효과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 곤란으로 인한 폐지 현상은 가속화 예상

□ (제안) 어린이집 지원정책(예산)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 실질적이고 활용가능한 지역 보육환경 진단 지표 개발 필요
 - 영유아와 보육 수요의 감소 현상을 반영한 지자체 어린이집 수급계획과 보육계획 수립 (법 제11조) 근거로 활용할 근거 마련 필요
 - 또한 영유아와 어린이집 감소 외 유치원 설치 및 이용 현황, 재정 투입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각종 지자체별 어린이집 지원 정책의 발굴·예산투입으로 야기되는 지역간 형평성 고려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대상 중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은 '제외'에서 '협의'대상으로 변경

2. 양육비용 및 표준보육비용의 적정화로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현

□ (과제) 부모급여 도입 및 표준보육비용 산출 세분화·고도화로 지원체계 강화

-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 지원(p5)
 -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절감, 부모의 양육선택권 강화로 돌봄 지원
- 어린이집의 안정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p65)
 - 표준보육비용 산출 세분화 고도화를 통한 근거 기반 지원체계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함.(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보육료
과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 (현황) 지자체 부모급여, 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그 외 지방이양사업 예산 부담 과중

- 영유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책 및 국고보조금 지방비 매칭으로 추가적인 재정소
요 발생 예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 규정과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수납하는 규정은 상치
- 지방이양사업(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 예산확보 부담
 - 상기 사업은 지역 밀착형 가정양육 및 보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재정부담에
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검토 중임.

□ (제안) 무상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부모부담보육료 폐지, 지역별 표준보육비용 마련

- 지속적으로 증가할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재정보호 방안마련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
정부담 구조 개선을 통한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시·도지사(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의한 매년 관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 폐지를 통한 실제 부모부담보육료 없는 보육지원체계 구축
- 표준보육비용 세분화 고도화에 지역별 표준보육비용도 제시 필요
 - 보육료 등 지원 대비 추가 보육비용 지원 및 부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3. 공공보육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과제) 어린이집의 안정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p65)

- (어린이집 재정 운영) 보건복지부 표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중 민간시장 개입 등 사유
로 중단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무회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어린이집 재정 운영을 모니터링

□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서울,경기,인천,대구 등 지자체 단위에서 금융기관과 연계한 별도 회계관리시스템 구
축·운영 중

- 부산형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중 보건복지부 운영 시스템과 중복 유사사업 제한 등 추가검토 필요
 - 현황 : 민간 회계시스템을 사용(원장이 직접 처리), 혹은 민간 회계업체 대행 사례가 대부분
 - 과제: 어린이집 회계 부적정, 복지부정사례가 반복·지속, 소규모 어린이집 업무 부담 과중
- (건의) 보건복지부 표준회계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건의
 - 어린이집 회계 전산화
 - (전자장부 도입) 계정과목 자동생성, 세목관리, 자동정산, 아동별 수납관리 등
 - 지자체별 별도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여 모니터링 하는 지역적 차별적 운영 문제 해소
 - 소규모어린이집 업무 간소화 등을 통한 운영지원, 부정수급 차단 및 보육품질 개선 도모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차 포럼

보육현장에서 바라본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이중규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 아동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유보통합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 및 격차 해소
- 초저출산 시대 속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원율이 함께 높아지고 있어 더 이상 이원화는 의미 없음
- 사회문화적 변화로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양육자에게는 질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접근성과 편의성까지 갖춘 영유아 교육기관 필요
-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통해 체계화된 제도를 갖추고 적재적소의 재정지원을 통해 아동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 마련 필요

□ 영아기 보육·교육 제도 확립

- 인간의 발달은 영아기를 거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유아와 구분되는 영아만의 발달 특성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
- 영아교사를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닌 영아보육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0~2세 영아의 발달 및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0~5세 모든 영유아를 위한 체계적 보육·교육 제도 확립 필요

□ 품질 관리 체계 확충 및 기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마련

- 국가 주도의 보육컨설팅 및 장학제도 운영으로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확충 및 강화
-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보육·교육에 중심을 두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축소·재정비 추진

2.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 학과제 중심의 양성체계 개편으로 예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체계 수립
- 자격 급수별 역할 분리 방안을 마련하여 3급 자격은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으로 역할 구분
- 보육과 유아교육의 교육과정을 잘 정비하여 자격증을 통합하고 질 높은 영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마련

□ 보육교사 호봉 및 수당 체계 개편

- 보육교사 자격취득 과정과 최저학력 기준에 따라 초임 호봉 산정 체계 마련
- 학위 취득 시 보육관련 전공의 경우에 한해 최저학력으로 인정, 타전공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 기간만 인정하여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함
- 보육교직원 자격 및 직책에 따른 수당체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어린이집에 따라 수당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 교사의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당의 개발 필요

□ 보육교직원 권익존중 방안 마련

- 어린이집 내 문제상황 발생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필요
-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 어린이집 관련 기사를 사실확인 없이 자극적인 소재로 이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

- 론의 보도윤리 준수, 판결 전 피의자 보호, 자극적인 영상 방영의 자제 원칙 마련
- 보육교직원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아동학대 근절 방안 모색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3. 보육 기반 강화

- 어린이집 급·간식비 분리 등 예산 지원 격차 해소
 -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함에도 지원예산 격차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에 시급한 개선 필요
 - 유치원과 동일하게 급·간식비를 보육료에서 분리하고 무상급식을 실행하여 영유아의 보육료는 그들의 보육·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린이집 재정지원 구조 개선
 -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상향과 반별 현원 기준 조정을 통해 교사의 안정된 근로권 확보 및 보다 전문적인 누리과정 교육 운영 지원
 - 영아반과 유아반 교사의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좁혀나가며, 궁극적으로 동일 비율 지원으로 개선되어 공보육 강화와 안정성 유지를 함께 도모
 - 저출산으로 보육 대상 아동이 급감한 상황에서 불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육료에 대한 개선 시급
 -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적 재산정을 통해 보육비용 중 누락된 원가 항목을 포함하고 원가 산정방법을 객관화하여 보다 적절한 보육료 단가 산정이 필요
- 잠재적 위험성과 우발적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안전한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기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고상황에서 어린이집의 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
 -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간의 다툼 또는 놀이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양육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문헌

- 김의향·박진옥(2018).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18(2).
- 김지영(2021).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보육사업’ 개선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1(9).
- 송은철(2020).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운영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황옥경(2012). 보육교사의 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 보수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3차 포럼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함미영 지부장(민주노총 보육교사지부)

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상향 개편

-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하여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균형을 맞추는 등 다양한 추진 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바람직함.
- 독립적 관리부처의 계획이 아닌 교육부와 복지부 합동 추진위에서 함께 논의.
-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 매년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유치원교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승급교육 이수 시간 상향 보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맞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수하게 해야 함.
-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근무 중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무 중이 아닌 퇴근 후 평일 저녁, 주말에 교육을 이수.
- 법령에 의한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 지급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 발생과 휴일에 쉴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승급교육 집중이수제로 전환 시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집중휴가 기간 이수 시 개인연차가 아닌 별도의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 선임교사 자격 도입 및 확대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를 통한 보육교직원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및 보육교사 휴식권 강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교사제 도입.

-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중간관리자의 선임교사제는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2.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의무교육

- 다양한 형태의 보수교육 및 의무교육 시 근무 중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의무교육에는 기본적인 노동권 교육도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함.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 보육교사는 노동자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 법이 있으나 직장내괴롭힘, 감정노동, 아동학대 무고피해 등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함.
 - 보육교사 10명중 7명이 직장내괴롭힘을 경험하고 괴롭힘 가해자로 78% 원장 지목.
 - 원장의 직장내괴롭힘을 인정 받아도 가해자 분리조치 및 원장교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어린이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 반복.
 - 원장으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위탁취소 및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 학부모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어디까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부당한 감정노동 발생 시 원장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육교사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심화.
 - 어린이집 자체별로 제작하기 어려운 대응매뉴얼 제작 보급.
 - 학부모와의 갈등 시 원장의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 역할 강화와 책임감 부여.
 - 원장의 무분별한 CCTV 열람과 근태감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보육교사의 괴롭힘 도구로 활용 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 인권침해 요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 개정.
- ###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지원
- 구청, 시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원 시 신분 노출 경험.

- 보육교사들이 안심하고 상담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과 협력 필요. 보육지부, 직장갑질 119, 지자체의 노동권익센터 등

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

□ 보육교사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 어린이집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 대체교사 신청 시 보육교사 1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수 10일로 제한되어 있어 충분한 휴가권 보장이 어려움.
-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및 휴가권 등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원장 및 모든 보육 교직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보육교직원 수당 및 호봉 체계 개편

-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미 이행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조항이 없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
- 새로운 호봉체계 개편 이전 현재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급여체계 실천 우선.
- 4대보험 납입증명서 매달 제출 시 인건비, 기관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

부록 5. 전문가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성과를 평가하고,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설문내용 문의: 송신영 연구원(02-398-7709, song@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 귀하의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성별	☐ 남 ☐ 여	연령	만 _____세
최종학력	☐ 전문대 졸	☐ (4년제)대 졸	
	☐ 대학원 이상	☐ 기타	
직장유형	☐ 보육 관련 교수, 강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보육 관련 정책연구소 연구원	☐ 기타()	
거주지	_____사도 _____사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과제를 2개만 골라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번 과제	2순위 : ()번 과제
----------------------	----------------------

6.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과제1.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2개만 골라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번 과제	2순위 : ()번 과제
----------------------	----------------------

7.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와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구분	성과 정도(목표 달성도)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			
	← 미흡			달성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2-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표준 보육시간제도 도입, 어린이집 이용시간개선)											
2-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비용 체계측 추진)											
2-3. 보육과정 개편 (특별활동 운영기준 개선, 공급기관 등록제 도입)											

8.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과제를 2개만 골라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번 과제	2순위 : ()번 과제
----------------------	----------------------

9.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과제2. 보육 체계 개편**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2개만 골라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번 과제	2순위 : ()번 과제
----------------------	----------------------

10.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와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구분	성과 정도(목표 달성도)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			
	← 미흡			달성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3-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자격체계 개편, 대학 중심 신규 자격취득 활성화, 보수교육 강화, 총괄관리기관 신설)											
3-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적정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보장)											
3-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탄력보육 최소 운영, 영유아반 구성기준 개편 방안 마련)											
3-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제 의무화, 평가 수준별 사후관리,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관, 안전컨설팅 확대 실시)											

1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과제를 2개만 골라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번 과제	2순위 : ()번 과제
----------------------	----------------------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과제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2개만 골라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번 과제	2순위 : ()번 과제
----------------------	----------------------

10.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의 목표 달성 정도와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곳에 v 표 해 주십시오.

구분	성과 정도(목표 달성도)							향후 지속 추진의 필요성			
	← 미흡		달성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대체로 필요	④ 매우 필요
3-1. 가정 내 양육지원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 정보 제공 및 안내 등)											
3-2.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시간제보육반 5년간 단계적 확대)											
3-4. (장애아, 다문화 아동) 취약보육 지원 개선 (취약보육 관련 실태조사)											

11.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목표 달성 정도가 가장 미흡한 과제를 2개만 골라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번 과제	2순위 : ()번 과제
----------------------	----------------------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과제4. 부모 양육지원 확대** 세부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2개만 골라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번 과제	2순위 : ()번 과제
----------------------	----------------------

13.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향상됨 ② 어느정도 향상됨 ③ 별로 변화 없음 ④ 전혀 변화 없음

II.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위한 정책

II-1. 대내외 환경 변화

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외 환경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내용	우선순위
대외 환경	1) 저출생 현상 심화	
	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3) 육아 휴직 증가	
	4) 여성 경력단절 증가	
	5) 가족구조의 다양화	
	6) 자녀 양육관 변화 또는 부모 역량 부족	
	7)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증가	
	8) 근로형태 다양화	
	9) 소득불평등(양극화) 심화	
	10)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응 요구 증가	
	11) 경제 위기	

- 1-1.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대내 환경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내용		우선순위
대내 환경	1) 어린이집 폐원 증가	
	2) 보육교사 전문성(역량)에 대한 요구 증가	
	3)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4)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 사고 증가	
	5)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 증가	
	6) 자녀양육지원 정책으로의 전환('23년 부모급여 도입 및 시행)	
	7) 보육 재정 안정성 확보 요구	

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전략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우선순위로 골라 주세요.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① 가정양육지원 ②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③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④ 보육 기반(공공보육, 안정적 비용 지원, 보육사각지대 예방 등) 강화

II-2. 추진전략별 정책 우선순위

※

3. 귀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가정양육지원 분야 추진과제 중 어떤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예 시 >

A	① 매우중요	②	③	④ 동등	⑤	⑥	⑦ 매우중요	B
	✓							

☞ A 항목이 B항목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 경우

번호	평가 정책	① 매우 중요	②	③	④ 동등	⑤	⑥	⑦ 매우 중요	평가 정책
1	양육비용 지원 강화 (부모급여,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역 량 강화(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어린 이집의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등)
2	부모교육 확대를 통한 부모 양육 역량 강화(부모교육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의 거점 양육지원 기관 육성 등)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제모육 확대, 육아용품 대여, 놀 이 및 폐원지원 인프라 확대 등)
3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제모육 확대, 육아용품 대여, 놀이 및 폐원지원 인프라 확대 등)								육아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단계별 검사상담서비스 연계, 지역 중심 돌봄 지원 강화 등)
4	육아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단계별 검사상담서비스 연계, 지역 중심 돌봄 지원 강화 등)								양육비용 지원 강화 (부모급여,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양 육비 지원 확대)

- 3-1. 위에 제시한 정책 외에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정양육지원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4. 귀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분야 추진과제 중 어떤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예 시 >

	① 매우중요	②	③	④ 동등	⑤	⑥	⑦ 매우중요
A	✓						B

☞ A 항목이 B항목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 경우

번호	평가 정책	① 매우 중요	②	③	④ 동등	⑤	⑥	⑦ 매우 중요	평가 정책
1	최적의 보육 환경 조성(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면적 확대, 설치인가 기준 개선 등)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련 참여 확대 등)
2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부모 및 교직원 질 관련 참여 확대 등)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아동발달 지원, 장애아 대상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등)
3	아동의 성장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강화(아동발달 지원, 장애아 대상 인프라 확대,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등)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표준보육과정 내실화, 보육과정 컨설턴트 양성,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
4	놀이 중심 보육과정 내실화(표준보육과정 내실화, 보육과정 컨설턴트 양성,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 등)								최적의 보육 환경 조성(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면적 확대, 설치인가 기준 개선 등)

- 4-1. 위에 제시한 정책 외에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5. 귀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분야 추진과제 중 어떤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예 시 >

	① 매우중요	②	③	④ 동등	⑤	⑥	⑦ 매우중요
A	✓						B

☞ A 항목이 B항목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 경우

번호	평가 정책	① 매우 중요	②	③	④ 중등	⑤	⑥	⑦ 매우 중요	평가 정책
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자격기준, 양성체계 개편 등)								보육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보수교육 체계 개편, 수강저축제, 교육플랫폼 등)
2	보육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보수교육 체계 개편, 수강저축제, 교육플랫폼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 조성(권리보호 근거 마련 및 교육 지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보조대체교사 확대,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수당 체계 개편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 개선(보조대체교사 확대, 휴게시간 및 휴가권 보장, 수당 체계 개편 등)

5-1. 위에 제시한 정책 외에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관련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6. 귀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 시 **보육기반 강화** 분야 추진과제 중 어떤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각 항목별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예 시 >

	① 매우중요	②	③	④ 중등	⑤	⑥	⑦ 매우중요	
A	√							B

※ A 항목이 B항목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 경우

번호	평가 정책	① 매우 중요	②	③	④ 중등	⑤	⑥	⑦ 매우 중요	평가 정책
1	어린이집 재정지원 체계 마련(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 취약보육 기준 합리화, 필요경비 제도 개선 등)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지역 균형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품질 향상, 공공성 개념 민간 분야 확대 등)
2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지역 균형 배치, 국공립어린이집 품질 향상, 공공성 개념 민간 분야 확대 등)								보육의 양적·질적 사각지대 예방(어린이집 소규모화 대응 품질 제고, 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 등)
3	보육의 양적·질적 사각지대 예방(어린이집 소규모화 대응 품질 제고, 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 등)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및 홍보 강화(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등)
4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및 홍보 강화(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등)								어린이집 재정지원 체계 마련(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 취약보육 기준 합리화, 필요경비 제도 개선 등)

- 5-1. 위에 제시한 정책 외에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관련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방안 연구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044) 202-3550

팩스: 044) 202-3973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540-01

